제 1 장

요약문

1.1 계획의 내용
1.2 정책계획의 대안
1.3 평가항목의 선정
1.4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제1장 요약문

1.1 계획의 내용

○ 계 획 명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2027~2031)

○ 위　　치 : 대한민국 전역

○ 계획기간 : 2027년~2031년(5년)

○ 계획수립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승인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협의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내용적 범위

- 「관광진흥법」 제49조에 의거하여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수립된 제4차 기본계획을 검토하여 변화된 관광 여건과 동향, 관광수요와 공급, 기본계획의 이행 점검, 수정된 전략 및 세부 과제 도출, 관광권역 설정 등을 포함

구 분	범 위
비 전 편	-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의 역할 - 여건 및 동향 분석, 수요 및 공급분석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이행점검 - 수정계획의 비전 및 목표 제시
전 략 과 제 편	- 전략 설정, 전략별 추진 과제와 세부 과제 도출
권 역 편	- 권역 설정, 시·도 권역별 관광개발 방향

1.2 정책계획의 대안

〈표 1.2-1〉 대안의 선정

대안종류	선정기준	내 용		선정안
계획비교	계획수립여부	대안 1	계획 수립시(Action)	◎
		대안 2	계획 미수립시(No Action)	-
수단·방법	관광협력권	대안 1	8대 국가전략 관광권	◎
		대안 2	다핵구조 중층적 관광권	-
		대안 3	16개 시·도 기반 지역자율 관광협력권	-
수요·공급	실증 추세수요	대안 1	추세수요	◎
	정책목표 대응 수요	대안 2	-	

1.3 평가항목의 선정

〈표 1.3-1〉 평가항목의 설정

구 분	평가 항목	제외 항목
정책계획의 적정성	○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 국가 환경 정책 -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
	○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계획 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
	○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 공간 계획의 적정성 -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 환경용량의 지속성	-
입지의 타당성	-	○ 입지의 타당성

〈표 1.3-2〉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 사유

검토항목	항 목		선정구분		선정 및 제외 사유
			중 점	일 반	
정책계획의 적정성	환경보전 계획과의 부합성	국가 환경 정책	○	-	○ 국가 환경 정책과의 부합성 검토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	-	○ 국제환경 동향·협약·규약과의 부합성 검토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계획 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	-	○ 계획 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검토
정책계획의 적정성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공간 계획의 적정성	○	-	○ 관광개발기본계획의 공간 계획의 적정성 검토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	-	○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여부 검토
		환경용량의 지속성	○	-	○ 환경용량의 지속성 검토
입지의 타당성			-	-	○ 구체적인 입지가 결정되지 않아 제외

1.4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본 계획은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분야 최상위 장기 법정계획으로 대한민국의 효율적인 관광개발을 위해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관광자원 확충 및 관광계획 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

○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관광진흥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지역으로 설정함

○ 관광개발기본계획의 특성에 따라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항목별 대상지역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설정함

〈표 1.4-1〉 평가항목의 대상지역의 설정

구 분	세부 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가)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1) 국가환경정책	○ 본 정책계획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환경계획 및 시책과의 부합 여부 검토	대한민국 전역
(2)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 본 정책계획이 국제적 환경관리 협약·조약·규범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는지 여부 검토	대한민국 전역
나)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 행정계획 및 다른 행정계획과의 부합 여부 파악	대한민국 전역
(2)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 계획목표와 계획의 세부내용이 일관성 있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검토	대한민국 전역
다)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1) 공간계획의 적정성	○ 각종 보호구역의 분포 여부 검토	대한민국 전역
(2)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 수요전망, 수요 및 공급규모 등과 연계하여 환경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었는지 검토	대한민국 전역
(3) 환경용량의 지속성	○ 환경용량 및 환경지표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검토	대한민국 전역

제 2 장

정책계획의 개요

2.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성격

2.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2.3 계획의 연혁 및 수립경위

2.4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2.5 계획의 내용

2.6 계획의 기대효과

2.7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주요 성과, 시사점

2.8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2027~2031)의 수정내용

제2장 정책계획의 개요

2.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성격

2.1.1 계획의 배경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재검토 및 정비를 위한 시기 도래

- 관광개발기본계획은「관광진흥법」제49조에 의거하여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2020년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제42조 제2항 신설)으로 5년마다 재검토 및 정비 필요
- 2021년 말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 이후 5년이 경과하여 재검토 및 정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의 비전을 넘어 관광 발전과 국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역의 관광개발 방향 지향

○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대응한 국가 관광개발계획 수립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계획기간 동안 국내·외 여건 변화와 시대상을 반영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관광개발기본계획 방향 모색
- 인구구조,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혁신적 국가 관광개발 전략과 국민 삶의 질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관광발전 전략 제시
- 국제 정세의 변화를 파악하여 국제관광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 관광개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관광경쟁력 제고

○ 제8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 연계

- 기본계획의 구체화 계획, 권역 특성화 계획, 관광(단)지 지정 근거계획의 성격을 갖는 제8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2027~2031년)이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과 동일한 시기에 수립되어 상호 연계·협력적 계획 수립 필요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2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의 재검토 및 정비 (제4차 수정계획 수립)

⇨ 국가 관광개발 위상을 정립하는 종합계획, 과학적 증거기반 정책계획, 이해관계자의 연계협력에 기반한 협력계획으로 변화된 관광환경에 맞는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2.1.2 계획의 목적

○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관광경쟁력 제고

- 계획기간 동안 인구구조, 생활양식, 가치관, 지역 및 국제관계 등에서 예상되는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응한 국가 및 지역 관광개발 방향을 모색하여 국가관광경쟁력 제고

○ 사람과 지역 중심의 국가관광개발 비전 제시

- 「관광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적·내용적 범위를 기준으로 사람(관광객)과 지역(관광목적지) 중심의 관광개발 비전 제시

○ 중기 관광개발 기본방향을 제시

-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관광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 삶의 질과 지역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전국 관광개발 기본방향을 제시

○ 국가단위 법정관광계획으로서 위상 재정립

- 관광개발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타 분야 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관광개발과 지역관광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국가단위 관광계획의 위상 재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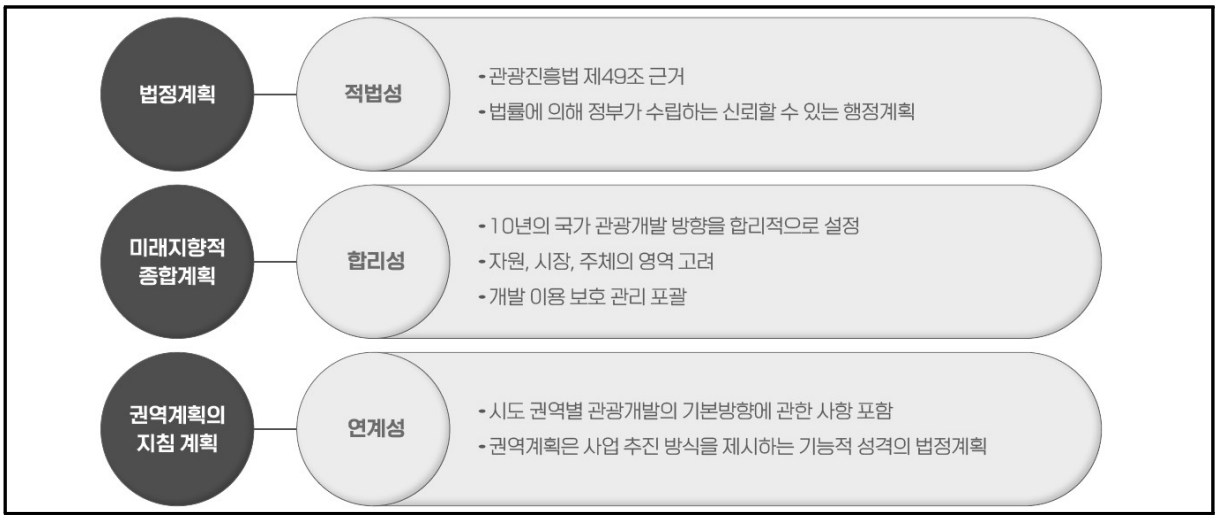
2.1.3 계획의 성격

○ 행정계획 및 법정계획

- 관광개발기본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에 근거하며 관광개발기본계획 재검토 및 정비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근거하여 국가관광개발의 위상을 정하고 있는 법정계획이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하여 공고하는 행정계획
-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적 범위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계획이 취할 수 있는 정책영역에 한정한 계획

○ 미래지향적 종합계획

-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5년 후 국가 관광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미래지향적 종합계획이며 미래를 전망하고, 계획 목표와 지향점은 무엇인가를 규정
- 관광개발의 주요 요소인 관광자원, 시장(관광객), 관광개발 주체(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의 영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 이용, 보호, 관리를 포괄하여 전략 제시



2.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관광진흥법」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으로「환경영향평가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관련 [별표2]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정책계획)에 해당됨

〈표 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1. 정책계획		
구 분	정책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마. 관광단지의 개발	1)「관광진흥법」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관광진흥법」제50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자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2]

2.3 계획의 연혁 및 수립경위

2.3.1 계획의 연혁

○「제1차 관광개발기본계획(1992~2001)」('93)

- 비전 및 전략 : 국토이용개념의 개발 체계확립, 관광수요와 부합하는 균형적개발·관리체계 형성, 개발추진을 위한 지원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02~2011)」('01. 7)

- 비전 : 21세기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는 관광대국 실현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11. 12)

- 비전 : 글로벌 녹색한국을 선도하는 품격있는 선진관광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22~2031)」('21. 12)

- 비전 : 미래를 여는 관광한국, 관광으로 행복한 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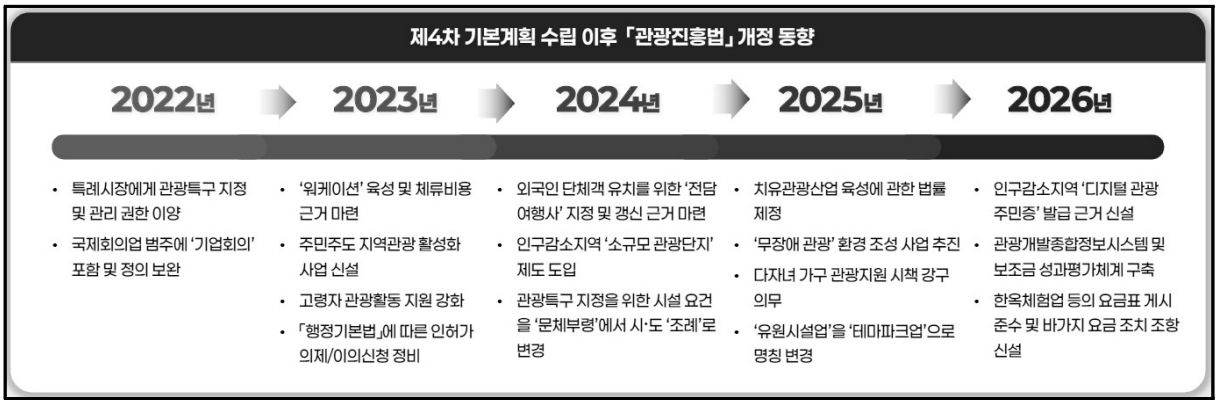
2.3.2 계획의 수립경위

가. 관광정책 환경 및 제도 변화

○ 관광개발 관련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신설, '관광특구 지정 및 운영' 권한 이행, 관광개발 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2026년 10월 29일 시행)

○ 「관광기본법」 전면 개정(안) 발의, 관광진흥법을 '(가칭)관광산업진흥법'과 '(가칭)지역관광발전법'으로 분리 추진

○ 「관광진흥법」 외에 관광관련 법률 제정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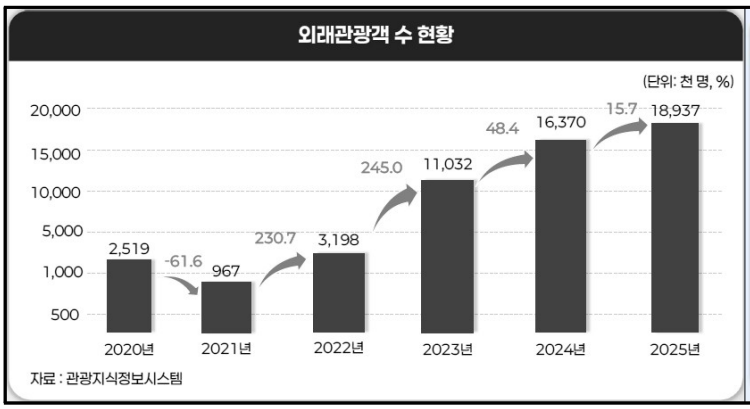
나. 국제관광 시장의 빠른 회복 및 한류관광 관심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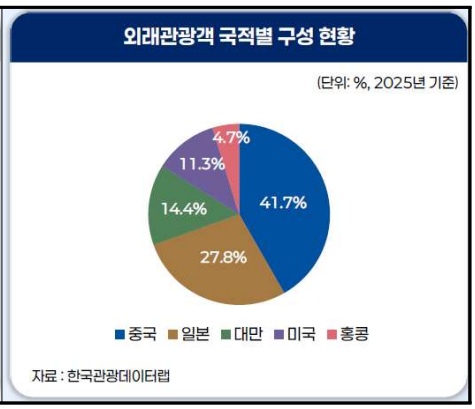
○ 2023년 코로나 엔데믹 이후 국제관광 시장의 회복

○ 제6차 관광진흥계획,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서 외래관광객 목표를 3천만명으로 설정

○ 로컬형 등 개인체험 관광이 인기를 끌며 K-뷰티·패션, 공연 등 한류관광 범위와 영향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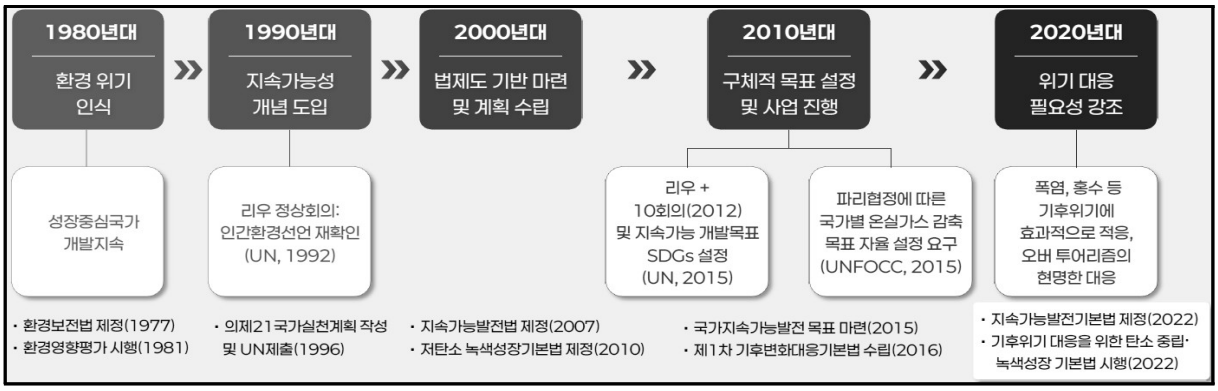
○ 외래관광객 비중은 중국(40% 내외)과 일본(25% 내외)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대만과 미국 고나광객 비중 상승





다. 기후 위기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고려한 관광개발 추진

- 2022년「지속가능발전기본법」제정 및 2026년「탄소중립기본법」시행으로 지속가능 및 탄소중립 실현 구현화
- 지속가능 발전은 기후변화, 탄소중립, 환경친화적 개발, ESG 등을 기반으로 한 국제사회 약속
- 기후위기는 관광시설 운영 및 관광활동은 물론 사회적 구조 변화 촉발
- 관련 법률 시행에 따라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절차 필요



라. 관광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하고 지역 체류인구를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 추진

-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래관광객 및 국내관광객의 집중 현상 지속(평균 75%)
- 워케이션, 한달 살기 등 지역 활력을 위해 생활인구(관광인구) 확대를 위한 노력 구체화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시행(2023.01)에 따라 생활인구에 대한 효과 논의
- 관광객 62명 소비액과 인구감소지역 정주 인구 1인 소비액과 동일



마. 5극3특이라는 현 정부 공간구조를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 필요

- 코로나 시기의 특수정이 반영된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의 공간 구조를 재편하여 현재 관광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공간 구조 제시 필요
- 정부의 새로운 공간 구상(5극 3특) 특징, 전략, 연계성을 고려한 관광권역의 검토
- 5대 지역공항 대상의 '지방공항 중심 관광권 육성(~2030)', 지역이 주도로 수립하는 방식을 적용한 '글로벌 K-관광배라 계획(2029~)' 등 새로운 공간 구조 설정 및 관광사업 추진 예정



2.3.3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행정절차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책계획)	법 제9조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2027~2031)
	↓		
	평가협의회 구성·운영 (Scoping)	법 제8조 시행령 제4조	
	↓		
	평가준비서 작성	시행규칙 제2조	
	↓		
30일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평가준비서 심의	시행령 제9조	
	↓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법 제11조	
	↓		
20일 이내 정보통신망, 정보지원시스템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14일 이상) (주민 등의 의견제출시 반영)	시행령 제10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법 제16조 시행령 제21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행정기관 장 → 협의기관)	법 제16조	
	↓		
30일~40일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협의내용 통보 (협의기관→행정기관 장)	법 제18조 시행령 제25조	
	↓		
조치계획 확정 후 30일 이내	협의내용 이행결과 통보 (행정기관 장 → 협의기관)	법 제19조 시행령 제26조	

주) 법/시행령 : 환경영향평가법

2.4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2.4.1 추진경위

- '21. 12. 02.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22~2031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 '21. 12. 30.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22~2031년) 확정·발표
- '26. 3. 23.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재검토 및 정비 연구 용역 계약 체결
- '26. 4. 22. : 관광트렌드 분석을 위한 워크숍
- '26. 6. 15. : 관광수요 지자체 송부
- '26. 7. 5. : 제4차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단 구성
- '26. 7. ~ 8.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1~5차)
- '26. 9.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서면심의)
- '26. 10. :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2.4.2 향후계획

- '26. 11.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및 협의요청
- '26. 11.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보고
- '26. 12. : 의견 및 조치사항 반영
- '26. 12.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2027~2031)」공고

2.5 계획의 내용

- 계 획 명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2027~2031)
-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7년~2031년(5년)
  - 공간적 범위 : 전국(한반도)
- 내용적 범위
  -「관광진흥법」제49조에 의거하여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수립된 제4차 기본계획을 검토하여 변화된 관광 여건과 동향, 관광수요와 공급, 기본계획의 이행 점검, 수정된 전략 및 세부 과제 도출, 관광권역 설정 등을 포함
- 계획수립기관(수립권자) : 문화체육관광부
- 협의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표 2-2〉 계획의 내용적 세부 범위

구 분	범 위
비 전 편	-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의 역할 - 여건 및 동향 분석, 수요 및 공급분석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이행점검 - 수정계획의 비전 및 목표 제시
전 략 과 제 편	- 전략 설정, 전략별 추진 과제와 세부 과제 도출
권 역 편	- 권역 설정, 시·도 권역별 관광개발 방향

2.5.1 계획의 방향

가. 관광개발 정책방향의 전환

(1) 공급·시설 중심에서 관광수요와 지역가치 중심으로 전환

- ㅇ 성공적인 관광개발은 변화하는 관광수요와 지역 고유자원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고, 다양한 추진주체가 관광자원의 매력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제고함으로써 관광객의 만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관광개발
- ㅇ 관광자원의 보유와 시설 조성을 중심으로 한 공급자 관점에서 벗어나 관광객의 이동·체류·소비행태와 경험 가치를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의 환경·사회문화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관광개발 고도화
- ㅇ 관광자원·관광시장·추진주체 간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관광객의 요구와 지역사회의 필요를 조화롭게 반영하고, 개발·이용·보호·관리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관광개발 추진
- ㅇ 관광객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관광 활동이 지역주민의 삶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광객과 지역사회가 관광개발의 편익을 함께 향유하는 관계 형성

(2) 신규 조성 중심에서 관광자원의 전 주기적 활용과 관리 강화

- ㅇ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등 기존 관광개발 정책수단은 국가와 지역의 관광기반 확충에 기여해 왔으나, 일부 사업은 수요 변화에 대한 대응 부족, 시설 노후화, 운영주체와 재원 미확보 등으로 조성 이후 지속적인 운영과 성과 창출에 한계
- ㅇ 신규 관광시설의 확충에 치중하기보다 기존 관광자원의 활용도와 운영 성과를 높이고, 필요한 경우 재생·재구조화하여 변화하는 관광수요와 지역 여건에 대응하는 관광개발 강화

○ 관광자원의 매력은 자원 자체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접근성과 편의성, 콘텐츠와 서비스의 품질, 안전성, 운영·관리 수준 및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경험 가치에 의해 결정되므로 개발·이용·보호·관리를 통합적으로 추진

○ 신규 시설 조성 시에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관광수요와 사업 타당성, 운영 주체와 운영 비용, 수익 구조 및 성과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성 이후의 지속가능성과 운영 성과 확보

○ 기존 관광자원의 재생과 활용, 운영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관광개발의 질적 수준과 공공투자의 효율성 제고

(3) 양적 확대와 질적 성과가 조화를 이루는 관광개발 추구

○ 기존 관광개발정책은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여 관광시설과 수용 기반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일부 사업은 관광수요와 지역 여건 및 환경적·사회적·문화적 수용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유사·중복 개발, 지역사회에 대한 부담 증가, 조성 이후 운영 부실 등 문제 발생

○ 향후 관광개발은 관광객 수와 시설 개소 수 등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 관광 만족도, 지역 일자리와 주민 소득, 지역주민의 삶의 질 등 질적 성과를 함께 추구

○ 외래관광객 유치와 국내 관광수요 확대가 지역 내 이동·체류·소비로 연결되고, 관광으로 창출된 다양한 편익이 지역사회에 확산·환류되도록 관광개발의 지역 파급효과 강화

○ 지역의 환경적·사회적·문화적 수용력을 고려하여 관광객과 관광공간의 시기별·지역별 편중을 완화하고, 관광객 만족도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추진

○ 관광자원의 가치 제고와 관광객의 체류·소비 확대, 지역 편익의 창출과 환류, 관광자원에 대한 재투자로 이어지는 지역관광의 선순환 구조 구축

나.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의 관광개발 개념

(1)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포괄하는 전 주기적 과정

○ 「관광진흥법」에서 관광개발기본계획 목적을 '전국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함'으로 명시하고, 이러한 근거에 의거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역의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는 주체로서 역할 수행

- 기존 관광개발은 공공 재원을 투입하여 관광시설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양적으로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으며, 관광자원의 운영과 유지관리, 기존 자원의 활용 및 가치 제고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실행은 상대적으로 부족
- 관광자원 관리는 개발 이후의 유지관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광자원의 발굴과 계획 수립부터 조성, 운영·관리, 성과평가 및 재투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자원의 가치와 이용 성과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정책 영역
- 향후 관광개발은 신규 관광자원 조성과 기존 관광자원의 활용·재생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지역의 여건과 수용력, 관광객의 이용 행태를 고려하여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고도화 필요
- 수정계획에서는 관광개발을 지역 고유자원과 관광수요를 토대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관광자원의 개발·이용·보호·관리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그 편익이 지역과 관광객에게 확산되어 관광자원의 가치 제고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과정으로 접근

(2) 개발, 이용, 보호, 관리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 강화

- 관광자원 개발은 지역 고유자원을 발굴하고 새로운 관광자원을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자원의 관광적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을 포괄
- 관광자원 이용은 관광객이 관광자원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체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자원의 특성과 수용력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활용하는 방식
- 관광자원 보호는 자연·문화·생활자원의 고유한 가치를 보전하고 미래세대에 전승하는 동시에 주민의 삶과 조화를 이루고 관광 활동으로 인한 환경·사회·문화적 영향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방식
- 관광자원 관리는 관광자원의 발굴·개발 이후 운영, 유지관리, 안전관리, 성과평가와 재투자까지 포괄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제도·인력·재원 등의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방식
- 관광자원의 개발·이용·보호·관리는 서로 독립적이거나 배타적인 영역이 아니라 관광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상호보완적 수단

2.5.2 비전 및 목표

가.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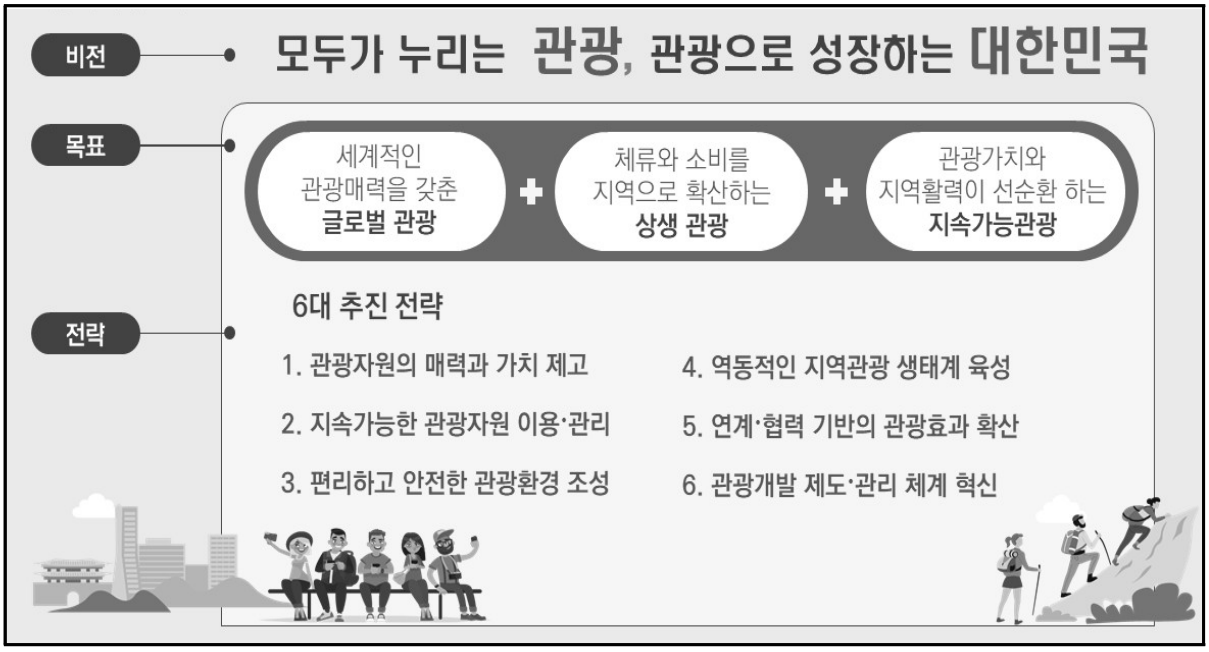
○ '모두가 누리는 관광'은 국민과 지역주민, 국내외 관광객, 현재와 미래세대가 관광의 기회와 경험, 관광개발로 창출되는 편익을 함께 향유하는 것을 의미

○ 단순히 누구나 여행할 수 있다는 포용적 의미를 넘어, 관광객은 좋은 관광경험을 누리고, 지역주민은 관광으로 창출되는 편익을 누리며, 미래세대는 보전된 관광자원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관광개발 지향

관광 향유의 포용성 + 국민 체감 + 지역 간 격차 완화 + 지속가능성

○ '관광으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은 관광객 수나 산업 규모의 성장에 한정되지 않고, 관광자원의 가치, 관광시장, 지역산업과 일자리, 지역 역량이 함께 성장하는 것을 의미

○ 관광자원의 가치 제고와 글로벌 관광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실현, 2031년에는 국민과 지역주민, 국내외 관광객, 현재와 미래세대가 관광의 기회와 편익을 함께 누리고, 관광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여 지역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실현, 기존 계획의 '관광으로 행복한 국민'을 계승하면서도 대상을 지역 주민·외래관광객·미래세대까지 확장



(그림 2-1) 기본가치 및 비전

나. 계획 목표

(1) 세계적 관광매력을 갖춘 글로벌 관광

- K-컬처에 대한 국제적 관심 확대와 국가 간 관광객 유치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관광자원과 관광경험을 세계인이 선택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고
- 글로벌 관광은 외래관광객 수의 양적 확대에 한정되지 않으며, 지역 고유자원의 매력과 차별성, 콘텐츠와 서비스의 품질, 접근성과 편의성, 안전성 등 관광 경험 전반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의미
- 자연·문화자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생활 문화와 산업, 음식, 예술, 경관 등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발굴하고, K-컬처 및 첨단기술과 결합하여 세계적인 관광매력을 갖춘 자원과 콘텐츠로 발전
- 신규 관광자원의 발굴·조성과 함께 기존 관광자원의 활용과 재생, 운영·관리 수준을 높여 세계인이 방문하고 만족하며 재방문을 고려하는 경쟁력 있는 관광 환경 조성
- 이에 기반하여 지역 고유성과 한국적 매력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관광경험을 제공하고, 대한민국 관광의 국제적 위상과 관광 경쟁력 제고

(2) 체류와 소비를 지역으로 확산하는 상생관광

- 관광객 수의 증가가 일부 지역과 관광지의 방문에 그치지 않고, 여러 지역으로의 이동과 장기 체류 및 지역 내 소비로 연결되도록 관광시장의 질적 변화를 유도
- 상생관광은 관광객에게 매력적이고 편리한 관광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가 지역의 상권·산업·일자리와 연결되어 관광객과 지역이 관광의 편익을 함께 누리는 것을 의미
- 수도권과 일부 유명 관광지에 집중된 관광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하고, 관광거점과 주변 지역, 도시와 농산어촌, 지역 간 관광자원과 동선을 연계하여 관광객의 이동범위와 체류시간 확대
- 단순 방문과 관람 중심의 관광에서 벗어나 숙박, 음식, 쇼핑, 문화·예술, 야간관광, 웰니스 등 지역의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경험하는 체류·소비형 관광 활성화
- 관광객의 이동·체류·소비행태를 분석하여 관광교통, 관광정보, 결제, 안전, 여행 전 과정의 편의를 개선하고, 관광수요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 조성
- 이를 토대로 관광객의 만족과 지역의 관광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함께 높이고, 관광수요의 지역 편중 완화와 지역 균형성장에 기여

(3) 관광가치와 지역 활력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관광

- 관광개발이 단편적 시설 조성과 관광객 유치에 그치지 않고, 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개발·이용·보호·관리하고 관광으로 창출된 편익을 지역에 환류하여 관광자원의 가치 보전과 지역 활력이 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 형성
- 지속가능관광은 지역의 환경적·사회적·문화적 수용력을 고려하여 관광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이용·보호·관리하고, 그 가치를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의미
- 관광가치는 관광자원의 매력과 보전가치뿐만 아니라 관광을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편익, 관광객의 경험가치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포괄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민간기업, 지역관광조직 등 다양한 주체가 관광개발의 계획·조성·운영·관리 과정에 참여하고,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에 기반한 지역주도 관광개발 체계 구축
- 관광으로 창출된 소득과 일자리 등 편익이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다시 관광자원의 보전·관리, 콘텐츠와 서비스 개선, 지역역량 강화에 재투자되는 환류구조 마련
- 기후변화와 오버투어리즘, 관광시설 노후화 및 운영 부실 등에 대응하여 관광자원의 개발·이용·보호·관리를 균형 있게 추진하고, 관광개발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관리와 성과평가 강화
- 이를 통하여 관광자원의 가치 제고가 지역 활력을 높이고, 높아진 지역 활력이 다시 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가치 향상으로 이어지는 관광개발의 선순환 실현

2.5.3 전략 도출 방향 및 추진전략

가. 전략 도출 방향

(1) 제4차 기본계획의 6대 전략체계 계승과 정책 환경 변화 대응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추진 전략은 자원·시장·주체라는 정책영역, 개발·이용·보호·관리라는 관광개발의 기능, 입체적·스마트·지속가능·합리적이라는 방향성을 토대로 6대 전략 도출
- 기존 계획에서 제시한 6대 전략체계는 관광자원, 관광환경, 지역 및 주체, 연계·협력, 제도·관리 등 관광개발의 핵심 정책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수정계획에서도 기본적인 전략 틀 유지
- 다만 코로나19 이후 관광시장 변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관광수요의 다변화, 지역 간 연계·협력 확대 등 2022년 이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수정계획의 비전 및 목표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략별 정책방향과 추진내용 재구조화

(2) 수정계획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의 성과지향성 강화

- 수정계획의 비전인 '모두가 누리는 관광, 관광으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전략체계의 상위 지향으로 설정하고, 관광의 향유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관광이 지역과 국가의 성장에 기여하도록 전략의 정책적 지향 명확화
- 세계적 관광매력을 갖춘 글로벌 관광, 체류와 소비를 지역으로 확산하는 상생관광, 관광가치와 지역 활력이 선순환 하는 지속가능관광의 3대 목표를 6대 전략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핵심 성과로 설정
- 관광자원의 공급과 개발 자체보다 세계적 관광매력의 창출, 관광 향유기회의 확대, 체류와 소비의 지역 확산, 관광가치와 지역 활력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등 전략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를 중심으로 전략별 방향 재설정

(3) 관광개발 정책영역의 확장과 유기적 연계

- 관광자원의 개발과 확충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관광개발 영역을 넘어 관광자원의 매력과 가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 편리하고 안전한 관광환경, 지역관광 생태계, 지역·부문 간 연계·협력, 제도·관리체계까지 관광개발의 정책영역 확장
- 개별 관광자원이나 시설 중심의 개발에서 나아가 관광객의 이동·체류·소비, 지역주민과 관광사업자 등 지역주체, 지역산업 및 지역 간 관계까지 포괄함으로써 관광자원과 관광환경, 지역주체와 산업, 공간 간 관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관광개발체계로 확장
- '자원 발굴-기반 확충-체계 구축' 중심의 전략에서 '가치 제고-지속가능한 이용·관리-지역효과 확산-제도 혁신' 중심의 전략으로 고도화

(4) 개발·이용·보호·관리의 균형에서 관광가치와 지역 활력의 선순환으로

- 「관광진흥법」에서 제시하는 관광자원의 개발·이용·보호·관리라는 관광개발의 기본 기능을 균형 있게 반영하되, 관광자원의 신규 공급과 개발 중심에서 기존 자원의 가치 제고와 지속가능한 이용·관리까지 관광개발의 기능 강화
- 관광자원의 개발 성과가 개별 관광지에 머무르지 않고 관광객의 향유와 체류·소비 확대를 거쳐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에 파급되고, 이를 통해 형성된 지역 활력이 다시 관광자원의 매력과 가치를 높이는 선순환적 관광개발체계 지향
- 이를 통해 관광매력 제고, 관광 향유 및 체류 확대, 지역 내 소비와 효과 확산, 지역 활력 제고, 관광가치 재창출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구현

나. 6대 전략(수정·보완)

(1) 전략 1. 관광자원의 매력과 가치 제고

- 관광수요와 기술·산업 변화에 대응하여 관광자원의 영역과 활용 방식을 확장하고, 지역 고유자원의 재발견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해 차별화된 관광매력 강화
- 신규 관광자원 발굴 중심에서 기존 자원의 재해석 및 고도화와 콘텐츠 융복합으로 관광자원의 질적 가치를 높여 세계적 수준의 관광경쟁력 확보

(2) 전략 2.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이용·관리

-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성 요구에 대응하여 관광자원의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활용 확산
- 노후·유휴 관광자원의 재생과 관광객 집중 등 관광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관광자원과 지역사회의 회복력 강화

(3) 전략 3. 편리하고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

- 관광객의 이동·체류·관광활동 전 과정에서 교통·안내·정보·서비스의 연결성과 편의성을 높여 관광 만족도를 제고하고 원활한 관광활동을 지원하는 관광환경 조성
- 관광약자를 포함한 모든 관광객의 관광 접근성과 안전을 강화하고, 투명한 가격과 신뢰할 수 있는 관광서비스를 확산하여 안심하고 누리는 관광여건 마련

(4) 전략 4. 역동적인 지역관광 생태계 육성

- 주민·지역기업·관광사업자 등 다양한 지역주체의 참여와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자원·산업과 관광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지역관광 가치 창출
- 관광개발의 성과가 지역의 사업·일자리·소득 등 지역 활력으로 이어지는 자생적 관광생태계 육성

(5) 전략 5. 연계·협력 기반의 관광효과 확산

- 행정구역과 개별 관광지의 경계를 넘어 지역·관광자원·산업 간 연계와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통해 관광공간과 관광경험의 범위 확장
- 광역·초광역 관광 연계와 지역 간 역할 분담을 통해 관광객의 이동·체류·소비를 지역으로 확산하고 관광개발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제고, 관광자원 영역 확장으로 다양한 신규 관광자원 창출

(6) 전략 6. 관광개발 제도·관리체계 혁신

- 관광개발 환경과 정책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광개발 관련 계획·제도와 추진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정책 실행력 강화
- 관광자원의 개발·이용·보호·관리를 전 주기적으로 고려하고 계획부터 사업 추진·운영·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관광개발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2.5.4 권역별 전략 및 추진계획

가. 수도권

(1) 관광권역 목표

- K-컬처를 세계와 지역으로 잇는 대한민국 관광관문

(2) 발전 방향

- 글로벌 관문과 K-컬처를 연계한 대한민국 대표 관광허브 구축
- K-컬처와 고부가 관광산업을 결합한 글로벌 관광경쟁력 강화
- 도시·해양·수변·평화생태자원을 연계한 다핵형 체류관광지대 조성
- 초연결·포용·상생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수도권 관광생태계 구축

(3) 시·도별 전략

(가) 서울

- 서울다운 관광경험을 관광소비와 고부가가치로 연결
- 관광경험의 시간적 확장으로 365일 즐거운 관광도시 구현
-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경험하는 관광환경 조성
- 관광성과를 지역과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 구축

(나) 인천

- 신관광 수요 대응형 차별적 매력 강화
- 경쟁력 있는 관광명소 확충·고도화
- 권역별 관광특화와 균형발전
- 글로벌 수준의 관광환경 조성
- 인천관광 고도화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

(다) 경기

- 경기로컬여행(G-Local)기반 및 거점 확충
- 경기로컬여행(G-Local) 고도화
- 경기형 특화 관광거점 육성 및 브랜드화
- 고부가 관광거점 및 상품 육성
- 경기관광 글로벌 인지도 제고
- 교통·라이프스타일 경계 없는 포용 관광환경 구축
- 데이터·AI·협력 기반 시공간 경계 없는 혁신 관광생태계 구축

나. 중부권

(1) 관광권역 목표

- 과학·문화와 내륙·서해를 잇는 대한민국 관광중심축

(2) 발전 방향

- 해양과 내륙의 자연자원을 연결한 광역 치유·휴양관광지대 조성
- 역사문화·과학·행정도시 자원을 융합한 중부권 특화 관광콘텐츠 육성
- 광역교통망과 핵심 관광거점을 활용한 초연결 체류관광권 구축
- 로컬관광과 야간경제를 기반으로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관광생태계 조성
- 스마트·포용·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중부권 관광경쟁력 강화

(3) 시·도별 전략

(가) 대전

- 지역문화 기반 로컬관광 고도화, 도시 경험 기반 체류형·야간경제관광 거점화
- 권역별·소권별 관광거점자원 개발 및 관광공간 활성화
- 지역관광 생태계 및 경쟁력 강화

(나) 세종

- 관광 거점 명소화를 통한 관광벨트 구축 기반 마련
- 상반된 매력이 공존하는 세종시 특화 콘텐츠 개발
- 체류형 관광 및 야간 경제관광 기반 구축
- 무장애 관광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

(다) 충북

- [SPACE] 고품격 체류 인프라 및 거점 현대화
- [CONTENTS] 내륙의 바다·백두대간, K-자연 콘텐츠 확충
- [HUMAN] 로컬 활력 증진 및 글로벌 교류 활성화
- [PLATFORM] 관광 생태계 고도화 및 미래 성장 기반

(라) 충남

- 글로벌 해양레저생태관광 거점화
- 오감 힐링 휴양관광 특화
- 체류형 휴양관광 기반 마련
- 지속가능 융복합 관광콘텐츠 개발
- 관광환경·편의 기반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

다. 서남권

(1) 관광권역 목표

- 자연 속에 의향·예향·미향으로 머무는 전남광주, 글로컬 관광특별시

(2) 발전 방향

- 지역 고유자원의 고부가 융·복합관광 전환
- 체류형 관광을 위한 관광동선 연계 및 관광기반·수용태세 강화
- 국제 관광 확대와 목적지 브랜드 경쟁력 강화
- 지역별 거점 특화와 광역 관광동선 연계
-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와 통합 운영기반 구축

(3) 시·도별 전략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해양·생태·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 융복합관광 전환
- 대한민국 대표 의향·예향·미향 관광콘텐츠 활성화
- 관광 동선 연계를 통한 체류·소비 기반 강화
- 관문 기능 강화와 국제관광 확대
- 통합 운영체계 구축과 지역 주도 관광생태계 조성

라. 대경권

(1) 관광권역 목표

○ 천년의 유산과 미래혁신을 잇는 글로벌 관광 중심

(2) 발전 방향

○ 천년 역사문화를 연결하는 K-헤리티지 관광루트 구축

○ 대구의 도시관광 기능을 활용한 경북 체류관광 확산

○ 천년유산에 미래기술을 더한 혁신관광 콘텐츠 육성

○ 관광성과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는 균형성장 기반 마련

(3) 시·도별 전략

(가) 대구

○ 체류형 관광·고부가가치 관광 육성

○ 대구 특화 K-컬처·랜드마크로 관광도시 인지도 제고

○ 도심과 자연을 연결한 취향 맞춤 관광 구현

○ 초광역 연결과 공항 기반 관광시장 확장

○ 신기술 활용·환경 대응 강화로 지속가능한 미래 관광생태계 구축

(나) 경북

○ 글로벌 스탠더드 K-관광 허브 구축,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 조성

○ 지역 주도 맞춤형 관광 개발,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 확충

마. 동남권

(1) 관광권역 목표

○ 세계로 열린 해양·산업·생태 융합관광 중심

(2) 발전 방향

○ 국제관문과 지역거점을 연결하는 초광역 관광생활권 구축

○ 해양·산업·생태·K-컬처 융합관광 경쟁력 강화

○ 스마트·데이터 기반의 통합 관광목적지 조성

○ 체류경제와 지역가치가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관광권 육성

(3) 시·도별 전략

(가) 부산

- ㅇ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누리는 공존형 도시 관광, 머무름과 소비가 확대되는 체류경제형 관광
- ㅇ 바다·도시·자연이 연결되는 입체형 관광
- ㅇ 광역연계·AI 기반의 미래형 관광

(나) 울산

- ㅇ (편리한 관광) 관광 이동을 연결하는 스마트·무장벽 관광환경 구축
- ㅇ (함께하는 관광) 관광가치가 지역에 환류되는 로컬 관광경제 구축
- ㅇ (지속가능한 관광) 보전과 성장이 공존하는 재생형 관광도시 구축
- ㅇ (잇는 관광) 핵심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통합 관광목적지 구축
- ㅇ (머무는 관광) 체류시간과 소비를 확대하는 체류경제형 관광도시 구축
- ㅇ (견인하는 관광) 복합관광거점 중심의 관광수요·투자 견인 기반 구축

(다) 경남

- ㅇ 글로벌 관문 연계 세계 수준의 관광인프라·콘텐츠 경쟁력 강화
- ㅇ 경남형 관광매력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 브랜드 가치 제고
- ㅇ 여행에서 생활로 이어지는 경남형 체류관광 활성화
- ㅇ 관광소비의 지역 내 순환을 통한 도민 체감형 경제효과 확대

바. 강원권

(1) 관광권역 목표

- ㅇ 다양한 강원다움으로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

(2) 발전 방향

- ㅇ 강원형 생태관광 힐링 브랜드 구축
- ㅇ 기존 관광자원·로컬감성의 활용 및 고도화
- ㅇ 융복합형 관광생태계 구축 및 연계·협력체계 구축
- ㅇ 글로벌 체류형 복합관광지 조성 및 콘텐츠 발굴, 지속가능한 관광환경 구축

사. 전북권

(1) 관광권역 목표

○ 전북의 맛과 쉼, 세계가 찾는 전북관광

(2) 발전 방향

○ 세계가 찾는 전북관광 기반 구축, 맛·쉼·문화 관광콘텐츠 고도화

○ 전북형 로컬관광 자원 브랜드화, 체류·재방문 관광상품 개발

○ 지속가능·편리한 관광수용태세 확립

아. 제주권

(1) 관광권역 목표

○ 도민과 여행자 모두가 행복한 글로컬 여행지 제주

(2) 발전 방향

○ 책임관광 육성으로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과 지속가능성 강화

○ 치유와 함께하는 지역관광체계 확립으로 새로운 관광산업생태계로 도약

○ 청정이미지를 담은 지역고유자산을 활용한 특화관광 육성, 지역관광 혁신역량 제고

○ 참여와 공존을 통한 지역관광 혁신역량 제고

2.6 계획의 기대효과

○ 국가 및 지역의 국제경쟁력 강화

- 전국 관광자원의 보호·이용·개발·관리를 통하여 관광유인력 및 관광만족도를 제고시킴으로써 주변국들과의 관광자원 및 시설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함

○ 국내·외 관광객 수용태세 확충을 통한 관광기회 확대

- 국민관광 및 외래관광객 등 미래에 증가할 관광수요에 대비하여 서비스 및 공간의 질적 활용을 통한 관광수용능력을 확충함으로써 관광기회를 확대함

○ 관광개발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및 경제에 기여

- 지역 편의시설의 확대, 지역 고용기회의 증가, 주민의 참여 활성화, 관광개발의 지역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지역 간 균형적 개발 및 지역 경제에 기여함

○ 미래 국토 공간에 대한 계획적 관리

- 제8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부처별 개발계획을 관광개발 측면에서 통합·조정하여 체계적인 국토 이용 정책에 기여함

2.7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주요 성과, 시사점

2.7.1 주요 성과

가. 다양한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 ㅇ미식, MICE, 섬 등 특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공간 조성
- ㅇ계획공모형 등 지역의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정책 추진
- ㅇ워케이션 등 지역 체류 및 효과 확산을 위한 노력

나. 자원, 시장, 주체의 효율적 추진 기반 마련

- ㅇ반값 여행 및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확대 등으로 국내 여행의 시간적·경제적 제약 완화
- ㅇDMO 지원 등을 통한 지역관광 자립 체계 마련

다. 관광 법제 정비 및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 체계 마련

- ㅇ관광기본법 전부 개정(안) 발의
- ㅇ관광 여건과 트렌드 반영을 위해 관광 법률 지속 개정
- ㅇ지역관광개발사업 성과평가체계 구축 및 시행

2.7.2 시사점

가. 외래관광객 수요 대응 및 트렌드 대응 필요

- ㅇ외래관광객 수요 및 다각화 된 정책 요구 등에 효과적 대응
- ㅇ지자체 및 운영관리 주체의 역량 강화
- ㅇ관광객 이동 및 관광활동 편의를 위한 통합 AI서비스 제공

나. 다각적 연계·협력체계 및 지역관광 법적 체계 구축 필요

- ㅇ관광의 융복합화, 관광객 이동 비정형화 등을 고려하고 부처 및 지자체간 연계와 협력 노력
- ㅇ관광 관련 법제 정비 및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다.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등 지속가능 관광 실현 방안 마련

- ㅇ탄소중립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안 구체화
- ㅇ재생 및 유휴자원 활용 등 관광개발 패러다임 전환 필요
- ㅇ관광개발 효과를 지역으로 확산 필요

2.8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2027~2031)의 수정내용

2.8.1 관광개발의 정책방향 전환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의 관광개발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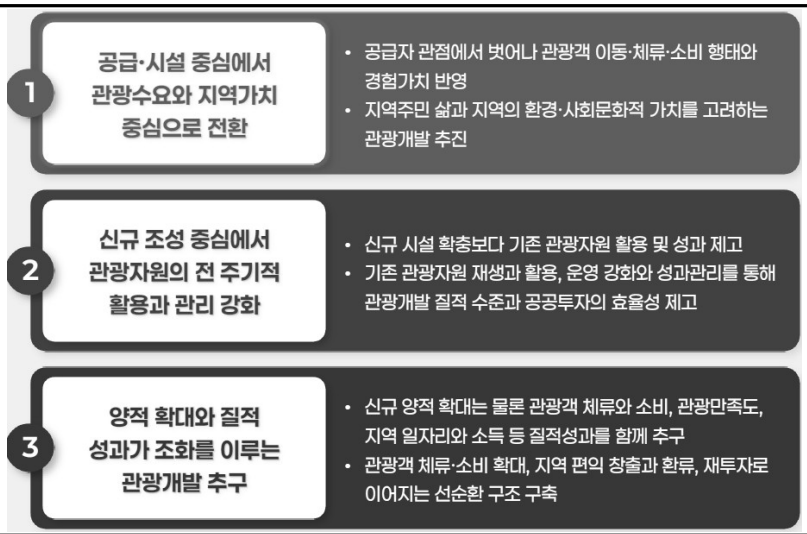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포괄하는 전 주기적 과정

-개발, 이용, 보호, 관리를 아우리는 통합적 접근 강화

○ 공급·시설 중심에서 관광수요와 지역가치 중심으로 전환

○ 신규 조성 중심에서 관광자원의 전 주기적 활용과 관리 강화

○ 양적 확대와 질적 성과가 조화를 이루는 관광개발 추구



2.8.2 관광 트렌드 및 환경 변화

○ 외래 관광객으로 범위 확대

○ 관광자원의 현명한 이용

○ 지역균형성장 및 효과 확산



2.8.3 관광자원의 범위 확장

- 전통적 관광자원의 가치 재발견과 경쟁력 강화
- 지역의 일상과 산업을 포괄하는 관광자원의 확장
- 관광개발의 핵심요소로서 자원, 시장, 주체의 통합적 고려



2.8.4 제1차~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비전 및 방향 설정

- 초기(제1차~2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은 관광자원개발 등에 집중되어 있던 비전이 녹색한국, 행복한 국민과 같이 폭넓은 논의와 방향성을 포함한 비전으로 확대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의 비전은 “미래”, “행복” 등 다소 추상적 가치를 지향하며, 목표는 10년뒤 미래 관광개발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가치와 수단 중심으로 표현



2.8.5 계획 지표(KDI)

- 기존 계획의 기본 가치를 계승하되, 변화된 환경에 대응해 성과 중심으로 재정립
- 기존 3개의 계획지표를 본 수정계획 목표와 연계하여 5개로 확대 및 구체화

2.8.6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과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비교

구 분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22~2031)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2027~2031)**
범 위	2022~2031	2027~2031
비 전	미래를 여는 관광한국, 관광으로 행복한 국민	모두가 누리는 관광, 관광으로 성장하는 대한민국
목 표	• 사람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상생관광 • 질적 발전을 추구하는 스마트·혁신관광 •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지속가능관광	• 세계적 관광매력을 갖춘 글로벌 관광 • 체류와 소비를 지역으로 확산하는 상생관광 • 관광가치와 지역 활력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관광
전략 및 과제	• 6대 전략 -전략 1. 매력적 관광자원 발굴 -전략 2. 지속가능 관광개발 가치 구현 -전략 3. 편리한 관광편의 기반 확충 -전략 4. 건강한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전략 5. 입체적 관광연계 협력 강화 -전략 6. 혁신적 제도·관리 기반 마련	• 6대 전략 -전략 1. 관광자원의 매력과 가치 제고 -전략 2.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이용·관리 -전략 3. 편리하고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 -전략 4. 역동적인 지역관광 생태계 육성 -전략 5. 연계·협력 기반의 관광효과 확산 -전략 6. 관광개발 제도·관리체계 혁신
	• 권역별 전략 및 추진계획 -수도·강원·제주권 : 글로벌 K관광 선도지대로 육성 ·수도권 : 글로벌 관광허브, 한류 중심지역 ·강원권 : 세계인이 다시 찾는 생태웰빙휴양 관광지역 ·제주권 : 미래지향적인 청정자연유산관광 중심지역 -충청권 : 과학기술기반의 백제·중원문화 관광지대 -전라권 : 다도해·새만금을 품은 문화예술 관광지대 -대경권 : 유교문화에 기반한 역사문화 생태관광지대 -부울경권 : 산업기반 해양레저·문화관광지대	• 권역별 전략 및 추진계획 -수도권 : K-컬처를 세계와 지역으로 잇는 대한민국 관광관문 -중부권 : 과학·문화와 내륙·서해를 잇는 대한민국 관광중심축 -서남권 : 자연 속에 의향·예향·미향으로 머무는 글로컬 관광특별시 -대경권 : 천년의 유산과 미래혁신을 잇는 글로벌 관광 중심 -동남권 : 세계로 열린 해양·산업·생태 융합관광 중심 -강원권 : 다양한 강원다움으로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 -전북권 : 전북의 맛과 쉼, 세계가 찾는 전북관광 -제주권 : 도민과 여행자 모두가 행복한 글로컬 여행지 제주
계획 지표(KDI)	관광객 수, 관광 일수, 지역관광발전지수	외국인 관광객 수, 국민여행 지출액(1회), 방한 외국인 관광객 지출액(1인당), 방한 외국인 관광객 비수도권 방문율, 비수도권 관광사업체수

제 3 장

환경보전목표

3.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3.2 평가지표(요소) 및 환경기준 설정

제3장 환경보전목표

3.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3.1.1 환경보전목표 설정 항목

○ 환경보전목표 설정 항목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및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5. 4,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시된 사항을 토대로 설정함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대기·수질환경·탄소중립 등 국가의 분야별 환경계획의 주요 목표 또는 지표

-시·도환경계획, 시·군·구환경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등 해당 지역 환경보전계획의 주요 목표 또는 지표

-생태면적률, 환경생태계획 등 국내·외에서 적용·활용 중인 다양한 계획기법 및 정책 목표

-국제협약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 설정한 기준

-환경기준, 생태·자연도, 오염총량 기준 등 관계 법률에서 설정한 기준

○ 환경보전목표는 현재의 과학과 기술로 달성가능하면서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

3.1.2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목표 설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제7조의2 및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5. 4,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항목별로 설정함

○ 한편, 환경보전목표의 설정은 해당 계획이 추구 또는 이루고자 하는 환경보전목표를 평가분야 또는 항목별로 정량적으로 설정하되, 본 계획은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정계획으로 사업특성상 정량적으로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성적으로 설정·제시함

〈표 3.1-1〉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목표 설정

평가항목		환 경 보 전 목 표	설정사유
가. 환경보전 계획과의 부합성	국가환경정책	○본 정책계획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환경계획 및 시책과 부합하는지 검토	○국가환경정책과의 부합성 검토
	국제환경동향·협약·규범	○본 정책계획이 국제적 환경관리 협약·조약·규범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는지 여부를 검토	○국제환경동향·협약·규범 등과의 부합성 검토
나.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국토종합계획,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 부합하는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정계획 수립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계획의 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계획목표와 계획의 세부내용이 일관성 있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검토	○계획목표 및 내용의 일관성 검토
다.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공간계획의 적정성	○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여건 변화와 관련 장·단기적 보전대책을 감안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검토	○공간계획의 적정성 검토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수요 및 공급 규모 등과 연계한 환경계획 수립	○효율적인 수요·공급 적정성 검토
	환경용량의 지속성	○환경용량 및 환경지표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검토	○환경계획 타당성 검토

3.2 평가지표(요소) 및 환경기준 설정

○ 본 관광개발기본계획은 전국(대한민국) 단위로 수립되는 계획으로 환경보전목표에 대한 정량화가 곤란함에 따라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 후 시행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및 관광개발 시 평가항목별 적정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요소)를 설정하였음

○ 환경기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으로서 본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 후 시행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및 관광개발 시 계획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자연·생활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목표로 설정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음

3.2.1 평가지표(요소)

〈표 3.2-1〉 평가지표(요소) 설정

세부 평가항목	평가지표(요소) 설정
환경보전목표와의 부합성	○ 환경기준 유지 달성 가능성
	○ 권역별 목표수질과의 적합성
	○ 물 수요관리 목표와의 적합성
	○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목표 등과의 적합성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 상위계획의 목표 및 내용과의 정합성
	○ 상위계획의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구상과의 부합성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전략과의 연계성
	○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전략과의 부합성
	○ 품격 있고 환경친화적 공간 창출전략과의 부합성
환경계획과의 정합성	○ 시·도 및 시·군·구 환경보전계획과의 정합성
	○ 시·도 야생생물보호세부계획과의 정합성
	○ 시·도 습지보전 실천계획과의 정합성
	○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의 부합성
계획목표와의 적정성	○ 계획 목표 설정의 적정성
추진전략과 방법의 적정성	○ 세부 추진전략 및 추진방법의 적정성
생태적 건강성	○ 보전·보호용도지역 보전
	○ 국토생태네트워크 및 생태축 보전
	○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 가능성
	○ 생태복원 계획의 적정성
	○ 생태통로 계획의 적정성
쾌적한 생활환경	○ 공원·녹지계획의 적정성
	○ 오염원과 배려시설 배치계획의 적정성

3.2.2 대기질

가. 대기 환경기준

〈표 3.2-2〉 대기환경기준

항목	기준	비고
아황산가스 (SO_2)	연간 평균치 : 0.02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 0.05ppm 이하 1시간 평균치 : 0.15ppm 이하	-
일산화탄소 (CO)	8시간 평균치 : 9ppm 이하 1시간 평균치 : 25ppm 이하	-
이산화질소 (NO_2)	연간 평균치 : 0.03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 0.10ppm 이하	-
미세먼지 (PM-10)	연간 평균치 : 50㎍/㎥ 이하 24시간 평균치 : 100㎍/㎥ 이하	-
초미세먼지 (PM-2.5)	연간 평균치 : 15㎍/㎥ 이하 24시간 평균치 : 35㎍/㎥ 이하	-
오존 (O_3)	8시간 평균치 :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 0.1ppm 이하	-
납 (Pb)	연간 평균치 : 0.5㎍/㎥ 이하	
벤젠	연간 평균치 : 5㎍/㎥ 이하	-

비고) 1.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3. 초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자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

3.2.3 수질 및 수생태계

가. 하천

(가)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표 3.2-3〉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구 분	항 목	기준값(㎎/L)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카드뮴(Cd)	0.005 이하
	비소(As)	0.05 이하
	시안(CN)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1)
	수은(Hg)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1)
	유기인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납(Pb)	0.05 이하
	6가크롬(Cr^{6+})	0.05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ABS)	0.5 이하
	사염화탄소	0.004 이하
	1,2-디클로로에탄	0.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4 이하
	디클로로메탄	0.02 이하

〈표 계속〉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구 분	항 목	기준값(㎎/L)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벤젠	0.01 이하
	클로로포름	0.08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0.008 이하
	안티몬	0.02 이하
	1,4-다이옥세인	0.05 이하
	포름알데히드	0.5 이하
	헥사클로로벤젠	0.00004 이하

자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

(나) 생활환경 기준

〈표 3.2-4〉 하천 생활환경 기준

구분	등급		상태	기준								
				수소이온농도(pH)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L)	화학적 산소요구량(COD)(㎎/L)	총유기탄소량(TOC)(㎎/L)	부유물질량(SS)(㎎/L)	용존산소량(DO)(㎎/L)	총인(T-P)(㎎/L)	대장균군(군수/100mL)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생활환경기준	매우좋음	Ia		6.5~8.5	1 이하	2 이하	2 이하	25 이하	7.5 이상	0.02 이하	50 이하	10 이하
	좋음	Ib		6.5~8.5	2 이하	4 이하	3 이하	25 이하	5.0 이상	0.04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약간좋음	II		6.5~8.5	3 이하	5 이하	4 이하	25 이하	5.0 이상	0.1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III		6.5~8.5	5 이하	7 이하	5 이하	25 이하	5.0 이상	0.2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나쁨	IV		6.0~8.5	8 이하	9 이하	6 이하	100 이하	2.0 이상	0.3 이하	-	-
	나쁨	V		6.0~8.5	10 이하	11 이하	8 이하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할 것	2.0 이상	0.5 이하	-	-
	매우나쁨	VI		-	10 초과	11 초과	8 초과	-	2.0 미만	0.5 초과	-	-

비고)

1.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가. 매우 좋음 :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나. 좋음 :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다. 약간 좋음 :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라. 보통 :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마. 약간 나쁨 :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바. 나쁨 :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않으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사. 매우 나쁨 :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아. 용수는 당해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자. 수소이온농도(pH) 등 각 기준항목에 대한 오염도 현황, 용수처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맞는 처리방법에 따라 용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음.

자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

나. 지하수질

〈표 3.2-5〉 먹는물의 수질기준

1. 미생물에 관한 기준
   가. 일반세균은 1mL 중 100CFU(Colony Forming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저온일반세균은 20CFU/mL, 중온일반세균은 5CFU/m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병에 넣은 후 4℃를 유지한 상태에서 12시간 이내에 검사하여 저온일반세균은 100CFU/mL, 중온일반세균은 20CFU/m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총 대장균군은 100mL(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매월 또는 매 분기 실시하는 총 대장균군의 수질검사 시료(試料) 수가 20개 이상인 정수시설의 경우에는 검출된 시료 수가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대장균·분원성 대장균군은 10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분원성 연쇄상구균·녹농균·살모넬라 및 쉬겔라는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마.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은 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바. 여시니아균은 2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2.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가. 납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불소는 1.5㎎/L(샘물·먹는샘물 및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의 경우에는 2.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비소는 0.01㎎/L(샘물·염지하수의 경우에는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라. 셀레늄은 0.01㎎/L(염지하수의 경우에는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수은은 0.001㎎/L를 넘지 아니할 것
   바. 시안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사. 크롬은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아. 암모니아성 질소는 0.5㎎/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질산성 질소는 10㎎/L를 넘지 아니할 것
   차. 카드뮴은 0.005㎎/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붕소는 1.0㎎/L를 넘지 아니할 것(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타. 브롬산염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수돗물, 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및 오존으로 살균·소독 또는 세척 등을 하여 먹는물로 이용하는 지하수만 적용한다)
   파. 스트론튬은 4㎎/L를 넘지 아니할 것(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하. 우라늄은 30㎍/L를 넘지 않을 것[수돗물(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수돗물을 말한다), 샘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3.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가. 페놀은 0.005㎎/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다이아지논은 0.02㎎/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파라티온은 0.06㎎/L를 넘지 아니할 것
   라. 페니트로티온은 0.04㎎/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카바릴은 0.07㎎/L를 넘지 아니할 것
   바. 1,1,1-트리클로로에탄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사.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아. 트리클로로에틸렌은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디클로로메탄은 0.02㎎/L를 넘지 아니할 것
   차. 벤젠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톨루엔은 0.7㎎/L를 넘지 아니할 것
   타. 에틸벤젠은 0.3㎎/L를 넘지 아니할 것

〈표 계속〉 먹는물의 수질기준

파. 크실렌은 0.5㎎/L를 넘지 아니할 것
하. 1,1-디클로로에틸렌은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거. 사염화탄소는 0.002㎎/L를 넘지 아니할 것
너.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은 0.003㎎/L를 넘지 아니할 것
더. 1,4-다이옥산은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4.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샘물·먹는샘물·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먹는해양심층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잔류염소(유리잔류염소를 말한다)는 4.0㎎/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총트리할로메탄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클로로포름은 0.08㎎/L를 넘지 아니할 것
라. 브로모디클로로메탄은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바. 클로랄하이드레이트는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사.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아.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0.09㎎/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0.004㎎/L를 넘지 아니할 것
차. 할로아세틱에시드(디클로로아세틱에시드, 트리클로로아세틱에시드 및 디브로모아세틱에시드의 합으로 한다)는 0.1㎎/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포름알데히드는 0.5㎎/L를 넘지 아니할 것
5.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가. 경도(硬度)는 1,000㎎/L(수돗물의 경우 300㎎/L,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 1,20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1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냄새와 맛은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맛 이외의 냄새와 맛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 다만, 맛의 경우는 샘물, 염지하수,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동은 1㎎/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색도는 5도를 넘지 아니할 것
바. 세제(음이온 계면활성제)는 0.5㎎/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사. 수소이온 농도는 pH 5.8 이상 pH 8.5 이하이어야 할 것. 다만, 샘물,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는 pH 4.5 이상 pH 9.5 이하이어야 한다.
아. 아연은 3㎎/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염소이온은 250㎎/L를 넘지 아니할 것(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차. 증발잔류물은 수돗물의 경우에는 500㎎/L,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미네랄 등 무해성분을 제외한 증발잔류물이 500㎎/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철은 0.3㎎/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타. 망간은 0.3㎎/L(수돗물의 경우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파. 탁도는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및 전용상수도를 제외한 수돗물의 경우에는 0.5NTU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하. 황산이온은 20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은 250㎎/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거. 알루미늄은 0.2㎎/L를 넘지 아니할 것
6. 방사능에 관한 기준(염지하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세슘(Cs-137)은 4.0mBq/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스트론튬(Sr-90)은 3.0mBq/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삼중수소는 6.0Bq/L를 넘지 아니할 것

자료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 먹는물의 수질기준

〈표 3.2-6〉 지하수의 수질기준

1.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경우 :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소독제 및 소독제 부산물질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
2. 지하수를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공업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항목 \ 이용목적별		생활용수 (mg/L)	농·어업용수 (mg/L)	공업용수 (mg/L)
일반오염물질 (4개)	수소이온농도(pH)	5.8~8.5	6.0~8.5	5.0~9.0
	총대장균군	5,000 이하 (군수/100mL)	-	-
	질산성질소	20 이하	20 이하	40 이하
	염소이온	250 이하	250 이하	500 이하
특정유해물질 (16개)	카드뮴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비소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시안	0.01 이하	0.01 이하	0.2 이하
	수은	0.001 이하	0.001 이하	0.001 이하
	다이아지논	0.02 이하	0.02 이하	0.02 이하
	파라티온	0.06 이하	0.06 이하	0.06 이하
	페놀류	0.005 이하	0.005 이하	0.01 이하
	납	0.1 이하	0.1 이하	0.2 이하
	크롬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이하	0.03 이하	0.06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1,1,1-트리클로로에탄	0.15 이하	0.3 이하	0.5 이하
	벤젠	0.015 이하	-	-
	톨루엔	1 이하	-	-
	에틸벤젠	0.45 이하	-	-
	크실렌	0.75 이하	-	-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염소이온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어업용수

나. 지하수의 이용 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해수침입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염소이온 농도가 증가한 경우

2.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가 생활용수의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경우에는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자료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1조 관련 [별표 9] 지하수의 수질기준

3.2.4 토양

가. 토양오염우려기준

〈표 3.2-7〉 토양오염우려기준

물 질	오염 기준 (단위 : ㎎/㎏,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pg-TEQ/g)		
	1지역	2지역	3지역
1. 카드뮴(Cd)	4	10	60
2. 구리(Cu)	150	500	2,000
3. 비소(As)	25	50	200
4. 수은(Hg)	4	10	20
5. 납(Pb)	200	400	700
6. 6가크롬(Cr^{6+})	5	15	40
7. 아연(Zn)	300	600	2,000
8. 니켈(Ni)	100	200	500
9. 불소(F)	800	1,300	2,000
10. 유기인화합물	10	10	30
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1	4	12
12. 시안(CN)	2	2	120
13. 페놀	4	4	20
14. 벤젠	1	1	3
15. 톨루엔	20	20	60
16. 에틸벤젠	50	50	340
17. 크실렌	15	15	45
18.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00	800	2,000
19. 트리클로로에틸렌(TCE)	8	8	40
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4	4	25
21. 벤조(a)피렌	0.7	2	7
22. 1,2-디클로로에탄	5	7	70
23.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	160	340	1,000

비고)

1. 1지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광천지 · 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 · 학교용지 · 구거(溝渠) · 양어장 · 공원 · 사적지 · 묘지인 지역과「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2. 2지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 · 염전 · 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 · 창고용지 · 하천 · 유지 · 수도용지 · 체육용지 · 유원지 · 종교용지 및 잡종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3. 3지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 · 주차장 · 주유소용지 · 도로 · 철도용지 · 제방 · 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국방 · 군사시설 부지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반환하거나「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12조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의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반환 후 용도에 따른 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5. 벤조(a)피렌 항목은 제한물질·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폐받침목을 사용한 지역(예: 철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및 하천 등)에만 적용한다.
6.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하는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조치명령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조사 기간 또는 정화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지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목변경이 예정된 경우에는 변경 예정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된 경우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하여「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후 공사가 착공된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목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가 착공된 경우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하는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의 관계 서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의 용도에 부합하는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관계 서류를 통하여 그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지역에 해당하는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자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관련 [별표 3]

나. 토양오염대책기준

〈표 3.2-8〉 토양오염대책기준

물 질	오염 기준 (단위 : ㎎/㎏,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pg-TEQ/g)		
	1지역	2지역	3지역
1. 카드뮴(Cd)	12	30	180
2. 구리(Cu)	450	1,500	6,000
3. 비소(As)	75	150	600
4. 수은(Hg)	12	30	60
5. 납(Pb)	600	1,200	2,100
6. 6가크롬(Cr^{6+})	15	45	120
7. 아연(Zn)	900	1,800	5,000
8. 니켈(Ni)	300	600	1,500
9. 불소(F)	2,400	3,900	6,000
10. 유기인화합물	-	-	-
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3	12	36
12. 시안(CN)	5	5	300
13. 페놀	10	10	50
14. 벤젠	3	3	9
15. 톨루엔	60	60	180
16. 에틸벤젠	150	150	1,020
17. 크실렌	45	45	135
18. 석유계총탄화수소(TPH)	2,000	2,400	6,000
19. 트리클로로에틸렌(TCE)	24	24	120
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	12	75
21. 벤조(a)피렌	2	6	21
22. 1,2-디클로로에탄	15	20	210
23.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	500	1,000	3,000

비고)

1. 1지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광천지 · 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 · 학교용지 · 구거(溝渠) · 양어장 · 공원 · 사적지 · 묘지인 지역과「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2. 2지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 · 염전 · 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 · 창고용지 · 하천 · 유지 · 수도용지 · 체육용지 · 유원지 · 종교용지 및 잡종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3. 3지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 · 주차장 · 주유소용지 · 도로 · 철도용지 · 제방 · 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국방 · 군사시설 부지
4. 벤조(a)피렌 항목은 제한물질·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폐받침목을 사용한 지역(예: 철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및 하천 등)에만 적용한다.
5. 법 제17조에 따른 토양오염대책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토양오염대책기준은 지정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지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목변경이 예정된 경우에는 변경 예정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된 경우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하여「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후 공사가 착공된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목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가 착공된 경우

자료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0조 관련 [별표 7]

3.2.5 소음·진동

가. 환경기준

(1) 소음

〈표 3.2-9〉 소음 환경기준 [단위 : Leq ㏈(A)]

지역구분	적용 대상지역	기 준	
		낮 (06:00~22:00)	밤 (22:00~06:00)
일반지역	“가” 지역	50	40
	“나” 지역	55	45
	“다” 지역	65	55
	“라” 지역	70	65
도로변지역	“가” 및 “나” 지역	65	55
	“다” 지역	70	60
	“라” 지역	75	70

비고)

1. 지역구분별 적용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5)「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6)「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나)「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특수도서관
   나. “나”지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 “다”지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라. “라”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2. "도로"란 자동차(2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가 한 줄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는 데에 필요한 일정 폭의 차선이 2개 이상 있는 도로를 말한다.
3.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

(2) 진동

○ 「환경정책기본법」상 별도의 진동 환경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음

(가) 규제기준

〈표 3.2-10〉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 지역	시간대별 /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 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자료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표 3.2-11〉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dB(V)]**

시간대별 / 대상 지역	주간 (06:00~22:00)	심야 (22:00~06: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비고)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dB을 보정한다.**

자료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 4 장

정책계획 대안

4.1 대안의 종류 설정

4.2 대안의 비교·검토

제4장 정책계획 대안

4.1 대안의 종류 설정

4.1.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23, 환경부」,「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및「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5. 4,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안의 종류 및 설정방법에 따라 대안의 종류 및 방법을 선정하였음

○관광개발기본계획에 따른 대안의 종류 선정은 계획비교, 수단·방법, 수요·공급에 대해 시행하였으며, 본 계획은 정책계획으로 현재 단계에서 시기·순서, 입지 등에 대한 계획수립이 어려워 대안 설정에서는 제외함

〈표 4.1-1〉 대안의 종류 및 설정

대안유형	대안 설정 방법	선정여부
계획비교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Action)을 대안으로 선정	◎
수단과 방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수요와 공급	○정책에 관한 수요예측을 토대로 수요와 공급 측면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설정	◎
시기와 순서	○정책의 시행 시기 및 정책 수요의 충족을 위한 단계별 충족 방안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설정	-
입 지	○공간구상 및 전략, 입지,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한 대안 설정	-
기 타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4.2 대안의 비교·검토

4.2.1 계획 비교

○ 계획 비교에 대한 대안은 본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Action)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를 대안으로 선정하여 비교·검토한 결과 대안1(Action)을 선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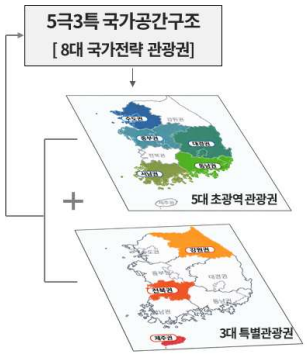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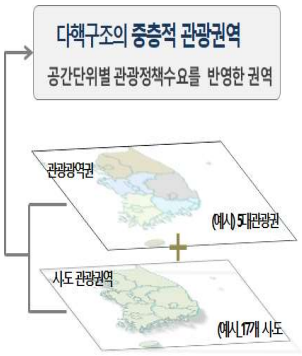
〈표 4.2-1〉 계획 비교에 따른 대안 검토

대안비교	대안 1안 계획수립시(Action)	대안 2안 계획 미수립시(No Action)
계획비교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2027~2031)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21~2031)
장 점	○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 기존 관광자원의 재해석·고도화와 콘텐츠 융복합을 통한 관광매력 강화 ○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이용·관리) 기후위기 대응과 노후·유휴 관광자원 재생 등 지속가능한 이용·관리 확대 ○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 이동·체류 전 과정의 편의성과 관광약자의 접근성·안전 강화 ○ (지역관광 생태계) 지역주체 참여와 지역산업 연계를 통한 자생적 관광생태계 육성 ○ (관광효과 확산) 광역·초광역 연계협력으로 관광객의 이동·체류·소비 및 파급효과 확산 ○ 계획부터 운영·관리까지 전 주기를 연계한 관광개발 제도·추진체계 개선 ○ 환경 분야 -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생태계 복원, 관광수용력 관리 강화	○ 관광자원 영역 확장으로 다양한 신규 관광자원 창출 ○ 대표 문화콘텐츠의 국제관광 경쟁력 제고 ○ (미래) 기술과 희소가치가 결합한 미래형 관광자원 발굴 ○ (개인별) 관광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세밀한 관광개발 ○ (정부·지자체) 정부와 지자체의 연계 관광개발 추진 ○ (중앙부처) 관광다양성 확보를 위한 부처 간 협력 강화 ○ (국제) 남북 및 동북아 연계 관광자원 개발 ○ 융복합 관광콘텐츠 발굴 및 확대 ○ 다양한 자원과 기술이 결합되면서 관광자원 범위가 확장 ○ 환경 분야 - 기존 환경보전 정책의 연속성 유지
단 점	○ 환경분야 - 신규 관광거점 및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과 환경부하 증가 가능성	○ 2021년(코로나19 시기)에 수립되어 엔데믹 이후의 관광수요와 새로운 관광행태 반영 한계 ○ 정부 교체에 따른 국정과제와 5극3특 등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 반영이 어려움 ○ 환경분야 - 기후위험 변화, 관광객 집중, 노후시설 등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한계
선 정 안	◎ (선정)	-

4.2.2 수단과 방법

○ 본 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되었던 권역 설정의 대안으로서 8대 국가전략 관광권(5대 초광역 관광권, 3대 특별관광권), 다핵구조의 중층적 관광권(5개 대권+16개 시·도), 16개 시·도 기반 지역자율 관광협력권(관광권 설정, 개방) 3개 대안의 설정안을 비교하였음

〈표 4.2-2〉 수단·방법 대안의 비교·검토

평가영역	대안1 (8대 국가전략 관광권 : 5대 초광역관광권, 3대 특별관광권)	대안2 (다핵구조의 중층적 관광권 : 5개 대권+16개 시·도)	대안3 (16개 시·도 기반 지역자율 관광협력권 : 관광권 설정, 개방)
공간구조			
주요내용	○ 현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에 따른 국토공간구조를 관광권역 설정의 기본골격으로 반영하여 8대 국가전략 관광권 설정	○ 다핵구조의 중층적 관광권역은 5개 대권과 16개 시·도가 중첩된 공간이며, 관광단위별 정책수요를 반영한 권역	○ 지역자율 관광협력권은 16개 시·도 기반으로 지역의 필요에 따라 지역이 주도적으로 협력권을 설정
장점	○ [균형발전] 5극은 대도시와 광역교통망을 중심으로 권역별 관광거점을 육성 및 관광수요 확산, 3특은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특성과 고유 관광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 발전 체계 구축 ○ [정합성 확보]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국토공간 구조를 관광 분야에 반영하여 국가 공간정책과 관광개발 정책 간 일관성 확보	○ [협력상생] 국가적 차원의 지역 간 연계사업의 체계적인 발굴과 지속적인 추진 가능 ○ [통합관리] 편협, 편중,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자원의 통합적 관리 가능 ○ [관광수요] 관광객 이동수요 반영	○ [가변성] 대권 설정 원칙만 제시, 지방분권 및 미래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의 유연한 대응 ○ [확장성] 다양한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관광공간 창출 ○ [실천성] 행정구역 중심의 집행력 제고로 신속한 의사결정 및 실행계획 추진 가능

〈표 계속〉 수단·방법 대안의 비교·검토

평가영역	대안1 (8대 국가전략 관광권 : 5대 초광역관광권, 3대 특별관광권)	대안2 (다핵구조의 중층적 관광권 : 5개 대권+16개 시·도)	대안3 (16개 시·도 기반 지역자율 관광협력권 : 관광권 설정, 개방)
단점	◦권역 간 기능과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조정 체계 구축 필요	◦시·도 통합형보다 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상호간 이해 부족, 권역 내 중심지역으로 관광수요와 투자가 집중될 가능성 우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관광행정 서비스의 권역 간 격차 발생 ◦인구감소 및 저성장 위기로 관광경쟁력 저하 우려 ◦연계협력, 관광 이동 수요 반영과 협의 도출을 위한 별도 지원 필요
선정	◎	-	-
선정 사유	◦대안 1은 정부의 국가균형성장전략인 5극3특의 국토공간구조와 정합성 확보, 관광자원·교통망·관광객 이동 및 시·도 간 정책협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반영 ◦5대 초광역관광권은 복수 시·도의 관광자원과 거점도시, 광역교통망 및 관광콘텐츠를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개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공동 관광루트와 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공간단위로 설정 가능 ◦강원·전북·제주의 3대 특별관광권은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자율성과 고유한 자연·문화·환경, 독립적인 관광시장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전략 공간으로 설정 가능 ◦8대 국가전략 관광권은 기존 5개 대권의 광범위한 공간 설정과 권역 내부의 이질성을 보완하고, 변화된 국가공간전략을 관광개발정책에 반영 가능		

4.2.3 "수요·공급" 대안의 비교·검토

◦관광개발에 대한 실증 추세수요와 정책대응 목표수요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여 비교·검토를 시행하였음

〈표 4.2-3〉 수요·공급 대안의 비교 검토

평가 영역	대안 1 (실증 추세수요)	대안 2 (정책목표 대응수요)
장 점	◦코로나19 이후 실측 구조 변화와 인구구조·지역 간 이동을 반영하며 관광시설 공급 검토의 기초수요로 활용 가능	◦정책 달성 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관광교통·숙박·안내·지역분산 체계를 검토하는 상향 시나리오로 활용 가능
단 점	◦과거 추세와 모형 가정에 의존하며 정책개입에 따른 수요 증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관광객 4,000만 명 도달의 예측 확률이나 국내관광 목표총량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아 시설 공급량 산정의 유일한 근거로 사용하기 곤란
공 급 검 토	◦시설별 이용실적 분포와 평균·중위수를 참고해 기존 시설 활용, 노후시설 개선, 관광수용력과 지역별 수급여건 분석에 적용	◦정책목표 달성 시 혼잡·교통·숙박·환경용량 등에 대한 민감도 및 단계별 대응능력 점검에 적용
선 정	◎ (기준수요 및 단계별 공급 검토의 기초자료)	- (정책목표 달성 시나리오의 보완 검토자료)

제 5 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5.1 대상지역의 설정

5.2 항목별 대상지역의 설정

제5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5.1 대상지역의 설정

○ 본 계획은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분야 최상위 장기 법정계획으로 대한민국의 효율적인 관광개발을 위해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관광의 확충 및 관광계획 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

○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관광진흥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지역으로 설정함

5.2 항목별 대상지역의 설정

○ 관광개발기본계획의 특성에 따라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항목별 대상지역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설정함

〈표 5.2-1〉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구 분	세부 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가)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1) 국가환경정책	○ 본 정책계획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환경계획 및 시책과의 부합여부 검토	대한민국 전역
(2)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 본 정책계획이 국제적 환경관리 협약·조약·규범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는지 여부 검토	대한민국 전역
나)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 행정계획 및 다른 행정계획과의 부합여부 파악	대한민국 전역
(2)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 계획목표와 계획의 세부내용이 일관성 있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검토	대한민국 전역
다)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1) 공간계획의 적정성	○ 각종 보호구역의 분포 여부 검토	대한민국 전역
(2)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 수요전망, 수요 및 공급규모 등과 연계하여 환경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었는지 검토	대한민국 전역
(3) 환경용량의 지속성	○ 환경용량 및 환경지표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검토	대한민국 전역

제 6 장
지역개황

6.1 정책계획 지역개황

6.2 환경관련 지역·지구 지정현황

6.3 환경기준

제6장 지역개황

6.1 정책계획 지역개황

○ 관광개발기본계획의 환경적 영향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구체적인 입지를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대상 및 주변지역 환경현황을 제시하지 않음

○ 다만,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기준, 관광 여건의 전망, 환경보전 지역·지구 현황 제시

6.1.1 지리적 현황

○ 우리나라는 아시아대륙 동북단에 위치한 반도로서 중국, 러시아, 일본과 접하는 동북아 교류의 요충지이자 환태평양 진출의 거점임

○ 남북길이 약 1,000㎞, 동서 평균 폭 약 300㎞의 반도와 3,200여 개의 도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반도의 총면적은 222천㎢이고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남한은 총면적의 45%인 99.9천㎢를 차지하고 있음

○ 간석지를 포함한 대륙붕은 약 50만㎢(이중 남한은 34.5만㎢)로 국토면적의 2배가 넘으며, 이 중 약 80%가 서해안에 분포해 있음

○ 산지는 해발고도 1,000m가 넘는 높은 산이 북쪽과 동쪽에 치우쳐서 지형의 등줄기를 이루어 동쪽으로는 급경사를 이루면서 동해안에 임박하지만, 서쪽으로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면서 서해안에 이름

○ 해안선 길이는 약 1만 7천㎞(도서 포함)이며, 동해안은 수심이 깊고 해안선이 단조로우나, 서·남해안은 수심이 얕고 복잡하고 근해에는 많은 섬이 있음

〈표 6.1.1-1〉 국토의 위치

구 분		북 위	동 경	비 고
남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33°06′40″	-	-
북쪽	함북 온성군 유포면	43°00′35″	-	-
서쪽	평북 용천군 마안도	-	124°11′45″	-
동쪽	경북 울릉군 독도	-	131°52′20″	남북 약 10° 동서 약 8°

자료 : 국토통계, 국토연구원 전자도서관

6.1.2 행정구역 현황

○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시 75개, 군 82개, 구 69개 등 226개 시·군·구로 구성되며 총 면적은 100,517.62㎢로 조사됨

〈표 6.1.2-1〉 행정구역 현황 **(단위 : 개, ㎢)**

구 분 / 시·도별	시·군·구				행정시·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				출장소			
	계	시	군	구	시	구	계	읍	면	동	계	시도	시군구	읍면
계(17)	226	75	82	69	2	35	3,565	235	1,176	2,154	82	9	11	62
서울특별시	25	-	-	25	-	-	427	-	-	427	-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26.7.1.)	27	5	17	5	-	-	393	33	196	164	28	1	1	26
광주광역시	5	-	-	5	-	-	96	-	-	96	1	1	-	-
전라남도	22	5	17	-	-	-	297	33	196	68	27	-	1	26
부산광역시	16	-	1	15	-	-	206	4	1	201	1	-	1	-
대구광역시	9	-	2	7	-	-	150	7	10	133	2	-	-	2
인천광역시	10	-	2	8	-	-	157	1	19	137	5	1	-	4
대전광역시	5	-	-	5	-	-	82	-	-	82	-	-	-	-
울산광역시	5	-	1	4	-	-	55	6	6	43	1	1	-	-
세종특별자치시	-	-	-	-	-	-	24	1	9	14	-	-	-	-
경기도	31	28	3	-	-	20	605	37	102	466	7	1	4	2
강원특별자치도	18	7	11	-	-	-	193	24	95	74	7	1	-	6
충청북도	11	3	8	-	-	4	153	16	86	51	5	3	-	2
충청남도	15	8	7	-	-	2	208	25	136	47	5	1	1	3
전북특별자치도	14	6	8	-	-	2	243	15	144	84	-	-	-	-
경상북도	22	10	12	-	-	2	321	38	192	91	14	-	1	13
경상남도	18	8	10	-	-	5	305	21	175	109	7	-	3	4
제주특별자치도	-	-	-	-	2	-	43	7	5	31	-	-	-	-

주) 1. 특별시(1), 광역시(6), 특별자치시(1), 도(6), 특별자치도(3), 전북특별자치도('24.1.18. 시행)
2. 공무원 : 단체장 및 국가공무원 제외

〈표 계속〉 행정구역 현황

통·리			반			인구(명)	면적(㎢)	세대수	공무원 정원(명)
계	통	리	계	동	읍·면				
102,740	64,447	38,299	526,632	390,106	136,526	51,117,378	100,517.62	24,300,948	384,155
12,962	12,968	-	94,751	94,751	-	9,299,548	605.25	4,501,031	56,454
11,370	4,425	6,945	38,228	22,427	15,801	3,171,148	12,865.21	1,571,734	36,106
2,537	2,537	-	12,455	12,455	-	1,392,013	500.95	658,450	9,533
8,833	1,888	6,945	25,773	9,972	15,801	1,779,135	12,364.26	913,284	26,573
4,696	4,505	191	28,289	26,240	2,049	3,241,600	771.67	1,573,996	21,368
4,075	3,558	517	26,607	23,212	3,395	2,353,032	1,499.68	1,112,508	15,046
5,085	4,814	271	24,874	23,308	1,566	3,051,961	1,069.56	1,400,788	18,025
2,676	2,676	-	15,304	15,304	-	1,440,729	539.83	697,348	8,905
1,655	1,269	386	11,596	9,469	2,127	1,091,948	1,062.91	499,304	7,502
595	336	259	3,352	2,035	1,317	391,965	464.99	165,220	2,611
18,417	14,124	4,293	102,767	84,605	18,162	13,730,135	10,207.70	6,122,165	69,008
4,533	2,217	2,316	24,155	13,228	10,927	1,508,500	16,876.33	768,900	22,599
5,127	2,013	3,114	20,727	9,879	10,848	1,596,502	7,406.69	797,797	16,649
5,974	1,459	4,515	26,216	7,834	18,382	2,136,753	8,248.25	1,062,282	22,846
8,378	3,052	5,326	25,318	14,317	11,001	1,724,856	8,077.65	868,116	20,524
7,993	2,861	5,132	42,231	17,875	24,356	2,506,526	18,428.23	1,295,685	30,484
8,420	3,558	4,862	36,581	22,202	14,379	3,207,383	10,543.53	1,548,612	29,427
784	612	172	5,636	3,420	2,216	664,792	1,850.14	315,462	6,601

자료 :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2025.12.31.기준), 행정안전부

6.1.3 인구 및 가구 현황

◦ 2025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는 51,117,378명이며 남녀비율은 0.99로 조사됨

◦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가구 수는 22,997,120가구, 주택은 19,872,674호로 조사됨

〈표 6.1.3-1〉 인구 현황 **(단위 : 명)**

구분	총인구수	남자인구수	여자인구수	남녀비율
2016	51,696,216	25,827,594	25,868,622	1.00
2017	51,778,544	25,855,919	25,922,625	1.00
2018	51,826,059	25,866,129	25,959,930	1.00
2019	51,849,861	25,864,816	25,985,045	1.00
2020	51,829,023	25,841,029	25,987,994	0.99
2021	51,638,809	25,746,684	25,892,125	0.99
2022	51,439,038	25,636,951	25,802,087	0.99
2023	51,325,329	25,565,736	25,759,593	0.99
2024	51,217,221	25,517,454	25,699,767	0.99
2025	51,117,378	25,436,665	25,680,713	0.99

자료 :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행정안전부

〈표 6.1.3-2〉 지역별 가구 및 주택 현황

구 분	가구-계(가구)	일반가구(가구)	집단가구(가구)	외국인가구(가구)	주택-계(호)
전국	22,997,120	22,294,419	19,874	682,827	19,872,674
서울특별시	4,319,073	4,159,502	2,442	157,129	3,170,332
부산광역시	1,491,579	1,470,562	829	20,188	1,350,452
대구광역시	1,059,084	1,043,729	662	14,693	903,591
인천광역시	1,310,880	1,268,133	1,052	41,695	1,152,762
광주광역시	641,029	628,551	393	12,085	567,994
대전광역시	670,971	658,831	558	11,582	523,823
울산광역시	473,979	462,342	309	11,328	411,508
세종특별자치시	161,309	158,901	115	2,293	158,283
경기도	5,827,597	5,592,072	5,285	230,240	4,962,282
강원특별자치도	714,657	702,603	741	11,313	684,430
충청북도	750,756	726,988	1,004	22,764	685,622
충청남도	1,007,652	964,538	1,422	41,692	948,183
전북특별자치도	805,961	788,621	817	16,523	773,649
전라남도	817,003	799,012	1,198	16,793	846,848
경상북도	1,204,317	1,174,597	1,399	28,321	1,128,786
경상남도	1,452,638	1,415,780	1,387	35,471	1,341,627
제주특별자치도	288,635	279,657	261	8,717	262,502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인구총조사」, 2024년 기준 (자료갱신일 2025. 7. 29.)

6.1.4 토지이용 현황

- 용도지역 현황은 총 106,566.7㎢(100.00%) 중 농림지역이 49,188.7㎢(46.16%)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용도구역 현황은 총 407개 구역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이 237개로 가장 많았고 개발제한구역이 3,781.3㎢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용도지구 현황은 총 2,459.2㎢(100.00%) 중 취락지구가 727.5㎢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6.1.4-1〉 용도지역 현황 **(단위 : ㎢, %)**

소재지(시도)별	합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미지정지역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전국	106,566.7	100.00	17,639.5	16.55	27,341.7	25.66	49,188.7	46.16	11,872.0	11.14	524.9	0.49
서울특별시	605.7	100.00	605.7	100.00	0.0	0.00	0.0	0.00	0.0	0.00	0.0	0.00
부산광역시	993.5	100.00	940.8	94.69	0.0	0.00	0.0	0.00	52.7	5.31	0.0	0.00
대구광역시	1,499.5	100.00	808.2	53.90	165.0	11.01	454.8	30.33	71.5	4.77	0.0	0.00
인천광역시	1,095.7	100.00	513.7	46.88	316.3	28.87	260.1	23.74	0.1	0.00	5.5	0.51
광주광역시	501.0	100.00	479.8	95.78	17.6	3.51	3.5	0.71	0.0	0.00	0.0	0.00
대전광역시	539.7	100.00	496.1	91.93	9.4	1.73	27.7	5.13	6.6	1.21	0.0	0.00
울산광역시	1,144.6	100.00	677.7	59.21	61.3	5.35	278.1	24.30	43.6	3.81	83.9	7.33
세종특별자치시	465.5	100.00	142.6	30.62	176.0	37.81	144.9	31.13	2.0	0.44	0.0	0.00
경기도	10,725.6	100.00	3,397.1	31.67	2,972.3	27.71	3,570.0	33.28	445.5	4.15	340.7	3.18
강원특별자치도	16,862.7	100.00	1,005.2	5.96	3,289.3	19.51	10,867.9	64.45	1,682.4	9.98	17.8	0.11
충청북도	7,412.9	100.00	749.7	10.11	2,268.9	30.61	3,562.8	48.06	831.5	11.22	0.0	0.00
충청남도	8,765.9	100.00	925.7	10.56	3,155.1	35.99	3,982.9	45.44	689.4	7.86	12.8	0.15
전북특별자치도	8,128.6	100.00	884.6	10.88	2,580.0	31.74	3,981.1	48.98	682.3	8.39	0.5	0.01
전라남도	15,447.3	100.00	1,659.8	10.75	3,490.1	22.59	6,315.8	40.89	3,919.1	25.37	62.4	0.40
경상북도	18,514.8	100.00	1,871.4	10.11	4,848.1	26.19	10,685.4	57.71	1,108.7	5.99	1.1	0.01
경상남도	11,813.3	100.00	2,009.0	17.01	2,909.3	24.63	4,945.4	41.86	1,949.7	16.50	0.0	0.00
제주특별자치도	2,050.3	100.00	472.3	23.03	1,083.1	52.83	108.1	5.27	386.8	18.87	0.0	0.00

자료 : 2024년기준,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표 6.1.4-2〉 용도구역 현황 (단위 : ㎢, 개)

소재지(시도)별	합계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혁신구역	
	구역수	면적	구역수	면적	구역수	면적	구역수	면적	구역수	면적	구역수	면적
전국	407	6,957	90	3,781	2	3	72	2,832	237	341	6	203
서울특별시	87	220	19	150	0	0	0	0	68	69	0	0
부산광역시	7	248	6	248	0	0	0	0	0	0	1	18
대구광역시	14	438	6	400	0	0	0	0	8	38	0	0
인천광역시	25	107	6	83	0	0	0	0	18	23	1	25
광주광역시	5	244	5	244	0	0	0	0	0	0	0	0
대전광역시	9	313	5	302	2	3	0	0	2	8	0	0
울산광역시	8	274	5	267	0	0	0	0	3	7	0	0
세종특별자치시	1	41	1	41	0	0	0	0	0	0	0	0
경기도	53	1,211	21	1,126	0	0	4	59	26	27	2	25
강원특별자치도	20	112	0	0	0	0	14	106	6	6	0	0
충청북도	25	116	2	54	0	0	3	18	20	44	0	0
충청남도	47	230	3	25	0	0	8	184	36	21	0	0
전북특별자치도	7	18	0	0	0	0	2	17	5	1	0	0
전라남도	47	1,516	4	267	0	0	16	1,202	27	46	0	0
경상북도	16	171	3	115	0	0	3	50	8	6	2	136
경상남도	36	1,700	4	458	0	0	22	1,196	10	45	0	0

자료 : 2024년기준,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표 계속〉 용도지구 현황 (단위 : ㎢, 개)

소재지(시도)별	용도지구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지구수	면적	지구수	면적	지구수	면적	지구수	면적	지구수	면적
전국	24,834	2,459.2	1,986	601.9	881	221.0	501	97.2	32	4.9
서울특별시	109	76.8	39	14.4	8	7.9	25	0.8	0	0.0
부산광역시	176	30.2	16	1.3	31	1.4	84	20.0	0	0.0
대구광역시	573	68.3	196	3.4	90	43.5	95	13.0	0	0.0
인천광역시	178	21.8	61	2.6	6	1.5	17	7.4	0	0.0
광주광역시	149	16.2	54	7.1	0	0.0	24	7.5	0	0.0
대전광역시	349	13.1	81	1.8	14	0.9	30	4.2	0	0.0
울산광역시	283	22.9	20	1.9	3	1.3	1	0.3	0	0.0
세종특별자치시	223	19.7	14	10.5	0	0.0	0	0.0	0	0.0
경기도	2,953	404.9	442	55.4	27	59.4	40	10.6	3	0.1
강원특별자치도	826	320.5	143	174.5	114	5.8	17	3.6	0	0.0
충청북도	1,570	245.2	84	138.1	23	2.9	24	2.9	0	0.0
충청남도	993	121.1	77	26.1	11	1.3	15	1.8	0	0.0
전북특별자치도	3,707	176.3	204	23.4	62	6.6	37	8.2	0	0.0
전라남도	6,314	388.9	110	74.0	71	11.3	28	5.2	27	4.8
경상북도	2,445	205.9	108	25.6	90	14.5	7	0.5	2	0.1
경상남도	2,843	189.6	110	19.2	51	7.6	13	3.8	0	0.0
제주특별자치도	1,143	137.8	227	22.4	280	55.3	44	7.2	0	0.0

자료 : 2024년기준,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표 계속〉 용도구역 현황 (단위 : 개, ㎢)

소재지(시도)별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조례로 정하는 지구	
	지구수	면적	지구수	면적	지구수	면적	지구수	면적	지구수	면적	지구수	면적
전국	591	217.1	18,327	727.5	2,430	583.4	47	2.9	5	0.1	34	3.2
서울특별시	4	50.3	24	0.4	9	3.0	0	0.0	0	0.0	0	0.0
부산광역시	2	5.6	15	0.4	0	0.0	0	0.0	0	0.0	28	1.4
대구광역시	16	0.2	137	3.7	39	4.4	0	0.0	0	0.0	0	0.0
인천광역시	5	3.2	77	4.1	10	2.4	0	0.0	1	0.0	1	0.5
광주광역시	15	0.1	56	1.5	0	0.0	0	0.0	0	0.0	0	0.0
대전광역시	2	0.8	221	5.3	0	0.0	0	0.0	0	0.0	1	0.3
울산광역시	38	8.9	221	10.6	0	0.0	0	0.0	0	0.0	0	0.0
세종특별자치시	0	0.0	185	5.4	24	3.9	0	0.0	0	0.0	0	0.0
경기도	52	50.6	1,911	91.2	431	135.5	40	1.4	4	0.1	3	0.7
강원특별자치도	27	5.1	376	23.0	148	108.2	1	0.3	0	0.0	0	0.0
충청북도	25	18.8	1,012	34.2	401	48.2	1	0.1	0	0.0	0	0.0
충청남도	77	10.2	416	15.6	396	66.0	1	0.0	0	0.0	0	0.0
전북특별자치도	15	5.5	3,243	106.4	145	25.9	1	0.3	0	0.0	0	0.0
전라남도	61	16.8	5,818	212.9	199	63.8	0	0.0	0	0.0	0	0.0
경상북도	198	26.1	1,713	71.9	327	67.2	0	0.0	0	0.0	0	0.0
경상남도	41	14.5	2,337	93.2	289	50.6	2	0.7	0	0.0	0	0.0
제주특별자치도	13	0.5	565	47.6	12	4.3	1	0.2	0	0.0	1	0.3

자료 : 2024년기준,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6.2 환경관련 지역·지구 지정 현황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환경 보전지역·지구 및 관리지역의 지정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6.2-1〉 주요 환경 관련 지역·지구 지정 현황

환경보전 용도지역	내용(요약)	관련법
생태경관보전지역	핵심·완충·전이구역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보호구역	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법
습지보호지역	습지보호, 주변관리, 개선지역	습지보전법
자연공원	국립, 도립, 군립공원	자연공원법
지질공원	국가·세계지질공원	자연공원법
백두대간보호지역	핵심·완충구역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수변구역	친수구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대기관리권역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토양보전대책지역	1지역~3지역	토양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해역	환경보전,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관리법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 해양생태계보호, 해양생물보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2.1 지형

가. 백두대간보호지역

○ 백두대간도는 주요 산들의 분포를 선으로 연결하여 표현하였으며, 1대간, 1정간, 13정맥이 위치하고 있고, 이는 산지 이용 계획 수립과 이용에 쉽게 활용할 수 있음

〈표 6.2.1-1〉 백두대간 보호지역 현황 **(단위 : ㎢, %)**

구 분	면적		
	계	핵심구역	완충구역
계	2,777(100)	1,811(65)	966(35)
강원	1,453(100)	1,052(72)	401(28)
충북	376(100)	120(32)	256(68)
전북	182(100)	144(79)	38(21)
전남	53(100)	34(65)	18(35)
경북	482(100)	320(67)	162(33)
경남	231(100)	141(61)	91(39)



자료 : 환경통계연감, 환경통계포털,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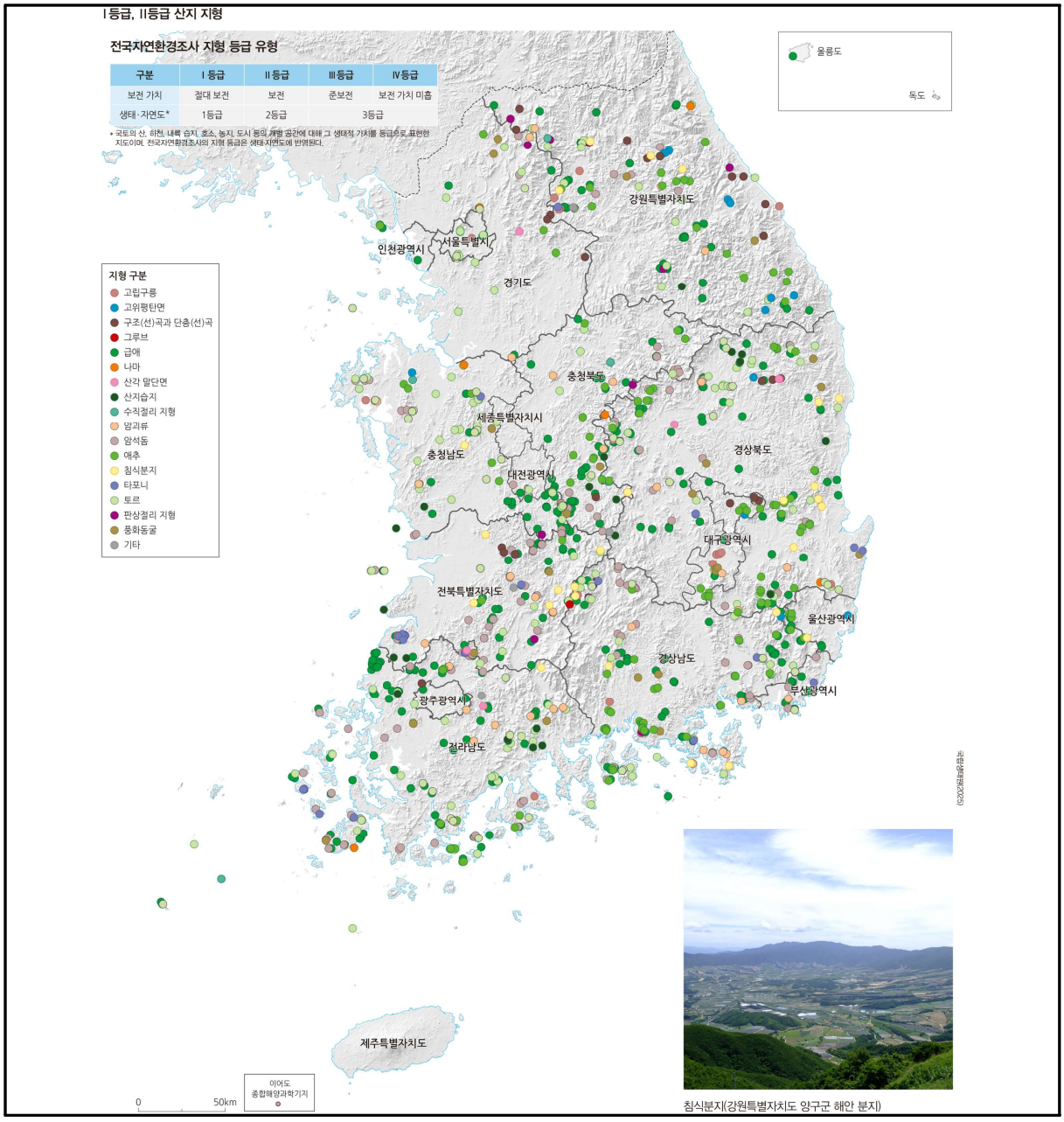
나. 지형경관(산지)

○ 자연환경 조사의 1등급 산지 지형은 주로 높은 산들이 분포하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지만, 도서 지역에도 많이 분포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산지는 고도가 높지 않으며, 한반도 동쪽의 지반 융기량이 서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높은 산지는 대부분 동쪽에 위치함

○ 선캄브리아기의 변성암부터 중생대의 화성암과 퇴적암을 거쳐 신생대 3기층과 4기층까지의 기반암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등 지형 자원의 다양성이 매우 높음

○ 1등급 산지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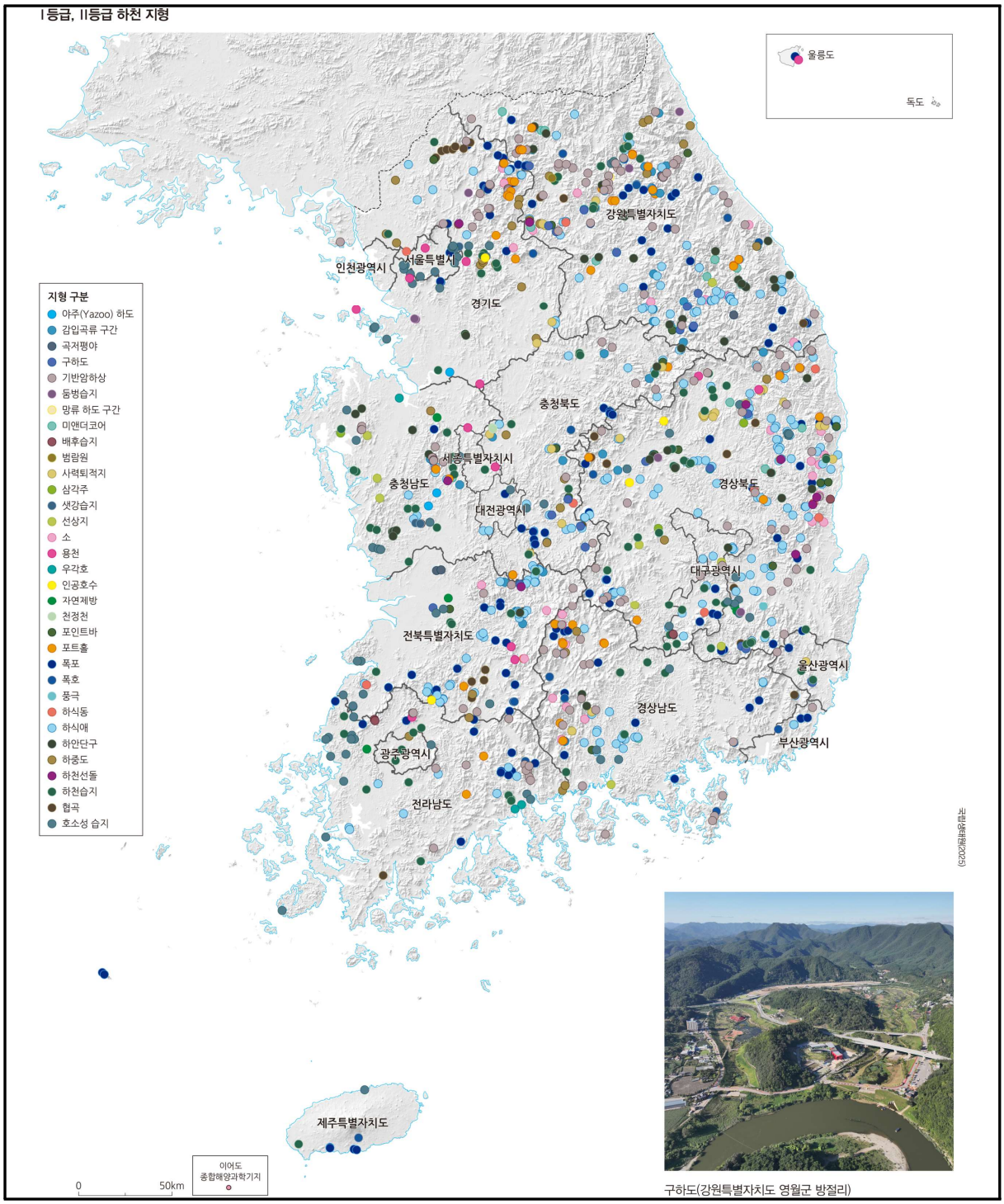
자료 :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다. 지형경관(하천)

○ 자연환경 조사의 1등급 하천 지형은 하천 하류보다는 상류지역에 주로 분포함

○ 범람원과 같은 대규모 하천 퇴적 지형은 대부분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하천 침식 지형으로는 폭포, 포트홀, 하식애 등이 있으며, 퇴적지형으로 범람원, 삼각주, 하천 습지 등이 있음

○ Ⅰ, Ⅱ등급 하천 지형



구하도(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방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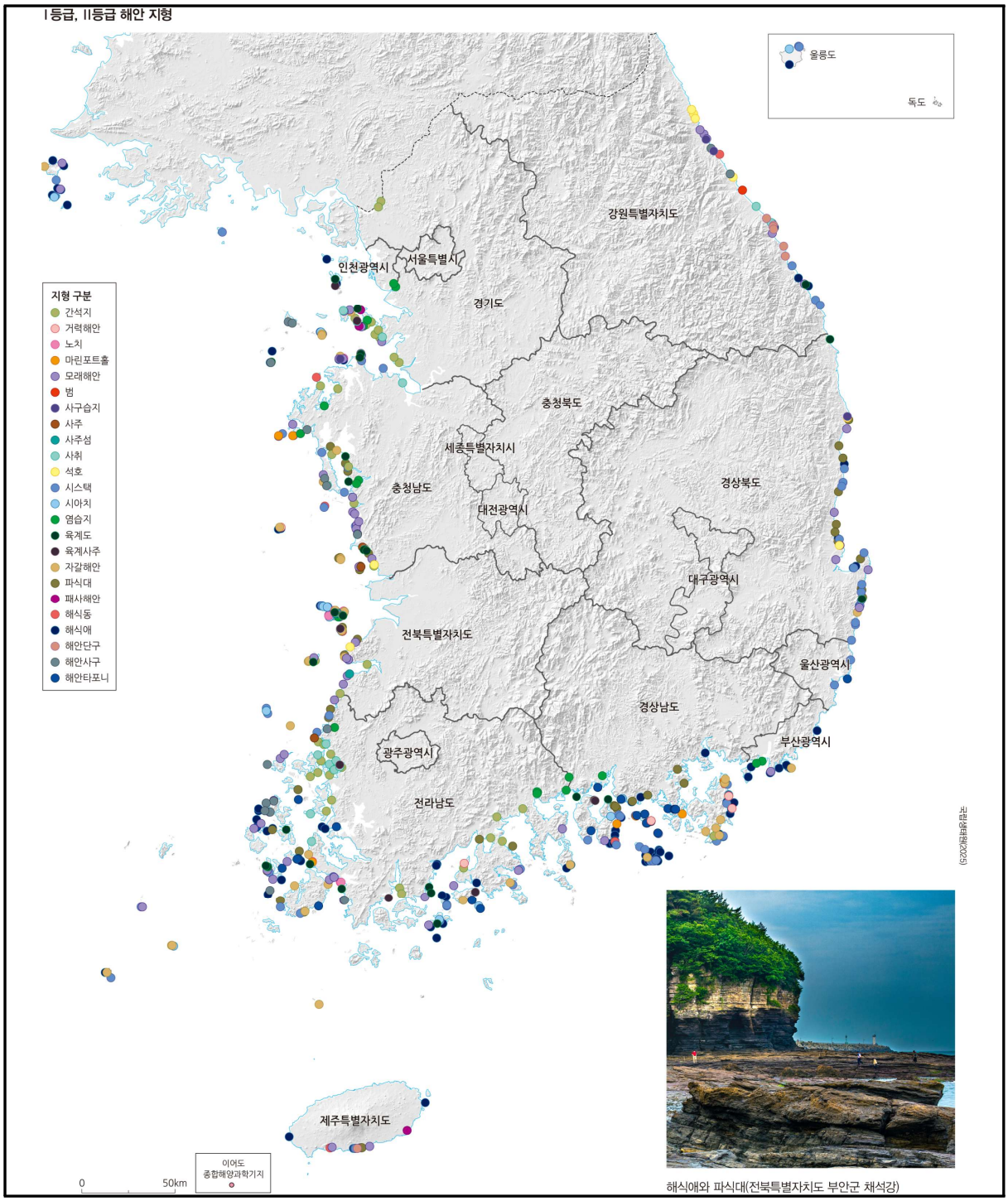
자료 :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라. 지형경관(해안)

○ 자연환경 조사의 1등급 해안 지형은 전체 해안선을 따라 골고루 분포하는 편이지만 개발이 비교적 적게 이루어진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음

○ 해안 지형은 구성물질에 따라 암석 해안, 모래 해안, 갯벌 해안으로 나눌 수 있음

○ 1등급 해안·카르스트 지형



해식애와 파식대(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채석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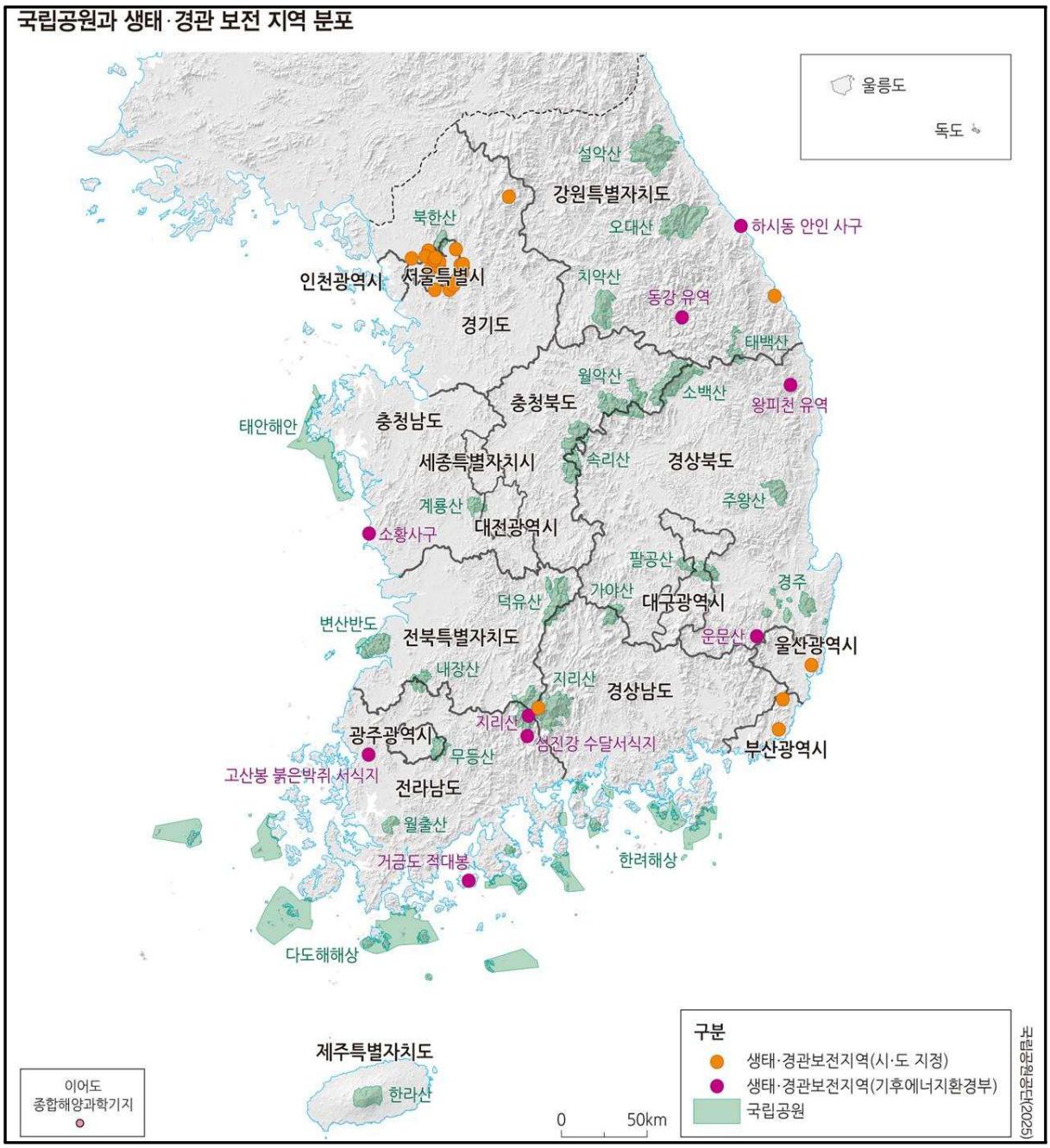
자료 :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6.2.2 생태·경관 보전지역

가. 생태·경관 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생태·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며, 생태·경관 보전지역은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또는 지형·지질이 특이하여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하는 지역 등으로 규정함

○생태경관 보전지역



자료 :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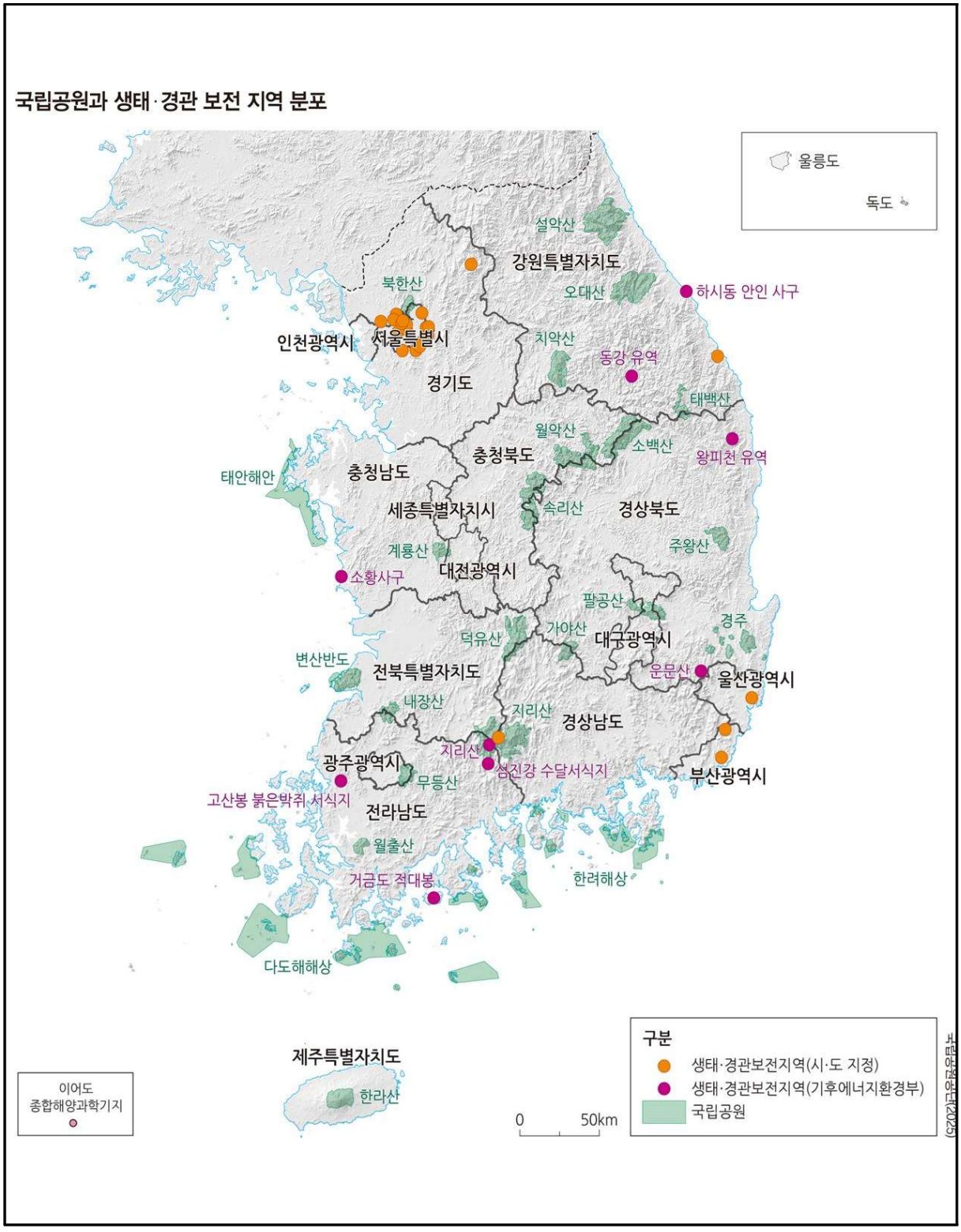
〈표 6.2.2-1〉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현황 (단위 : ㎢)

구분	지역명	면적(km²)	지정일자
환경부지정	계	249.196	-
	지리산	20.2	1989.12.29
	섬진강수달서식지	1.834	2001.12.01
	고산봉붉은박쥐서식지	8.78	2002.05.01
	동강유역	80.426	2002. 8. 9(2019.12.31)
	왕피천유역	102.841	2005.10.14.(2013. 7.17)
	소황사구	0.121	2005.10.28
	하시동안인사구	0.234	2008.12.17
	청도운문산	26.395	2010.09.09
	거금도 적대봉	8.365	2011.01.07
시도지사지정	계	38.187	-
	한강밤섬	0.279	1999.08.10
	둔촌동 자연습지	0.03	2000.03.06.(2013.07.04.)
	방이동습지	0.059	2002.04.15.(2005.11.24)
	탄천	1.151	2002.04.15
	진관내동습지	0.017	2002.12.30
	암사동습지	0.27	2002.12.30.
	고덕동한강고수부지	0.32	2004.10.20.(2007.12.27)
	청계산원터골	0.146	2004.10.20
	헌인릉오리나무	0.057	2005.11.24
	남산	0.705	2006.07.27.(2007.12.27)
	불암산 삼유대	0.204	2006.07.27
	창덕궁 후원	0.441	2006.07.27
	봉산 팥배나무림	0.073	2007.12.27
	인왕산 자연경관	0.258	2007.12.27
	광양백운산	9.74	1993.04.26
	태화강	0.983	2008.12.24
	조종천상류명지산청계산	22.06	1993.09.01
	한강강서	0.283	2024.12.26
	성내천하류	0.07	2009.11.26
	관악산	0.748	2009.11.26
	소한계곡	0.104	2012.10.05
	백사실 계곡	0.133	2009.11.26
	석은덤계곡	0.02	2015.06.10
	장산습지	0.037	2017.08.09

자료 : 환경통계연감, 환경통계포털,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나. 국립공원

○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총 22개소(6,888.395㎢)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18개의 산악형 국립공원, 3개의 해안형 국립공원 그리고 1개의 사적형 국립공원(경주)이 지정되어 있음



자료 :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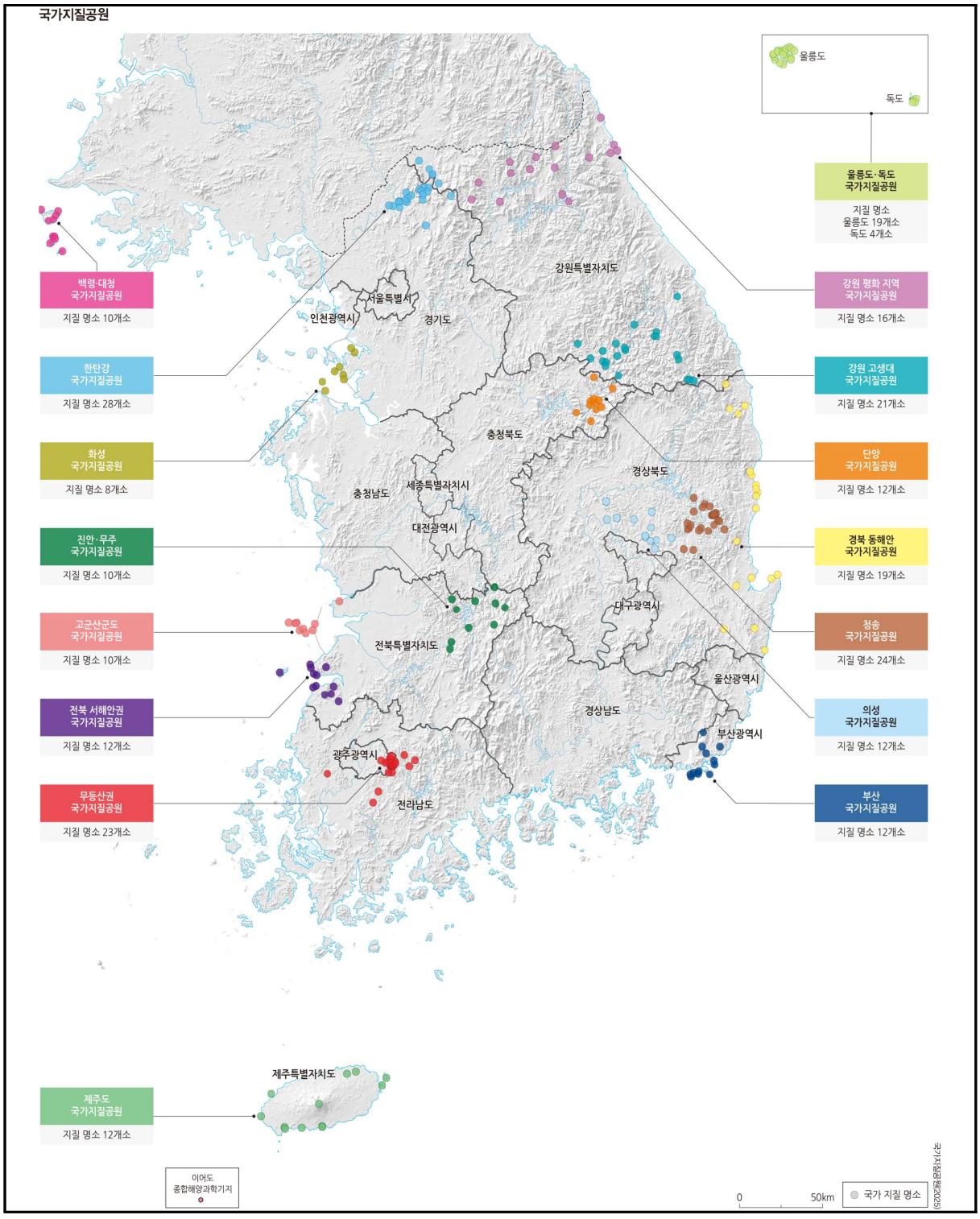
〈표 6.2.2-2〉 국립공원 지정현황 (단위 : ㎢)

공원명	구 분	내 용
국립공원	계	6,888.395 (해상 2,782.375)
	지리산	485.647
	경주	137.418
	계룡산	64.176
	한려해상	537.479(해상 414.750)
	설악산	400.027
	속리산	278.921
	한라산	153.444
	내장산	80.138
	가야산	76.792
	덕유산	228.919
	오대산	327.904
	주왕산	106.114
	태안해안	388.604(해상 364.788)
	다도해해상	2,276.209(해상 1,985.187)
	북한산	77.334
	치악산	176.567
	월악산	288.14
	소백산	321.264
	변산반도	154.957(해상 17.650)
	월출산	56.526
	무등산	75.721
	태백산	70.036

자료 : 환경통계연감, 환경통계포털,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6.2.3 국가 및 세계지질공원

○ 지질 및 지형적 중요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국가 및 세계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다양한 화산 지형과 지질 자원을 지니고 있어 섬 전체가 국가 지질 공원이자 세계 지질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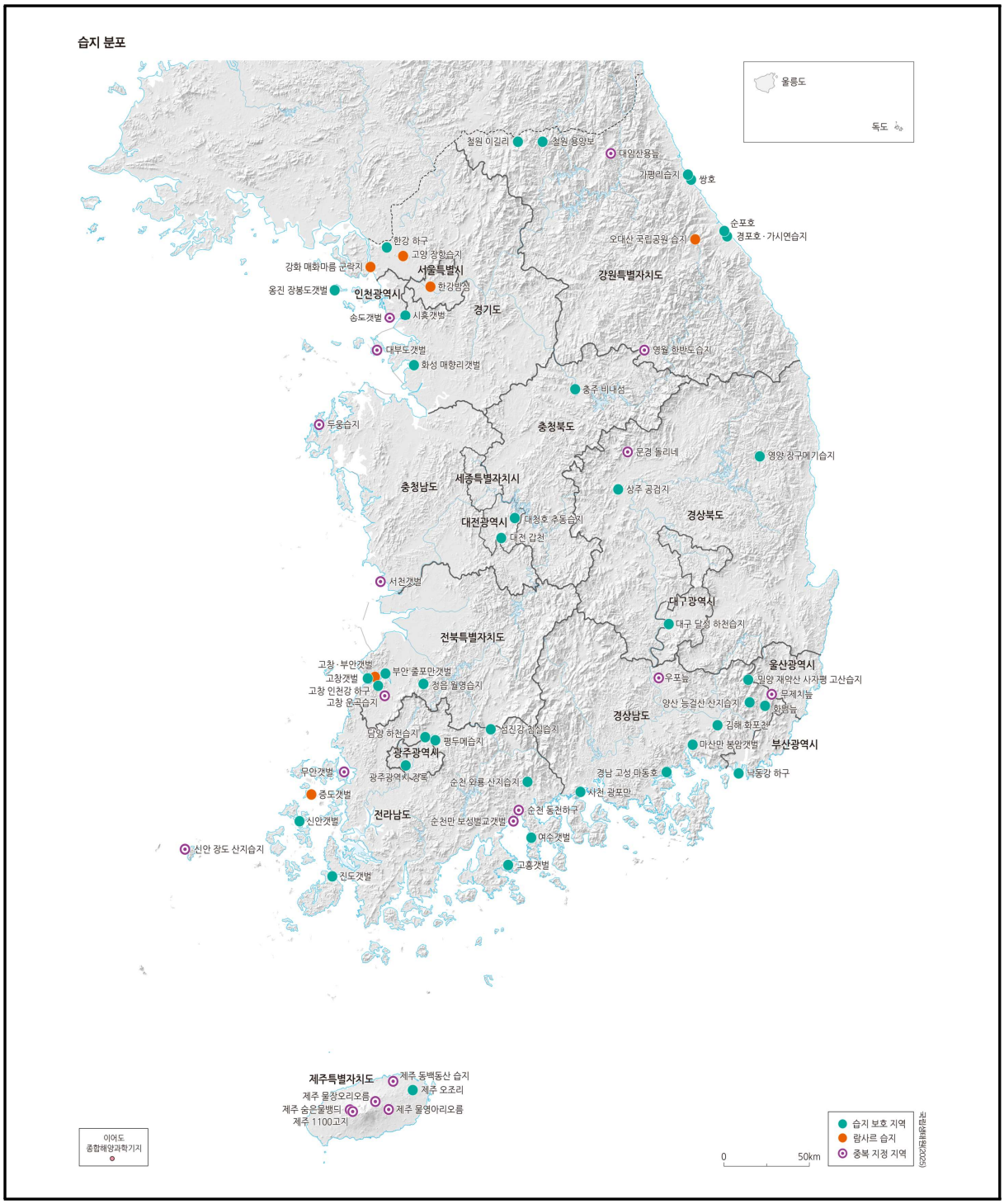


자료 :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6.2.4 습지보호지역

◦ 습지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각종 오염 물질로부터 생태계를 보호해 주는 생태적 완충지대임

◦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은 33개소(137.696㎢)이며, 해양수산부 지정 17개소(1,604.97㎢), 시·도지사 지정 7개소(8.254㎢)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자료 :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표 6.2.4-1〉 습지보호지역 지정현황

지정주체	지역명	면적(㎢)	지정일자	람사등록일자
환경부 (기후에너지 환경부) 지정	소계	137.696	33개소	
	충주비내섬	0.92	2021.11.30	
	낙동강하구	37.718	1999.08.09	
	대암산 용늪	1.36	1999.08.09	('97.03.28 람사등록)
	우포늪	8.808	2023.11.13.(확대)	('98.03.02 람사등록)
	무제치늪	0.184	1999.08.09	
	물영아리오름	0.309	2000.12.05	('06.10.18 람사등록)
	화엄늪	0.124	2002.02.01	
	두웅습지	0.067	2002.11.01	('07.12.20 람사등록)
	신불산 고산습지	0.308	2004.02.20	
	담양 하천습지	0.981	2004.07. 8	
	신안 장도 산지습지	0.09	2004.08.31	('05.03.03 람사등록)
	한강하구 습지	60.668	2006.04.17	
	재약산 고산습지	0.587	2006.12.28	
	제주1100고지습지	0.126	2009.10.01	('09.10.12 람사등록)
	제주물장오리오름습지	0.61	2009.10.01	('08.10.13 람사등록)
	제주 동백동산	0.59	2009.10.01	('11.03.14 람사등록)
	고창 운곡습지	1.93	2011.03.14	('11.04.07 람사등록)
	상주 공검지	0.264	2011.06.29	
	영월 한반도습지	2.772	2012.01.13	('15.05.13 람사등록)
	정읍 월영습지	0.375	2014.07.24	
	제주숨은물뱅듸	1.175	2015.07.01	('15.05.13 람사등록)
	순천동천하구	5.656	2015.12.22	
	섬진강침실습지	2.037	2016.11.07	
	문경 돌리네	0.494	2017.06.15	
	김해 화포천	1.298	2022.08.12(확대)	
	고창인천강하구	0.722	2018.10.23	
	광주광역시 장록	2.735	2022.08.12(확대)	
	철원 용양보	0.519	2020.12.08	
	경남고성마동호	1.079	2022.02.03	
	순천와룡산지습지	0.899	2022.12.30	
	대전 갑천	0.901	2023.06.05	
	철원 이길리	1.39	2023.12.29	
	영양 장구메기	0.045	2024.09.10	
해양수산부 지정	소계	1,604.97	17개소	
	화성매향리갯벌	14.08	2021.07.20	
	무안갯벌	42	2001.12.28	('08.01.14 람사등록)
	진도갯벌	1.44	2002.12.28	
	순천만갯벌	28	2003.12.31	('06.01.20 람사등록)
	보성·벌교 갯벌	33.92	2020.12.31(확대)	('06.01.20 람사등록)
	옹진 장봉도 갯벌	68.4	2003.12.31	
	부안 줄포만 갯벌	4.9	2006.12.15	('10.02.01 람사등록)
	고창갯벌	64.66	2018.09.03(확대)	('10.02.01 람사등록)
	서천갯벌	68.09	2018.09.03(확대)	('09.12.02 람사등록)
	신안갯벌	1,100.86	2018.09.03	(증도:'11.07.29 람사등록)
	봉암갯벌	0.1	2011.12.16	
	시흥갯벌	0.71	2012.02.17	
	대부도갯벌	4.53	2017.03.22	

〈표 계속〉 습지보호지역 지정현황

지정주체	지역명	면적(㎢)	지정일자	람사등록일자
해양수산부 지정	고흥갯벌	59.43	2022.12.29	
	사천광포만	3.46	2023.10.23	
	제주 오조리	0.24	2023.12.21	
	여수 갯벌	38.81	2024.07.30	
시·도지사 지정	소계	8.254	7개소	
	대구 달성하천습지	0.178	2007.05.25	
	대청호 추동습지	0.346	2008.12.26	
	송도갯벌	6.11	2009.12.31	('14.7.10 람사등록)
	경포호·가시연습지	1.314	2016.11.15	
	순포호	0.133	2016.11.15	

자료 : 환경통계연감, 환경통계포털,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6.3 환경기준

○ 우리나라에서는「환경정책기본법」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에 따라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음

6.3.1 대기질

가. 대기 환경기준

〈표 6.3.1-1〉 대기환경기준

항목	기준	비고
아황산가스 (SO2)	연간 평균치 : 0.02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 0.05ppm 이하 1시간 평균치 : 0.15ppm 이하	-
일산화탄소 (CO)	8시간 평균치 : 9ppm 이하 1시간 평균치 : 25ppm 이하	-
이산화질소 (NO2)	연간 평균치 : 0.03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 0.10ppm 이하	-
미세먼지 (PM-10)	연간 평균치 : 50㎍/㎥ 이하 24시간 평균치 : 100㎍/㎥ 이하	-
초미세먼지 (PM-2.5)	연간 평균치 : 15㎍/㎥ 이하 24시간 평균치 : 35㎍/㎥ 이하	-
오존 (O3)	8시간 평균치 :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 0.1ppm 이하	-
납 (Pb)	연간 평균치 : 0.5㎍/㎥ 이하	
벤젠	연간 평균치 : 5㎍/㎥ 이하	-

비고)

1.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3. 초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자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2조 관련 [별표 1]

6.3.2 수질 및 수생태계

가. 하천

(가)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표 6.3.2-1〉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구 분	항 목	기준값(㎎/L)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카드뮴(Cd)	0.005 이하
	비소(As)	0.05 이하
	시안(CN)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1)
	수은(Hg)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1)
	유기인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납(Pb)	0.05 이하
	6가크롬(Cr^{6+})	0.05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ABS)	0.5 이하
	사염화탄소	0.004 이하
	1,2-디클로로에탄	0.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4 이하
	디클로로메탄	0.02 이하
	벤젠	0.01 이하
	클로로포름	0.08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0.008 이하
	안티몬	0.02 이하
	1,4-다이옥세인	0.05 이하
	포름알데히드	0.5 이하
	헥사클로로벤젠	0.00004 이하

자료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

(나) 생활환경 기준

〈표 6.3.2-2〉 하천 생활환경 기준

구분	등급		상태	기준								
				수소이온농도(pH)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L)	화학적 산소요구량(COD)(㎎/L)	총유기탄소량(TOC)(㎎/L)	부유물질량(SS)(㎎/L)	용존산소량(DO)(㎎/L)	총인(T-P)(㎎/L)	대장균군(군수/100mL)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생활환경기준	매우좋음	Ia		6.5~8.5	1 이하	2 이하	2 이하	25 이하	7.5 이상	0.02 이하	50 이하	10 이하
	좋음	Ib		6.5~8.5	2 이하	4 이하	3 이하	25 이하	5.0 이상	0.04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약간좋음	II		6.5~8.5	3 이하	5 이하	4 이하	25 이하	5.0 이상	0.1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III		6.5~8.5	5 이하	7 이하	5 이하	25 이하	5.0 이상	0.2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나쁨	IV		6.0~8.5	8 이하	9 이하	6 이하	100 이하	2.0 이상	0.3 이하	-	-
	나쁨	V		6.0~8.5	10 이하	11 이하	8 이하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할 것	2.0 이상	0.5 이하	-	-
	매우나쁨	VI		-	10 초과	11 초과	8 초과	-	2.0 미만	0.5 초과	-	-

비고)

1.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가. 매우 좋음 :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나. 좋음 :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다. 약간 좋음 :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라. 보통 :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마. 약간 나쁨 :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바. 나쁨 :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않으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사. 매우 나쁨 :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아. 용수는 당해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자. 수소이온농도(pH) 등 각 기준항목에 대한 오염도 현황, 용수처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맞는 처리방법에 따라 용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음.

자료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

나. 지하수질

〈표 6.3.2-3〉 먹는물의 수질기준

1. 미생물에 관한 기준
   가. 일반세균은 1mL 중 100CFU(Colony Forming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저온일반세균은 20CFU/mL, 중온일반세균은 5CFU/m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병에 넣은 후 4℃를 유지한 상태에서 12시간 이내에 검사하여 저온일반세균은 100CFU/mL, 중온일반세균은 20CFU/m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총 대장균군은 100mL(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매월 또는 매 분기 실시하는 총 대장균군의 수질검사 시료(試料) 수가 20개 이상인 정수시설의 경우에는 검출된 시료 수가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대장균·분원성 대장균군은 10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분원성 연쇄상구균·녹농균·살모넬라 및 쉬겔라는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마.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은 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바. 여시니아균은 2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2.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가. 납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불소는 1.5㎎/L(샘물·먹는샘물 및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의 경우에는 2.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비소는 0.01㎎/L(샘물·염지하수의 경우에는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라. 셀레늄은 0.01㎎/L(염지하수의 경우에는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수은은 0.001㎎/L를 넘지 아니할 것
   바. 시안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사. 크롬은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아. 암모니아성 질소는 0.5㎎/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질산성 질소는 10㎎/L를 넘지 아니할 것
   차. 카드뮴은 0.005㎎/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붕소는 1.0㎎/L를 넘지 아니할 것(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타. 브롬산염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수돗물, 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및 오존으로 살균·소독 또는 세척 등을 하여 먹는물로 이용하는 지하수만 적용한다)
   파. 스트론튬은 4㎎/L를 넘지 아니할 것(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하. 우라늄은 30㎍/L를 넘지 않을 것[수돗물(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수돗물을 말한다), 샘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3.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가. 페놀은 0.005㎎/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다이아지논은 0.02㎎/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파라티온은 0.06㎎/L를 넘지 아니할 것
   라. 페니트로티온은 0.04㎎/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카바릴은 0.07㎎/L를 넘지 아니할 것
   바. 1,1,1-트리클로로에탄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사.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아. 트리클로로에틸렌은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디클로로메탄은 0.02㎎/L를 넘지 아니할 것
   차. 벤젠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톨루엔은 0.7㎎/L를 넘지 아니할 것
   타. 에틸벤젠은 0.3㎎/L를 넘지 아니할 것

〈표 계속〉 먹는물의 수질기준

파. 크실렌은 0.5㎎/L를 넘지 아니할 것
하. 1,1-디클로로에틸렌은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거. 사염화탄소는 0.002㎎/L를 넘지 아니할 것
너.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은 0.003㎎/L를 넘지 아니할 것
더. 1,4-다이옥산은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4.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샘물·먹는샘물·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먹는해양심층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잔류염소(유리잔류염소를 말한다)는 4.0㎎/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총트리할로메탄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클로로포름은 0.08㎎/L를 넘지 아니할 것
라. 브로모디클로로메탄은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바. 클로랄하이드레이트는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사.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아.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0.09㎎/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0.004㎎/L를 넘지 아니할 것
차. 할로아세틱에시드(디클로로아세틱에시드, 트리클로로아세틱에시드 및 디브로모아세틱에시드의 합으로 한다)는 0.1㎎/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포름알데히드는 0.5㎎/L를 넘지 아니할 것
5.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가. 경도(硬度)는 1,000㎎/L(수돗물의 경우 300㎎/L,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 1,20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1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냄새와 맛은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맛 이외의 냄새와 맛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 다만, 맛의 경우는 샘물, 염지하수,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동은 1㎎/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색도는 5도를 넘지 아니할 것
바. 세제(음이온 계면활성제)는 0.5㎎/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사. 수소이온 농도는 pH 5.8 이상 pH 8.5 이하이어야 할 것. 다만, 샘물,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는 pH 4.5 이상 pH 9.5 이하이어야 한다.
아. 아연은 3㎎/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염소이온은 250㎎/L를 넘지 아니할 것(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차. 증발잔류물은 수돗물의 경우에는 500㎎/L,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미네랄 등 무해성분을 제외한 증발잔류물이 500㎎/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철은 0.3㎎/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타. 망간은 0.3㎎/L(수돗물의 경우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파. 탁도는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및 전용상수도를 제외한 수돗물의 경우에는 0.5NTU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하. 황산이온은 20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은 250㎎/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거. 알루미늄은 0.2㎎/L를 넘지 아니할 것
6. 방사능에 관한 기준(염지하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세슘(Cs-137)은 4.0mBq/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스트론튬(Sr-90)은 3.0mBq/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삼중수소는 6.0Bq/L를 넘지 아니할 것

자료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 먹는물의 수질기준

〈표 6.3.2-4〉 지하수의 수질기준

1.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경우 :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소독제 및 소독제 부산물질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
2. 지하수를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공업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항목 \ 이용목적별		생활용수 (mg/L)	농·어업용수 (mg/L)	공업용수 (mg/L)
일반오염물질 (4개)	수소이온농도(pH)	5.8~8.5	6.0~8.5	5.0~9.0
	총대장균군	5,000 이하 (군수/100mL)	-	-
	질산성질소	20 이하	20 이하	40 이하
	염소이온	250 이하	250 이하	500 이하
특정유해물질 (16개)	카드뮴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비소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시안	0.01 이하	0.01 이하	0.2 이하
	수은	0.001 이하	0.001 이하	0.001 이하
	다이아지논	0.02 이하	0.02 이하	0.02 이하
	파라티온	0.06 이하	0.06 이하	0.06 이하
	페놀류	0.005 이하	0.005 이하	0.01 이하
	납	0.1 이하	0.1 이하	0.2 이하
	크롬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이하	0.03 이하	0.06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1,1,1-트리클로로에탄	0.15 이하	0.3 이하	0.5 이하
	벤젠	0.015 이하	-	-
	톨루엔	1 이하	-	-
	에틸벤젠	0.45 이하	-	-
	크실렌	0.75 이하	-	-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염소이온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어업용수

나. 지하수의 이용 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해수침입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염소이온 농도가 증가한 경우

2.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가 생활용수의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경우에는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자료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1조 관련 [별표 9] 지하수의 수질기준

6.3.3 토양

가. 토양오염우려기준

〈표 6.3.3-1〉 토양오염우려기준

물 질	오염 기준 (단위 : ㎎/㎏,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pg-TEQ/g)		
	1지역	2지역	3지역
1. 카드뮴(Cd)	4	10	60
2. 구리(Cu)	150	500	2,000
3. 비소(As)	25	50	200
4. 수은(Hg)	4	10	20
5. 납(Pb)	200	400	700
6. 6가크롬(Cr^{6+})	5	15	40
7. 아연(Zn)	300	600	2,000
8. 니켈(Ni)	100	200	500
9. 불소(F)	800	1,300	2,000
10. 유기인화합물	10	10	30
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1	4	12
12. 시안(CN)	2	2	120
13. 페놀	4	4	20
14. 벤젠	1	1	3
15. 톨루엔	20	20	60
16. 에틸벤젠	50	50	340
17. 크실렌	15	15	45
18.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00	800	2,000
19. 트리클로로에틸렌(TCE)	8	8	40
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4	4	25
21. 벤조(a)피렌	0.7	2	7
22. 1,2-디클로로에탄	5	7	70
23.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	160	340	1,000

비고)

1. 1지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광천지 · 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 · 학교용지 · 구거(溝渠) · 양어장 · 공원 · 사적지 · 묘지인 지역과「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2. 2지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 · 염전 · 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 · 창고용지 · 하천 · 유지 · 수도용지 · 체육용지 · 유원지 · 종교용지 및 잡종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3. 3지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 · 주차장 · 주유소용지 · 도로 · 철도용지 · 제방 · 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국방 · 군사시설 부지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반환하거나「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12조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의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반환 후 용도에 따른 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5. 벤조(a)피렌 항목은 제한물질·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폐받침목을 사용한 지역(예: 철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및 하천 등)에만 적용한다.
6.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하는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조치명령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조사 기간 또는 정화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지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목변경이 예정된 경우에는 변경 예정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된 경우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하여「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후 공사가 착공된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목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가 착공된 경우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하는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의 관계 서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의 용도에 부합하는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관계 서류를 통하여 그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지역에 해당하는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자료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관련 [별표 3]

나. 토양오염대책기준

〈표 6.3.3-2〉 토양오염대책기준

물 질	오염 기준 (단위 : ㎎/㎏,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pg-TEQ/g)		
	1지역	2지역	3지역
1. 카드뮴(Cd)	12	30	180
2. 구리(Cu)	450	1,500	6,000
3. 비소(As)	75	150	600
4. 수은(Hg)	12	30	60
5. 납(Pb)	600	1,200	2,100
6. 6가크롬(Cr^{6+})	15	45	120
7. 아연(Zn)	900	1,800	5,000
8. 니켈(Ni)	300	600	1,500
9. 불소(F)	2,400	3,900	6,000
10. 유기인화합물	-	-	-
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3	12	36
12. 시안(CN)	5	5	300
13. 페놀	10	10	50
14. 벤젠	3	3	9
15. 톨루엔	60	60	180
16. 에틸벤젠	150	150	1,020
17. 크실렌	45	45	135
18. 석유계총탄화수소(TPH)	2,000	2,400	6,000
19. 트리클로로에틸렌(TCE)	24	24	120
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	12	75
21. 벤조(a)피렌	2	6	21
22. 1,2-디클로로에탄	15	20	210
23.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	500	1,000	3,000

비고)

1. 1지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광천지 · 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 · 학교용지 · 구거(溝渠) · 양어장 · 공원 · 사적지 · 묘지인 지역과「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2. 2지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 · 염전 · 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 · 창고용지 · 하천 · 유지 · 수도용지 · 체육용지 · 유원지 · 종교용지 및 잡종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3. 3지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 · 주차장 · 주유소용지 · 도로 · 철도용지 · 제방 · 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국방 · 군사시설 부지
4. 벤조(a)피렌 항목은 제한물질·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폐받침목을 사용한 지역(예: 철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및 하천 등)에만 적용한다.
5. 법 제17조에 따른 토양오염대책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토양오염대책기준은 지정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지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목변경이 예정된 경우에는 변경 예정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된 경우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하여「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후 공사가 착공된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목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가 착공된 경우

자료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0조 관련 [별표 7]

6.3.4 소음·진동

가. 환경기준

(1) 소음

〈표 6.3.4-1〉 소음 환경기준 [단위 : Leq dB(A)]

지역구분	적용 대상지역	기 준	
		낮 (06:00~22:00)	밤 (22:00~06:00)
일반지역	“가” 지역	50	40
	“나” 지역	55	45
	“다” 지역	65	55
	“라” 지역	70	65
도로변지역	“가” 및 “나” 지역	65	55
	“다” 지역	70	60
	“라” 지역	75	70

비고)

1. 지역구분별 적용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5)「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6)「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나)「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특수도서관
   나. “나”지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 “다”지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라. “라”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2. "도로"란 자동차(2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가 한 줄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는 데에 필요한 일정 폭의 차선이 2개 이상 있는 도로를 말한다.
3.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

(2) 진동

○「환경정책기본법」상 별도의 진동 환경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음

(가). 규제기준

〈표 6.3.4-2〉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 지역	시간대별 /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 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자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표 6.3.4-3〉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dB(V)]**

시간대별 / 대상 지역	주간 (06:00~22:00)	심야 (22:00~06: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비고)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을 보정한다.**

자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 7 장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및 결정내용 공개

7.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대상여부

7.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개요

7.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7.4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결정내용 및 조치내용

제7장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및 결정내용 공개

7.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을 구성하였음

7.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에 의거 심의를 개최하였음

○ 심의추진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날짜 : 2026. 09. 22.~10. 02.

○ 심의내용

- 총괄의견
- 대상지역의 설정
- 대안
- 평가항목의 범위·방법 등
- 기타

○ 위원 인원수 : 8인(위원장 포함)

〈표 7.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구성 및 심의의견제출 여부

소 속	성 명	의견제출 여부	비 고
문화체육관광부	이 ○ ○	●	
기후에너지환경부	정 ○ ○	●	
원주지방환경청	정 ○ ○	●	
한국환경연구원	주 ○ ○	●	
충청북도청	오 ○ ○	●	
주 민 대 표	홍 ○ ○	●	
민 간 전 문 가	박 ○	●	
민 간 전 문 가	고 ○ ○	●	

7.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7.3.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결 내용

○본 계획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결로 평가항목 등을 선정하였음

〈표 7.3.1-1〉 평가항목의 설정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범위
가)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1) 국가 환경 정책	○본 정책계획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환경계획 및 시책과의 부합여부 검토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21~2040) -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2026~2030) -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2025) -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023~2042)	대한민국 전역
(2) 국제 환경 동향·협약·규범	○본 정책계획이 국제적 환경관리 협약·조약·규범 등을 고려하여 수립되었는지 여부 검토 - 기후변화협약 - 생물다양성협약	대한민국 전역
나)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1)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상위 행정계획 및 다른 행정계획과의 부합여부 파악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 제1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방향 연구(2016~2020) -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2018~2027) -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2019~2028) -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9~2023) - 생태관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대한민국 전역
(2) 계획 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계획목표와 계획의 세부내용이 일관성 있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검토	대한민국 전역
다)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1) 공간 계획의 적정성	○각종 보호구역의 분포 여부 검토	대한민국 전역
(2)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수요전망, 수요 및 공급규모 등과 연계하여 환경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었는지 검토	대한민국 전역
(3) 환경 용량의 지속성	○환경용량 및 환경지표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검토	대한민국 전역

7.3.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은 다음과 같음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계획명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

□ **총괄의견**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2027~2031)에 대한 해당 평가준비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상지역의 설정, 토지이용 구상,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이 적절하게 설정됨.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 평가준비서의 내용에 **이견이 없는 경우 : 의견없음에 "√" 표시**

※ 평가준비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 수정의견에 "√" 표시**하고, **향후 평가협의회 심의·의결을 위한 수정의견 및 그 사유를 작성**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

3.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수정의견( )

4. **대안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

5. **평가항목 · 범위 · 방법 등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

6. 기 타

○ 23p. 1.6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22~2031)의 비전·목표·전략 및 과제는 문체부 기 발표('21.12.30.) 내용으로 수정하여 반영 필요

2026. 9. 30.

심의위원 : 이 [redacted]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계획명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

□ **총괄의견**

○ 동 계획은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22~2031년)에 대해 변화된 관광여건과 동향 등을 고려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

3.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수정의견( )

4. **대안의 설정** : 의견없음( ), 수정의견(√)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과 달라진 전국의 관광 수요와 공급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와 공급'에 대한 대안도 설정하여 비교·제시

5.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 의견없음( ), 수정의견(√)

○ 동 계획은 정책계획으로서 관광개발 분야의 최상위계획으로, 제8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및 향후 관광개발사업의 입지선정 및 사업추진시의 기본방향·지침으로 적용될 것이므로

– 금회 수정계획에 포함된 6대 전략과 권역별 전략·추진계획이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수립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평가항목별 검토를 위한 예측·분석기법 및 근거자료를 함께 상세히 제시

○ 항목별 조사 범위 및 방법은 최신 상위계획 및 연관계획에 대해 문헌조사를 통해서 작성

6. 기 타

○ 「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2(정책계획의 의견 수렴)에 따른 행정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필요

2026. 10. 2.

심의위원 : 정[redacted]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계획명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

□ **총괄의견**

○ 전국을 범위로 하는 정책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광개발의 양적 확대보다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관광개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금회 정책계획에서 환경보전 원칙 및 입지·개발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향후 지역별 관광개발계획 및 개별 관광개발사업 추진 시 환경적 고려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여야 함.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의견없음( ), 수정의견(✓)

○ 강원·충북 북부지역은 백두대간 및 한강 상류수계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이 있으므로 산악·수변지역 관광개발계획 수립 시, 산림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 방향을 설정하여야 함.

○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관광지역, 국립공원 등 생태적으로 우수하고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은 보전·관리 중심의 관광정책을 우선 수립하고, 주변 지역은 자연·문화자원과 연계한 저영향 관광개발을 유도하는 등 지역별 차등화된 개발목표를 설정하여야 함.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

3.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수정의견( )

4. **대안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

5.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 의견없음( ), 수정의견(✓)

○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0호)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함.

6. **기 타**

○ 의견 없음

2026. 10. 1.

심의위원 : 정[redacted]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계획명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

□ 총괄의견

○ 본 계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중심으로 환경보전목표를 수립하고 5대 초광역권관광권, 3대 특별관광권의 권역별 개발방향과 상위 환경계획의 생태축과 공간환경전략과의 상충 여부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의견없음( ), 수정의견(○)

○ 환경보전목표는 계획의 적정성·지속성을 중심으로 설정하되 계획으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영향에 대하여 이를 다루고 있는 환경 관련 상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전락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

○ 의견없음

3.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 수정의견( )

○ 의견없음

4. **대안의 설정** : 의견없음( ), 수정의견(○)

○ 수단·방법의 대안의 평가는 본 계획에서 수립하고 있는 목표와 6대전략, 권역별 전략 및 추진계획,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계획을 지표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5.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 의견없음( ), 수정의견(○)

○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 본 계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과 직·간접으로 연관이 있는 환경 관련 계획을 선정하고, 그 환경 관련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와 추진전략이 금회 수정계획과 부합되는 지의 여부를 검토

○ 공간계획의 적정성 : 5대 초광역권관광권, 3대 특별관광권의 권역별 개발방향과 자연환경보전계획의 3대 핵심 생태축, 국가환경보전계획의 권역별 공간환경전략과의 상충 여부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향 수립 필요

○ 환경용량의 적정성 : 오버투어리즘 관광지의 폐기물 발생과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에 대한 환경적·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책방향 수립 필요. 또한 관광시설의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수소 환풍 확대와 에너지 효율 향상, 순환경제 확대 등의 기본방향 수립 필요

6. 기 타

○ 의견없음

2026. 10. 01.

심의위원 : [redacted]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계획명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

□ 총괄의견

○ 본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는 적절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며 관광개발계획의 최상위 법정계획임을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

3.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수정의견( )

4. 대안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

5.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

6. 기 타

○ 없음

2026. 10. 1.

심의위원 : [redacted]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계획명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

□ 총괄의견
○ 국가의 중장기 관광개발 법정계획으로 전반적인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

3.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수정의견( )

4. **대안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

5.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

6. 기 타
○ 없 음

2026. 10. 1 .

심의위원 : [redacted])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계획명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

□ 총괄의견

○ 본 계획은 전국을 대상으로 관광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이므로 관광권별 환경적 특성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하위계획의 수립 원칙에 반영하는 데 평가의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본 계획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나, 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안전을 위해 생물다양성 영향과 권역별 기후위험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하위계획의 입지·관리 원칙에 반영할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의견없음( ), 수정의견(V)

○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 절차 중심의 목표에 더하여, 관광개발계획에 적용할 실질적인 환경보전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환경민감지역의 훼손 회피, 기존 관광자원의 우선 활용, 관광객 집중에 따른 환경부하 관리, 기후위험을 고려한 안전한 이용·관리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자료가 확보되는 경우 판단 가능한 지표를 함께 제시할 것을 제안함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 수정의견(V)

○ 대한민국 전역을 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하는 데 동의함. 다만 실제 분석에서는 계획의 8대 국가전략 관광권을 기본 단위로 삼고, 연안·도서, 산지, 하천·습지, 도시 등 환경특성이 다른 지역을 구분하여 검토할 것을 제안함

3.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V), 수정의견( )

4. 대안의 설정 : 의견없음(V), 수정의견( )

5.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 의견없음( ), 수정의견(V)

○ 공간계획의 적정성: 8대 관광권별 보호지역, 주요 생태축 및 환경민감지역의 분포를 검토하고, 하위계획에서 적용할 훼손 회피·기존 자원 활용 원칙 제시

○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연간 관광수요뿐 아니라 계절별·지역별 집중, 기존 관광시설의 활용 수준과 신규 공급 필요성 검토

○ 관광지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 관광객 집중에 따른 교통·폐기물·물 이용·생태계 교란 등 주요 부담과 관리방안, 폭염·집중호우·침수·산불 등 권역별 주요 기후위험을 파악하고, 하위계획의 입지 및 운영·관리 원칙에 반영하는 방법 검토

2026. 9. 29.

심의위원 : [redacted]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계획명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

□ 총괄의견

○ 본 계획은 신규 관광시설의 무분별한 조성을 지양하고 기존 관광자원의 내실 있는 활용 및 관리 지속가능한 관광을 지향하고 있어 계획의 기본 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 평가준비서의 내용에 이견이 없는 경우 : 의견없음에 "√" 표시

※ 평가준비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 수정의견에 "√" 표시하고, 향후 평가협의회 심의·의결을 위한 수정의견 및 그 사유를 작성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

○ 의견없음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

○ 관광개발기본계획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계획이므로 대상지역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설정한 것은 타당함

3.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수정의견( )

○ 구체적인 입지계획이 없는 정책계획의 특성상 토지이용 구상안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타당함

4. 대안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

○ 의견없음

5.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 의견없음( ), 수정의견(√)

○ "탄소중립기본법" 등에 따른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및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와 함께 관광개발과 연관된 자연환경분야 관련 계획을 추가로 검토·제시하여야 함

6. 기 타

○ 의견없음

2026. 9 . 29 .

심의위원 : [redacted]

7.4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결정내용 및 조치내용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및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7.4-1〉 평가항목·범위등의 결정내용 및 조치내용

구 분	평가항목 · 범위 등 결정내용	조치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이○○ 위원	□ 총괄의견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2027~2031)에 대한 평가준비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상지역의 설정, 토지이용 구상,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이 적절하게 설정됨.	-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의견없음	-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의견없음	-
	3. 토지이용 구상안	
	◦의견없음	-
	4. 대안의 설정	
	◦의견없음	-
	5.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의견없음	-
	6. 기타	
	◦23p. 1.6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22~2031)의 비전·목표·전략 및 과제는 문체부 기 발표('21.12.30.) 내용으로 수정하여 반영 필요	◦반영(p.28)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22~2031)의 비전·목표·전략 및 과제는 문체부 기 발표 내용으로 수정하여 반영하였음

구 분	평가항목 · 범위등 결정내용	조치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정○○ 위원	□ 총괄의견	
	◦동 계획은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22~2031년)에 대해 변화된 관광여건과 동향 등을 고려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	◦반영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였음.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의견없음	-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의견없음	-
	3. 토지이용 구상안	
	◦의견없음	-
	4. 대안의 설정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과 달라진 전국의 관광수요와 공급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와 공급'에 대한 대안도 설정하여 비교·제시	◦반영(p.48, p.369~372) - 국내 숙박·당일 및 외래 수요예측, 시설공급 검토 기준을 반영하여 실증 추세수요·정책목표 대응수요를 비교·검토함
	5.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동 계획은 정책계획으로서 관광개발 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제8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및 향후 관광개발사업의 입지선정 및 사업추진 시의 기본방향·지침으로 적용될 것이므로 - 금회 수정계획에 포함된 6대 전략과 권역별 전략·추진계획이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수립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평가항목별 검토를 위한 예측·분석기법 및 근거자료를 함께 상세히 제시	◦반영(p.305~309, p.310~356, p.378~383) - 6대 추진전략과 공간계획 적정성, 환경용량 검토 및 관련 기준을 제시하였음.
	6. 기타	
	◦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의2(정책계획의 의견 수렴)에 따른 행정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필요	◦반영(p.109~112)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였으며, 추후 행정예고를 시행할 계획임.

구 분	평가항목 · 범위등 결정내용	조치내용
원주지방환경청 정○○ 위원	□ 총괄의견	
	◦전국을 범위로 하는 정책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광개발의 양적 확대보다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관광개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반영(p.14~15, p.305~309) - 공급·시설 중심에서 수요·지역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관광자원의 전주기 관리와 환경적 수용력 고려 방향을 제시하였음.
	◦금회 정책계획에서 환경보전 원칙 및 입지·개발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향후 지역별 관광개발계획 및 개별 관광개발사업 추진 시 환경적 고려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여야 함.	◦반영(p.322~383) - 입지·개발기준을 권역별로 제시하였으며, 보호지역·생태축의 현황과 공간계획 적정성, 환경용량 관련 검토기준을 설정함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강원·충북 북부지역은 백두대간 및 한강 상류 수계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이 있으므로 산악·수변지역 관광개발계획 수립 시 산림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 방향을 설정하여야 함.	◦반영(p.218~219, p.245~247, p.378~383) - 공간계획에서 권역별 관광구상과 보전지역·지형경관 등의 보전방향을 제시하였음.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관광지역, 국립공원 등 생태적으로 우수하고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은 보전·관리 중심의 관리정책을 우선 수립하고, 주변 지역은 자연·문화자원과 연계한 저영향 관광개발을 유도하는 등 지역별 차등화된 개발목표를 설정하여야 함.	◦반영(p.356~366, p.378~383) - 환경보전지역 지정 현황 및 자연환경보전·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권역별 특색에 맞는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함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의견없음	-
	3. 토지이용 구상안	
	◦의견없음	-
	4. 대안의 설정	
	◦의견없음	-
	5.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0호)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함.	◦반영 -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0호) 등을 참고하여 작성함.
	6. 기타	
	◦의견없음	-

구 분	평가항목 · 범위등 결정내용	조치내용
한국환경연구원 주○○ 위원	□ 총괄의견	
	◦본 계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중심으로 환경보전목표를 수립하고 5대 초광역 관광권, 3대 특별관광권의 권역별 개발방향과 상위 환경계획의 생태축과 공간환경전략과의 상충 여부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반영(p.31~42, p.197~201, p.253~266) - 본 계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중심으로 환경보전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상위 환경계획을 반영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향을 마련함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환경보전목표는 계획의 적정성·지속성을 중심으로 설정하되 계획으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영향에 대하여 이를 다루고 있는 관련 상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반영(p.31~42, p.378~383) - 계획의 적정성·지속성을 중심으로 환경보전 계획(안)을 수립하여 주요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계획, 생태축, 환경보전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정함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의견없음	-
	3. 토지이용 구상안	
	◦의견없음	-
	4. 대안의 설정	
	◦수단·방법의 대안의 평가는 본 계획에서 수립하고 있는 목표와 6대 전략, 권역별 전략 및 추진계획,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계획을 지표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반영(p.47~48) - 8대 국가전략 관광권과 다른 권역 대안을 비교·검토하였음 - 구체적 사업내용과 입지가 설정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환경계획을 지표로 평가하기 어려움
	5.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환경보전과의 부합성 : 본 계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과 직·간접으로 연관이 있는 환경 관련 계획을 선정하고, 그 환경 관련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와 추진전략이 금회 수정계획과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	◦반영(p.253~266)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자연환경·탄소중립 관련 계획의 정책방향을 제4차 수정계획과 부합여부를 검토하고 제시하였음
	◦공간계획의 적정성 : 5대 초광역관광권, 3대 특별관광권의 권역별 개발방향과 자연환경보전계획의 3대 핵심 생태축, 국가환경보전계획의 권역별 공간환경전략과의 상충 여부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향 수립 필요	◦반영(p.322~350, p.373~381) - 본 계획은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으로 기존 관광개발계획을 재검토·정비하는 계획으로 공간환경전략에 부합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보전 계획(안)을 수립하였음
	◦환경용량의 적정성 : 오버투어리즘 관광지의 폐기물 발생과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에 대한 환경적·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책방향 수립 필요. 또한 관광시설의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수소 환경 확대와 에너지 효율 향상, 순환경제 확대 등의 기본방향 수립 필요	◦반영(p.146~147, p.378~383) -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에 대한 정책방향을 수립하였으며, 환경용량 지속성 검토, 관광객 집중, 환경부하 및 탄소중립·친환경 이용관리 관련 검토기준 등을 제시하였음.
	6. 기타	
	◦의견없음	-

구 분	평가항목 · 범위등 결정내용	조치내용
충청북도청 오○○ 위원	□ 총괄의견	
	◦본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는 적절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며, 관광개발계획의 최상위 법정계획임을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반영(p.253~266, p.274~301) -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시하였음.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의견없음	-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의견없음	-
	3. 토지이용 구상안	
	◦의견없음	-
	4. 대안의 설정	
	◦의견없음	-
	5.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의견없음	-
	6. 기타	
	◦의견없음	-

구 분	평가항목 · 범위등 결정내용	조치내용
주민대표 홍○○ 위원	□ 총괄의견	
	◦국가의 중장기 관광개발 법정계획으로 전반적인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반영(p.253~266) - 국가환경종합계획·탄소중립 및 자연환경 관련 정책 등을 검토하여 제시하였음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의견없음	-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의견없음	-
	3. 토지이용 구상안	
	◦의견없음	-
	4. 대안의 설정	
	◦의견없음	-
	5.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의견없음	-
	6. 기타	
	◦의견없음	-

구 분	평가항목 · 범위등 결정내용	조치내용
민간 전문가 박 ○ 위원	□ 총괄의견	
	◦본 계획은 전국을 대상으로 관광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이므로 관광권별 환경적 특성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하위계획의 수립 원칙에 반영하는 데 평가의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반영(p.298~312, p.335~340) - 본 계획의 관광권역별 공간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였고 하위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본 계획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나, 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안전을 위해 생물다양성 영향과 권역별 기후위험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하위계획의 입지·관리 원칙에 반영할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반영(p.138~141) - 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안전을 위해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관광개발 강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위계획의 원칙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함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 절차 중심의 목표에 더하여, 관광개발계획에 적용할 실질적인 환경보전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환경민감지역의 훼손 회피, 기존 관광자원의 우선 활용, 관광객 집중에 따른 환경부하 관리, 기후위험을 고려한 안전한 이용·관리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자료가 확보되는 경우 판단 가능한 지표를 함께 제시할 것을 제안함	◦반영(p.31~42, p.356~366, p.378~383) - 실질적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본 계획은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입지가 설정되지 않아 환경민감지역의 훼손·회피, 환경부하 관리 등 목표설정, 지표 제시가 어려우나, 공간계획·자연환경보호지역 및 환경용량 검토 자료 등을 제시하였음.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대한민국 전역을 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하는 데 동의함. 다만 실제 분석에서는 계획의 8대 국가전략 관광권을 기본 단위로 삼고, 연안·도서, 산지, 하천·습지, 도시 등 환경특성이 다른 지역을 구분하여 검토할 것을 제안함.	◦반영(p.197~252, p.356~366, p.378~383) - 환경특성이 다른 지역의 구분·검토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서 시행될 계획이며, 본 계획에서 전국 단위 공간계획 및 자연환경 현황을 제시하였음.
	3. 토지이용 구상안	
	◦의견없음	-
	4. 대안의 설정	
	◦의견없음	-
	5.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공간계획의 적정성: 8대 관광권별 보호지역, 주요 생태축 및 환경민감지역의 분포를 검토하고, 하위계획에서 적용할 훼손 회피·기존 자원 활용 원칙 제시	◦반영(p.356~366, p.378~383) - 기존 관광자원 재생·관리와 자연환경 보호 및 환경용량 검토자료 등을 제시하였음.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연간 관광수요뿐 아니라 계절별·지역별 집중, 기존 관광시설의 활용 수준과 신규 공급 필요성 검토	◦반영(p.366~372) - 2031년 수요예측과 국내·외 수요구조 및 공급 등을 검토하여 제시하였음.
	◦관광지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 관광객 집중에 따른 교통·폐기물·물 이용·생태계 교란 등 주요 부담과 관리방안, 폭염·집중호우·침수·산불 등 권역별 주요 기후위험을 파악하고, 하위계획의 입지 및 운영·관리 원칙에 반영하는 방법 검토	◦반영(p.373~383) - 주요 환경관리방안과 환경용량 지속성에서 관련 관리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시 주요 기후위험을 파악할 계획임
	6. 기타	
	◦의견없음	-

구 분	평가항목 · 범위등 결정내용	조치내용
민간 전문가 고○○ 위원	□ 총괄의견	
	◦본 계획은 신규 관광시설의 무분별한 조성을 지양하고 기존 관광자원의 내실 있는 활용 및 관리, 지속가능한 관광을 지향하고 있어 계획의 기본 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의견없음	-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관광개발기본계획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계획이므로 대상지역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설정한 것은 타당함	-
	3. 토지이용 구상안	
	◦구체적인 입지계획이 없는 정책계획의 특성상 토지이용 구상안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타당함	-
	4. 대안의 설정	
	◦의견없음	-
	5.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탄소중립기본법” 등에 따른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및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와 함께 관광개발과 연관된 자연환경분야 관련 계획을 추가로 검토·제시하여야 함	◦반영(p.264~273, p.298~301) - “탄소중립기본법” 등에 따른 관련계획인 제4차 국가 기후위기 대응대책,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등이 본 계획과의 부합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며, 자연환경분야 관련 계획을 환경보전계획 부합성에 포함하여 검토하였음,
	6. 기타	
	◦의견없음	-

제 8 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8.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및 주민의견 검토

제8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8.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내용 공개 : “평가 항목 및 내용” 등을 결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14일 이상 공개

○ 공개 장소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통신망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http://www.eiass.go.kr/

○ 주민 의견 반영

- 관련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영

  (공개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결과(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등)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주민 등 의견을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

○ 의견제출 : 제출된 주민의견 없음

〈표 8.1-1〉 결정내용 공개에 대한 주민의견 제출 결과

구 분	문화체육관광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비고
주민의견 제출	없음	없음	

※ 본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2027~2031)은 정책계획으로서 추후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제15조의2(정책계획의 의견 수렴)에 의거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실시할 계획임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0394호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2027~203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2027~2031)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붙임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공개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06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1. 계획개요
   가. 계 획 명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2027~2031)
   나. 대상지역 : 대한민국 전역
   다. 계획수립근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라. 계획수립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2. 공개개요
   가. 공개기간 : 2026. 10. 06. ~ 2026. 10. 20.
   나. 공개방법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다.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붙임 참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작성 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관광개발과에 서면제출(hooya2022@korea.kr)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등록
   다. 의견범위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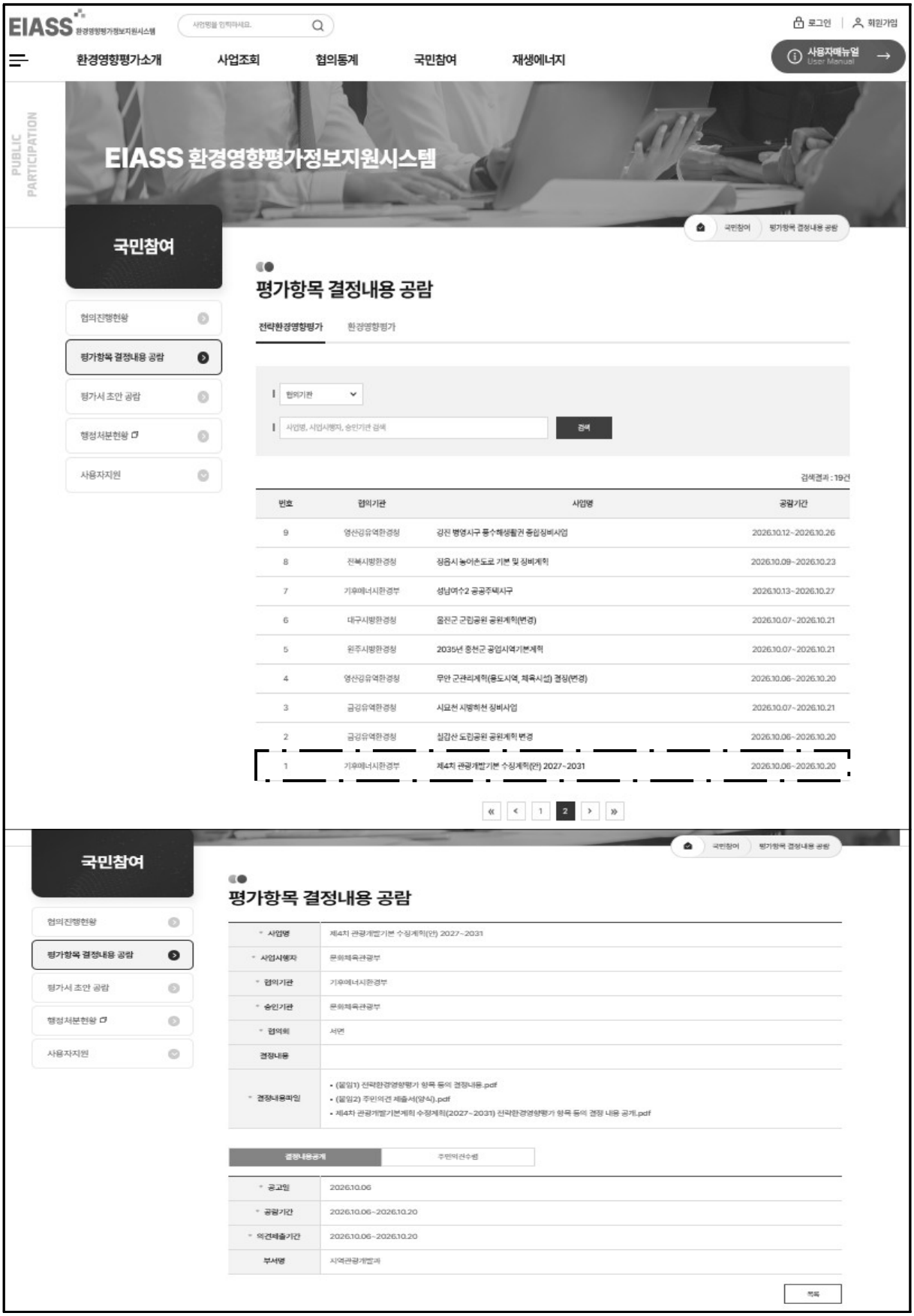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관광개발과(☎044-203-2844, hooya2022@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양식) 1부. 끝.

(그림 8.1-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문



(그림 8.1-2)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문화체육관광부)



(그림 8.1-3)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제 9 장

정책계획의 적정성

9.1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2027~2031)

9.2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9.3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9.4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제9장 정책계획의 적정성

9.1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2027~2031)

9.1.1 비전 및 목표

가. 수정방향

(1) 기존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비전, “미래를 여는 관광한국, 관광으로 행복한 국민”

- 10년 후의 미래는 관광의 일상화와 일상공간의 관광자원화가 보편화된 환경에서 행복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국민들의 중요한 권리로서 관광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을 지향
- 국가관광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관광발전을 견인하는 관광자원 개발과 관리의 방향은 관광객(관광시장), 관광자원, 개발 주체(지자체, 지역주민, 민간 등)의 영역을 아우르고, 연계·협력하는 합리적 사고와 통합된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설정
- 2031년에는 미래 관광개발 구현을 통해 관광하고 싶은 매력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고, 관광객과 지역민 모두가 기본적인 권리로서 관광을 통해 행복한 미래를 이룬다는 의미

(2) 현 정부의 국정 목표와 다양한 환경 변화 반영

- 기존 비전은 “미래”, “행복” 등 다소 추상적 가치를 지향하며, 목표는 당초 10년 뒤 미래 관광개발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가치와 수단 중심으로 표현 및 설정
- 수정계획에서는 현 정부의 국정 철학 및 목표, 주요 관광정책 방향, 관광트렌드 및 주요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2031년의 관광개발 미래상과 목표를 설정
  - 국정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 국정목표: 2.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3.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 주요 관광정책 방향: 외래관광객 4천만 시대, 내수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관광, 전 국토 관광시대 구현
  - 주요 환경 변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심화, 기후위기 심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관광수요의 다변화, 지역 간 연계·협력 확대 요구
- 특히 목표는 관광개발을 통해 관광개발 핵심요소를 어디까지 변화시킬까,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를 반영하여 설정
  - 관광개발의 핵심요소인 관광자원, 관광시장, 추진주체와 지역(성과)를 기준으로 계획기간 동안 도달하고자 하는 변화상을 3대 목표로 설정

나. 계획 비전

(1) 모두가 누리는 관광, 관광으로 성장하는 대한민국

○ '모두가 누리는 관광'은 국민과 지역주민, 국내외 관광객, 현재와 미래세대가 관광의 기회와 경험, 관광개발로 창출되는 편익을 함께 향유하는 것을 의미

○ 단순히 누구나 여행할 수 있다는 포용적 의미를 넘어, 관광객은 좋은 관광경험을 누리고, 지역주민은 관광으로 창출되는 편익을 누리며, 미래세대는 보전된 관광자원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관광개발 지향

- 관광 향유의 포용성 + 국민 체감 + 지역 간 격차 완화 + 지속가능성

○ '관광으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은 관광객 수나 산업 규모의 성장에 한정되지 않고, 관광자원의 가치, 관광시장, 지역산업과 일자리, 지역역량이 함께 성장하는 것을 의미

○ 관광자원의 가치 제고와 글로벌 관광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실현, 2031년에는 국민과 지역주민, 국내외 관광객, 현재와 미래세대가 관광의 기회와 편익을 함께 누리고, 관광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여 지역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실현, 기존 계획의 '관광으로 행복한 국민'을 계승하면서도 대상을 지역주민·외래관광객·미래세대까지 확장



(그림 9.1.1-1) 비전, 목표, 6대 추진전략

다. 계획 목표

(1) 세계적 관광매력을 갖춘 글로벌 관광

○ K-컬처에 대한 국제적 관심 확대와 국가 간 관광객 유치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관광자원과 관광경험을 세계인이 선택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고

○ 글로벌 관광은 외래관광객 수의 양적 확대에 한정되지 않으며, 지역 고유자원의 매력과 차별성, 콘텐츠와 서비스의 품질, 접근성과 편의성, 안전성 등 관광경험 전반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의미

○ 자연·문화자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생활문화와 산업, 음식, 예술, 경관 등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발굴하고, K-컬처 및 첨단기술과 결합하여 세계적인 관광매력을 갖춘 자원과 콘텐츠로 발전

○ 신규 관광자원의 발굴·조성과 함께 기존 관광자원의 활용과 재생, 운영·관리 수준을 높여 세계인이 방문하고 만족하며 재방문을 고려하는 경쟁력 있는 관광환경 조성

○ 이에 기반하여 지역 고유성과 한국적 매력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관광경험을 제공하고, 대한민국 관광의 국제적 위상과 관광경쟁력 제고

(2) 체류와 소비를 지역으로 확산하는 상생관광

○ 관광객 수의 증가가 일부 지역과 관광지의 방문에 그치지 않고, 여러 지역으로의 이동과 장기 체류 및 지역 내 소비로 연결되도록 관광시장의 질적 변화를 유도

○ 상생관광은 관광객에게 매력적이고 편리한 관광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가 지역의 상권·산업·일자리와 연결되어 관광객과 지역이 관광의 편익을 함께 누리는 것을 의미

○ 수도권과 일부 유명 관광지에 집중된 관광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하고, 관광거점과 주변 지역, 도시와 농산어촌, 지역 간 관광자원과 동선을 연계하여 관광객의 이동범위와 체류시간 확대

○ 단순 방문과 관람 중심의 관광에서 벗어나 숙박, 음식, 쇼핑, 문화·예술, 야간관광, 웰니스 등 지역의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경험하는 체류·소비형 관광 활성화

○ 관광객의 이동·체류·소비행태를 분석하여 관광교통, 관광정보, 결제, 안전, 여행 전 과정의 편의를 개선하고, 관광수요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 조성

○ 이를 토대로 관광객의 만족과 지역의 관광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함께 높이고, 관광수요의 지역 편중 완화와 지역 균형성장에 기여

(3) 관광가치와 지역 활력이 선순환 하는 지속가능관광

○ 관광개발이 단편적 시설 조성과 관광객 유치에 그치지 않고, 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개발·이용·보호·관리하고 관광으로 창출된 편익을 지역에 환류하여 관광자원의 가치 보전과 지역 활력이 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 형성

○ 지속가능관광은 지역의 환경적·사회적·문화적 수용력을 고려하여 관광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이용·보호·관리하고, 그 가치를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의미

○ 관광가치는 관광자원의 매력과 보전가치뿐만 아니라 관광을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편익, 관광객의 경험가치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포괄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민간기업, 지역관광조직 등 다양한 주체가 관광개발의 계획·조성·운영·관리 과정에 참여하고,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에 기반한 지역주도 관광개발 체계 구축

○ 관광으로 창출된 소득과 일자리 등 편익이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다시 관광자원의 보전·관리, 콘텐츠와 서비스 개선, 지역역량 강화에 재투자되는 환류구조 마련

○ 기후변화와 오버투어리즘, 관광시설 노후화 및 운영 부실 등에 대응하여 관광자원의 개발·이용·보호·관리를 균형 있게 추진하고, 관광개발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관리와 성과평가 강화

○ 이를 통하여 관광자원의 가치 제고가 지역 활력을 높이고, 높아진 지역 활력이 다시 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가치 향상으로 이어지는 관광개발의 선순환 실현

라. 계획 지표

○ (글로벌 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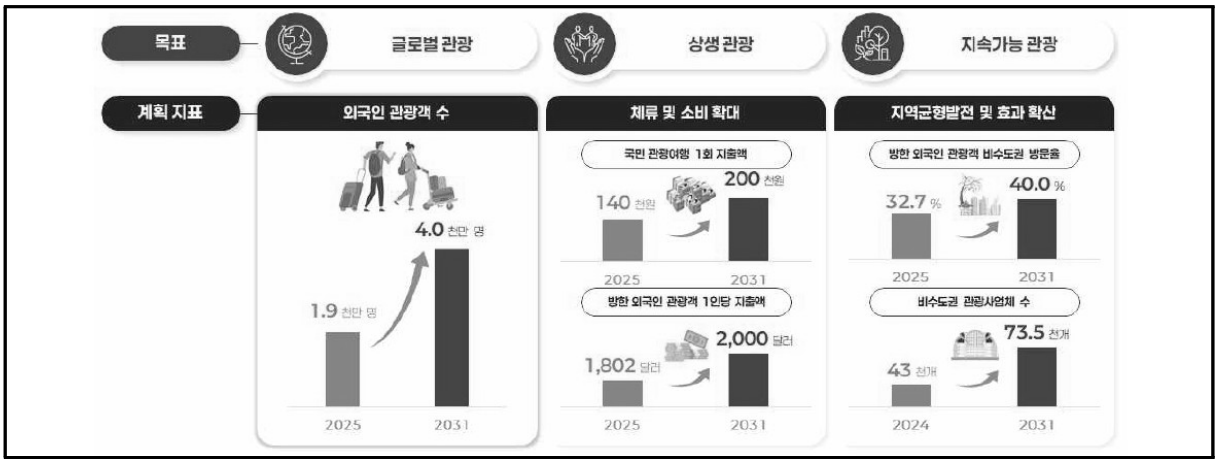
- 외국인 관광객 수 — 2025년 1.9천만 명 → 2031년 4천만 명

○ (상생 관광 : 체류 및 소비 확대)

- 국민 관광여행 1회 지출액 — 2025년 140천 원 → 2031년 200천 원
- 방한 외국인 관광객 1인 지출액 — 2025년 1,802달러 → 2031년 2,000달러

○ (지속가능 관광 : 지역균형발전 및 효과 확산)

- 방한 외국인 관광객 비수도권 방문율 — 2025년 32.7% → 2031년 40.0%
- 비수도권 관광사업체 수 — 2024년 43천개 → 2031년 73.5천개



(그림 9.1.1-2) 계획 지표

마. 추진 전략

(1) 전략 도출

(가) 제4차 기본계획의 6대 전략체계 계승과 정책 환경 변화 대응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추진 전략은 자원·시장·주체라는 정책영역, 개발·이용·보호·관리라는 관광개발 기능, 입체적·스마트·지속가능·합리적이라는 방향성을 토대로 6대 전략 도출
- 기존 계획에서 제시한 6대 전략체계는 관광자원, 관광환경, 지역 및 주체, 연계·협력, 제도·관리 등 관광개발의 핵심 정책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수정계획에서도 기본적인 전략 틀 유지
- 다만 코로나19 이후 관광시장 변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관광수요의 다변화, 지역 간 연계·협력 확대 등 2022년 이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수정계획의 비전 및 목표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략별 정책방향과 추진내용 재구조화

(나) 수정계획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의 성과지향성 강화

- 수정계획의 비전인 ‘모두가 누리는 관광, 관광으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전략체계의 상위 지향으로 설정하고, 관광의 향유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관광이 지역과 국가의 성장에 기여하도록 전략의 정책적 지향 명확화
- 세계적 관광매력을 갖춘 글로벌 관광, 체류와 소비를 지역으로 확산하는 상생관광, 관광가치와 지역 활력이 선순환 하는 지속가능관광의 3대 목표를 6대 전략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핵심 성과로 설정
- 이에 따라 관광자원의 공급과 개발 자체보다 세계적 관광매력의 창출, 관광 향유기회의 확대, 체류와 소비의 지역 확산, 관광가치와 지역 활력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등 전략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를 중심으로 전략별 방향 재설정

(다) 관광개발 정책영역의 확장과 유기적 연계

- 관광자원의 개발과 확충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관광개발 영역을 넘어 관광자원의 매력과 가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 편리하고 안전한 관광환경, 지역관광 생태계, 지역·부문 간 연계·협력, 제도·관리체계까지 관광개발의 정책영역 확장
- 개별 관광자원이나 시설 중심의 개발에서 나아가 관광객의 이동·체류·소비, 지역주민과 관광사업자 등 지역주체, 지역산업 및 지역 간 관계까지 포괄함으로써 관광자원과 관광환경, 지역주체와 산업, 공간 간 관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관광개발체계로 확장
- ‘자원 발굴-기반 확충-체계 구축’ 중심의 전략에서 ‘가치 제고-지속가능한 이용·관리-지역효과 확산-제도 혁신’ 중심의 전략으로 고도화

(라) 개발·이용·보호·관리의 균형에서 관광가치와 지역 활력의 선순환

- 「관광진흥법」에서 제시하는 관광자원의 개발·이용·보호·관리라는 관광개발의 기본 기능을 균형 있게 반영하되, 관광자원의 신규 공급과 개발 중심에서 기존 자원의 가치 제고와 지속가능한 이용·관리까지 관광개발의 기능 강화
- 관광자원의 개발 성과가 개별 관광지에 머무르지 않고 관광객의 향유와 체류·소비 확대를 거쳐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에 파급되고, 이를 통해 형성된 지역 활력이 다시 관광자원의 매력과 가치를 높이는 선순환적 관광개발체계 지향
- 이를 통해 관광매력 제고, 관광 향유 및 체류 확대, 지역 내 소비와 효과 확산, 지역 활력 제고, 관광가치 재창출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구현

(2) 전략별 추진 방향

(가) 전략 1. 관광자원의 매력과 가치 제고

- 관광수요와 기술·산업 변화에 대응하여 관광자원의 영역과 활용 방식을 확장하고, 지역 고유자원의 재발견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해 차별화된 관광매력 강화
- 신규 관광자원 발굴 중심에서 기존 자원의 재해석 및 고도화와 콘텐츠 융복합으로 관광자원의 질적 가치를 높여 세계적 수준의 관광경쟁력 확보

(나) 전략 2.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이용·관리

-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성 요구에 대응하여 관광자원의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활용 확산
- 노후·유휴 관광자원의 재생과 관광객 집중 등 관광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관광자원과 지역사회의 회복력 강화

(다) 전략 3. 편리하고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

- 관광객의 이동·체류·관광활동 전 과정에서 교통·안내·정보·서비스의 연결성과 편의성을 높여 관광 만족도를 제고하고 원활한 관광활동을 지원하는 관광환경 조성
- 관광약자를 포함한 모든 관광객의 관광 접근성과 안전을 강화하고, 투명한 가격과 신뢰할 수 있는 관광서비스를 확산하여 안심하고 누리는 관광여건 마련

(라) 전략 4. 역동적인 지역관광 생태계 육성

○ 주민·지역기업·관광사업자 등 다양한 지역주체의 참여와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자원·산업과 관광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지역관광 가치 창출

○ 관광개발의 성과가 지역의 사업·일자리·소득 등 지역 활력으로 이어지는 자생적 관광 생태계 육성

(마) 전략 5. 연계·협력 기반의 관광효과 확산

○ 행정구역과 개별 관광지의 경계를 넘어 지역·관광자원·산업 간 연계와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통해 관광공간과 관광경험의 범위 확장

○ 광역·초광역 관광 연계와 지역 간 역할 분담을 통해 관광객의 이동·체류·소비를 지역으로 확산하고 관광개발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제고

(바) 전략 6. 관광개발 제도·관리체계 혁신

○ 관광개발 환경과 정책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광개발 관련 계획·제도와 추진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정책 실행력 강화

○ 관광자원의 개발·이용·보호·관리를 전 주기적으로 고려하고 계획부터 사업 추진·운영·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관광개발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9.1.2 추진 전략

가. 관광자원의 매력과 가치 제고

정책 방향
○ 미래 관광수요에 대응한 선제적 관광자원 발굴 ○ 관광자원 영역과 대상을 확대하여 유연한 관광개발 추진 ○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문화콘텐츠의 관광콘텐츠화
계획 지침
○ 미래 관광수요 대응 선제적 관광자원 발굴 - 정부는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관광수요 요구에 대응하는 선제적 능동형 관광개발 전략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경계가 사라지는 경계 융화 시대에 자연, 역사문화 등 전통적 관광자원 개발을 넘어 일상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관광개발 대상과 영역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외 없이 모든 국민이 관광을 누릴 수 있도록 세대별 특화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관광공간을 개발하여 관광 여건을 개선한다. - 정부는 차세대 미래기술을 관광자원과 공간에 접목하여 기술이 집약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개발하여 확장된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관광공간을 조성한다.

계획 지침
○ 융·복합 관광콘텐츠 확대 - 정부는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은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면서도 관광스토리와 콘텐츠를 접목·보강하여 국가 상징 브랜드 관광자원으로 육성한다. - 정부는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고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하는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관광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된 관광환경 및 시장의 요구를 진단하고, 미래 관광수요와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는 관광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형 융합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산업관광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을 확대한다.

[전략 1] 관광자원의 매력과 가치 제고

추진 과제	세부 과제
1 첨단 기술과 미래 테마를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관광경험 확장 ○ 미지 영역을 테마로 한 관광콘텐츠 발굴 ○ 디지털기술 기반의 참여형 관광콘텐츠 개발
2 지역 고유 문화·예술 콘텐츠의 관광자원화	○ K-콘텐츠를 활용한 한류 관광거점 조성 ○ 지역특화 문화예술관광도시 조성 ○ 건축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3 수요 변화에 대응한 특화 관광개발 추진	○ 일과 여가가 공존하는 워케이션 관광 활성화 ○ 휴양·치유 기반의 웰니스 관광 고도화 ○ 반려동물 친화 관광환경 조성 ○ 야간관광 공간 조성 및 야간 경제 활성화
4 관광기반 시설의 체험 명소화	○ 체류형 테마 숙박시설 확충 ○ K-푸드의 글로벌 관광자원화 ○ 쇼핑공간의 관광체험·문화복합공간 전환
5 산업·문화자원의 융합적 관광 활용	○ 복합 기능을 갖춘 융합관광 클러스터 조성 ○ 관광매력을 갖춘 산업관광 활성화 ○ 종교관광 거점 및 연계 코스 개발 활성화

(1) 첨단 기술과 미래 테마를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관광경험 확장

○ 관광객의 관광 경험이 고도화되면서 콘텐츠 품질 문제, 기기 착용 등 이용 불편 및 신규콘텐츠 개발의 고비용 구조 등의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의 기술이 관광객들에게 많은 관심 유발

○ 단순히 녹화된 연출과 반복적 패턴 영상을 감상하는 형태를 벗어나, 프로젝션 매핑이나 미디어 파사드를 구현하는 인터랙티브 영상 기술을 활용하여 관람객의 이동이나 터치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연출을 체험하는 기술융합형 체험관광 확대

○ 실감 콘텐츠가 독자적인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개인기기 착용 없이 대규모 공간 전체를 몰입 환경으로 구성하는 방식이 관광지로서의 집객력과 지속성을 입증

- 기기 착용형(HMD·스마트글래스)과 무기기(無機器) 대공간 몰입형을 병행하되, 관광자원 조성의 기본형은 무기기 대공간형으로 설정하여 동시 수용 인원 확보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연령·신체조건에 따른 이용 제약 해소, 무장애 관광실현 도모

○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실감콘텐츠 기술을 고도화하여 DMZ, 독도, 백두산 천지, 해저, 화산 내부 등 실제 방문하고 체험하기 어려운 공간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가상관광 체험 확대 개발

○ 기존 관광자원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1차원적 활용을 추구하기보다는 기술이 집약된 관광자원으로서 새로운 접근과 재해석을 바탕으로 신개념 관광자원으로 창출하고, 미래사회에서 관광객이 추구하는 가치를 담은 관광자원으로 조성

○ 관광자원의 개념과 영역이 확장되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전통적 관광시설, 자원 등을 뛰어넘은 새로운 기술과 자원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수단으로써 실감기술 활용 케이(K)-관광콘텐츠 발굴 및 체험 가능한 관광자원 구현

○ 생성형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동일한 공간에서도 관광객의 언어·연령·관심사·체류시간에 따라 서사와 해설이 실시간으로 달라지는 개인화 실감 콘텐츠를 구현하고, 일회성 방문에 그치기 쉬운 실감콘텐츠 시설의 한계를 극복하여 재방문 수요 창출

(나) 미지 영역을 테마로 한 관광콘텐츠 발굴

○ 해저, 우주 등 미지의 세계(공간)는 인류가 동경하는 대상이고, 과학기술 발전으로 일반인들도 참여하고 접근 가능한 시대가 열려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발굴하고 활용 추진

-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주개발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우주관광 실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유망기술 연계 개발

- 민간 기업에서 우주경계선인 고도 100km에 도달하고 내려오는 준궤도 방식의 민간인 우주관광을 실현시켰고, 더 나아가 국제우주정거장(ISS)을 다녀오거나 더 높은 궤도에서 체류하는 우주관광시대 본격화

ㅇ 미지의 공간 관광자원화를 위한 연관 산업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여 항공 및 우주산업, 해양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위성 및 우주항공 연구, 생물 다양성, 해저 공간개발 연구 등과 관광개발 연구 연계 확대

ㅇ 우주는 인류가 오랫동안 동경해 온 영역으로,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관광 영역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열리고 있음. 다만 궤도·준궤도 우주관광은 여전히 초기 상업화 단계에 머물러 있으므로, 우주관광 상품의 직접 실현에 앞서 국내에 축적된 우주항공 자산을 지상의 관광자원으로 전환하는 단계적 접근 추진

- 민간 기업에서 우주경계선인 고도 100km에 도달하고 내려오는 준궤도 방식의 민간인 우주비행과 궤도 비행을 실현하며 우주관광의 기술적 가능성을 입증하였으나, 기체 개발 지연과 높은 비용으로 상업운항 일정은 반복적으로 조정되고 있어 상용화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
- 국내에는 발사장, 연구기관, 산업단지 등 우주항공 자산이 축적되어 있으나 대부분 연구·산업 목적으로 조성되어 방문객 수용 기능이 제한적인 상황

ㅇ 현 기술·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지상형·체험형·기반형의 단계적 접근으로 우주 분야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우주관광 상용화 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

- (지상형) 국내 우주항공 자산의 권역형 관광자원화: 나로우주센터(전남 고흥), 우주항공청 및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경남 사천·진주),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 등을 연계한 우주관광 벨트를 조성하고, 발사 일정과 연동한 발사 관람 관광 프로그램 개발
- (체험형) 준우주 체험 자원 발굴: 무중력 체험, 성층권 관측, 우주인 훈련 체험 등 현 기술수준에서 실현 가능한 중간 단계 체험자원을 발굴하여 우주관광 수요 조기 흡수
- (기반형) 우주관광 상용화 대비 기반 조성: 우주관광 활성화에 대비한 안전기준·보험·면허 등 제도 검토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국내 우주관광 수요 조사 및 시장 전망 분석 실시

ㅇ 새로운 영역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연관 산업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여 항공 및 우주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 「우주항공청(KASA, 2024년 5월 개청)」의 우주개발 정책과 연계하여 우주관광 실현을 위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광분야 적용 가능한 유망기술 연계 개발
- 항공·우주산업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위성 및 우주항공 연구와 관광개발 연구의 연계 확대

(다) 디지털기술 기반의 참여형 관광콘텐츠 개발

- 기존 물리적 시설을 조성하는 하드웨어 중심 관광 개발에 소요되는 대규모 시설투자 없이 기존 관광자원에 새로운 경험과 스토리를 부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관광개발 방식으로 전환 필요
- 관광객이 정해진 동선을 따라 관광자원을 단순히 관람하고 정보를 전달받는 수동적 관광방식에서 벗어나, 관광객 스스로 미션을 수행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관광공간을 탐색하는 게임기반의 능동적 참여형 관광콘텐츠 개발 수요 증대
- 지역의 역사, 문화, 인문 관광자원에 스토리텔링을 접목하고, 위치기반서비스(LBS), 모바일 앱, 증강현실(AR), QR코드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보물찾기, 미션투어, 추리게임, 역할수행게임(RPG) 등 관광객 참여형 콘텐츠로 개발
- 관광객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서로 다른 관광경로와 이야기가 전개되도록 콘텐츠를 구성하고, 미션 수행, 포인트 및 아이템 획득, 레벨 상승, 지역별 배지 수집 및 이용자 간 경쟁·협력 등의 게임화(Gamification) 요소를 관광경험 전반에 적용하여 관광객의 몰입과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유도
-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Questo는 도시 전체를 게임공간으로 활용하여 관광객이 스마트폰을 통해 실제 거리를 이동하면서 단서를 찾고 퍼즐과 미션을 해결하는 도시탐험형 관광상품을 제공함. 런던의 역사와 인물을 활용한 미션, 베를린 장벽 탈출 스토리 등 실제 장소와 지역 이야기를 게임 서사와 결합하여 기존 도보관광을 능동적인 경험으로 전환하며, 현재 세계 1,000개 이상의 도시에서 관련 콘텐츠 제공
- 이러한 게임기반 관광콘텐츠를 전통시장, 골목길, 역사문화지구, 지역축제, 자연관광지 등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객의 이동경로를 다양화하고, 상대적으로 방문이 적은 장소에 미션과 보상을 배치함으로써 관광객의 공간적 분산과 체류시간 확대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
- 특히 관광시설과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대규모 관광개발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 및 재원 확보에 현실적 한계가 있는 소규모 지역의 경우, 신규 시설 조성보다는 기존 지역자원에 스토리, 미션, 게임 등의 소프트웨어적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관광경험과 방문동기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관광개발 방식으로 활용 가능

(2) 지역 고유 문화·예술 콘텐츠의 관광자원화

(가) K-콘텐츠를 활용한 한류 관광거점 조성

- ㅇ K-음악, K-드라마, K-영화 등 한류콘텐츠(K-culture)를 활용한 국제적 관광명소를 조성하고 K-pop, 영화, 드라마 등 개별적 한류콘텐츠가 아닌 한류 자체의 정체성을 부각시킨 스토리 테마공원 조성 중
- ㅇ K-pop, 드라마, 영화에 한정되었던 한류의 범위가 웹툰·웹소설·애니메이션·게임·버추얼 아이돌 등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제작되지 않았더라도 한국적 요소를 담은 융합 콘텐츠까지 한류로 인식되는 단계에 이르렀음. 개별 장르 콘텐츠가 아닌 한류 자체의 정체성을 부각시킨 스토리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국제적 관광명소로 육성
- ㅇ 한류콘텐츠를 관광자원으로 소비하는 장소적 기능뿐만 아니라 한류 R&D, 문화유산화(아카이브), 한류관광 성지로서 공간과 기능을 집적화
- ㅇ 한류관광 테마공원 내에는 한류 콘텐츠 공연이 가능한 전문 공연장, 전문 상영관 등 한류콘텐츠를 체험 관람할 수 있는 시설 조성
- ㅇ 드라마나 영화 등 촬영장비, 세트장 등을 활용하여 관광객이 직접 주인공이 되어 특정 장면을 촬영하거나 무대에 올라서는 등 직접 시연·체험하는 몰입형 오픈 스튜디오를 포함하여 오감체험형 테마공원으로 조성
- ㅇ 대규모 한류관광 거점 조성은 장기 인허가와 대규모 민간투자가 결합되는 사업으로, 인허가 지연과 사업비 급등으로 사업이 무산된 전례가 있음. 이에 따라 인허가 절차의 사전 일괄 협의(원스톱 인허가), 사업비 변동에 대응하는 협약 조정 장치,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공급계획의 사전 확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단일 초대형 단지 방식과 함께 기존 공연·전시 인프라를 활용하는 분산형 조성 방식을 병행 검토

(나) 지역특화 문화예술관광도시 조성

- ㅇ 비엔날레, 국제영화제 등 국제적 인지도가 있는 도시 중심으로 문화예술 체험과 도심 관광이 융합된 관광개발 추진
  - 비엔날레(광주, 부산), 국제영화제(부산, 전주, 부천), 「대한민국 문화도시」(속초, 순천, 안동 등 13개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대표적 도시관광자원을 발굴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관광도시 조성
- ㅇ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지역주민의 문화향유와 문화산업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둔다면, 문화예술관광도시는 그 성과를 외래관광객이 소비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어 사업 간 역할을 분담하고 중복투자 방지

ㅇ각 도시가 확정한 특화 방향(순천의 애니메이션·웹툰, 전주의 전통문화와 신기술 융합, 통영의 음악, 안동의 유교문화, 진도의 전통예술 등)을 관광자원 유형과 연계하여 도시별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개발

ㅇ문화예술관광도시에 외래관광객 방문을 촉진할 수 있도록 안내, 숙박, 쇼핑 등 다양한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외래관광객 유치촉진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도시를 세계적 관광 브랜드로 육성하고 외래관광객 지방분산 촉진

ㅇ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상당수가 주간에 집중되어 당일 방문에 그치는 한계가 있으므로, 야간 공연·전시·개방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1박 이상의 체류형 방문으로 전환하고 지역 내 관광지출 확대 유도

ㅇ문화 자산이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특구 및 광역관광권 제도와 연동하여 문화관광특구 및 문화관광권 지정

ㅇ관광자원 및 관광콘텐츠로 활용 가능한 독특한 문화자원을 조사·발굴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독창성을 갖춘 관광자원으로 전환하여 신규 관광수요 창출

(다) 건축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ㅇ세계적인 문화 랜드마크로서 궁궐, 사찰, 서원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축문화유산을 관광명소로 조성

- 건축문화유산은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대 또는 젊은 세대에게 계승·상속할 만한 가치를 지닌 건축물 또는 건축 양식의 문화적 소산
- 2024년 9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 유산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하여 보호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1970~80년대 산업시설·공공건축·극장·상업건축 등 그동안 보호·활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근현대 건축자산을 신규 관광자원으로 편입

ㅇ국내 지역별 건축문화유산을 선별하여 관광숙박, 관광쇼핑, 관광안내 및 관광음식 등의 공간으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 후 이를 지역관광 대표시설로 육성

ㅇ고택 체험, 서원·템플스테이 등 전통건축물 활용 체험관광 확대 및 근대문화재 집중지역 관광가로(街路) 조성

- 한국의 고유한 역사.문화유산인 향교, 서원, 고택, 사찰 등을 외래관광객 선호가 높은 고택 체험, 한옥체험 및 템플스테이 등 적극적인 체험형 관광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의 역사문화스토리와 콘텐츠 등을 접목하여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

○ 국가유산청에서 관리 중인 근대건축문화 유산 중 지역관광 랜드마크로 부각될 수 있는 대표적 건축문화유산을 선별하여 보전과 활용을 통해 관광자원화하고, 건축물을 테마로 도시별 건축문화기행(걷는 길)과 연계하여 공간경험성 극대화

(3) 수요 변화에 대응한 특화 관광개발 추진

(가) 일과 여가가 공존하는 워케이션 관광 활성화

○ 워케이션 관광지는 업무와 관광, 휴식을 관광지에서 향유하는 관광시설 또는 공간으로 디지털 기기, 회의실 등 업무 기능과 음식, 숙박 등 관광편의 기능을 갖춘 지역관광 베이스캠프로 특화

- 워케이션 관광지가 갖춰야 할 주요 속성으로는 숙박시설, 장소(농촌, 도시, 바다 등), 관광체험 콘텐츠, 식음 및 부대시설, 접근성, IT기술(업무 환경) 등

○ 하이브리드 근무의 제도화와 디지털 노마드·프리랜서·창작자 경제의 성장으로 일과 여가의 경계가 구조적으로 융합되면서, 워케이션은 일시적 유행이 아닌 상시적 관광 수요이자 지역 생활인구 확대 수단으로 정착

○ 워케이션 관광지가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관광자원의 매력성, 관광서비스와 편의시설의 품질 등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지역별, 관광자원 특성 및 테마별로 워케이션 관광지가 조성되어야 하고 다양성을 위해 소규모 관광마을에도 접목

○ 워케이션 관광지는 업무 효율성 제고와 관광 만족도를 동시에 추구하므로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 및 관광시설 운영 주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연계·협력을 기반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관광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관광핵심공간으로 모델화

- (단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정 관광지(휴양시설) 및 관광마을에 원격 업무가 가능한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 폐교·유휴 연수원 등 유휴 공공시설의 워케이션 거점 전환 시범사업 추진
- (중기) 공공기관 연수원, 지정 관광지 및 지자체 운영 휴양시설 등을 워케이션 관광지로 전환하고,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에 워케이션 존(업무·숙박·휴양 복합공간)을 반영하며, 필요시 민간 리조트시설의 원격업무 시설 확충 지원
- (장기) 신규 관광지 및 민간 휴양시설 조성 시 워케이션 기능 도입을 유도하고, 디지털노마드 비자와 연계한 외국인 장기체류형 워케이션 거점을 육성하여 인바운드 워케이션 시장 선점

(나) 휴양·치유 기반의 웰니스 관광 고도화

○ 뷰티.스파, 힐링.명상, 자연.숲치유, 한방 등 건강·휴양 관련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웰니스관광 거점 조성

- 웰빙, 치유, 휴식을 결합한 웰니스(wellness)는 관광목적지 선택에 중요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한국형 뷰티, 한방, 자연·숲 치유, 힐링·명상의 4가지 테마를 강조한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조성

○ 웰니스 관광은 고부가가치 체류형 관광시장으로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며, 고령화·건강 중시 라이프스타일 확산으로 국내외 수요의 구조적 증가 전망

- 글로벌 웰니스 관광시장은 2022년 약 6,510억 달러 규모에서 2027년 1조 3천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이 전망되는 대표적 고성장 관광시장(Global Wellness Institute)
- 웰니스 관광객은 일반 관광객 대비 체류기간이 길고 1인당 지출액이 높아, 지방 자연자원(숲·바다·온천)을 보유한 지역의 체류형 고부가 관광모델로 적합

○ 산림·해양·농업 등 부처별 치유자원의 법제화·시설화가 진전되어, 이를 관광과 연계하는 국가 차원의 웰니스 관광 개발체계 구축 필요

- 산림치유(치유의 숲·산림복지시설), 해양치유(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완도 해양치유센터), 치유농업(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부처별 치유 인프라가 개별 구축되고 있으나 숙박·관광과의 연계는 미흡
- 한국관광공사는 2017년부터 우수 웰니스 관광지를 선정·지원하고 있어(2024년 신규 13개소 등), 개별 시설 인증을 넘어 거점형 클러스터 개발로 발전시킬 단계로 발전되는 경향
- 특히, 2025년 치유관광산업육성법 제정 및 2026년 시행, 2026년 시행령 제정 등에 따라 웰니스 관광과 치유관광산업을 복합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지자체에서는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및 웰니스 관광의 개발 육성 본격화

○ 주요 추진방향

-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개발) 치유자원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치유시설-숙박-식음-프로그램이 결합된 체류형 웰니스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테마별(산림형·해양형·온천형·한방형·뷰티형) 거점을 권역별로 배치
- (부처 연계 개발체계) 산림청·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 등의 치유시설 조성 사업과 관광개발 사업을 연계하여 치유시설 입지에 숙박·관광편의 기능을 결합하는 부처 협력형 개발 추진

- (의료·웰니스 융합) 검진·재활·항노화 등 의료서비스와 웰니스 프로그램을 결합한 케이-메디웰니스 상품을 개발하여 고부가 인바운드 시장(중화권·동남아·중동) 유치
- (단기) 우수 웰니스 관광지의 체류형 기능 보강 및 치유자원 실태조사, 치유관광 사업자 육성 (중기) 권역별 웰니스 클러스터 조성 및 부처 연계 개발 제도화, 치유관광산업지구 권역별 지정 (장기) 글로벌 웰니스 목적지 브랜드 확립 및 인바운드 웰니스 시장 본격 육성, 치유관광산업지구 연계 타 관광개발(관광(단)지 등) 촉진

(다) 반려동물 친화 관광환경 조성

○ 반려동물 돌봄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펫코노미(petconomy) 시대에 대응하여 펫팸족 대응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반려견과 걷기 좋은 길, 사진 찍기 좋은 장소 조성 등 반려동물 친화형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여 반려동물 동반 여행환경 조성

- 2025년 처음 국가승인통계로 실시된 반려동물 양육현황조사 결과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29.2%로 세 가구 중 한 가구 수준이며,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는 약 12만 1천 원으로 조사(농림축산식품부, 2026)
-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펫푸드를 넘어 펫보험·호텔·유치원·장례문화까지 확장되며 연평균 9.5% 성장하여 2032년 21조 원 규모로 전망되고, 반려동물 동반 출근을 허용하는 회사와 문화공간도 확산
- 펫팸족이란 반려동물(pet)과 가족(family)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급속하게 증가 추세
-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연구원 연구조사 결과, 반려동물 돌봄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었고, 펫상품은 펫푸드 시장뿐 아니라 펫보험, 호텔, 유치원, 장례문화까지 등장했으며, 반려동물 동반 출근을 허용하는 회사와 문화공간 확산

○ 반려동물 동반 여행 에티켓(펫티켓) 캠페인과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

○ 반려동물 동반여행의 최대 제약은 동반 가능한 숙박·식음·이동수단·관광시설의 부족과 시설별 동반 기준의 비일관성으로, 개별 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 단위의 동반 가능 환경(존) 구축이 관건

- 동반 가능 여부·조건이 시설마다 달라 여행 계획 단계의 탐색 비용이 크고, 비반려인과의 공간 갈등(위생·안전 우려)이 상존하여 공간 설계를 통한 공존 방안 필요

○ 주요 추진 방향

- (반려동물 친화 관광공간 개발) 관광지·공원·해수욕장·캠핑장 등에 동반 구역과 비동반 구역을 구분 설계하고, 반려동물 놀이터·음수대·배변 처리 시설·세족장 등 전용 인프라를 갖춘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를 권역별 조성
- (펫 프렌들리 숙박·체류 인프라) 반려동물 동반 객실 기준(방음·바닥재·전용 비품)을 마련하고 동반 가능 숙박시설·캠핑장·이색 테마형 숙박의 확충 지원
- (친화관광도시 확산) 한국관광공사의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사업(2023년 울산 최초 선정)을 확대하여 숙박-식음-이동-관광활동을 지역 단위로 연계한 반려동물 동반여행 목적지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였으나, 2026년부터 추가 지정은 종료. 기존 친화관광도시의 모델 고도화 및 도시 확산 등을 통해 반려동물 친화관광 기반 마련 필요
- (동반 기준·인증 체계) 관광시설의 반려동물 동반 기준과 인증제(동반 가능 등급 표시)를 마련하여 여행 전 탐색 비용을 낮추고 시설 운영의 예측 가능성 제고
- (펫티켓·공존 문화) 반려동물 동반 여행 에티켓(펫티켓) 캠페인과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비반려인 배려 수칙을 포함한 이용 문화 정착으로 다양한 관광 수요에 대응한 체험 프로그램 제공

(라) 야간관광 공간 조성 및 야간 경제 활성화

○ 야간관광은 관광객 체류시간과 숙박·소비를 직접 확대하는 체류형 관광의 핵심 수단이자 폭염 시대 한낮 관광활동의 대체 시간대로 부상하고 있으나, 야간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인프라의 부족이 근본적 제약으로 작용

- 숙박을 동반하는 야간관광은 당일 관광 대비 1인당 지출액을 크게 늘리는 구조로, 지방 관광지의 최대 과제인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의 전환에 직접 기여
-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는 2022년 통영·인천을 시작으로 부산·대전·강릉·전주·진주 등으로 야간관광 특화도시를 확대(2027년까지 10개소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 글로벌 관광특구로 선정된 경주·해운대 모두 야간관광과 야간콘텐츠를 핵심 전략으로 채택
- 다만 기존 사업은 경관조명·미디어파사드·일회성 축제 등 콘텐츠 중심으로 추진되어, 야간 보행환경·심야 교통·안전·상업시설 등 야간 활동을 뒷받침하는 공간·기반시설의 계획적 정비는 미흡
- 야간관광의 실질적 제약은 볼거리가 아니라 밤에 걷고, 이동하고, 먹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의 부재에 있으므로, 관광개발계획 차원에서 야간 특화 공간의 조성·정비를 과제화할 필요

○ (개발) 야간관광 거점 공간의 계획적 조성

- (야간관광 특화지구 지정·조성) 야간 콘텐츠·식음·상업·공연·숙박·교통 결절을 공간적으로 집적한 야간관광 특화지구를 관광(단)지·구도심·수변 등에 지정하고, 지구 단위의 야간경관 마스터 플랜(조명·미디어·경관 통합계획)에 따라 조성

※ 유형별 조성 모델: 수변형(하천·항만·호수 야간 수변공간), 역사문화형(고궁·성곽·전통마을 야간개장 기반 정비), 도심상업형(야시장·심야식당가·공연 클러스터), 관광지형(체류형 관광지 내 야간 프로그램 존)

- (야간 보행·체류 기반시설 정비) 야간 보행 네트워크(보행등·바닥조명·안전 동선), 야간 개방 화장실·쉼터, 조명·CCTV·비상벨을 결합한 안심구역 등 야간 활동 기반시설을 지구 계획에 반영하여 일괄 정비

- (기존 시설의 야간화 리모델링) 박물관·미술관·전통시장·산업시설·수변공간 등 주간 중심 시설의 야간 운영을 위한 조명·냉난방·안전설비 리모델링을 지원하여 신규 시설 투자 없이 야간 관광자원 확충

- (야간 경관자원 개발) 지역 고유의 야경 조망점(전망대·교량·언덕), 미디어아트 상설관, 빛 정원 등 야간 전용 관광자원을 개발하되, 빛공해 관리 기준과 조화되는 야간경관 조성 원칙 적용

○ (진흥) 야간경제 운영체계 구축

- (야간 이동·안전 운영) 심야 대중교통·순환셔틀·안전귀가 시스템과 야간 관광안내 체계를 운영하여 지구 간·숙박지 간 야간 이동성 확보

- (상시형 콘텐츠 공급) 미디어아트·공연·빛 콘텐츠를 상시 개발하는 야간관광 창작랩과 국내외 작가 공모·레지던시를 운영하여 일회성 점등 행사 중심 구조 탈피

- (야간 상권 활성화) 심야 식당가·야시장·루프탑 등 야간 식음 상권을 관광코스와 연계하고 심야 영업 소상공인의 안전설비·홍보 지원

- (주민 상생 관리) 소음·빛공해·쓰레기·주민안전을 관리하는 주민협약과 야간관광 운영 가이드라인을 지구 지정 요건으로 운영

- (성과지표) 방문객 수가 아닌 숙박률, 야간소비액, 체류시간, 지역사업자 매출 중심의 야간경제 지표로 성과 관리

○ 단계별 추진방향

- (단기) 야간관광 특화지구 시범 지정 및 야간경관 마스터플랜 수립, 기존 공공·문화시설 야간화 리모델링 착수, 운영 가이드라인·주민협약 모델 보급

- (중기) 유형별(수변·역사문화·도심상업·관광지형) 특화지구 확산, 야간 보행·안심 기반시설 및 심야 교통체계 구축, 창작랩 기반 상시 콘텐츠 정착
- (장기) 야간관광 특화지구의 전국 네트워크화 및 도시계획·상권정책과의 통합 운영, 글로벌 야간관광 목적지 브랜드 확립

(4) 관광기반 시설의 체험 명소화

(가) 체류형 테마 숙박시설 확충

○ 소도시에 분포하고 있는 마을 중 관광경쟁력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숙박, 체험 등의 개념을 결합한 '마을형 숙박시설(마을호텔)'을 지정·육성하여 지역관광의 거점시설이자 새로운 개념의 소도시 관광모델로 활용

- 역사문화, 자연생태, 인문 등 특색 있는 마을에서 숙박, 음식, 문화, 체험 등 활동이 가능한 체류형 마을호텔로 개발하고 인근 관광지, 관광시설, 관광자원 등을 단일 플랫폼으로 연계하는 신개념 지역관광거점 조성 추진

○ 마을 내 민박(숙박업소), 식당·카페 등의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사진관·사우나·갤러리·공연장·영화관 등 관광활동과 연계하여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마을 전체가 호텔이자 리조트 기능을 하는 마을호텔로 운영

○ 마을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마을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 등을 활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과 지역 특산물과 연계된 메뉴를 개발하는 등 마을의 일상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숙박체험마을로 개발·운영

○ 캠핑, 카라반, 요트스테이, 등대 숙박 등 야외 레저 활동과 연계한 특색 있는 테마형 관광숙박시설을 개발하여 숙박시설이 잠자리 수단을 넘어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확장

○ 지역 전통적 숙박 형태를 반영한 시설, 지역 생활문화·체험활동 등과 결합한 시설, 음악·문학·미술 등과 결합한 시설, 지역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시설, 반려동물 동반의 욕구를 반영한 시설 등 다양성에 기반한 테마형 숙박시설 인프라 확대

○ 야외레저 숙박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자연환경 보존, 탄소저감형 관광활동 확대 차원에서 자연친화형 숙박시설 조성 확대·추진

○ 숙박시설의 기능을 지역커뮤니티형, 지역문화체험형, 문화예술형, 전통문화형, 장기체류형 등 유형화하고 다양한 숙박시설 재생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새로운 지역 관광 창업모델로 활용

(나) K-푸드의 글로벌 관광자원화

○ 세계에서 인정한 한국 음식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전통음식, 사찰음식, 지역 이색음식, 퓨전음식, 시그니처 음식, 트렌드 맛집 등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 관광자원의 아카이브 구축 사업 추진

- 한국과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 관련 지역, 어원, 요리법, 이야기, 음식점, 관련 인물 등을 조사 및 DB화하고, 디렉토리북을 제작하며 K-푸드 관광자원화 계획 수립

○ 경쟁력 있는 K-푸드를 특화하여 지역 음식관광 브랜드로 활용하고 음식점을 중심으로 'K-미식로드'를 조성하고, 지역별 'K-푸드 문화체험센터'를 조성하여 글로벌 관광상품이자 복합 문화공간으로 육성

- K-푸드 지정기준 및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을 대표하고 나라를 대표하는 미식여행 명소로 육성
- 기존 음식테마거리 사업이 인지도 높은 음식을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홍보 중심 사업이었던 점에서 벗어나 인프라, 프로그램, 교육 등 복합적인 패키지 지원으로 음식, 체험, 문화 등이 결합된 지역 관광체험공간 육성
- K-푸드 문화체험센터는 사찰음식, 궁중음식, 종갓집음식, 제사음식, 지역향토음식 등의 명장, 명인들과 연계하여 음식 개발, 음식문화체험, 음식 교육, 인력 양성 등 추진
- 음식 역사서 등을 기반으로 전통음식 조리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새롭게 개발하고 일반 밥상뿐 아니라 술, 떡 등의 다과류, 계절 음식 등 항목별 다양화 추진

○ K-푸드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테마여행 코스를 개발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국가별 문화와 특성을 반영한 음식 관광상품 개발

(다) 쇼핑공간의 관광체험·문화복합공간 전환

○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전통시장, 쇼핑거리, 대형 쇼핑몰, 아울렛, 면세점, 기념품 판매장 등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공간을 넘어 쇼핑 경험과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육성하여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활용

○ 지역 특성을 보유한 전통시장과 쇼핑 테마거리 등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매력성, 상품성, 시장성 등을 제고하고 쇼핑은 물론 음식, 지역문화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융·복합화된 쇼핑문화체험공간으로 전환하여 관광시장화

- 전통시장 등 쇼핑공간을 특화 관광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야시장 등 야간관광 상품으로 확장하여 관광객 체류시간 확대

○ 다양한 시설과 체험이 가능한 도심형 대형 쇼핑몰, 아울렛, 면세점 등을 대상으로 복합기능을 부여하여 도시관광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거점 관광공간으로 활용

- 쇼핑공간 외에 놀이공간, 테마공간 등 체험공간을 마련하고 안내데스크, 짐 보관함 등 여행자 편의시설 조성

○ 공항 및 항만 면세점을 대상으로 한국 및 지역문화 체험공간을 마련하고, 특산품 판매공간을 고품격 체험공간으로 복합화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내 관광안내소에 안내기능, 쇼핑기능, 편의기능 등 다양한 부가기능을 도입하여 복합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소규모 지역 특산물 판매장 운영

(5) 산업·문화자원의 융합적 관광 활용

(가) 복합 기능을 갖춘 융합관광 클러스터 조성

○ 의료관광, MICE 등 융·복합 관광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함에 따라 융·복합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융합 관광개발 수단 마련

○ 지역관광 육성을 위한 관광거점으로 기존 융합관광 클러스터를 확대 선정하여 육성하고 새로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및 지역관광의 거점으로서 융합관광 클러스터의 제도적 근거 마련 및 지원체계 구축

○ 「국제회의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합지구 등이 순차적으로 지정되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2026년 1월 지정된 수원컨벤션센터 일원은 물론 전국에 인천, 고양, 경주 등 기존 8개소도 운영 중

○ 국제회의 복합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제회의집적시설 10개도 추가로 지정되어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운영하여 기반 강화

○ 중장기적으로 공연, 영상, 한류 등 다양한 분야와 관광산업의 융합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클러스터 형태의 융·복합 관광산업화를 촉진하는 관광개발 모델 발굴

(나) 관광매력 요인을 갖춘 산업관광 활성화

○ 전국적으로 1,212개의 산업단지가 분포하고 있고, 다양한 산업시설과 유통·판매시설 등이 집적된 산업단지의 입지 특징을 고려해 집적된 시설과 사업장 등을 관광콘텐츠로 활용하는 산업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 산업단지를 활용한 산업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직접적 자원화, 융·복합 자원화, 간접적 자원화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추진

- (직접적 자원화) 출판, 유통 등 단지 자체가 관광자원으로서 매력성을 갖춘 산업단지는 직접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

- (융·복합 자원화) 산업관광의 매개 요소로 활용 가능한 기술이나 콘텐츠를 보유한 산업단지는 기능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관광체험 공간 조성

- (간접적 자원화) 산업단지 내부를 직접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단지는 주변지역과 연계하고, 별도의 공간에 조성된 홍보관 등을 활용

◦산업, 공간 및 사람의 혁신을 통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스마트 그린 시설 및 시스템과 연동한 관광안내 등 관광편의시설 조성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산업단지 주변부의 관광 매력도 및 관광편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상권과 연계하여 지역관광 생태계 활성화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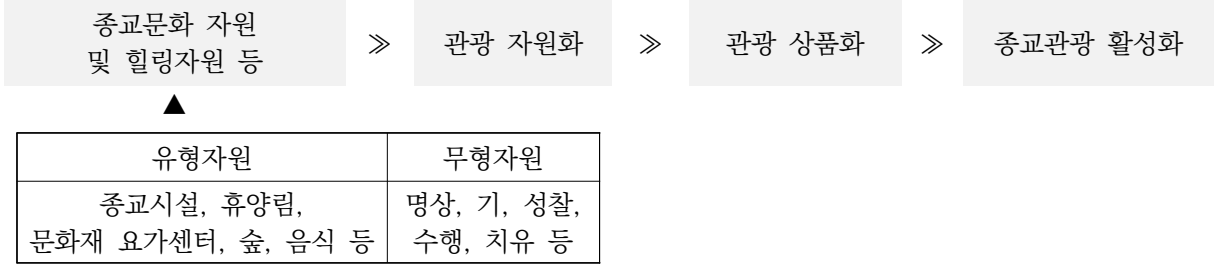
(다) 종교관광 거점 및 연계 코스 개발 활성화

◦최근 건강과 명상을 테마로 한 치유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관광자원과 관광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와 연계하여 종교 유산과 종교 기능을 활용한 순례, 명상 등 프로그램 확대

◦종교관광은 문화관광의 한 범주로서 특수목적관광(SIT)이며 종교, 명상(수행), 치유(healing, 마음치유), 성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마음(정신)치유, 정신고양, 자아성찰 등에 관광을 통해 참여하는 행위

◦융·복합 콘텐츠로서 종교 및 순례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품 개발 등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며 이해관계자들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추진

- 인프라 기반조성으로 기존 종교시설을 활용하여 관광수용태세 확충 및 정비 개선 (기존시설 보수 및 정비, 교통시설 등 지역 연계 기반 구축 등)
-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로서 종교 자원을 활용한 문화축제 이벤트 발굴, 맞춤형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외래관광객을 위한 관광자원 연계상품 개발, 종교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스토리뱅크 구축
-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종교 및 순례관광 관계자 간 자문 및 협의회 구성 및 정기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그림 9.1.2-1) 종교 및 순례관광의 단계별 구상(안)

나.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이용·관리

정책 방향
○ 혁신적인 지속가능 패러다임 대응 ○ 노후시설 및 유휴자원의 관광매력성 제고 ○ 관광개발의 사회적 기여 확대
계획 지침
○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관광부문 실천 - 글로벌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新경제질서에 대응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추진과제와 연계하여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지역 관광산업의 탄소배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개발 계획 수립단계부터 집행, 관리 운영 단계까지 탄소 중립을 실행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행 방안을 마련한다. - 관광(단)지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지의 녹색화를 추진하고 노후화된 관광시설을 녹색시설로 전환한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전환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관광 취약분야를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 관광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관광기반 구축 - 중앙정부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입각하여 관광자원의 적정개발과 이용을 위한 관광개발 모델을 정립하고 관광개발의 친환경성을 극대화한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관광자원, 경관자원 등을 보존하여 친환경적 관광지를 발굴하고 국제적 수준의 자연관광자원으로 육성한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지역 유휴자원을 발굴하고 콘텐츠와 연계하여 관광매력성을 제고한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유형의 오버투어리즘 원인을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전략 2] 지속가능 관광자원 이용·관리

추진 과제	세부 과제
1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관광개발 강화	○ 관광개발 탄소배출 관리 및 중립 목표 이행 ○ 관광시설의 그린 리모델링 및 에너지 전환 ○ 기후위기 적응형 관광개발 추진
2 생태계 보존·복원 기반의 관광자원 활용	○ 생태복원형 관광지 육성 ○ 생태계 서비스 기반의 자연친화적 관광모델 개발 및 확산 ○ 자연 순환을 고려한 관광자원 이용·관리

3 유휴·노후 관광자원의 재생과 활용	ㅇ디자인을 활용한 관광시설 기능 다변화 ㅇ유휴시설 · 노후관광지 재생을 통한 관광자원화 ㅇ유휴·노후자원 재생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4 관광 수용력 기반의 오버투어리즘 관리	ㅇ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오버투어리즘 관리체계 구축 ㅇ지자체의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ㅇ관광객이 참여하는 책임관광 문화 확산

(1)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관광개발 강화

(가) 관광개발 탄소배출 관리 및 중립 목표 이행

ㅇ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실현을 위해 관광(단)지 개발, 관광숙박시설, 테마파크, 컨벤션 시설 등 관광시설의 조성 계획 수립 시 탄소 감축을 실천할 수 있는 목표 설정 의무화

ㅇ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관광개발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과 지표를 설정하고, 탄소발자국 등과 같이 사용자들이 이해가 쉬운 계량적 지표를 발굴하여 이를 전략적으로 운영

- '탄소발자국'은 환경성적표지 환경영향 범주 중 하나로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 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온실가스)가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나타낸 지표(기후변화홍보포털, 2021)

ㅇ관광시설 조성 시 탄소배출량을 고려하여 완공 목표 연도까지 지켜야 하는 탄소 감축 목표를 단계별로 설정하고, 관광개발 주체들은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인력 또는 추진체계를 마련하며, 정부는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컨설팅 제공

ㅇ관광개발사업 추진 시 규모와 여건, 특성 등이 상이한 것을 고려하여 정부는 다양한 관광개발 추진 주체들이 준용할 수 있도록 탄소 감축 목표의 개별적 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

(나) 관광시설의 그린 리모델링 및 에너지 전환

ㅇ탄소 감축과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관광시설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고 에너지 재생과 효율화를 추진하는 그린 리모델링 추진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27조(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는 국가 및 지자체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 리모델링')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

ㅇ 관광지 조성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관광시설, 건축물(문화시설,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노후 관광지 진단 기준 등 진단체계를 개발하고 점진적으로 전체 관광지로 확대하여 관광지의 기능 재편과 미관 개선을 동시 추진

- 진단체계에 근거하여 노후관광지와 관광시설을 선정하여 실내·외 공간 등의 녹색 전환을 지원하고, 휴게공간 등 그린 리모델링(태양광 설치, 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저감 설비 설치) 추진 및 그린 숲 조성, 탄소중립 여행 상품 개발 등 추진
- 그린 리모델링 지원은 설치 설비의 종류가 아니라 리모델링 전·후의 단위 면적당 에너지사용량 감축률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지원 대상 시설은 3년간 에너지사용량 실적을 보고하여 정부에서는 관광시설 유형별 표준 감축률을 산정해 나가면서 이를 지원 기준 등에 환류하는 시스템 구축

ㅇ 관광(단)지 조성 계획 수립 및 관광시설 조성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에 대해 친환경적인 공법이나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여 탄소 발생(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증제 도입

- 관광부문 배출 온실가스가 전 세계 배출량의 5% 차지(UNWTO, 2008)

ㅇ 관광시설 및 관광지 조성 시 필수적인 도입시설인 공공편익시설(화장실·주차장·관광안내소 등)에서 태양열, 물 재활용 등의 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 최소화 및 재생 에너지 적용 방안 마련

ㅇ 관광시설 조성 시 공공편익시설과 더불어 숙박시설, 운동 · 오락시설 또는 휴양 · 문화시설에서 재생 에너지 활용 방안 마련

- 관광숙박시설·골프장·스키장·해수욕장 등과 같이 많은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시설은 에너지를 자체 발생시킬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시설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도입
- 오스트리아 쉬타트 할레(Stadthalle) 호텔은 세계 최초의 제로에너지 호텔로 호텔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풍력과 태양광, 지하수열을 이용하여 조달하고 있으며 옥상 정원수와 화장실 용수는 빗물을 재활용하는 등 적극적 참여

ㅇ 대중교통 접근성이 미흡한 도심 주변 관광지는 높은 자가용 이용률로 관광(단)지 내·외부에 탄소 발생을 증가시킴에 따라 관광(단)지 내·외부를 이동하는 관광객들의 교통수단을 전기·수소 등 친환경 모빌리티로 전환하고 충전 인프라 조성

ㅇ 대규모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단)지의 숙박시설·관광시설·골프장 등에서 제공하는 교통 편의를 위한 내·외부 이동시설의 현황을 파악하여 연도별 친환경시설 조성 목표 설정

○ 관광(단)지 내 직원들의 교통수단은 물론 관광(단)지 관리· 운영을 위한 이동 시설(카트 등) 등을 전기를 사용하는 친환경 모빌리티 시설로 모두 전환하여 해당 관광지 내에서는 탄소 발생의 최소화 유도

○ 탄소 감축과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후 관광(단)지 관광시설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고 에너지 재생과 효율화를 추진하는 그린 리모델링 추진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는 국가 및 지자체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 리모델링')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

○ 관광지 조성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관광시설, 건축물(문화시설,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노후 관광지 진단 기준 등 진단체계를 개발하고 점진적으로 전체 관광지로 확대하여 관광지의 기능 재편과 미관 개선을 동시 추진

- 진단체계에 근거하여 노후관광지와 관광시설을 선정하여 실내·외 공간 등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휴식공간 등 그린 리모델링(태양광 설치, 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저감 설비 설치) 추진 및 그린 숲 조성, 탄소중립 여행 상품 개발 등 추진

○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단지를 중심으로 해외 성공 사례를 검토하여 한국형 탄소중립 관광자원 모델 추진

○ 지자체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집적화단지 제도가 시행(2020.11)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자원의 여건과 위치를 고려하여 신재생 에너지 단지의 입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관광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단지 계획 수립

○ 태양열 단지는 전국에 널리 분포하여 양적으로 충분하지만, 대부분 민간이 소유하고 있어 특정 시설 도입 및 특구 지정 등에 제약요인이 많으므로 민관협력을 통한 산업관광의 방식으로 접근

○ 풍력 단지는 육상(산) 또는 해상(해안)에 위치하여 관광객 선호도가 높고 주변 자연경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부가적인 관광활동 추진이 가능하며 덴마크, 영국 등 해외에서도 관광자원화의 성공 모델 확산

○ 에너지산업 융·복합 단지는 대규모 에너지 특화기업, 연구소, 대학을 비롯하여 에너지 공기업, 에너지 공급시설(발전소 등) 실증·시험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교육관광과 연계하고 다양한 체험 기능을 도입하여 활용

(다) 기후위기 적응형 관광개발 추진

ㅇ 국내외 관광지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폭염, 집중호우·산사태, 해수면 상승·해안 침식, 산불 등 기후 물리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출 저감 중심의 기존 과제와 병행하여 기후 적응과 회복력(resilience) 관점의 관리 체계 도입

ㅇ UN Tourism은 관광 부문의 기후 행동을 온실가스의 측정 및 감축과 기후영향에 대한 적응 역량 강화로 정의하고 있으며, '관광 기후행동 글래스고 선언'의 5대 이행 경로(측정, 탈탄소, 재생, 협력, 재원) 역시 포괄적 대응 요구

ㅇ EU 이사회는 2026년 5월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변화에 대한 관광 부문의 회복력 강화를 회원국 공통 과제로 제시하였고, 유럽집행위원회는 회원국별 기후리스크 평가와 적응계획 수립을 지원

ㅇ 해수욕장·도서·산악·습지 등 유형별 관광지를 대상으로 폭염일수, 강수강도, 해수면 상승, 산불위험지수 등을 반영한 기후리스크 취약성 진단을 실시하고 관광지별 위험등급을 산정

- 물리적 위험도와 함께 대피 가능성을 진단 지표에 포함
- 진단 결과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야영장 및 숙박시설 등록, 재정지원 사업 선정시 판단 근거로 활용
- 오버투어리즘 진단 지표와 조사 항목 및 주기를 통합 설계, 운영하여 중복 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관광지 종합 관리등급으로 운영 가능

ㅇ 위험등급 상위 관광지를 대상으로 방재 인프라(배수체계, 방풍·차양시설, 대피동선), 대체 콘텐츠(실내형·계절 비의존형 프로그램) 확충 등 회복력 강화 계획 수립

- 도보 대피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설은 침수 예상고도 위의 대피 공간 확보를 등록, 인허가 조건으로 고려

ㅇ 폭염·태풍 등 기상특보 발령 시 관광객 대피·환불·정보전달 체계를 표준화한 '관광지 기후재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지자체·관광사업체에 보급하고, 기후 리스크가 높은 지역 관광시설에 대한 재해보험·재정지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의 회복탄력성을 높임

- 위험등급 상위시설은 시설 여건을 반영한 안전 규정서를 작성하여 지자체 승인을 받도록 제도화
- 시설별 안전 규정서는 지자체의 안전관리계획 및 재난대응체계와 정합하도록 개별 시설 대응이 지역 재난대응체계에 연동되도록 함
- 정기 점검을 통해 이행 여부 확인, 미이행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실효성 확보 수단 마련

(2) 생태계 보존·복원 기반의 관광자원 활용

(가) 생태복원형 관광지 육성

○ 갯벌, 내륙습지 등의 복원과 철새, 물범 등 생태계 종다양성 회복을 통해 생태자원의 가치를 높여 새로운 생태관광지로 육성하거나 기존 생태관광지의 매력도 제고

○ 생태자원 보전, 경관 보전 등을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 조성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추진

○ 해양쓰레기 등 오염물질 수거 및 배출 저감 캠페인, 자연생태교육 등 다양한 생태 관련 활동을 접목한 관광 프로그램 활성화로 미래지향적 생태관광 환경 조성

○ 과거의 생태관광은 기존 자연경관을 단순 관람하거나 보전하는 수동적 방식에 머물렀으나, 현대 관광 개발은 훼손된 생태계를 능동적으로 되살려 자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생태복원형(Nature-Restorative) 관광으로 진화 중임

○ 갯벌, 내륙습지 등의 복원과 철새, 물범 등 생태계 종다양성 회복을 통해 생태자원의 가치를 높여 새로운 생태관광지로 육성하거나 기존 생태관광지의 매력도 제고

- 갯벌과 내륙습지는 강력한 탄소 흡수원인 ‘블루카본(Blue Carbon)’ 및 ‘그린카본’ 역할을 수행
- 갯벌과 습지 복원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가적 명분과 결합하여, 기업의 ESG 투자나 사회적 공헌형 관광 개발, 프로그램 등과의 연계 가능성을 창출

○ 생태자원 보전, 경관 보전 등을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 조성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추진

○ 해양쓰레기 등 오염물질 수거 및 배출 저감 캠페인, 자연생태교육 등 다양한 생태 관련 활동을 접목한 관광 프로그램 활성화로 미래지향적 생태관광 환경 조성

- 최근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MZ세대와 글로벌 관광객을 중심으로 환경 오염을 저감하고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플로깅, 비치클린, 멸종위기종 모니터링 등 생태 보전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임팩트 여행 수요 지속 증가
- 엠제코(MZ+Eco)는 기후위기와 환경을 삶의 주요한 가치관으로 삼는 MZ세대를 일컫는 신조어로 이들은 기후변화와 환경이슈에 민감하고, 공정함과 투명성이라는 주요 가치를 위한 이슈를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김성원, 2023.01.26.)
-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데크, 친환경 이동수단(예: 전기 셔틀, 무동력 보트) 도입, AR/VR을 통한 멸종위기종 생태 체험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생태교육 확대

(나) 생태계 서비스 기반의 자연친화적 관광모델 개발 및 확산

○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우수한 자연생태를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춘 생태관광지 모델을 제시하고자 자원별 유형에 따라 한국형 생태관광 모델사업 대상지 10곳을 선정·개발

○ 자연친화적 관광모델은 생태관광지 모델 사업을 확대한 개념으로 환경부, 산림청 등과 공동으로 환경과 경관이 우수한 자연공원 등을 대상으로 '자연친화형 관광모델 사업'을 추진하고 '대표 생태관광지 인증제'와 연계하여 시행

○ 자연친화형 관광모델은 자연공원 방문객의 요구와 욕구를 반영하여 자연감성형, 국민휴양형, 관광레저형, 건강·휴양형, 자연생태교육형 등의 유형으로 다양화하여 개발

- 자연감성형 관광모델은 아름다운 경관을 활용하여 인근 마을의 이야기, 전통문화, 생활양식, 문화예술 등과 결합한 감성적 콘텐츠 중심으로 개발
- 국민휴양형 관광모델은 자연공원 내 노후화되고 공동화 현상을 보이는 시설을 공익적 관광시설로 리모델링하여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 목적으로 개발
- 관광레저형 관광모델은 자연공원 내 캠핑, 레저 활동 등을 중심으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개발
- 건강·힐링형 관광모델은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목적으로 자연휴양림, 산책로, 자연학습장 등을 중심으로 개발
- 자연생태교육형 관광모델은 어린이, 청소년, 가족관광객을 대상으로 자연 속 환경교육을 목적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개발

○ 자연친화형 관광모델 개발은 관광, 환경, 지역 등의 영역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추진체계 마련

- 대상지 내 빈집 등 유휴시설과 기존에 설치된 저지대 체류시설인 생태탐방 시설, 체험 학습관, 탐방안내소, 국립공원 야영장 등을 최대한 활용하며, 관광객 이동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친환경 순환교통망 중심으로 모델 개발

○ 자연공원(국립공원, 지질공원 등)을 포함하는 자연친화형 관광모델은 해당 지역의 전통, 예술, 생활문화 자원 및 관광 인프라를 활용하고 기존 환경부 및 국립공원공단에서 추진하는 자연공원 저지대탐방사업과 연계 추진

(다) 자연 순환을 고려한 관광자원 이용·관리

○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우수한 자연생태를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춘 생태관광지 모델을 제시하고자 자원별 유형에 따라 한국형 생태관광 모델사업 대상지 10곳을 선정·개발

○ 자연친화형 관광모델은 자연공원 방문객의 요구와 욕구를 반영하여 자연감성형, 국민휴양형, 관광레저형, 건강·휴양형, 자연생태교육형 등의 유형으로 다양화하여 개발

- 자연감성형 관광모델은 아름다운 경관을 활용하여 인근 마을의 이야기, 전통문화, 생활양식, 문화예술 등과 결합한 감성적 콘텐츠 중심으로 개발
- 국민휴양형 관광모델은 자연공원 내 노후화되고 공동화 현상을 보이는 시설을 공익적 관광시설로 리모델링하여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 목적으로 개발
- 관광레저형 관광모델은 자연공원 내 캠핑, 레저활동 등을 중심으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개발
- 건강·힐링형 관광모델은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목적으로 자연휴양림, 산책로, 자연학습장 등을 중심으로 개발
- 자연생태교육형 관광모델은 어린이, 청소년, 가족관광객을 대상으로 자연 속 환경교육을 목적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개발

○ 자연친화형 관광모델 개발은 관광, 환경, 지역 등의 영역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추진체계 마련

- 대상지 내 빈집 등 유휴시설과 기존에 설치된 저지대 체류시설인 생태탐방 시설, 체험 학습관, 탐방안내소, 국립공원 야영장 등을 최대한 활용하며, 관광객 이동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친환경 순환교통망 중심으로 모델 개발

○ 자연공원(국립공원, 지질공원 등)을 포함하는 자연친화형 관광모델은 해당 지역의 전통, 예술, 생활문화 자원 및 관광 인프라를 활용하고 기존 환경부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자연공원 저지대탐방사업과 연계 추진

(3) 유휴·노후 관광자원의 재생과 활용

(가) 디자인을 활용한 관광시설 기능 다변화

○ 신규 관광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시설 노후화 및 관광트렌드 변화로 쇠퇴한 지역 관광명소를 디자인, 건축, 예술과 접목하여 리디자인(Redesign) 추진

○ 현재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정 관광지 및 관광특구를 대상으로 정부와 광역지자체가 협력하여 재생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활성화 유도

○ 지역관광명소 리모델링은 오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시설이 노후화되었거나, 콘텐츠 및 프로그램이 낙후된 지역관광명소를 대상으로 지역 콘텐츠 기반형 재생사업 추진

○ 문화·예술 및 디자인 기반의 지역특화 관광명소 재생사업을 통해 매력성이 낮은 공간을 경쟁력 있는 트렌드 관광자원으로 재창조

- 건축가, 예술가 등이 참여하는 공간디자인 사업을 통해 지역 고유의 경관을 회복하고, 새로운 가치의 지역 대표 관광명소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 지역에서 추진하는 관광지, 문화 및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 사업 등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 디자인 요소가 필수적으로 가미될 수 있도록 디자인 기반 관광개발계획 추진체계 마련
- 스페인의 대표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구엘공원 등 7개의 건축물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화 예술적 가치가 높은 건물과 장소는 바르셀로나의 관광명소 및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나) 유휴시설·노후관광지 재생을 통한 관광자원화

○ 폐교, 빈집, 폐산업 시설 등 유휴시설과 문화콘텐츠, 관광 프로그램 등이 결합된 재생모델을 개발하여 폐조선소 복합단지 조성, 도서지역 폐교 활용 복합문화공간·야영장 조성 등 새로운 개념의 관광자원으로 활용

- 활용도가 저하된 원도심 건물, 기능을 상실한 폐광·폐석장·쓰레기처리장·오폐수처리시설, 폐철길 등 유휴자원 등의 공간에 관광기능을 도입하여 새로운 관광지 및 관광시설로 리모델링

(다) 유휴·노후자원 재생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 단편적인 유휴시설의 관광자원화에서 벗어나 유휴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유휴시설 재생 모델 개발

- 유형별 유휴시설과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문화콘텐츠, 관광 프로그램 등과 결합된 재생 모델을 개발하고,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
- 유휴시설 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전국적으로 유휴시설 재생 모델을 보급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 유휴자원 재생을 위한 방안 모색

○ 지역 관광재생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관광재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에 관련 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업무 기능 포함 유도

- 지자체는 DMO 등과 연계하여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 관광재생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체계 마련

(4) 관광 수용력 기반의 오버투어리즘 관리

(가)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오버투어리즘 관리체계 구축

○ 세계 국제관광객 수는 2025년 약 15억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 세계적으로 오버투어리즘이 재차 심화되고 있음

- 2025년 국제관광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유럽 및 아시아 주요 도시는 2026년을 기점으로 숙박세 인상, 당일 방문객 접근료, 크루즈 승객 부담금, 단기임대 총량 관리 등 관리 수단을 동시에 가동
- 다만 부담금 단독으로는 방문객 총량이 감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금, 공급관리, 수요분산, 행동유인 등을 결합한 정책 추진 필요

○ 지역 및 관광지의 오버투어리즘 문제는 지속가능한 관광 및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현안이므로,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하기 위한 '책임 있는 지역관광 관리계획' 수립

- 지역 및 관광지의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단순히 관광객을 유인하고자 지역을 알리는 데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명확한 근거에 입각한 관리계획인 '책임 있는 지역관광 관리계획' 수립 유도
- 지역관광 관리계획에는 우선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 관리를 위해 지역관광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책임 있는 관광 성장 전략을 구체화

○ 오버투어리즘 현상 모니터링 및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 관광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주거 지역은 관광객 유입에 따라 생활 환경이 바뀌고, 주민과 관광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다양한 현상들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변화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오버투어리즘 현상의 지속성 여부 판단 중요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지역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거버넌스 내 지역 주민을 포함한 민간부문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광 정책 및 계획에 반영

(나) 지자체의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내 오버투어리즘이 발생한 지역이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분석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관광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 기초지자체에서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건의를 받아 오버투어리즘 '특별관리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고, 오버투어리즘 지역으로 인정이 된 경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

○ 해당 관광지나 지역에 오버투어리즘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진단 및 평가를 위하여 관광수용력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고 오버투어리즘 진단 지표 개발

- 오버투어리즘 현상의 발생 징후 및 심화 신호를 발견하여 정책입안자와 지역주민, 일반 시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진단체계 마련으로 예방 및 초기 대응 유도
- 공통적인 진단 지표 외에 지역적 특성에 맞춰 오버투어리즘을 진단할 수 있는 지역별 특화 지표를 개발하며 관광과 각 부문 간의 관계와 영향을 토대로 물리적 수용력, 심리적 수용력, 경제적 수용력, 사회적 수용력 및 생물학적 수용력 등에 대한 개념 정의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마련

○ 오버투어리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별로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관리하도록 추진

- 지역마다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과 양상이 다르고 특정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시각이 상이하므로 각 문제의 특성별, 원인별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
- 가이드라인을 지역주민, 관광객, 자원(인프라/자연), 문화 및 유산 등으로 접근하고 공간의 특성이나 오버투어리즘의 시기, 심각도에 따라 적용 가능한 대응책 차별화

(다) 관광객이 참여하는 책임관광 문화 확산

○ 지역 오버투어리즘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경우는 지역주민 삶의 영역을 침해한 경우로, 지역주민을 배려하는 관광객의 행동 변화에 따라 일정 부분 해소가 가능하므로 관광객의 인식을 바꾸고 행동을 촉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관광객을 동반하는 문화관광해설사나 관광통역안내사 등의 가이드를 대상으로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문제점과 마을관광 에티켓을 교육하고, 교육이수자만이 관광객을 동반할 수 있게 하는 규정 마련

○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인식을 제고하고 책임 있는 관광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광객 행동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항을 담은 관광객 행동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여 관광객과 마을 주민과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지역 조성

○ 관광객의 수준 높은 관광문화를 고양하고 지역 내 지역주민을 배려하고 매너 있는 관광활동 준수를 강화하는 책임 있는 관광 행동 안내판 설치 및 홍보물 제작 배포

다. 편리하고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

정책 방향
○ 스마트한 관광자원 이용으로 관광편의성 제고 ○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환경 제공 ○ 외국인, 노약자 등 관광약자의 관광편의 개선
계획 지침
○ 관광환경의 품질 제고 및 기능 개선 -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 거점에서 관광목적지로 이동하는 관광이동수단을 발굴하고 광역교통망과 대중교통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교통 접근성을 제고한다. - 정부는 개별관광객이 원하는 맞춤형 이동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지에서 이용 가능한 공유형 개인 이동수단의 기반을 확대한다. - 정부는 자가용 중심에서 대중교통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교통편의 제고 및 관광객 흥미 유발을 위해 신규 관광교통서비스를 확충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이색적인 테마를 활용하여 숙박시설이 잠자리 장소를 넘어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기능을 확장하고 지역의 식음, 쇼핑시설에 규모별 다양한 즐길거리를 마련하여 이들을 주된 관광목적지로 전환한다. ○ 안전 · 안심 · 안내 스마트관광 환경 구현 - 정부는 관광지 방역, 안전수칙, 밀집도 등 공간의 환경을 관리하는 기준을 수립하고 관광객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요소에 타 부처와 공동 대응하는 방역 및 안전관리체계를 추구한다. - 정부는 스마트관광도시를 중심으로 ICT 관광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개별관광객들이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동 플랫폼을 구축하고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광안내체계를 개선한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편의시설이 설치된 열린 관광지를 확대 지원하고, 관광지뿐 아니라 지역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여 무장애 관광도시를 추구한다.

[전략 3] 편리하고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 과제	세부 과제
1 지역 이동 편의를 높이는 관광교통 체계 개선	○ 방한 4천만 시대를 위한 지역 관문 다변화 및 수용력 확충 ○ 초광역 관광권 광역 연계교통망 구축 ○ 수요맞춤형 관광교통서비스 확충 ○ 이동이 관광이 되는 신개념 관광교통 자원화
2 외래관광객의 관광활동 편의 개선	○ 국경 없는 개방형 결제 편의 개선 ○ 외래관광객 통합 관광패스 구현 ○ 외래관광객의 지역 체류 지원기반 확충

3 안전·신뢰·포용 관광환경 구현	ㅇ관광지·관광시설 안전관리체계 강화 ㅇ관광 서비스 요금 모니터링과 가격 신뢰 제고 ㅇ무장애관광 확산을 위한 열린관광지 및 관광도시 고도화
4 전체 여행 과정의 관광 정보·서비스 고도화	ㅇAI 기반의 맞춤형 관광 정보서비스 기반 확충 ㅇ스마트 관광도시의 성과 확산 ㅇ관광지 및 관광시설 통합 정보망 구축

(1) 지역 이동 편의를 높이는 관광교통 체계 개선

(가) 방한 4천만 시대를 위한 지역 관문 다변화 및 수용력 확충

ㅇ2025년 방한 외래객 1,894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2026년 월 200만 명대에 진입하였으며, 제4차 수정계획에서는 2031년 4천만 명 목표의 조기 달성과 4천만~5천만 명 시대 준비를 공식화

ㅇ입국 관문의 인천공항 집중(75.7%)과 인천공항 입국객의 수도권 이동(78.4%)이 지방 관광 확산을 제약하며, 관광학계는 3천만 명 수용을 위해 김해·청주·무안·양양 등 지방 국제공항으로의 게이트웨이 분산과 교통 연계·결제 편의의 지역 확산을 지적

ㅇ2026년 국토부 지방공항 인바운드 거점화 전략, 법무부 출입국 편의 제고, 해수부 크루즈 수용태세 개선이 동시에 발표되어 관문 다변화의 정책 기반이 마련

ㅇ‘인천 일극’에서 ‘다관문 체계’로의 전환 목표 설정 : 5대 지방 국제공항(김해·대구·청주·무안·양양)과 크루즈 기항지(부산·제주·인천 등)를 포함한 지방 관문 입국 비중 목표를 수정계획 지표로 설정

-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시설사용료 감면·슬롯 확대(김해·청주) 등 국토부 특전을 관광 수요 창출 실적과 연동하고 미활용 운수권 문제 해소

ㅇ인바운드 공항·거점항공사 육성 및 항공–관광 융복합 상품화

- 시범공항 지정, 거점항공사 지정·인센티브·세제 지원 등 토털 지원체계(후쿠오카공항 사례: 외래객 연 40만→200만 명)
- 직항·전세기 연계 맞춤 상품, 중국 3~4선 도시 전세기, 국제스포츠·수학여행·MICE 산업융합 인센티브의 지방공항 우선 적용
- 공항을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브랜드 거점으로 리브랜딩

ㅇ인천공항 입국객의 지방 연계 환승체계 고도화

- 인천공항–지방공항 국내선 신설·증편, 심야 공항버스를 수도권 13개 노선에서 충청·강원권으로 확대, KTX 사전 예매기간(현 1개월) 확대

- 공항철도-KTX(Air&Rail) 연계 및 인천공항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 계획과 연동
- 입국심사(자동출입국 대상국 18개국→EU 등 확대·심사대 증설)-수하물-환승 교통편 안내의 원스톱 동선 설계 및 다국어 지원

ㅇ 크루즈·항만 관문의 연계교통체계 개선

- 기항지-관광지 셔틀·시티투어·관광택시 연계로 오버나이트 크루즈 체류시간 확대
- 부산·제주·인천 등 크루즈 유치추진 지자체와 기항지 관광교통 지원정책 연계

(나) 초광역 관광권 광역 연계교통망 구축

ㅇ 방한 외래객 방문지가 서울(78.4%)·부산(16.2%)에 집중되고 나머지 지역은 1% 내외에 그치며, 고속철도 정차역·배차가 대도시 중심으로 편중되어 지역 간 접근 자체가 어려운 상황

ㅇ 정부는 행정구역을 넘어 방한객의 실제 체류 동선을 반영한 초광역 "관광권" 육성을 지역관광 재설계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2025년 충북·충남, 2026년 대구·경북 권역의 초광역 관광교통 혁신 선도 지구를 선정

ㅇ 지역 간 최소서비스수준 평가 결과 159개 시·군 중 22%가 사각지역, 56.6%가 취약지역으로 관광교통취약성 진단에 기반한 우선 개선이 필요

ㅇ 초광역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의 권역별 순차 확대

- 충북·충남(청주공항-오송역-공주·부여, 일본 백제문화 관심층 타깃), 대구·경북(대구공항·동대구역-안동·경주·포항) 모델의 성과 평가 후 호남·강원·남해안 권역으로 확산 유도
- 선도지구에 통합예약·결제 플랫폼, 스마트 정류장, 다국어 안내를 필수 구성요소로 포함

ㅇ KTX 철도역 연계 지방관광 게이트웨이 조성

- KTX 정차역 보유 지자체 대상 철도역-대표 관광명소 연계 코스(근거리 도보·자전거, 중장거리 관광택시·시내버스·시티투어·DRT) 구성 및 역사 내 관광안내센터 기능 확대
- 다구간 이용권·교통패스 등 지역 상품 발굴과 코레일 앱·역사 채널 유통을 위한 국토부·철도공사 협업
- 대중교통 미연계 구간은 수요응답형 관광교통과 연계

ㅇ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의 광역 관광거점화

- 터미널 내 시티투어·관광셔틀 전용 승하차 구역·안내데스크, 고속·시외버스 도착시각 연계 배차, 하차 후 보행 동선 안내체계

- 터미널 출발·도착형 지역 특화 테마 여행상품(역사문화·미식·축제 연계) 및 농촌체험 연계셔틀
- 터미널 유휴공간 내 PM·초소형 전기차 렌탈 스테이션 설치

ㅇ관광권 간 광역DRT·순환버스 운행 및 항공·철도 연동 배차

- 초광역권역 내 권역 내 주요 교통 거점과 지역관광지를 연결하는 초광역버스 및 수요응답형 버스(DRT) 등을 관광권역별 표준 모델로 정립
- 항공편 출·도착 및 KTX 도착 시각과 연동한 배차로 환승 대기시간 최소화
- 기존 직행노선이 없는 관문–관광지 구간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

ㅇ관광교통 취약성 진단 기반 광역 사각지역 개선 및 환승거점 안내체계

- 관광지점 입장객·내비게이션·대중교통 데이터를 결합한 관광교통 취약성 진단으로 관광권별 사각·취약 구간을 도출하고 우선 개선
- 광역 환승거점(공항·KTX역·터미널)에 스마트 정류장(실시간 정보·다국어·호출)과 관광권 통합 교통정보 제공
- 진단–지원–평가 결과를 수정계획 시행계획에 환류

(다) 수요맞춤형 관광교통서비스 확충

ㅇ전차계획은 이색 관광교통수단과 개인형 이동수단 인프라 조성을 제시하였으나, 실제 정책 수요는 관광 DRT·관광택시·통합예약 등 수요자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와 AI 기반 운영으로 이동

ㅇ전국 68개 지자체 226개 시티투어 노선 중 86.3%가 전세 버스형, 84.5%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어 개별관광객의 자유도가 낮고, 강릉 수요응답형 시티투어 실증은 대기시간 8분 49초(기존 26분36초)·만족도 4.28점으로 관광형 DRT의 효과를 입증

ㅇ정부는 AI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2026.3.)으로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2028년 공공 UAM 상용화를 제시하고 강릉·제주·경주 등 관광거점에서 자율주행 DRT·셔틀 실증을 추진

ㅇ관광형 DRT의 전국 확산 및 지역 맞춤형 운영모델 정립

- 외래객 관광경로 기반 관광 DRT를 인구감소지역·관광거점 주변으로 확대
- 예약방식(앱·콜센터·웹)과 차량규모(소형 4~5인승 택시형, 중형 11~15인승, 대형 25인승 이상)를 지역 수요·이용자 연령 특성에 맞춰 조합하는 운영모델 매뉴얼 보급
- 기존 농어촌 주민DRT(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와 관광DRT의 통합 운영 및 주말·성수기 관광노선 탄력 운행(영주시 사례)

○ 시티투어버스의 수요응답형 전환 및 통합예약·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 고정노선·사전예약 중심 시티투어를 순환형+수요응답형 혼합모델로 전환하고 당일 실시간 예약 도입
- 시티투어(카카오T)·관광택시(티머니GO) 모바일 예약·결제 서비스를 전 지자체로 확대하고 다국어·해외카드 결제 지원
- 노선별 이용수요·운영실적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으로 보조금 효율화 및 코스 유형별 만족 요인 반영 노선 개편

○ 관광택시의 제도화 및 서비스 표준화

- 예약서비스 기반 관광택시를 외래관광객·영유아 동반·장애인·가족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기점–관광지 연결 기능으로 정립하고 일반택시와 구분(전차계획 유지)
- 지자체 조례 기반 운전자 교육과정·요금체계·다국어 서비스 기준 표준화 및 10개 지자체 티머니GO 사례의 전국 확산
- 외국인 개별관광객 전용 관광택시모델의 권역별 도입 추진

○ AI 모빌리티 기반 관광교통 운영 고도화 및 자율주행 관광셔틀 도입

- (개념) AI 모빌리티는 인공지능이 수요예측·동적 배차(운영), 이동수단 자율화(자율주행·UAM), 개인 맞춤 여정 설계(에이전트)를 담당하는 이동 서비스 체계로, 관광객이 교통망을 이해하지 않아도 이동할 수 있는 상태를 지향
- 통신·카드·입장객 데이터를 학습한 AI 수요예측으로 관광 DRT·시티투어의 배차·노선을 요일·축제·항공편 도착에 맞춰 실시간 재편(강릉 관광형 DRT 호출 기반 배차 성과의 표준 모델화, 대구·경북 광역 DRT를 AI 동적 운영 시범지구로 지정)
- 관광단지·역세권 등 제한 구역부터 자율주행 셔틀을 도입(경주 보문단지 9.7km 순환셔틀, 강릉 심야 자율주행 DRT, 제주 공항–도심 자율주행 승합차)하고 2027년 레벨4 상용화에 맞춰 공항·역–관광지 노선으로 확대
- 관광권 육성사업 AI 실증 프로젝트·규제샌드박스와 연계한 실증 확대 및 데이터 비식별화·알고리즘 기준 정비

○ 관광특화 모빌리티 법·제도 정비 및 규제특례 활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관광형 DRT·관광택시·관광셔틀의 운영 근거와 면허체계 정비, 규제 샌드박스(강릉DRT 규제특례) 활용 실증 확대
-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관제·대여·중개·관리) 제도화 및"선 허용, 후 규제" 원칙에 따른 관광거점 실증 특례 적용
- 스마트 모빌리티 친화 관광지 조성을 위한 PM 스테이션·이용구간·안전관리 기준 마련 및 융복합 서비스 도입 편익 분석에 근거한 재정지원 기준 마련

(라) 이동이 관광이 되는 신개념 관광교통 자원화

○ 관광교통은 '관광을 위한 교통(Transport for Tourism)'과 '관광으로서의 교통(Transport as Tourism)'으로 구분되며, 관광열차·케이블카·레일바이크 등 이동 자체가 체험이 되는 교통수단은 지역의 독자적 관광자원으로 기능

○ 제4차 계획은 드론·해상택시·관광트램·수륙양용버스 등 이색 관광교통수단 도입을 제시하였고, 정부는 2026년 코리아 기차둘레길(남도 기차둘레길 시범)을 확정하여 철도 기반 체험형 교통의 정책 기반이 강화

○ UAM·드론·친환경 항공기 등 미래 항공 모빌리티가 급속히 발전하고 지방공항이 실증 테스트베드·버티포트 거점으로 활용 가능하여 관광노선 실증의 기회가 도래

○ 코리아 기차둘레길·관광열차의 전국 네트워크화

- 전국 외곽 광역철도망을 활용한 코리아 기차둘레길 조성(2026 경전선 남도 기차둘레길 시범, 남해안 27개 인구감소지역 연계)과 기차역-인근 관광지 코스화
- 관광전용열차 운영 확대와 철도역-관광지 연계 교통(관광택시·DRT)·숙박·체험의 결합 상품화
- 통합 관광패스·내일로·KORAIL PASS 이용 범위에 포함

○ 국도 휴게소의 지역관광 거점화(한국형 '길의 역' 조성)

- 일본 미치노에키(道の駅) 휴게·정보발신·지역연계 기능을 벤치마킹하여 5대 관광권 주요 관광국도(7번·77번 해안국도 등)에 관광거점형 국도 휴게소를 권역별 시범 지정하고, 고속도로 개방형 휴게소에 지역특산물 직거래·지역맛집 모델을 국도로 확장
- 관광안내·로컬푸드 직판장·관광 DRT/관광택시 호출·PM 스테이션·차박 체류구역을 기본 패키지로 구성하여 휴게소를 관광교통 환승·체류 거점으로 기능화
- 공공관리회사 직접계약·청년창업 입점 등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개편 방식을 국도 휴게소 설치·운영 지침에 준용하고 '관광거점형' 유형 신설

○ 해상·수변 연계 관광교통 확충

- 수상택시·연안 유람선 등 해양·수변 관광교통수단 인프라 조성 및 기존 시설 활용
- 코레일 레일쉽(목포·여수-제주, 포항-울릉) 철도-해운 연계이용권 확대 및 도서 관광 접근성 제고

○ 관광트램·케이블카·모노레일 등 지역 여건형 관광교통 도입

-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트램·관광지 내부 이동열차·케이블카 등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지역 관광자원과 혁신 모빌리티 융복합 서비스 도입 효과·지역경제 편익 분석 결과에 근거한 지원 기준 마련
- 자연·경관 보전과의 조화를 위한 환경성 검토 및 전략2(지속가능 관광개발)와의 정합성 확보

○ UAM·드론 관광노선 실증 및 지방공항 버티포트 연계

- 지방공항을 UAM 버티포트 거점 및 드론 실증 공간으로 활용하여 공항–관광지 간 관광UAM 노선 실증(2028년 공공 UAM 상용화 대응)
- 안전·소음·공역 기준을 고려한 단계적 실증 추진(관광지 주변 저밀도 공역 우선)

○ 친환경 개인형 이동수단·자전거 관광루트 조성

- 철도역·터미널·관광지 렌탈 스테이션(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초소형 전기차)과 생태·자연 명소 연계 친환경 투어 프로그램
- 스마트 모빌리티 친화 관광지 조성(강릉 KTX역 개인형 모빌리티 사례) 및 환승 거점에서의 교체·충전·관리 서비스
- 관광교통 촉진지역 사업(공유차량·PM 지원)과 해안·강변 관광루트(영덕 블루로드 사례) 연계

(2) 외래관광객의 관광활동 편의 개선

(가) 국경 없는 개방형 결제 편의 개선

○ 뉴욕·런던·싱가포르·도쿄 등 주요 관광도시는 개방형 교통결제를 도입하였고 일본은 2026년 초 45개 현·220개 이상 운영사로 확산되었으나, 국내는 제주 외 폐쇄형 체계로 외래관광객이 별도 교통카드 구매·현금 충전을 해야 하는 '관광 갈라파고스' 상태

○ 고속·시외버스 해외카드 결제 전면 도입(2024.7.) 이후 외국인 이용이 32.2% 증가하고, 카카오T 외국인 호출·네이버 지도 개선 등 민관협의체 성과로 온라인 예매·현장 결제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으나 지방 교통체계와 통합 패스는 과제로 잔존

○ 오픈 루프 교통 결제의 전국 로드맵 수립·이행

- 제주(2025.8.)·서울(2025~2030, 3단계)·부산(2028) 도입 계획을 토대로 5대 관광권 관문도시와 광역시로 확산하는 국가 로드맵 수립
- 정책협의회를 통한 정산사업자·카드사·지자체 이해관계 조정, 수수료·보안·환율 변동 리스크 분담 기준 및 국비 지원
- 과도기 조치(지하철 신형발매기 해외카드 결제, 모바일 교통카드 해외카드 충전) 병행 및 오픈루프 도입 후 지역상권 소비 효과 모니터링

(나) 외래관광객의 통합 관광패스 구현

○ 정부는 외국인 전용 통합 관광패스를 2026년 하반기 시범 도입하고 2027년 본격 시행 예정이며,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철도·버스·지방 관광지를 하나로 묶는 K-투어패스 도입을 제안

○ 한국형 통합 관광패스(가칭K-투어패스) 도입

- 고속철도·고속시외버스·도시철도·공항철도와 전국 주요 관광지 입장·할인을 통합한 디지털 패스(2026 하반기 시범→2027 본격), 글로벌 간편 결제·해외카드 연동
- 앱 내 다국어 관광정보·실시간 교통정보·지도앱 길 찾기 및 지역 숙박·전통시장·음식점 바우처 연계
- 문체부·국토부·관광공사·철도공사·버스조합·교통카드사 운영협의체 및 정산 규칙 사전 합의

○ 권역 패스 및 기존 지역 패스의 통합·호환

- 대경권 K-코어 관광패스 등 초광역 권역 패스와 코리아투어카드·디스커버서울·비짓부산·전북투어패스의 상호 호환 및 통합 발급채널 구축
- 전국호환 교통카드(티머니) 기반 결합, 권종·가맹점·정산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 지역 간 교통수단 온라인 예매·해외결제·인증 개선

- 고속·시외버스 예매처(약 40개국 통화·해외 간편 결제) 다국어 홍보 및 외국인 예매 할인, KTX 사전 예매기간 확대
- 외국인 본인인증 절차(주민번호·국내 휴대전화 중심) 개선, 모바일 승차권 보편화, 여행사 구매대행 허용
- 관광교통 민관협의체(11개사)의 개선과제 상시 발굴·이행 및 다국어 교통정보 콘텐츠(여행자 유형별 흐름도·결제방식 안내) 배포

○ 택시·플랫폼 호출 서비스의 외국인 친화적 운영

- 공항·KTX역·터미널 플랫폼 택시 전용 승·하차 구역 설치 및 카카오T 외국인 호출 서비스 연계 안내
- 택시 부당운임 즉시 자격정지 등 제재 강화, 다국어 영수증·결제 안내
- 지방 관광지 택시 부족 지역은 관광택시·DRT 호출 통합

(다) 외래관광객의 지역 체류 지원기반 확충

○ 인구감소 시대의 지역 활력이 정주인구가 아닌 생활인구(체류 포함)로 관리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1주~1개월 단위로 지역에 머무르며 일상을 경험하는 로컬리빙(살아보기형) 관광이 새로운 체류 수요로 부상

-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체류를 포함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법제화하고 통계를 산정·공표하고 있어, 관광 체류 기반의 확충이 지역 인구정책의 성과로 직접 연결되는 제도 환경 형성
- 디지털관광주민증은 2022년 평창·옥천 시범운영 이후 2026년 52개 지역(89개 인구감소지역의 58.4%), 혜택 장소 1,400여 곳으로 확대되었고 2024년 말 기준 누적 발급 411만 건을 돌파, 충북 영동군은 발급자 수가 주민등록인구를 추월하는 등 관계 기반 방문수요 실증(문화체육관광부)
- 제주 한 달 살기 이후 전국으로 확산된 살아보기 수요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체류가 가능한 숙소(취사·세탁 가능)와 생활 지원 기능이 절대 부족하여 수요가 공급 부족에 막혀 있는 상황
- 워케이션은 업무 목적 체류, 마을형 숙박은 숙박거점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업무 목적이 아닌 장기체류·반복방문·지역 관계 형성을 수용하는 체류 기반의 개발 과제가 필요

○ (개발) 장기체류형 체류 기반의 조성

- (로컬리빙 체류거점 조성) 빈집·유휴 공공시설·마을호텔을 리모델링하여 취사·세탁·업무가 가능한 1주~1개월 단위 생활형 숙소를 공급하고, 마을 단위로 공유주방·코워킹·공용 세탁실·짐보관 등 공유 생활시설을 결합한 로컬리빙 빌리지로 조성

※ 농촌체험휴양마을, 빈집 재생사업, 마을형 숙박, 워케이션 시설 등 기존 사업의 시설 자원을 로컬리빙 공급망으로 통합 활용하여 신규 건설 최소화

- (로컬리빙 스테이션 조성) 지역생활 안내, 주민교류, 이동·예약·택배·짐보관 기능을 제공하는 거점시설(로컬리빙 스테이션)을 생활SOC(도서관·체육시설·커뮤니티센터)와 연계 배치하여 체류자의 생활 편의와 지역 연결을 원스톱 지원
- (생활 인프라 연계 정비) 중장기 체류에 필수적인 이동수단(공유 모빌리티·마을버스 연계), 의료·생활 서비스 접근성, 통신 환경을 체류거점 조성계획에 포함하여 정비
- (입지·유형 다변화) 농산어촌형(농촌 일상 체험), 소도시형(구도심 상권 연계), 휴양지형(관광지 연계 장기체류) 등 지역 여건별 조성 모델을 유형화하여 확산

○ (진흥) 관계 형성·반복방문 운영체계

- (관광주민증 고도화) 디지털관광주민증을 할인수단에서 지역 멤버십·반복방문 관리 수단으로 고도화하여 방문이력 기반 혜택 누적, 지역 활동 참여 연계, 재방문 유도 체계로 발전
- (일상 참여형 프로그램) 지역 식생활, 문화강좌, 농어촌 활동, 창작, 자원봉사 등 일상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비형 방문을 관계형 체류로 전환하고, 참여 활동이 지역 일손 수요(농번기·축제 운영)와 연결되는 상생 구조 설계
- (생애주기별 체류모델) 청년(원격근무·창업 탐색), 가족(계절학기·농촌유학 연계), 은퇴자(시니어 롱스테이), 해외동포·외국인(K-라이프스타일 체험), 창작자(레지던시) 등을 포괄하는 다층적 체류상품 운영
- (성과지표) 방문횟수·체류일수·지역활동 참여도·지역 내 소비를 결합한 관광생활인구 지표를 개발하여 행정안전부 생활인구 통계와 연동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

○ 단계별 추진방향

- (단기) 로컬 리빙 시범지역 지정, 빈집·유휴시설 리모델링 기반 생활형 숙소 공급 착수, 로컬 리빙 스테이션 시범 조성, 관광주민증 멤버십 기능 고도화
- (중기) 유형별(농산어촌·소도시·휴양지형) 로컬 리빙 빌리지 권역 확산, 생활 인프라 연계 정비, 일상 참여형 프로그램의 상품화 및 관광생활인구 지표 도입
- (장기) 워케이션-마을형 숙박-로컬리빙을 아우르는 체류형 지역관광 기반의 통합 운영 체계 정착, 생활인구(행정안전부)·귀농귀촌(농림축산식품부) 정책과의 부처 연계 제도화

(3) 안전·신뢰·포용 관광환경 구현

(가) 관광지·관광시설 안전관리체계 강화

○ 정부는 AI와 관광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관광지의 밀집도, 이동 흐름 및 위험요인을 실시간으로 분석·예측하고, 관계부처와 연계하여 관광객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능형 안전관리체계 구축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ICT 기반 스마트관광 서비스를 AI 기반 지능형 관광 서비스로 고도화하고, 스마트 주차·교통, 혼잡도 안내, 맞춤형 관광정보 및 실시간 다국어 번역·통역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개별관광객의 이동과 관광 편의성 제고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열린 관광지를 지속 확대하고,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이동·정보·안내 서비스를 강화하여 관광지 단위를 넘어 지역 전체의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나) 관광 서비스 요금 모니터링과 가격 신뢰 제고

○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를 운영하여 숙박업체 등이 성수기, 비성수기, 특별행사 기간별 요금 상한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지방정부에 미리 신고하고 있음

○ 신고된 상한 가격은 예약 플랫폼(OTA)이나 업체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약속한 상한 요금보다 더 많이 받다가 적발되면 엄격한 제재

(다) 무장애관광 확산을 위한 열린관광지 및 관광도시 고도화

○ 누구에게나 문턱 없는 대한민국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열린관광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상 개소 수 및 지원 내용 확대

- 열린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경사로 등 시설 개보수, 관광지 보행 환경 개선, 화장실 및 보행 안내판 개선, 지자체 열린관광지 특화 지원 조례 제정, 관광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및 종사자 인식 개선 교육, 열린관광지 공공 디자인 및 운영 매뉴얼 지원, 공간 환경 개선 및 공공 디자인 지원 등

○ 개별 관광지 단위의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서 나아가 지역 내 관광지를 잇는 무장애 관광루트를 조성하는 등 관광약자들의 관광지 간 이동과 지역 전반의 관광 활동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 열린관광도시 육성 확대

○ 도시 내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고 다양한 무장애시설을 도입하고, 어린이 및 여성, 노인을 위한 맞춤형 안전 및 편의 체계 강화

○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장애가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 인증제'를 보완하여 열린관광 도시를 중심으로 '장애가 없는 관광환경 인증제도' 시행

(4) 전체 여행 과정의 관광 정보·서비스 고도화

(가) AI 기반의 맞춤형 관광 정보서비스 기반 확충

○ 국내 · 외 관광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맞춤형 관광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예약에서 사후관리까지를 포괄하는 '스마트 관광 통합 플랫폼' 구축

- 교통, 숙박, 음식, 쇼핑 등 관광접점별 예약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서비스 등 ICT와 관광의 융·복합을 통해 관광 이용의 편의성 제공

- 다양한 고객층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스톱으로 쉽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플랫폼 모델 개발

○ 관광지를 중심으로 사물 인터넷 기술과 무료 와이파이 존, 키오스크 관광안내시스템 등 첨단 스마트관광 실현을 위한 ICT 관광 서비스 기반 구축

○ AI와 관광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관광객의 이동, 수요 및 관광지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예측하고, 관광객에게 맞춤형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기반 스마트 관광 시스템 구축

○ CCTV·IoT·통신데이터 등에 AI 분석기술을 적용하여 관광객 밀집도와 이동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예측하고, 혼잡정보 및 대체 관광지·이동경로 제공

○ AI 영상인식 및 센서기술을 활용하여 관광지 주변 주차공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주차수요를 예측하는 스마트 주차관리 시스템 구축

○ 생성형 AI와 자동번역 기술을 관광안내소, 관광지, 음식점, 전통시장 등에 적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언어장벽을 완화하고 관광 편의성 제고

○ 관광객의 위치·관심사·여행일정 등을 반영한 AI 관광비서 및 맞춤형 여행정보 서비스와 음성·텍스트 기반 실시간 다국어 번역·통역 서비스 확대

(나) 스마트 관광도시의 성과 확산

○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구축된 스마트관광 플랫폼, 관광정보·이동·예약·결제 서비스 등 주요 성과와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타 지역으로 확산

○ 스마트관광 요소를 집약해 여행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해 스마트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관광도시를 지속 확대

○ 단순 검색으로 정보를 제공받는 검색형 서비스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반응하는 지능형 서비스로 전환되며 유적 중심 자원에서 스토리와 기술 중심 자원으로 전환

- 기존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스마트관광 플랫폼 모델을 통하여 타 지자체도 스마트 관광도시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 추진 중에 축적된 데이터를 통하여 관광객들에게 예측력 높은 서비스 제공

○ 스마트 관광도시를 중심으로 '관광데이터센터'를 조성하여 지역여행의 객관적인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거점 관광 활성화 유도

- 기존 사업을 통해 구축된 플랫폼과 축적된 관광데이터를 활용하여 단순 정보제공 중심의 서비스를 넘어 AI 기반 관광수요 예측, 맞춤형 관광정보 제공, 혼잡도 분석 등 지능형 관광서비스로 고도화

○ 스마트관광도시에서 개발·검증된 우수 기술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지역 간 확산을 지원하여 신규 대규모 인프라 구축보다는 기존 성과와 자산을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

(다) 관광지 및 관광시설 통합 정보망 구축

○ 안내소 기능의 한계, 관광안내소의 활용 및 효율성 저하 등 지역 관광안내소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지역관광 안내시스템 선진화 및 효율적인 관광안내소 운영

○ 선진화된 안내체계 개선을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입지적 측면(대도시 거점센터형, 중소도시 관광안내소형, 소도시 안내부스형, 관광지안내형 등), 기능적 측면(종합적 다기능형, 교통안내 중심형, 관광안내 중심형, 단순 안내형 등), 특화 서비스 측면(이동식 관광안내소, 찾아가는 안내소 등) 등을 기준으로 유형화

○ 관광안내소에 가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신뢰도 높은 관광안내소 브랜드로 육성

라. 역동적인 지역관광 생태계 육성

정책 방향
○ 관광을 통한 자립적 지역발전 ○ 관광개발 효과가 지역관광생태계로 연결되는 관광정책 추진 ○ 지역관광 주체(지자체와 지역주민)의 관광역량 강화
계획 지침
○ 지역 주도의 관광산업 추진 - 지역관광생태계는 지역 내 관광생태계로서 '지역관광' 중심의 가치 사슬구조를 근간으로 지역사회의 인력, 관광기업의 지원, 지역관광자원의 개발 등이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연계 및 확산한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자체적으로 관광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참여 및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상생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특화 관광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반환경을 구축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이 보유한 자연·생태, 역사·문화 등 관광자원의 특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방안을 모색한다. ○ 관광개발 추진역량 제고 - 지역관광생태계 가치 사슬은 '기획→개발→조성→운영→성과 관리'로 연결되어 있고 각 단계별 과정들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협력 및 추진체계, 역량 등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관광자원의 광역적 연계와 중앙정부, 지자체 및 관련기관 등 이해관계자 간 조정 등의 역할을 하도록 지역관광의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이양이 추진됨에 따라 지역이 자발적으로 관광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 민간참여 지원, 성과관리 등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기획, 추진, 관리·운영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략 4] 역동적인 지역관광 생태계 육성	
추진 과제	세부 과제
1 주민참여형 지역관광 추진 확대	○ 주민참여형 지역관광 발굴·운영 확대 ○ 주민 관광사업체의 자립·성장 지원 ○ 관광 편익의 지역 환류 공유모델 확산
2 지역관광 전문인력·조직·기업 육성	○ 지역관광 전문가 양성 ○ 지역관광 조직 기능 및 역량 고도화 ○ 지역 관광기업의 성장 지원 거점 확대
3 관광과 지역상권·산업의 연계 강화	○ 관광서비스 거점으로서 지역상권 활성화 ○ 6차 산업을 통한 지역관광 활력 증진 ○ 지역관광 유산의 산업화 지원
4 지역관광 협력 체계와 추진역량 강화	○ 민-관-산-학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지자체와 지역주민 관광개발 역량 강화 ○ 지역관광 혁신거점으로 지역 대학의 역할 확대

(1) 주민참여형 지역관광 추진 확대

(가) 주민참여형 지역관광 발굴·운영 확대

○ 지역관광에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는 지역사회의 자생적 관광 기반 구축을 위해 중요하며,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중장기적으로 추진기간(2~3년)을 설정하여 정책추진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 인력 지원과 정책 지원을 통해 주민제안 사업이 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 제안 사업내용에 따라 특정 분야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공간 구상 사업은 공공디자인, 건축, 조경 등의 전문적 컨설팅을 지원하며,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인적자원 역량 강화(교육) 등 지원

○ 주민참여형 관광자원 개발 확대를 위해 거버넌스 구축, 지역문제의 발굴, 지역문제의 해결방안 마련, 사업화 선정, 사업화 실행의 단계적 추진

○ 지역주민의 참여범위를 관광자원의 발굴·개발에서 관광사업의 운영·관리 및 성과환류까지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지역관광 생태계 구축

- 지역주민이 관광자원 및 콘텐츠 개발 이후에도 관광시설·프로그램의 운영, 관광서비스 제공, 환경·경관 관리 등 지역관광의 운영·관리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주민조직, 주민사업체, 지역 관광사업자 등이 관광사업의 운영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 서비스관리, 마케팅, 회계정산 등 운영역량 강화 지원
- 관광사업의 추진성과와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과 공유하고 후속 사업과 관광환경 개선에 반영하는 기획→운영→평가→환류의 주민참여 구조 구축

○ 지역 여건과 주민의 참여역량을 고려하여 관광서비스·환경관리·지역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참여형 관광 운영모델 발굴

- 관광안내·해설, 지역문화 체험, 축제·이벤트, 관광시설 운영, 경관·환경 관리 등 지역의 특성과 주민역량에 적합한 참여분야 발굴
- 지역의 공동체, 주민사업체, 사회적경제조직, 로컬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지역주체 간 역할분담과 협업을 통해 주민참여형 관광서비스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 강화

○ 관광객과 지역주민 간 교류를 확대하고 재방문객·관계인구 등의 지역활동 참여를 통해 주민참여형 지역관광의 외연 확대

- 지역축제, 문화·생활체험, 농산어촌 활동, 지역문제 해결 프로그램 등에 관광객과 생활인구가 지역주민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류형 관광프로그램 확대
- 지역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재방문객, 장기체류자, 워케이션 참가자 등 관계인구가 주민과 함께 지역의 관광활동 및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지역주민과 방문자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관광객을 단순 소비자에서 지역의 가치와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주체로 확대

○ 주민의 관광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관광으로 창출된 편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참여기반 강화

- 주민의 관광에 대한 인식, 관광사업 참여도 및 만족도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지역관광 정책과 관광사업 운영에 반영
- 관광사업 운영성과와 지역사회 기여도를 주민과 공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관광서비스 개선 및 신규사업 발굴에 반영
- 주민참여 활동이 일회성·무보수 활동에 의존하지 않도록 참여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 및 수익창출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주민참여 유도

〈표 9.1.2-1〉 주민 참여형 지역관광사업 단계

거버넌스 구축 〉〉	지역문제 발굴 〉〉	지역문제 해결 방안 마련 〉〉	사업화 선정 〉〉	사업화 실행
시민참여단/유관기관/전문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추진체계 마련	지역에서 느끼는 문제점 등 관광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발굴	다양한 관광환경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 도출	도출된 아이디어를 실현한 사업 아이템 선정	민간기업 참여, 의견교류를 통해 지역관광사업 실행, 모니터링

(나) 주민 관광사업체의 자립·성장 지원

○ 관광두레 2.0 사업의 기본 방향은 '공동체성', '지역성', '지속가능성' 이라는 가치를 유지하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소득·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관광 구축

○ 관광두레 사업체 증가에 맞춰 지원체계와 성과관리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여 지역 관광두레 사업추진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 지원조직을 설립하여 시·군 단위의 관광두레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권역 및 거점별 지원 및 관리체계 마련

- 시·도별 거점지역에 '(가칭)관광두레 지역협력센터'를 설치하여 시·군 단위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관광두레 중심의 마을관광 육성체계 구축

○ 주민사업체 지원체계를 세분화하여 새롭게 정비하고 권역과 거점의 특성에 맞는 지역 맞춤형 사업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 방안 마련

○ 외연 확대와 내생적 지역관광 발전 내용을 포함하는 「관광진흥법」 개정 및 지자체 조례 제정을 확대하여 관광두레 사업의 법률적 기반 마련

(다) 관광 편익의 지역 환류 공유모델 확산

○ 관광객 유치와 관광소비 확대를 넘어 관광으로 창출된 경제·사회·문화적 가치가 지역사회에 축적·확산되는 지역관광 구조 구축

- 관광개발과 관광객 증가로 창출되는 경제적 편익이 지역 내 일자리, 주민소득, 지역사업체 매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광과 지역경제 간 연계 강화
- 지역상품과 서비스의 구매·조달, 지역인력 고용, 주민사업체 및 로컬크리에이터의 관광사업 참여 등을 확대하여 관광소비의 지역 내 순환과 부가가치 창출 유도
- 관광을 통해 지역의 문화와 생활양식, 공동체 활동 등 지역 고유의 사회·문화적 가치가 보전·확산될 수 있도록 관광과 지역사회 간 연계 강화

○ 지역주민이 관광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관광개발 과정에서 주민참여와 지역사회 편익 확대

- 관광개발 및 관광사업의 기획·운영 과정에 지역주민과 지역사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업과 관광객 수요가 연계될 수 있는 추진체계 마련
- 관광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 고용, 지역 업체 참여, 지역상품 활용 등 지역사회 기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사업계획 단계부터 검토
- 관광으로 발생한 수익과 편익의 일부가 지역의 환경·경관 관리, 문화자원 보전 및 공동체 활성화 등에 재투자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마련

○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상생·공존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관광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관광객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주차, 혼잡, 쓰레기, 소음 등 주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지역별 여건에 적합한 관리방안 마련
- 특정 관광지와 시간대에 집중되는 관광수요를 주변지역과 조·야간 시간대로 분산하여 관광객 체류와 소비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주민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완화
- 지역주민의 관광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관광정책 및 관광개발사업에 반영하여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역관광 환경 조성

○ 관광객 수 중심의 성과관리에서 지역사회에 창출되는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역관광 성과관리체계로 전환

- 방문객 수, 관광소비액 등 기존 양적 지표와 함께 지역고용, 지역업체 참여, 지역 내 소비, 주민 만족도, 지역사회 기여도 등 관광이 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
- 관광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문화·환경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를 관광정책과 관광개발 사업에 환류
- 지역별 관광수용력과 주민수용성을 고려하여 관광산업의 성장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관리체계 구축

〈표 9.1.2-2〉 관광을 통한 지역사회 가치 창출 및 환류 체계(안)

지역자원 활용 》	관광소비 창출 》	지역경제 연계 》	지역사회 편익 확대 》	지역사회 재투자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상품 개발	관광객 방문·체류 및 지역 내 소비 확대	지역 업체 참여, 지역 상품 구매, 주민고용 및 소득 창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자원 보전·환경개선·공동체 사업 등에 재투자

(2) 지역관광 전문인력·조직·기업 육성

(가) 지역관광 전문가 양성

- ㅇ 지역의 자연적·문화적 자산에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 주체인 로컬크리에이터 등 지역관광활동가 발굴 및 육성
- ㅇ 창의적인 민간주체로서 지역관광활동가를 육성해 지역의 자연적·문화적 자산을 토대로 지역 관광이 차별화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생적 협업과 지원 제공
- ㅇ 지역의 가치를 로컬푸드, 자연친화 활동, 문화체험, 지역 특화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유형화하여 공모·지원
- ㅇ 지역관광활동가는 지역의 다양한 혁신 주체들과의 연결과 협업을 강화하여 지역의 고유한 가치에 기반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확대

(나) 지역관광 조직 기능 및 역량 고도화

- ㅇ 지역관광 혁신조직은 지역관광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지역관광 거버넌스를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관광의 기획 및 실행,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원
- ㅇ 정부는 정보, 인력,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주도의 관광사업 추진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지역 간 또는 생활권을 기반으로 한 기초 단위의 지역관광 혁신조직으로 확대
- ㅇ 한국형 관광발전지역 만들기 법인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지역관광 혁신조직의 기본방향 및 역할 제시
  - ‘(가칭) 한국형 관광발전지역 만들기 법인’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관광협의회, 관광재단 등 지역관광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을 육성하여 지역관광의 당면과제를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ㅇ 지역관광 혁신조직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 주민·업계의 중간조직으로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의 관광발전을 견인하는 역할 확대

(다) 지역 관광기업의 성장 지원 거점 확대

- ㅇ 지역 기반의 관광기업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의 자생적 구조를 확립함으로써 지역관광 경쟁력과 국내관광 활성화에 기여
- ㅇ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는 특정 지점이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 전반에서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및 지역특화 관광기업 육성 및 지원
- ㅇ 지역의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를 위해 창업공간을 지원하고, 초기 관광벤처를 위해 교육·컨설팅·멘토링·홍보·판로지원 등 지원

(3) 관광과 지역상권·산업의 연계 강화

(가) 관광서비스 거점으로서 지역상권 활성화

○ 지역단위의 관광상권은 내·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숙박·음식·체험·쇼핑·교통 등을 집적화시킨 관광서비스 거점으로 조성하여 지역관광 산업의 실질적 성장 유도

○ 관광상권이 지역관광의 소비 핵심으로 자리 잡기 위해 개별 관광사업체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이들의 공간적 집적을 통해 만들어내는 상권의 매력 창출

○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의 맥락에서 지역 관광상권의 연계 방안 모색과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상권 시범사업 실시 등 추진

- (도심권 관광재생 특화 시범사업) 도시 재생사업으로 지역의 문화자원 등을 활용하여 새롭게 조성된 공간을 중심으로 주민주도의 프리마켓, 공방 등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관광 사업에 기반한 관광상권으로 전환 유도
- (관광자원 연계형 관광상권 시범사업)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와 상권을 연계하여 관광객의 호기심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특화 먹거리, 로컬 편집숍, 게스트 룸 등을 운영함으로써 관광상권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관광지·관광단지 내 관광자원 운영 사업의 관광업종 편입을 통해 지역관광 상권의 중심축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고 관광지가 관광개발 조성 이후 지역관광산업과 연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나) 6차 산업을 통한 지역관광 활력 증진

○ 6차 산업은 1차(농림수산업)+2차(제조업)+3차(서비스업)산업 간 융합 개념으로 농림, 산림, 해양수산 등의 지역자원과 관광, 휴양, 체험, 치유 등과의 융·복합을 통해 관광 생태계를 만들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산업화 지향

- 농촌 지역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체험시설 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방문 여건을 충족시켜줌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 산림자원은 타 산업에 비해 계절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산림자원이 가지는 생태적, 환경적, 경관적 가치를 활용하여 휴양, 치유 등을 연계
- 어촌의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어업과 식품, 특산품 제조 가공 및 유통·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지역의 주민공동체가 시행 주체가 되어 체험, 상품 개발, 운영 및 관리 등을 중심으로 읍·면·동 마을 단위의 6차 산업 마을 관광단지 조성

○ 특산물(치즈, 꿀 등) 가공용 공장과 관광 체험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6차 산업 중심 지역특화 산업시설의 관광(단)지 내 제한적 도입 및 단지 내 생산·체험·소비를 통한 지역 활성화 기여

(다) 지역관광 유산의 산업화 지원

○ 지역관광유산 개념과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이 참여하는 관광유산 발굴 체계 구축

- 관광유산의 개념 및 범위를 정립하고 역사성, 상징성, 관광사적 가치, 지역성, 국민적 기억, 희소성, 전승·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선정기준 마련
- 지자체, 지역주민, 관광업계, 전문가 등의 추천뿐만 아니라 국민이 자신의 여행경험과 기억이 담긴 관광자산을 제안할 수 있는 참여형 발굴방식 도입
- 전문가 조사와 지역사회 의견수렴 등을 통해 관광유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대한민국 관광유산(가칭)'을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기록·관리
- 기존 국가유산,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역 미래유산 등 관련 제도와의 중복성을 검토하고 기존 제도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관광 고유의 역사·사회·문화적 가치 중심으로 차별화

○ 관광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정 보존보다 기록·전승·활용 중심의 유연한 관리체계 마련

- 관광산업과 여행문화가 시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획일적인 원형보존보다는 관광유산의 특성에 따라 보전형·기록형·계승활용형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
- 보전 필요성이 높은 장소·시설 등은 관련 제도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소멸하거나 변화하는 관광자산은 디지털 아카이브 등을 통해 기록과 기억을 보존
- 축제, 여행문화, 관광서비스 등 변화와 계승이 필요한 무형의 관광유산은 기록과 콘텐츠화를 통해 그 의미와 가치 전승

○ 발굴된 관광유산을 지역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여 지역 관광정체성과 관광 브랜드 강화

- 관광유산에 축적된 장소의 이야기와 국민의 여행기억을 스토리텔링하여 관광코스, 해설, 전시, 교육, 디지털 콘텐츠 등으로 활용
- 지역 내 다른 관광자원 및 지역상권과 연계하여 관광유산을 중심으로 지역의 관광 역사와 정체성을 경험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
- 관광유산 관련 기록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국민이 관광유산에 얽힌 사진·기록·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참여형 플랫폼으로 확장

(4) 지역관광 협력 체계와 추진역량 강화

(가) 민-관-산-학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지역관광의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공공주도의 개발방식에서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 관광개발 추진 체계 마련

○ 주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역할을 분담하는 지자체 단위 민-관-산-학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실질적 기여 유도

○ 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주체로서 지자체는 네트워크의 유기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과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의 확장을 위한 노력 추진

(나) 지자체와 지역주민 관광개발 역량 강화

○ 관광이 지역발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고, 지방분권 확산으로 지역관광 발전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되었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관광 활성화의 목표 달성을 위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 방안 마련

○ 지자체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역관광 아카데미 재활성화, 이러닝 플랫폼 등의 역량 교육, 지역 관광개발 노하우 등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관광개발 지침 제작, 공유 및 학습 지원

○ 지역주민의 관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주민 참여 인식, 지역관광에서 주민의 역할, 관광객과 서비스 관리 등 관광서비스의 기본적인 사항부터 주민사업체 설립 운영의 영역까지 단계적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다) 지역관광 혁신거점으로 지역대학의 역할 확대

○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관광산업·기관·기업이 연계하여 지역관광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내 활동과 정착으로 이어지는 인재양성 생태계 구축

- 지역대학의 관광 관련 학과를 지역관광의 전문 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고 지역의 관광자원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 대학-지자체-관광공사·재단-DMO-관광기업 및 지역사업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학 교육과 지역관광 현장의 연계 강화
- 지역에서 교육받은 관광인재가 지역 관광산업에 취·창업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 → 현장 경험 → 취·창업 → 지역정착의 선순환 체계 구축

○ 지역별 관광 특성을 반영한 ‘지역관광 특성화대학 육성사업(가칭)’을 추진하여 지역관광 인재양성 기반 강화

-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한 교육역량 및 지역협력 기반을 갖춘 지역대학을 ‘지역관광 특성화대학(가칭)’으로 선정하고 교육과정 개발·운영, 현장교육, 산학협력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
- 지역의 관광자원 및 산업 특성에 따라 생태·웰니스·문화유산·해양·농촌·MICE·로컬콘텐츠 등 대학별 특성화 분야를 설정하고 정규 교과과정, 마이크로디그리, 융합전공 및 비교과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 관광 분야의 디지털 전환, AI 활용, 콘텐츠 기획, 관광데이터 분석 등 관광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관광인재 교육 강화

○ 대학과 지역 관광산업 간 현장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관광 문제를 해결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

- 지자체, 관광공사·관광재단, DMO, 관광기업 및 지역 관광사업체 등이 대학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지역관광 협력 체계 구축
- 지역의 실제 관광현안을 대학의 교과·비교과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지역관광 문제를 발굴하고 관광콘텐츠 및 사업을 직접 기획·실행하는 프로젝트 기반 교육 확대
- 현장실습, 인턴쉽, 캡스톤 디자인, 리빙랩, 관광콘텐츠 실증 등을 통해 대학 교육과 지역관광 현장 간 연계 강화
- 지역에서 양성된 관광인재의 취·창업과 지역정착을 지원하여 지역관광 전문인재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 특성화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과 지역 관광기업·기관 간 취업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관광기업 인턴십 및 현장실습 확대
- 관광콘텐츠 및 관광서비스 분야의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창업교육, 멘토링, 사업화 및 지역 관광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관광 창업인재 육성
- 교육과정 이수 이후 지역 취업·창업 및 활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에서 활동하며 지역에 정착하는 관광인재 선순환 구조 구축

〈표 9.1.2-3〉 지역관광 전문인재 양성 생태계(안)

지역대학 학과 특성화 》	지역기반 관광교육 》	현장 프로젝트 》	지역 취·창업 》	지역정착
지역관광 특성화 대학/학과 선정·지원	지역 관광자원·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교육	지자체·관광기관·기업 연계 현장실습 및 프로젝트	관광기업·기관 취업 및 지역관광 창업 지원	지역관광 전문인력으로 활동·성장

마. 연계·협력 기반의 관광효과 확산

정책 방향
◦ 점-선-면 관광공급 요소를 넘어선 입체적 관광공간 구축 ◦ 관광개발과 관광공간의 유기적 연계 확대 ◦ 공동자원에 대한 국가 간·부처 간 연계·협력 강화
계획 지침
◦ 공간위계별 유기적 연계를 통한 관광발전 체계 정립 - 정부는 전국토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관광자원 간 위계를 고려한 관광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 확산하기 위한 정책을 지원한다. - 정부는 미래 관광개발여건을 고려하여 공간위계에 따라 지역관광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관광 및 관광개발 정책을 재편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자원 확충을 위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차세대 지역수요의 요구를 반영하여 수요맞춤형 관광개발을 추진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관광 균형발전과 관광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관광 거점을 중심으로 연계와 협력을 통해 주변지역으로 관광개발 효과를 확산시킨다. ◦ 다자간 연계·협력 기반의 관광개발 추진 - 정부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관광개발의 통합적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연계·협력을 기반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협력하는 관광개발을 추진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잠재력 있는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발하고, 다양한 주체가 관광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개방적 참여형 관광개발을 실행한다. - 해양, 농·산촌, 산림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가능성이 높은 자원을 관할하는 정부부처 간 협력을 선도하여 범부처 다협력 관광자원화를 유도한다. - 정부는 관광시장의 전략적 확대와 공동 관광권 형성을 위해 북한 및 동북아 국가들과 관광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의 관광자원 활용 계획을 수립한다.

[전략 5] 연계·협력 기반의 관광효과 확산	
추진 과제	세부 과제
① 광역관광권 연계협력 체계 구축	◦ 5극3특과 연계한 초광역 관광협력권 육성 ◦ 다극다핵 기반 관광축 구축 ◦ 광역관광 협력조직체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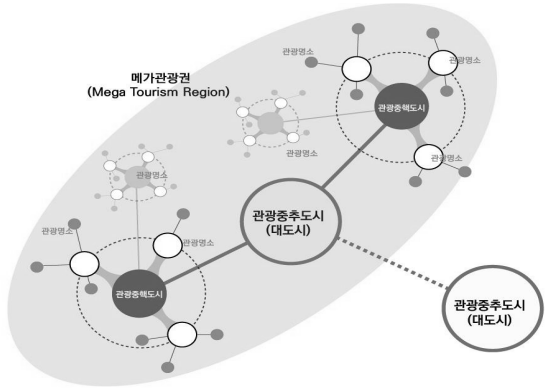
2 관광거점 연계와 지역관광 효과 확산	○ 다층적 구조 및 연계를 고려한 지역관광 육성계획 수립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관광거점 및 주변 지역 연계 강화 ○ 지역특화형 강소형 유망관광도시 육성
3 남북·국제 관광 협력 확대	○ 남북관광 재개에 대비한 남북관광 연계 모델 마련 ○ 한·중·일 공동 관광권 협력체계 구축
4 관광영역 확장에 따른 범부처 관광개발 추진	○ 아웃도어 스포츠관광 육성 ○ 크루즈 및 섬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지역 SOC 연계형 관광자원 조성 ○ 범부처 지역관광 융합개발사업 추진

(1) 광역관광권 연계협력 체계 구축

(가) 5극3특과 연계한 초광역 관광협력권 육성

○ 메가 관광권(mega tourism region)은 초광역권 관광권을 의미하며 관광중추도시, 관광중핵도시 및 관광명소(시설, 자원 등) 등 산재해 있는 다른 공간 층위(세 계층)를 하나로 뭉치는 관광개발 전략

- 관광중추도시는 현재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숙박, 쇼핑, 음식 등 관광수용태세가 일정 수준 이상 이루어진 공간으로 메가관광권 내의 관광중핵도시에 관광객을 송출하거나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국제적(international) 수준의 관광도시
- 관광중핵도시는 중핵도시 관광이동권 내 관광자원, 관광시설 및 관광명소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국가적(national) 수준의 관광도시
- 관광명소는 그간 관광개발정책으로 추진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등 관광지점과 선형관광자원 중 지역(regional)을 대표하는 관광자원



〈역 할〉

○ 관광중추도시는 관광권에서 관광시설, 자원, 콘텐츠, 홍보, 조직 등을 압축적으로 개발하여, 메가관광권(mega tourism region)의 핵심 역할 담당

○ 관광중핵도시는 고유한 관광브랜드를 지니고 있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중소규모의 핵심 관광도시(시.군)로 관광중추도시를 연결하는 관광매개(노드, node) 역할 담당

○ 관광명소(시설, 자원 등)는 점형(관광지 등), 선형(걷는 여행길 등) 또는 면형 관광자원으로 쇠퇴, 유휴된 관광자원, 시설 등을 포함하여 관광객 유입 역할 담당

(그림 9.1.2-2) 메가관광권 개념도

ㅇ 메가관광권 내의 관광중추도시는 광역교통체계를 근간으로 관광도시 간 연계가 이루어지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입출국 장소로서 안내, 정보, 편의 등 외래관광객 유치 기반을 마련

- 관광교통은 목적지까지의 모든 여정에 걸쳐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철도, 버스,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지역 간 연계 및 다양한 편의 확대가 우선
- 관광중추도시와 관광중핵도시, 관광중핵도시와 관광명소 간 연계 체계 구축에 있어 관문~허브~관광지점이 연계되도록 구축

ㅇ 5대 메가관광권은 자족적 관광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 숙박, 교통, 안내정보, 관광시설 및 자원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

(나) 다극다핵 기반 관광축 구축

ㅇ 관광자원과 관광객의 이동동선을 중심으로 전 국토를 종횡으로 연결하는 관광축 구축으로 차세대 관광국토 완성

- 관광중추도시, 관광중핵도시와 관광명소(테마파크 등) 등을 중심으로 국토를 종횡으로 연결하여 공급중심 정책에서 관광객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 가치 활용 정책으로 관광개발정책 전환
- 관광축은 지역관광 발전 및 국가관광 경쟁력 강화를 선도하는 중심지(관광중핵도시 등)와 관광이동권을 연결한 선형 지대를 의미

ㅇ 4대 관광계(界)는 관광자원 확장 및 연계·협력 확대를 통한 지역공동발전 전략을 상징화한 축으로 동·서·남·북 사계(四界)로 구축

- 관광거점도시 등 관광중추도시로서 역할을 하는 도시를 기반으로 도시관광 특성과 자연, 문화 등을 고려하여 관광객 행태와 관광자원 가치를 연결한 국토관광축 구축
- 관광객 행태와 자원 가치를 연계한 4대 관광계는 강력한 관광자원을 갖춘 2개 이상의 도시를 연합하여 고차원적인 관광공간, 시설, 자원 등 중심기능 공유
- 남계는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와 치유 기능을 확대하는 남부권(축), 북계는 DMZ와 안보자원을 활용하여 미래 남북교류 가치를 확대하는 북부권(축), 동계는 동해안과 백두대간의 해양과 산악을 아우르는 자원을 활용한 동부권(축), 서계는 갯벌의 가치와 자연생태와 환경적 가치를 활용한 서부권(축)으로 설정

ㅇ 3대 지역 관광축은 전 국토를 관통하는 광역교통체계를 따라 관광지점을 연결하여 지역관광 매력을 확산하고, 관광객 지방 분산을 유도하는 관광축

- 철도 기반 미래 광역교통체계로써 관광객 동선과 연계한 지역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관광축에서 주변지역으로, 지역에서 관광축으로 탄력적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유연하면서 개방적인 방식으로 추진
- 마을단위 관광지점을 광역교통체계와 연계하는 회랑형(corridor) 관광개발을 통해 대규모 관광개발을 지양하면서도 관광객 체류일수를 연장하고, 입체적인 지역관광 점.선.면.체(體)의 완성 추진
- 지역 관광축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지역이 가진 관광역량을 결집시키고 결합하여 역사문화관광축, 그린 관광축, 산악관광축 등 광역교통체계 인근 지역의 관광여건에 맞게 관광축 안에서 세부적으로 테마를 부여하여 다양한 매력 창출 유도
- 제1관광축은 수도권과 부산·경남을 중심으로, 제2관광축은 강원과 호남을 중심으로, 제3관광축은 충청과 경상을 중심으로 구축

ㅇ 전국토를 대상으로 8대 테마 중심의 4계(공급 관점)와 관광객 이동동선(수요 관점)을 통해 미래지향적 관광발전 체계를 구축

(다) 광역관광 협력조직체계 구성

ㅇ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광역연합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실효적인 광역연합 관광지원 조직 설립 추진 가능

- 2021년 기준 광역연합을 위한 메가시티가 논의되는 지역은 부산·울산·경남(부·울·경) 3개 시·도로서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인구 800만 제2국가 성장축으로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 계획 추진
- 대전·세종·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광역교통협의회'를 통해 광역협력을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메가시티 조성 계획 중

ㅇ 관광수요의 광범위한 관광행태, 지역 관광개발 행정의 광역적 접근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관광을 자립·분권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광역연합형 관광지원 조직 설립

ㅇ 광역연합형 관광지원 조직은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서 지역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관광시설·관광인프라 등의 연계 및 협력 개발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

-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를 통해 광역연합형 관광지원 조직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규약제정, 지방의회 의결, 조직 설립 신청 및 승인 등의 과정을 통해 설립
- 광역연합형 관광지원 조직은 전통적(행정권+관광자원 중심) 방식, 기능적(접근성+수요동선 중심) 방식, 전략적(비즈니스+정책 협력) 방식 등 유형화하여 추진

(2) 관광거점 연계와 지역관광 효과 확산

(가) 다층적 구조 및 연계를 고려한 지역관광 육성계획 수립

- 뭉치고 연결하기 전략(Compact-Network)에 따라 광역연합관광권-광역권-소권-도시-지구-지점 등 공간층위별 지역관광 육성계획(그랜드 플랜) 수립
- 광역연합관광권과 관광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관광개발의 전환적 계기를 마련하고, 관광자원, 시설, 인프라 및 공간의 통합을 위한 핵심적인 지역관광 육성계획으로서 우리나라 전 국토를 미래 거대(巨大)관광 자원으로 육성하는 계획
- 지방관광거점 구축 및 연계사업 간 상생 발전을 유도하여 경쟁 기조에서 협력 기조로 미래 지역 관광개발 방향을 전환하는 육성계획 수립
- 광역권 관광개발의 공간적 범위를 뭉치고(compact), 관광거점도시 효과를 관광중추도시로 연결하여 확산하며,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관광명소로 연결(Network)하여 기존 관광개발 체계의 계승 발전 유도

(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관광거점 및 주변 지역 연계 강화

- 수도권, 제주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외래관광객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는 관광거점도시가 추진되었으며 관광기반시설과 다양한 콘텐츠를 조성하고 외래관광객의 관광편의시설을 확대
- 관광거점은 접근성이 우수하고 다양한 관광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하며 외래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는 국제적 수준의 관광지역으로 성장 발전 유도
- 관광거점을 통해 지방 관광도시 역량을 강화하고 관광객들이 주변 지역으로 이동 확산할 수 있도록 접근성 및 교통 체계를 확충·다변화

(다) 지역특화형 강소형 유망관광도시 육성

- 근거리 여행, 라이프스타일 여행, 생활관광 및 경험소비 등의 트렌드는 관광객의 개성을 중시하고, 전통적인 관광지보다는 광범위한 관광자원 권역과 번잡하지 않은 중소 도시에 대한 여행 선호 경향 확대
- 대중교통을 포함한 관광교통, 숙박 및 안내정보 체계 등 도시관광의 중요한 기반 시설을 갖춘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한 유망 관광도시 육성
- 관광객이 스스로 관광지를 발굴할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관광객이 발굴한 관광지와 도시 인프라 및 도심 문화관광 시설을 연계하여 수요체감형 관광콘텐츠로 활용

○ 강소형 유망관광도시 육성은 관광객과 지자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차세대 관광도시 모델로서 도시 인프라와 관광자원을 관광객의 요구에 따라 조성하기보다는 이용하는 새로운 관광개발 정책 모델로 활용

- 원도심의 역사·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노후된 관광지 재생, 유휴자원 활용 대안으로 수요체감형 관광콘텐츠 접목 및 마이크로데이터 기반 개인별 관광정보와 코스를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관광서비스 확대

○ 유망관광도시 육성은 지방소멸, 인구감소 등 도시 여건 변화 및 관광개발의 결합형 정책으로 관광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용이하고,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색깔을 지닌 특화 관광거점도시로 성장

(3) 남북·국제 관광 협력 확대

(가) 남북관광 재개에 대비한 남북관광 연계 모델 마련

○ 남북 교류의 상징인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바탕으로 남북한 공동으로 남북 자연 및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공동 관광개발을 추진하며, 남북 간 항공, 철도, 도로 등을 관광교통로로 활용

○ 신북방정책을 통해 북방 국가와의 협력에 집중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정치적 영향이 적은 관광개발을 통해 경제·산업적 협력을 북한으로 확장

○ 북한 경제개발구에 관광부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대북제재 완화 등 국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자본 유치를 통한 관광개발 추진

- 환동해권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유도하고,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동해와 산악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자원 등 경쟁력 높은 관광자원을 공동 개발하며,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환동해 크루즈 추진
- 환황해권은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로서 수도권과 개성공단, 평양 등을 잇는 서해안 경협벨트 및 양덕온천문화휴양지와 연계하여 경제적·산업적 평화관광 기반 조성
- 중국·러시아 등과 인접한 국경지역은 두만강 국제관광특구 공동개발 추진 등 초국경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남북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과 연계 개발 추진

(나) 한·중·일 공동 관광권 협력체계 구축

○ 한·중·일 3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고, 상호 관광객 방문 비중이 높으며 역사, 생활, 언어 등 문화적 유사성에 비추어 공동관광권 형성이 수월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크루즈, 철도 등 접근성 개선·확충

○ 동북아 지역이 국제적인 관광목적지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의체인 동북아 열린관광 정부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공동관광권 내 주요 관광도시를 선정하여 상호 연계하는 관광생태계 조성, 디지털 기반 공동관광정보 플랫폼 구축

○ 국가 간 공통 관심사인 자연유산, 문화유산(유네스코) 등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연계 관광상품을 기획하고, 온라인 기반의 관광정보플랫폼을 공용으로 운영하는 등 협력 체계의 실체적 관광자원화를 추진

(4) 관광영역 확장에 따른 범부처 관광개발 추진

(가) 아웃도어 스포츠관광 육성

○ 항공, 해양 및 육상 등 다양한 공간에서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과 숙련도를 고려하여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관광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체험 및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저변 확대

○ 시설, 지원 서비스 등이 집적화된 레저스포츠관광단지를 조성하여 레저스포츠의 교육, 체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광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적인 레저스포츠관광 향유 유도 및 기반 마련

○ 소관 부처별로 분리되어 있는 레저스포츠 관련 정책을 통합 운영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대표 레저스포츠관광을 선별 육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중앙정부는 역량 강화 및 프로그램 기획 등 지원

○ 달리기·트레일러닝·자전거·걷기·등산·서핑·패들스포츠·클라이밍 등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형 관광수요가 급성장하고 있어, 치유·휴식 중심의 웰니스 관광과 차별화되는 액티브 관광에 대한 수요증대 및 대응 필요

- 국민생활체육조사에서 조깅·달리기 참여율은 2024년 4.8%에서 2025년 7.7%로 급증하여 전체 생활체육 종목 중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를 기록(문화체육관광부, 2026)
- 러닝크루 등 커뮤니티 기반 참여가 확산되어 대회의 성격도 기록 경쟁에서 벚꽃·야경·음악 등을 결합한 경험 소비형 이벤트로 변화하고, 가족·크루 단위 참가로 동반 체류·소비 규모가 확대

- 경주 벚꽃마라톤에 2만 명 이상이 몰리는 등 대회 참가를 목적으로 한 원정형 여행(런케이션)이 지역 숙박·소비로 직결되는 한편, 사이판 마라톤 참가자의 약 35%가 한국인일 정도로 해외 원정 수요도 확대→ 국내 수용 기반을 갖추지 못하면 활동형 관광수요의 해외 유출 지속
- UN Tourism은 스포츠관광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관광 분야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며, 참가형 스포츠 여행은 개최 시기 조정이 자유로워 비수기·평일 수요 창출과 재방문 유도에 유리한 구조 보유

○ 국내에는 이미 전국 단위 활동 인프라가 상당 수준 구축되어 있어, 신규 시설 투자보다 기존 자원의 연계·서비스화가 관건

- 코리아둘레길(해파랑길·남파랑길·서해랑길·DMZ 평화의길, 총 약 4,500km)이 전 구간 연결되었고 국토종주 자전거길 인증제가 정착되는 등 걷기·자전거 기반은 완비 단계이나, 숙박·짐 운송·장비·의료 등 체류 지원 서비스와의 결합은 미흡
- 대회·코스·시설이 체육정책과 관광정책으로 분절 관리되어, 참가자를 체류·소비로 연결하는 상품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 주요 사업(안)

- (액티브 관광루트) 지역별 자연환경과 생활스포츠를 결합한 국가·광역 단위 액티브 관광루트(러닝·라이딩·트레일 코스)를 지정하고, 코리아둘레길·자전거길·숲길 등 기존 노선과 연계한 코스 인증·안전 기준을 마련
- (액티브 관광 베이스) 샤워실·탈의실·물품보관·장비 대여/수리·짐 운송·휴식/의료 기능을 갖춘 액티브 관광 베이스를 거점별 조성하되, 기존 체육시설·폐교·유휴 공공시설의 재생 활용을 우선
- (대회 연계 체류상품) 달리기·자전거·트레일 대회 참가와 지역 숙박·미식·관광을 묶은 체류형 상품(런케이션 등)을 개발하고, 대회 개최 시기를 비수기·평일로 분산 배치하여 지역 관광 비수기 보완

※ 대회 전야제-지역 투어, 완주자 대상 지역 할인, 동반자 프로그램 등 참가자와 동반자의 체류를 함께 설계

- (포용적 참여 기반) 초보자·고령자·가족·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는 난이도별 코스와 안전인증 체계를 갖추어 참여 저변을 확대(무장애 관광 연계)하고, 안전사고·부상 대응을 위한 코스별 응급체계 구축
- (국제 참가형 이벤트 유치) 국제 마라톤·트레일·그란폰도 등 참가형 대회의 지역 유치를 지원하여 인바운드 스포츠관광 수요 창출

- (성과관리 재설계) 성과관리는 대회 개최 건수가 아니라 재방문율, 비수기 숙박, 지역 사업자 매출을 기준으로 설계하고, 체육정책(대회·시설)과 관광정책(체류·소비·상품)의 역할 분담을 명확화

ㅇ단계별 추진방향

- (단기) 액티브 관광루트 시범 지정 및 코스 정보·안전 통합 안내체계 구축, 대회 연계 체류상품 시범 운영
- (중기) 유휴시설 재생형 액티브 관광 베이스 확산, 광역 단위 루트 네트워크화, 국제 참가형 대회의 지역 유치 지원
- (장기) 사계절·전국 단위 액티브 관광 목적지 브랜드 확립, 스포츠관광 통계·성과지표 체계 정착

(나) 크루즈 및 섬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ㅇ섬 지역은 국토 유지에 필수적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정주 인구 확대 또는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관광객 등의 유동인구를 확대하거나 장기 체류 유도를 위하여 섬관광 활성화 추진

ㅇ섬은 천혜의 자연관광지로서 휴양, 치유 관광을 추구하는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자연관광지 선호 및 워케이션 관광지 선호 트렌드 확산으로 관광객 증가

ㅇ가족, 마니아, MZ 세대 등 특정계층과 세대별 특화 상품을 개발하여 섬 관광 수요를 확대하고 섬 고유성을 살릴 수 있는 특화 관광브랜드 구축

ㅇ부처 간 협력을 통해 해상 교통수단 다각화, 스마트화를 통한 예약 및 환승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물리적·심리적 거리감을 최소화하고 체류관광 및 연계관광 기반 확충 지원

ㅇ탄소 없는 섬(Carbon Free Island) 등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관광부문의 역할을 설정하고 섬 고유 경관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경관 및 환경 가이드라인 마련

(다) 지역 SOC 연계형 관광자원 조성

ㅇ지역주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및 공간인 생활SOC 자원을 로컬라이프의 일상 체험과 다양한 관광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광매력 및 편의 기능 강화

ㅇ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SOC 시설을 활용하여 생활SOC 관광복합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생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생활 유휴자원을 관광시설로 활용 확대

ㅇ생활SOC의 관광 활용 유형을 관광매력 강화형, 관광기능 추가형, 관광 정책 연계형 등으로 구분하여 비관광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전환

- 관광매력 강화형 생활SOC는 어린이과학관, 박물관, E스포츠 상설경기장, 가상현실 체험관 등, 관광기능 추가형 생활SOC는 생활문화센터, 로컬푸드 복합센터, 국민체육센터 등, 관광정책 연계형은 일반농산어촌, 어촌뉴딜300 등 포함

ㅇ생활SOC의 관광자원화 추진체계는 5단계로 ① 생활SOC 관광자원 시범사업추진(선도모델 개발), ② 생활SOC 관광을 위한 공간조성(관광 매력성 확보), ③ 지속가능한 운영·유지를 위한 재원확보(추진 재원 마련), ④ 생활SOC 관광자원 관리·운영 체계화(지속가능한 관리), ⑤ 생활SOC 관광자원화를 위한 제도화(추진시스템 구축) 순으로 추진

(라) 범부처 지역관광 융합개발사업 추진

ㅇ산림, 해양, 환경 등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부처마다 다른 정책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기획 추진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을 통합하여 범부처 지역관광융합개발사업 추진

ㅇ부처 간 융합관광개발 사업을 발굴하고, 순차적으로 관광개발 공모 사업을 통합·추진하여 지역수요에 따른 관광개발 및 관광자원화 유도

- 부처별 공모로 추진되는 관광개발사업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통합공모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부처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관광자원 개발 효과 극대화

바. 관광개발 제도·관리체계 혁신

정책 방향
ㅇ관광자원 개발, 이용, 보호, 관리의 균형적 추진 ㅇ관광개발 정책효과 제고 ㅇ관광자원 관리 최적화
계획 지침
ㅇ효율적인 관광자원개발 법·제도 정비 - 관광개발기본계획은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국가단위 장기 종합계획으로, 중앙정부는 관광개발기본계획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조화와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 및 지역 관광개발의 기준이 되는 법정계획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한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등 관광개발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관광 육성을 위한 법률 정비, 재원 확충, 지역관광 추진 조직 설립, 정책역량 강화 등을 포함하는 지역관광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개발 전주기에 걸친 관광개발 표준지침을 개발 및 보급하고 표준지침에 따라 관광자원 개발 및 관리가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 정부는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등의 제도를 환경변화에 맞춰 개선하고 다양한 관광개발 수단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계획 지침
◦ 전(全) 주기 관광자원 관리체계 구축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관광수요와 공급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축적하고, 관광수요의 요구와 관광자원의 가치를 통합하는 과학적인 전주기 관광자원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개발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관광자원의 개발·이용·보호·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광개발계획의 평가와 환류를 강화한다. - 정부는 부처별 관광개발사업의 통합관리를 위한 부처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관광자원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고도화한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관광개발계획을 실행함에 있어 관광개발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전략추진 방향과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진단한다.

[전략 6] 관광개발 제도·관리체계 혁신

추진 과제	세부 과제
1 관광개발 법·제도 체계 정비	◦ 관광개발기본계획 위상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지역관광진흥법 제정 ◦ 관광특구 제도 내실화 및 관광 거점 기능 강화
2 관광개발 성과 관리를 위한 정책 지원 확대	◦ 관광개발 표준지침 및 가이드라인 고도화 ◦ 관광개발 단계별·맞춤형 컨설팅 강화 ◦ 관광개발 관련 계획의 연계 모니터링 추진
3 데이터 기반의 관광개발 통합 관리	◦ 과학적 분석 기반 관광개발 성과관리·성과체계 고도화 ◦ 지역관광 데이터·통계의 생산 및 관리방안 마련 ◦ TDSS 기반 관광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1) 관광개발 법·제도 체계 정비

(가) 관광개발기본계획 위상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관광 관련 주요 법률인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을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분법을 통한 관광법제 개편 추진

◦ 「관광기본법」을 개편하여 기존 기본법의 내용과 더불어 국제관광, 국민관광, 지역관광 및 관광산업의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

◦ 「관광진흥법」은 법률 취지와 체계에 맞도록 '(가칭) 관광사업법, (가칭) 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가칭) 관광숙박업 등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으로 분야별 기능별로 분법 추진

- ‘(가칭) 관광사업법’은 현행 「관광진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광업종 체계의 개편 및 행정절차를 규율하는 내용 중심으로 개편
- ‘(가칭) 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관광(단)지의 지정 및 조성절차를 체계화하고 관광지등 이외의 다양한 관광개발 수단을 포함하여 체계적·효율적인 개발체계로 개편
- ‘(가칭) 관광숙박업 등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숙박업관련 행정절차와 규제 또는 진흥에 관한 조항을 통합하여 개편

(나)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지역관광진흥법 제정

○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지방 이양됨으로써 관광개발 주체인 지자체 중심의 지역관광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어 계획수립, 예산편성, 자원 개발, 정책 집행, 운영관리, 평가 등 지역 단위의 관광정책·제도에 대한 전반적 정비 추진

○ ‘(가칭)지역관광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의 확충, 기금 조성, 인력 양성, 조직 설립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에 미치는 관광영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광수용태세, 관광자원개발, 융·복합 관광콘텐츠 개발 지원 등의 내용 포함

○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진흥에 관한 조항을 다루고 있지만, 지역관광 진흥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 단위에서 특성화된 관광개발 활성화로 시·군 및 광역 단위의 관광개발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로써 ‘(가칭)지역관광진흥법’ 제정

- 지역문화정책은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으로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
- ‘(가칭)지역관광진흥법’을 제정하여 지역관광을 전담할 지역관광조직을 설치하여 지역관광 관련 개발계획 및 정책사업의 제도화 등 추진역량 강화

(다) 관광특구 제도 내실화 및 관광거점 기능 강화

○ 2019년 정부 주관 관광특구평가가 신설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년마다 특구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광특구 평가를 통해 우수 관광특구 인센티브 지원, 지정요건 미충족 및 추진실적이 미흡한 특구에 대한 조치 방안 추진 중

○ 지역중심의 종합지원형 사업 전환을 위해 각각의 특구가 보유한 자원, 인적특성, 사업체, 시설인프라 등 체계적인 관리 운영 방안을 찾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관광 거점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 전략 수립

○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관광 활동 중심지역으로 차별적인 특화 전략을 통해 지역관광 활동과 지역관광상권의 중심거점 역할 수행

○ 관광특구진흥계획에 대한 체계적 분석.평가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관광특구 운영 컨설팅 및 사업개선 지원으로 특구 운영 내실화 도모

○ 글로벌 관광특구 추진을 위하여 2026년 공모를 통해 2개 관광특구(경주, 해운대)를 선정하고 국비 지원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2) 관광개발 성과 관리를 위한 정책 지원 확대

(가) 관광개발 표준지침 및 가이드라인 고도화

○ 정부의 관광개발 사무가 지방 이양되면서 지역관광개발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담당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 개발 및 관리를 위한 표준지침 개발 및 보급

○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유형의 관광자원 개발 및 관리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광자원 발굴, 재생, 융·복합 등 새로운 관광개발 추진 방식을 활용한 관광개발이 가능하도록 유형별 분야별 가이드라인 마련

○ 시설조성 중심, 공영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관광객의 요구를 반영하여 해당 지자체의 관광자원 가치를 극대화하며, 관광자원 생애주기에 맞춰 기획, 개발, 운영, 평가, 환류 등 관광개발 전 과정에서 사업 추진 내실화 유도

○ 관광개발은 건축, 조경, 도시뿐만 아니라 법·제도적 내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 관련 지식 및 정보 제공 차원의 종합적인 관광개발 표준 지침 개발 및 보급

(나) 관광개발 단계별·맞춤형 컨설팅 강화

○ 지역 관광개발의 기획, 개발, 운영, 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량 제고가 필요하고, 단위사업 중심의 점적인 일회성 관광개발에서 벗어나 도시단위의 선, 면적 관광개발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

○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춰 지역관광 정책의 경험을 축적하고 관광개발 추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관광 전반의 진단과 처방을 포함하는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역관광 발전모델 정착

- 미래 관광트렌드를 반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관광수요의 요구와 지역 관광자원의 가치의 접점을 찾아 고품격 관광자산 개발

- 타 부처 관광개발 정책 연계, 민간 참여 확대, 지속적 성과관리, 조성과 운영의 통합 관리 등 관광개발 전 과정에서 전문성을 제고하여 지역관광의 질적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실용적인 컨설팅 제공

(다) 관광개발 관련 계획의 연계 모니터링 추진

○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하고,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내용적 범위로 하는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관광개발계획을 대상으로 관광개발기본계획의 관광개발 방향과 지침에 준하여 일관성과 정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연계 모니터링 실시

- 정부부처와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다양한 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서 계획 간 일관성과 정합성이 미흡한 문제점 개선

○ 연계 모니터링 제도는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관광개발, 경쟁력 있는 관광환경 조성 및 환경친화적 관광개발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기여 여부와 관광개발 최상위 계획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상위 유관계획과 부합 여부 검토

○ 모니터링 제도의 도입과 실행을 위한 법 개정 절차를 이행하고, 사전 연구를 통해 제도 시행을 위한 추진 체계를 마련

○ 공공부문 관광자원 개발 및 관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권역별관광개발계획 및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관광개발계획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시행

- 모니터링 대상(안): 공공에서 수행하는 모든 관광개발 계획을 포함
- 모니터링 기준(안): 관광개발기본계획의 계획지침을 기준으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관광자원의 지속가능성, 친환경적 관광개발, 관광자원의 현명한 이용, 균형적이고 합리적 관광개발, 관광수요의 적정성, 경제적 파급효과의 타당성 등
- 모니터링 절차(안): ① 요청서 작성계획 수립(문체부)▶ ② 세부 평가기준 및 모니터링 방법 선정·통보(문체부)▶ ③ 자체 모니터링 실시(공공기관의 장 및 계획수립권자) ▶ ④ 요청서 작성 및 모니터링 요청(계획수립권자 → 문체부) ▶ ⑤ 관광계획 사전 정합성 평가 실시(문체부·전담기관) ▶ ⑥ 전문가 평가단 심의(문체부·전담기관)▶ ⑦ 모니터링 결과 통보 및 반영(문체부·계획수립권자)

(3) 데이터 기반 과학적 관광개발 통합 관리

(가) 과학적 분석 기반 관광개발 성과관리·성과체계 고도화

○ 지역관광발전지수를 중심으로 지역관광 진단체계를 고도화하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지역관광발전 수준의 진단과 지자체 자체적인 처방이 가능하도록 자료입력, 동향 분석, 진단 등의 과정을 체계화

○ 지역관광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격년 주기로 실시하는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 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5년 단위로 개발된 표준모델과 지표체계를 재검토하여 기준연도와 가중치 등을 조정해 지역관광발전지수의 효과성과 시의성 제고

○ 축적된 데이터 및 분석 자료를 활용한 동향분석 기능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관광 진단지표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예비지표 체계 도입

○ 중장기적으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 특화된 맞춤형 지역관광 진단지표 개발, 지역관광산업 지표 연계 등의 방식을 포함하여 고도화

(나) 지역관광 데이터·통계의 생산 및 관리 방안 마련

○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관성 있는 통계의 생산이 전제되어야 하며, 통계 생산 조직의 체계적인 제도적 관리에 기반하기 위해 통계관리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지역관광통계 생산 및 관리방안 고도화

○ 관광부문 주요 국가승인통계는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 관광사업체조사, 국민여행조사, 외래관광객조사 등이고, 지역관광 방문객의 정의 및 집계방식을 명시하고 있는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는 관광자원 영역이 확장되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관광지점을 확대하고, 관광지점별 통계 생산 및 관리 체계화

○ 지자체 단위의 지역관광정책 수립 및 관광진흥, 성과평가의 기초 인프라로써 지역의 관광수요와 관광자원 및 사업체 현황을 정확하고 시의성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선진 통계기법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단위 관광통계 생산방안 마련

○ 지자체 단위 통계 생산은 지자체 데이터기반 시책과 연동하여 협업하고, 주요 관광자원과 사업체 현황을 포함하는 지역관광통계 생산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며, 생산되는 지역관광통계 자료를 지자체 스스로 진단

(다) TDSS 기반 관광자원 통합 관리시스템 고도화

○ 관광자원개발통합정보시스템(TDSS)의 방대한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형태로 제공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관광개발 의사결정을 위한 최적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전환

○ 국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관광자원 개발 관리 전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시스템 자체적으로 분석한 고품질의 정보를 생산하며 제도, 예산 등과 연계한 실질적인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고도화

◦ 지자체 스스로 지역관광발전 수준을 자가 진단하는 지역관광발전지수 시스템과 관광개발사업의 추진과 성과를 관리하는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시스템을 통합하고,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스템 활용도 제고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1) 국가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리플렛

(그림 9.1.2-3) 국가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TDSS) 고도화

◦ 지자체 관점에서 관광개발은 동일한 자원과 공간에 다양한 부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로 인해 나타나는 중복 투자, 비효율적 투자 등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부처 간 협업 및 전략적 정책 운영 체계 구축

◦ 지역 발전 수단으로 관광개발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기획-계획-개발-운영 등 전주기적 지역관광 협업체계를 마련하여 다부처 공동 기획 사업을 우선적으로 기획 및 예산을 편성하며, 국가 R&D 사업으로 투자 확대

◦ 지역관광 협업체계는 부처별 관광개발 사업의 점검, 다부처 공동 기획 제안에서부터 사업 선정,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한 부처 간 역할 분담과 이견 조정 등 기능 담당

9.1.3 관광권역 기본 구상

가. 기존 관광권역 검토 및 권역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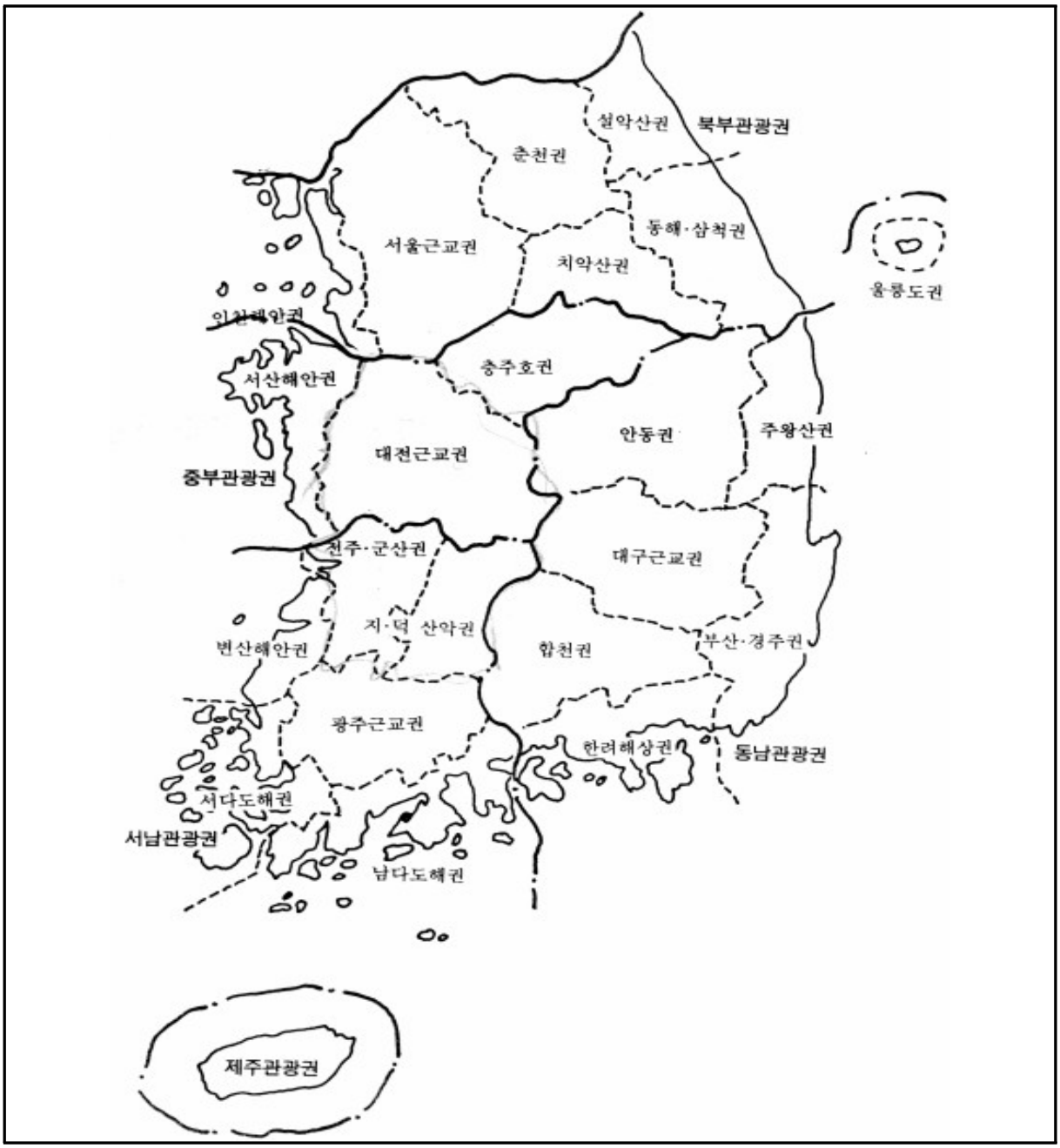
(1) 기존 계획권역설정의 검토

(가) 제1차 관광개발기본계획(1992~2001) : 5대권 24개 소권

1) 교통망 확충과 관련하여 이용객 이동변화에 대응하는 권역 설정

◦ 제1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의 관광권역은 지역의 자원과 행정구역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지역관광수요의 충족, 자원 중심의 권역 설정이라는 방향성 아래 권역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5대권 24개 소권 설정

◦ 5대권 24개 소권 관광권은 실제 사업집행권역과 일치하지 않아 기본계획과 권역계획의 기능적 연계 및 일관성 부족, 권역계획의 실천성 미흡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정책 집행의 비효율성, 도시권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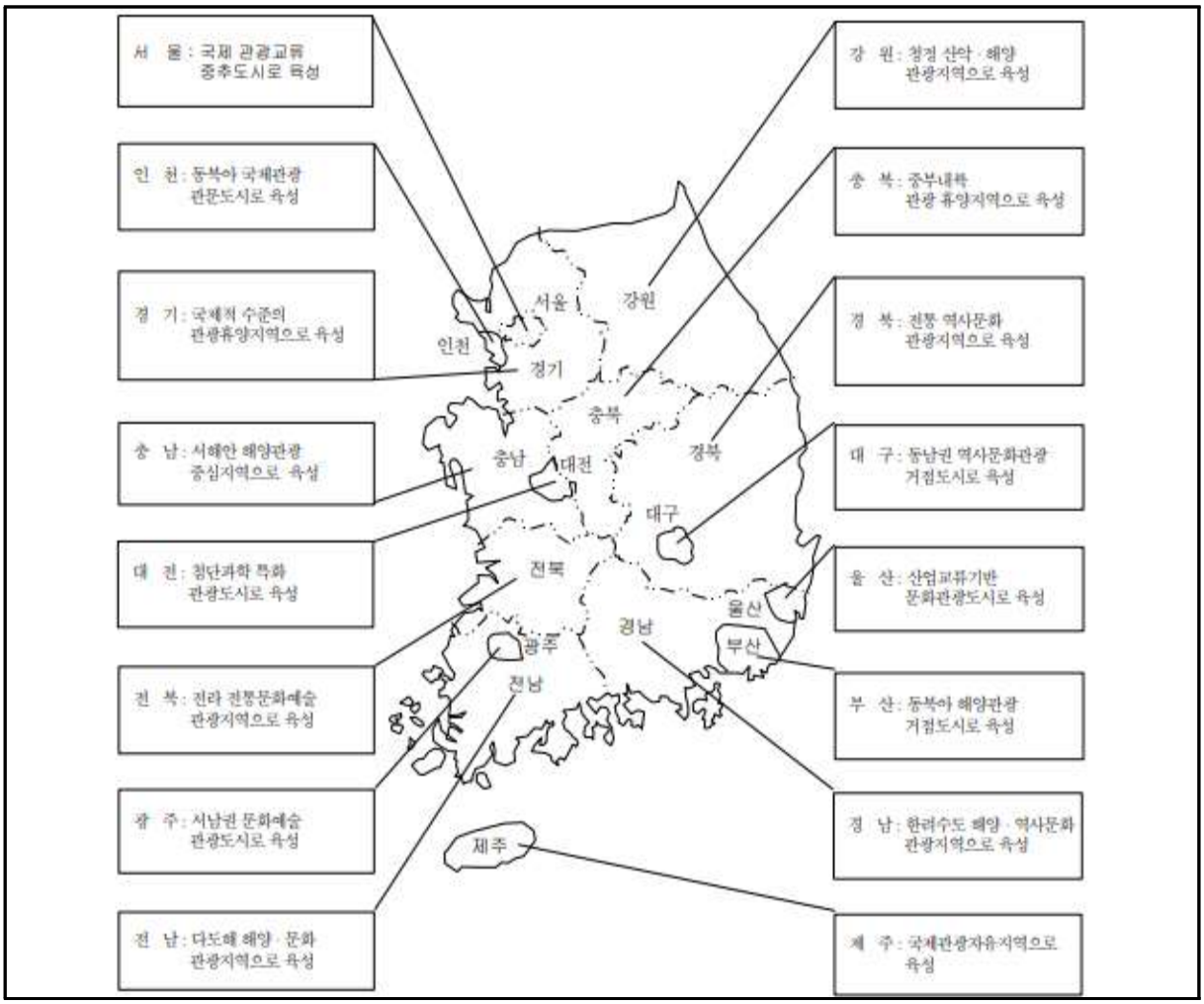


(그림 9.1.3-1) 1차 관광개발기본계획 5대권 24소권

(나)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02~2011) : 16개 시·도 권역

1) 행정권 중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한 권역 설정

-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의 관광권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 행정권(집행주체) 중심으로 16개 시·도 권역 설정
- 16개 시·도 권역설정으로 행정적 집행력은 강화되었으나, 행정 단위를 넘어서 나타나는 자원개발 추진에 대한 한계가 나타났으며, 특히 인접 지역의 유사사업과 중복 투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체계적 관리의 어려움 제기



(그림 9.1.3-2) 2차 관광개발기본계획 16개 시·도 관광권역별 개발방향

(다)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 : 7대 광역관광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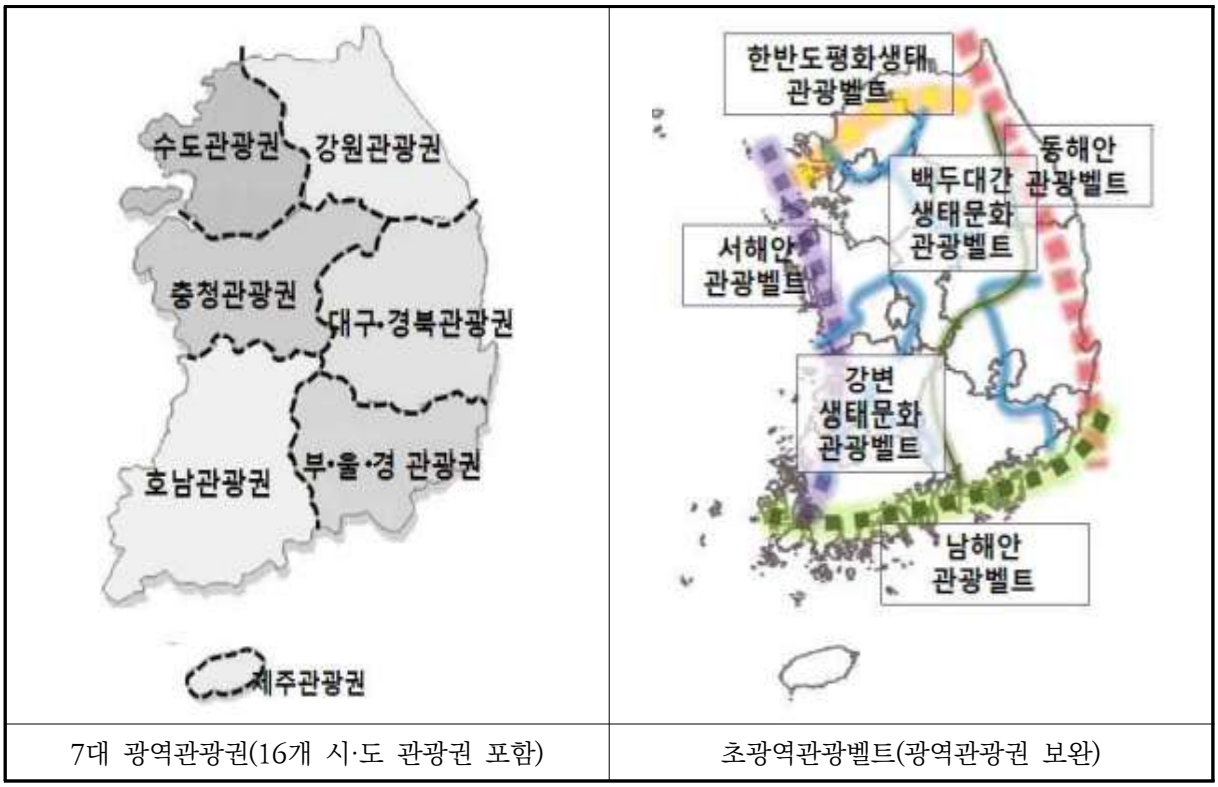
1) 권역계획의 수립단위 존치 및 5+2 광역경제권 체계를 광역관광권으로 수용

○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의 관광권역은 기존의 국토계획 및 관련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16개 시·도, 광역경제권, 초광역 개발권 등 변화하는 행정 위계를 반영한 '다층적 지역 관광발전 전략'을 도입

- 이에 16개 시·도 관광권역설정과 더불어 5+2 광역경제권을 관광권역으로 수용하여 7대 광역관광권으로 설정하였으며,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관광벨트사업을 중심으로 초광역 관광벨트권을 설정하여 관광권역을 기능적으로 연계·보완

○ 행정적 집행력은 강화되었으나 5+2 광역경제권을 반영한 7대 광역관광권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가 미약하여 상위계획에 포함된 일부 사업들만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인접 시·군 간의 연계·협력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은 여전히 미해결

○ 특히 관광객은 설정된 계획권역과 관계없이 이동하는 특성을 보이고, 출발지와 주요 목적지 간의 기확보된 교통체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수요지향적인 권역설정이 미흡하며, 2개 시·군, 광역도 간의 연계·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



7대 광역관광권(16개 시·도 관광권 포함)	초광역관광벨트(광역관광권 보완)

(그림 9.1.3-3) 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관광권역 구상

2) 7대 광역관광권('5+2 광역경제권' 지역관광부문 중심 검토)

○ 7대 광역관광권의 추진경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5+2 광역경제권'이 추진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검토 대상으로 하되, 5+2 광역경제권 추진경과와 관련된 지역관광부문 중심으로 검토

-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04) 이후, 국가균형발전법 제4조를 근거로 한 법정계획이며 국가균형발전·지역발전에 대한 비전·목표를 기반으로 현재까지 총 4차례의 계획 수립

○ 무엇보다 7대 광역관광권이 포함된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 수립기간에 해당되는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은 제1차, 제2차이며, 제4차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분석대상에 해당

- 지역발전 5개년의 계획명은 '제1차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이나 최초는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당시 수립된 제1차 균형발전5개년계획(2004~2008)이 있기에 국가 및 지역 균형 발전 관련하여 두 번째 수립된 계획

◦ 제1차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제외하고 제2차와 제4차에서의 지역관광부문은 대부분 계획 수립 이전에 추진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들을 반영. 이에 제1차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지역관광부문계획의 성과 분석

◦ 제1차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은 “5+2” 지역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발표(‘08.9월)한 이후 ‘08년 12월부터 ’09년 10월까지 중앙부처와 “5+2”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 중심으로 30대 선도 프로젝트와 부문별 계획 수립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 계획기간에 해당		
	제1차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제2차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제4차 균형발전 5개년 계획*
기간	2009~2013	2014~2018	2018~2022
비전 전략	지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삶의 질이 보장되는 공동체창조 *5+2 광역경제권 설정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지역 관광 부문	◦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조성사업(광역경제권 30대 프로젝트) ◦ 관광기반 선진화	◦ 지역 간 연계협력과 지역 관광거점 육성 ◦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특화관광 육성 ◦ 지역관광 혁신역량 제고	◦ 지역관광산업 육성 생태·자연환경 보전·활용

주) 제1차의 표현은 2009년 계획의 기반이 되는 법명의 변화(균형발전특별법→지역발전특별법)를 반영한 차수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두 번째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이며, 2018년에 균형발전특별법으로 다시 재개정됨으로써 제1차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포함하여 네 번째 수립됨에 따라 제4차 균형발전 5개년 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수립

(그림 9.1.3-4) 7대 광역관광권과 지역관광부문계획이 반영된 지역발전 5개년 계획

가) 광역경제권 30대 프로젝트(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조성사업)

◦ 5+2 광역경제권 추진을 통해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하였으며, 관광부문은 대경권 사업으로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 사업 포함

◦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은 연구용역 수립 후 국비 지원을 확보하였으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중

〈표 9.1.3-1〉 광역경제권 30대 프로젝트 내『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

구 분	주요 추진 경과	검토 결과
	○ 광역경제권 30대 프로젝트 중 '3대 문화권 사업'선정(2008.9) ○ 3대 문화권 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발주(2009.3) ○ 선도 사업 계획 확정 통보 및 2010년 예산 집행 (2010.12) ○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2010년~2021), * 대상: 2개 시·도, 24개 시·군 * 계획사업비 41,760억 원 (국비 19634.5억 원) * 추진사업: 50개	○ 연구용역 수립 후 국비 지원 확보 * 사업비: 21,086억 원 (국비12,340억 원)확보 ○ 현재까지 사업추진 중 * 사업 57개로 변경 추진

주)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단위 지역경제권을 창출하고 지방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기반시설

나) 계획별 지역관광 부문 추진 성과

○ 제1차 지역발전 5개년 계획(2009~2013)에서의 지역관광부문은 관광기반 선진화 부문에 4대강 관광활성화, 녹색·관광인프라 조성, 전시컨벤션시설 확충 제시

○ 4대강 관광활성화 부문은 강변문화관광개발계획, 한강관광자원화 종합계획 등으로 연구용역 수립 후 국비가 확보되어 사업 추진 중

〈표 9.1.3-2〉 제1차 지역발전 5개년 계획 내『지역관광부문: 관광기반 선진화』내용

구분		주요 추진 경과	검토 결과
지역발전 5개년 계획 (2009~2013) 「관광기반 선진화」	4대강 관광 활성화	○ 강변 문화관광개발 계획 (연구용역 : 2010년, 사업기간 : 2010~2016년) ○ 한강 관광자원화 종합계획 (연구용역 : 2015년, 사업기간 : 2016~2018년(잠정중단), 2018.10~현재)	연구용역 수립 후 국비 확보 및 사업추진
	생태·녹색 관광 인프라 조성	○ 문화생태 탐방로 지정 및 지원(2009~2013, 해파랑길 포함 48개 길) →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세부사업 내 "걷기여행길 관리 및 활성화" 내역사업으로 편성 운용 ○ 걷기여행길 관리 및 이용활성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13.10.8)	생태·녹색관광 인프라는 탐방로 조성사업으로 반영된 것으로 진단
	전시 컨벤션 시설 확충	○ 알펜시아 컨벤션 센터 개관(2010년), 고양 KINTEX, 대구 EXCO 확장공사(2011년), 부산 BEXCO 확장공사(2012년),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2센터 개관(2013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GSCO) 개관(2014년),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개관(2015년)	시설 개관, 확장공사 등 추진

(라)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22~2031) : 5대(1^3+4) 광역연합관광권

1) 관광권역은 5개(1^3+4) 광역연합관광권이며, 공간단위별 정책수요를 반영

- ㅇ수요와 공급의 통합적 관점에서 1핵(수도권)에서 대도시권 중심의 다핵(①서울 ② 대전 · 세종, ③대구, ④광주 ⑤울산 · 부산)이 관광객 송출시장의 기반이 되는 배후시장의 핵심이라 보고 인접 중소도시권으로의 관광객 이동수요를 포함할 수 있도록 5개의 관광대권 설정
  - 1^3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4는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라권(광주, 전북, 전남), 대경권(대구, 경북), 부울경권(부산, 울산, 경남)으로 구성
- ㅇ장점은 인접권역 이외의 공간범위를 포함하여 비물리적 거버넌스 확장 및 관광권역별 주요 배후시장(대도시)을 기반으로 지역 간 연계사업의 발굴이 가능하고, 관광객 이동수요 반영 및 통합적 관리 가능
- ㅇ배후시장 기반은 지역 간 연계사업의 체계적 발굴이 가능하고, 관광객의 이동 수요와 다양한 공간 단위별 정책 수요 반영 등 맞춤형 발전전략 수립 가능
- ㅇ단점은 시·도 통합형과 비교하여 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상호간 이해 부족, 광의의 관광권역 범위에 대한 국민 인식의 부족, 권역 범위 확대에 대한 관광수요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지 미지수

〈표 9.1.3-3〉 5대 광역연합관광권 특징

구분	주요 내용	공간 구조
장점	ㅇ인접권역 이외의 공간범위를 포함하여 비물리적 거버넌스 확장 가능 ㅇ관광권역별 주요 배후시장(대도시)을 기반으로 지역 간 연계사업 발굴 가능 ㅇ관광객 이동수요 반영 및 통합적 관리 가능	
단점	ㅇ시·도 통합형보다 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상호간 이해 부족 ㅇ시·도 통합형보다 광의의 관광권역 범위에 대한 국민 인식 부족 ㅇ시·도 통합형보다 권역범위 확대에 따른 관광수요 창출 기여 미지수(현재 관광총량 정체) 장기 경유형 시장 미형성	

2) [설정 방향] 다핵구조의 중층적 권역 설정

○ 제4차 기본계획의 관광권역은 다핵구조의 중층적 관광권역으로 앞서 제시한 설정 원칙을 기반으로 관광이동량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관광자원 등의 공급계획, 장래 교통계획분석, 관련 상위 계획 등의 다양한 공간단위의 레이어 분석을 통해 5개(1^3+4)의 광역연합관광권과 더불어 16개 시·도 권역으로 설정

○ 제4차 기본계획의 관광권역은 기존의 16개 시·도 공간단위 중심의 16개 시·도 관광권역, 그리고 5개의 광역시·도 간 연계 단위를 반영한 광역연합관광권, 초광역 간 공간 단위를 포함하여 다양한 공간 단위를 포괄하도록 다핵구조 중심의 중층적 관광권역

- 특히 광역연합관광권은 광역시·도 간 연계 단위의 공간단위에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자립발전과 지속가능한 관광서비스 제공에 비중을 두었다는 점이 특징

가) 수도.강원.제주권

○ 수도·강원·제주권은 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강원·제주지역을 포함한 권역이며, 기본방향은 글로벌 K관광 선도 지대

- 수도권은 글로벌 관광허브, 한류중심지역, 강원권은 세계인이 다시 찾는 생태·웰빙·휴양지역, 제주권은 미래지향적인 청정 자연유산관광 중심지역

○ 복·융합 국제관광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평화생태관광벨트화를 통한 신경제구상을 선도하고, 국제관문관광지역으로의 역할을 수행하며, 건강휴양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국민관광공간의 제공과 청정 환경생태관광지역으로서의 환경브랜드 가치 제고

나) 충청권

○ 충청권은 대전·세종 도시권을 중심으로 충북·충남지역을 포함한 권역이며, 기본방향은 과학기술 기반의 유교.중원문화 관광지대 육성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강점을 활용하여 전국 관광집객 중심거점으로 조성하고 백제의 역사와 동서양의 문화에 첨단기술 접목을 통한 디지로그 관광 활성화, 웰빙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합관광 거점으로 조성

다) 전라권

○ 전라권은 광주도시권을 중심으로 전북·전남지역을 포함한 권역이며, 기본방향은 다도해·새만금을 품은 문화예술관광지대로 육성

◦문화예술과 역사를 통한 콘텐츠 확대 및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한식, 한문화 등의 콘텐츠 육성지원을 통한 관광경쟁력 제고, 해안·섬·다도해 등 해양관광자원 및 새만금 해양관광권 등 서해안 관광허브로 조성

라) 대경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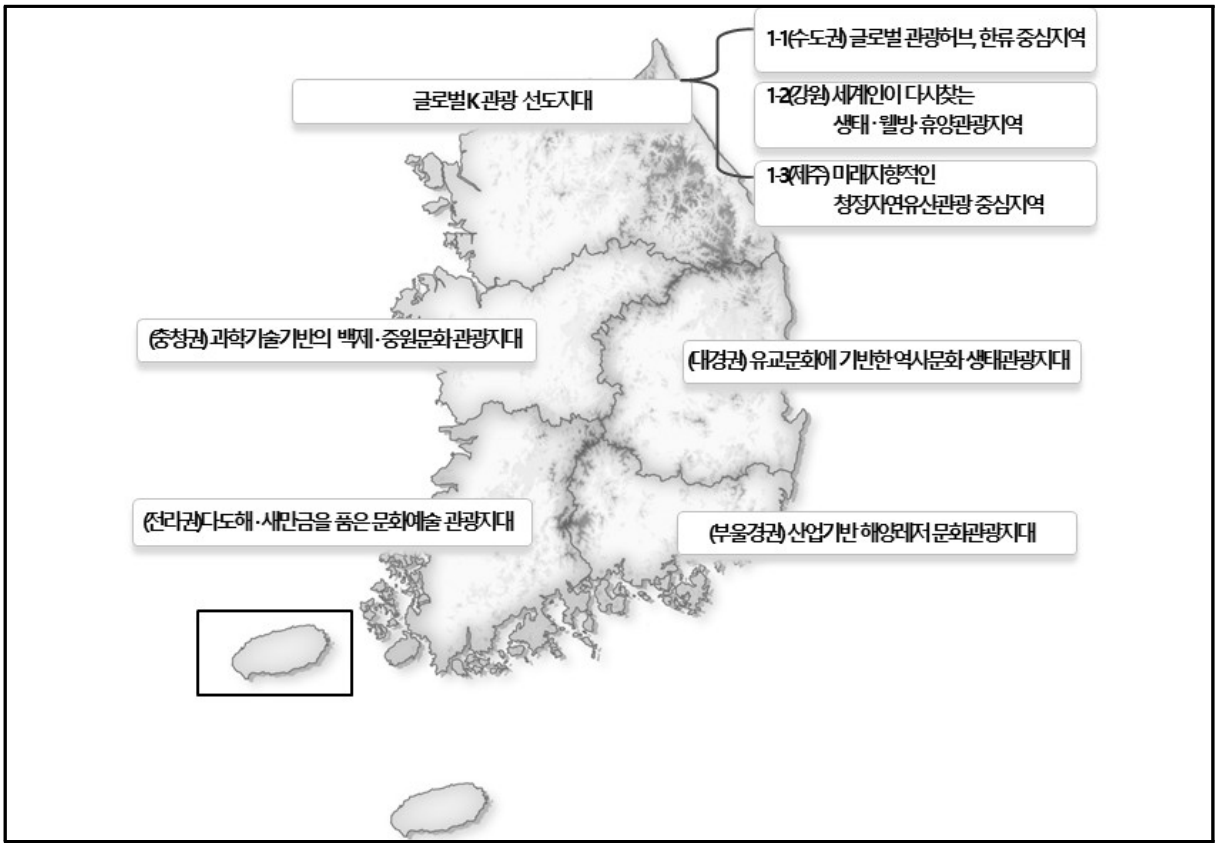
◦대경권은 대구 도시권을 중심으로 경북지역을 포함한 권역이며, 기본방향은 유교문화에 기반한 역사문화 · 생태관광지대 육성

◦유교문화에 기반한 역사문화자원 거점으로 조성하고, 백두대간 생태축, 동해안 해안축, 낙동강 문화권을 연계한 생태관광의 실현, 도심과 역사문화권을 잇는 체류형 생활관광 육성

마) 부 · 울 · 경권

◦부 · 울 · 경권은 부산·울산 도시권을 중심으로 경남지역이 포함된 권역이며, 기본방향은 산업기반 해양레저문화 관광지대

◦글로벌 해양레저 관광허브로 구축하고, 영화, 음악, 엔터테인먼트 기반의 산업관광 활성화로 관광 저변의 확대, 바다·산을 연계하는 웰니스 관광벨트 조성



(그림 9.1.3-5)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관광협력권별 개발 방향

(2) 관광권역 설정

(가) 기본 방향

○ 현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에 따른 국토공간구조를 관광권역 설정의 기본골격으로 반영하여, 국가 공간정책과 관광정책 간 정합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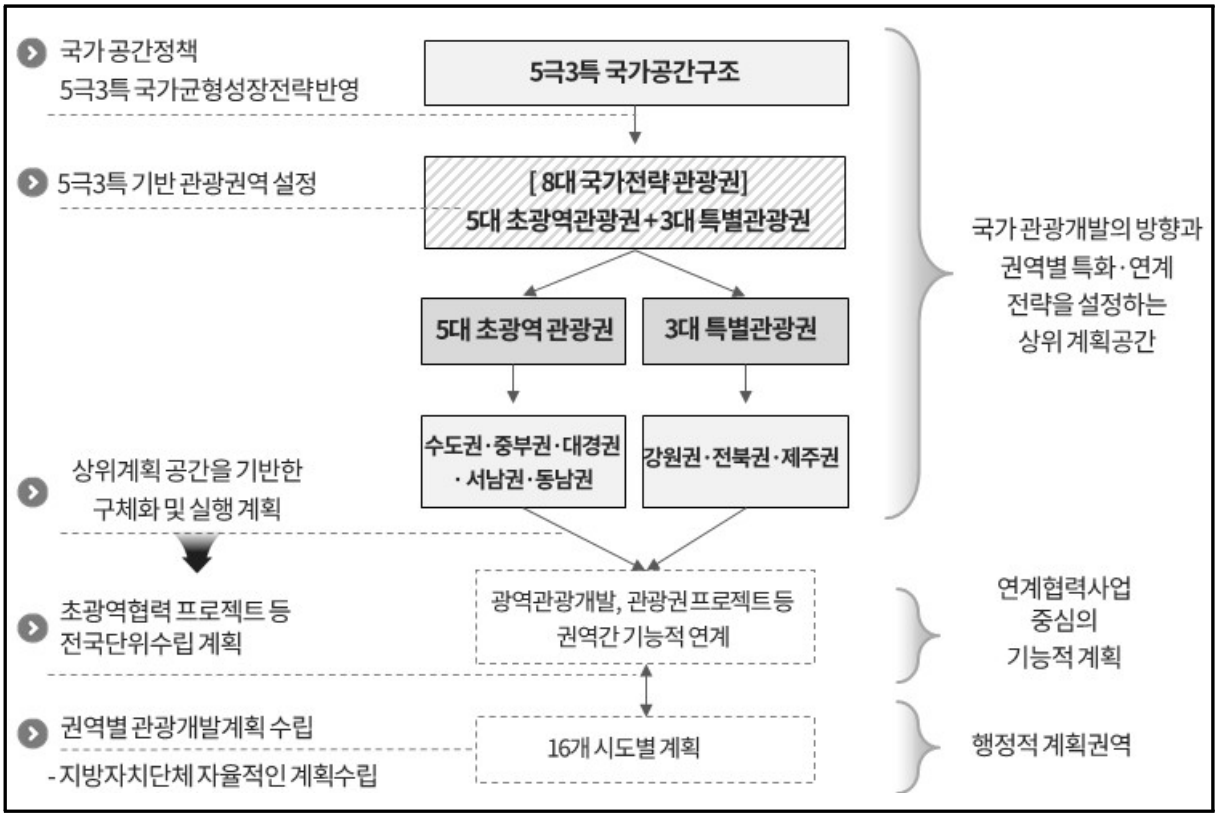
- 다핵 국토공간구조를 관광정책에 반영하여 권역별 관광거점과 연계도시를 연결하는 다극·다핵 관광공간구조로 전환

○ 5극3특 국토공간구조를 기반으로 5대 초광역관광권 수도권·중부권·대경권·동남권·서남권과 3특별관광권 강원권·전북권·제주권으로 구성된 '8대 국가전략 관광권' 설정

- 5극은 대도시와 광역교통망을 중심으로 권역별 관광거점을 육성하고 주변지역으로 관광수요를 확산하며, 3특은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특성과 고유 관광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발전 체계 구축

○ '8대 국가전략 관광권'을 중심으로 권역별 관광거점과 주변지역을 연결하고, 관광자원·산업·교통망의 연계를 강화하여 권역 단위의 관광경쟁력과 정책 실행력 제고

- 권역별 관광자원을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거점에 집중된 관광수요와 성과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균형성장 구조 구축



(그림 9.1.3-6) 5극3특 기반 관광개발 공간체계(안)

(나) 국가전략 관광권의 개념 및 설정기준

1) 국가전략 관광권의 개념

○ 국가전략 관광권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관광객의 이동·소비행태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 관광개발의 중장기 방향과 권역별 특화·연계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설정하는 상위 계획 공간

-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전국을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로 재편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정부의 핵심 균형성장 정책

○ 국가전략 관광권은 개별 관광개발사업의 대상구역이나 관광객의 실제 이동범위를 그대로 구획한 사업권역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관광기능과 정책수단을 배치하고 권역 간 역할과 협력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전략적 공간단위

○ 국가전략 관광권은 국가 차원의 관광개발 방향을 광역 연계·협력사업과 시·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기반이 되는 전략적 공간 단위로 기능

> "국가전략 관광권"
> 국가 관광개발의 중장기 방향과 권역별 특화·연계전략을 제시하고, 전국단위의 광역 연계·협력사업과 시·도 관광개발계획의 공간적 기반이 되는 전략적 공간 단위

2) 국가전략 관광권의 역할

○ (국가 공간정책과의 정합성 확보)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국토공간구조를 관광분야에 반영하여 국가 공간정책과 관광개발정책 간 일관성 확보

○ (8대 국가전략 발전 방향 제시) 8대 국가전략 관광권의 관광자원, 산업기반, 시장수요 및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8대 국가전략 관광권별 특화방향과 발전전략을 제시

○ (다극·다핵 체제의 관광 공간구조 형성) 5극 3특 중심의 다극체제를 만들고, 권역별 중심의 거점과 연계도시, 중소도시·농산어촌지역, 광역교통망과 관광축으로 연결하여 관광수요가 권역 전반으로 확산되는 공간구조를 구축

○ (권역 간 기능적 연계 촉진) 광역관광개발사업(지역 K-관광개발), 관광권 프로젝트 등 전국 단위의 광역 연계·협력사업 등을 통해 권역 내부 및 권역 간 관광자원·교통망·콘텐츠의 연계를 강화하고, 권역 간 상호 보완적 기능의 공간 체계를 구축

○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의 연계) 국가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을 시·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사업이 국가 관광정책 방향과 연계

3) 국가전략 관광권의 설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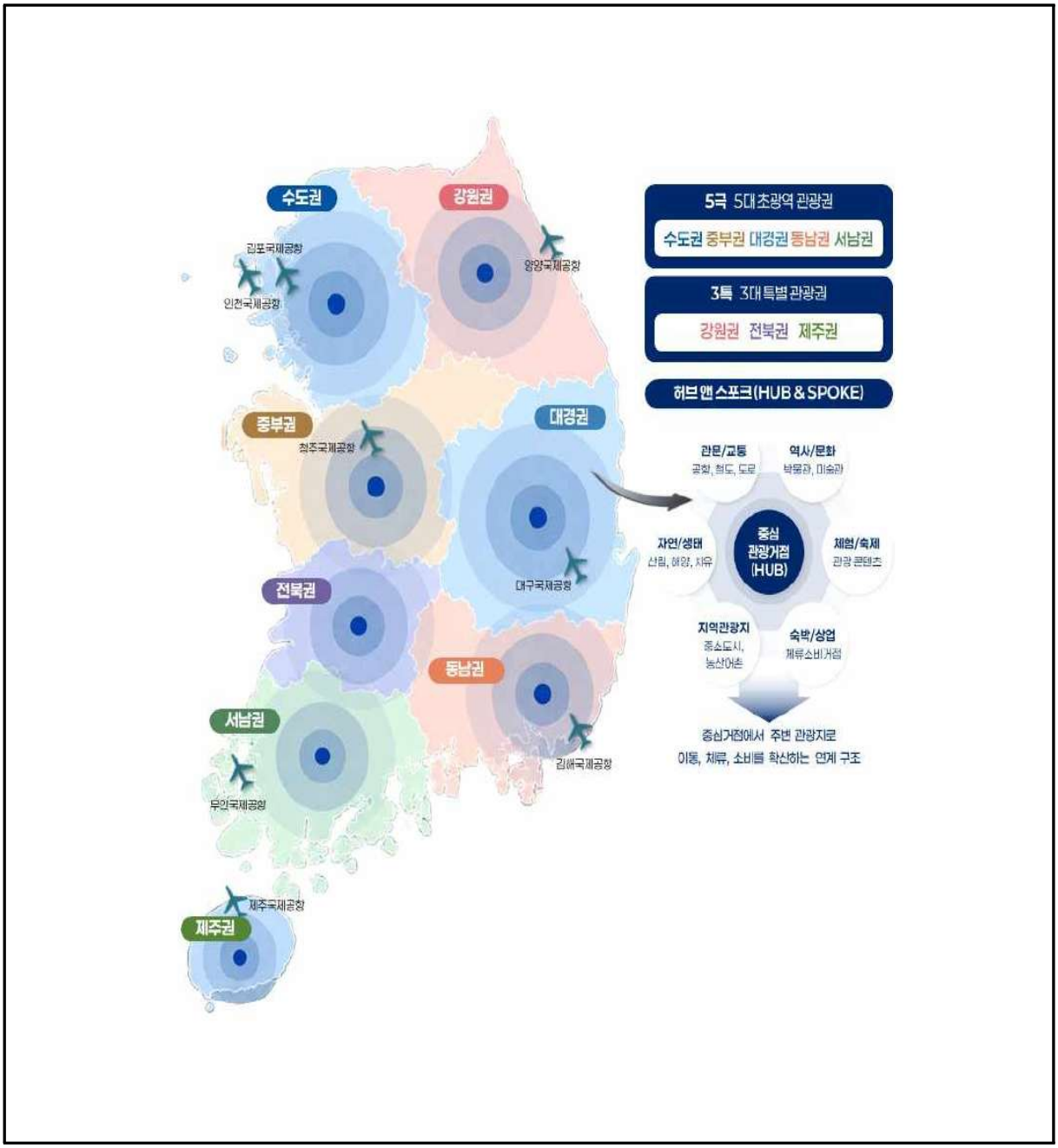
- (정책적 정합성)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초광역권 발전계획 및 광역교통계획 등 국가 공간정책과의 연계성을 우선적 고려
- (관광수요 및 이동 연계성) 관광객의 방문·이동·숙박·소비 등 관광행태와 권역 내부 및 권역 간 이동 흐름을 고려하여 관광거점과 관광축의 연계 가능성 검토
- (관광자원·산업의 기능적 연계성) 관광자원의 분포와 집적도, 권역별 전략산업과 관광산업의 융복합 가능성 및 지역 간 관광콘텐츠의 상호 보완성 고려
- (광역교통 및 접근성) 공항·항만·철도·도로 등 광역교통망과 주요 도시 및 관광거점 간 연결성을 고려하여 권역 내 관광수요의 이동과 확산 가능성 검토
- (균형성장 및 성과 확산 가능성) 관광기능과 정책지원을 경쟁력 있는 거점에 전략적으로 집적하되, 그 성과가 연계도시와 중소도시·농산어촌으로 확산될 수 있는지를 고려

4) 국가전략 관광권의 공간설정 원칙

- 국가전략 관광권의 기본 범위는 5극3특 국가공간구조에 따라 설정하되, 관광객 이동과 관광자원·산업·교통의 기능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권역 내부의 관광공간구조 구체화
- 국가전략 관광권은 상호 배타적이거나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라, 관광축과 공동사업을 통해 인접 관광권과 연결되는 개방형 계획공간으로 설정
- 각 관광권 내부는 중심거점–연계거점–중소도시·농산어촌 등으로 이어지는 다핵 구조를 기본으로 하며, 중심거점에 집중된 관광수요와 성과가 주변지역으로 확산
- 광역관광개발사업과 관광권 프로젝트 등 기능적 사업권역은 사업 목적과 관광객 이동에 따라 하나의 국가전략 관광권 내부에서 설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복수의 국가전략 관광권에 걸쳐 설정
- 시·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국가전략 관광권의 발전방향과 연계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여건과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구체화

〈표 9.1.3-4〉 관광공간 체계 간 관계

구 분	공간적 성격	주요 기능
8대 국가전략 관광권	국가차원의 상위계획 공간	권역별 특화방향과 연계전략 제시
기능적 사업권역	공동사업 중심의 유연한 공간	광역관광개발사업, 관광권 프로젝트 등
시·도 행정적 계획 권역	행정구역에 기초한 법정 계획공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등



(그림 9.1.3-7) [8대 국가전략 관광권] 공간 구상

나. 관광권역 기본 구상

(1) 8대 국가전략 관광권 체계

(가) 5대 초광역 관광권

○ 수도권·중부권·대경권·동남권·서남권을 대상으로 대도시와 광역교통거점을 중심으로 관광자원·산업·콘텐츠를 연계하고, 시·도 간 광역협력사업을 통해 관광수요와 성과가 권역 전반으로 확산되는 초광역 관광체계를 구축



▶

◦대도시와 광역교통거점을 중심으로 시·도 간 관광자원·콘텐츠·지역의 산업을 연계하고, 관광수요와 성과의 권역 내 확산을 촉진
- 광역교통망을 기반으로 시·도 간 관광객 이동 편의성 제고
- 대도시의 관광수요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는 허브 앤 스포크 구조 구축
- 복수 지자체가 공유하는 관광루트와 공동 관광상품 개발
- 권역 단위 통합 브랜드·마케팅 및 관광정보·교통서비스 연계
- 지역별 관광산업과 콘텐츠의 분업·연계를 통한 광역 관광경제권 형성

(그림 9.1.3-8) 5대 초광역 관광권 방향

(나) 3대 특별 관광권

◦강원권·전북권·제주권을 대상으로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특성과 지역 고유의 자연·문화·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관광발전모델을 구축하고, 인접 관광권과의 기능적 연계를 통해 관광경쟁력을 강화



▶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특성과 고유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관광발전모델을 구축하여 권역 내부의 체류와 순환을 강화
- 특별자치제도의 권한과 특례를 활용한 관광개발 및 정책 강화
- 지역 고유자원에 기반한 차별화된 관광개발모델 구축
- 관광객의 권역 내 체류기간과 지역 내 이동 확대
- 자연환경과 관광수용력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관광관리

(그림 9.1.3-9) 3대 특별 관광권 방향

(2) 8대 국가전략 관광권 (5대 초광역 관광권 + 3대 특별 관광권)

(가) 설정 방향: 5극3특 국가공간구조와 연계한 8대 국가전략 관광권 설정

◦5대 초광역 관광권은 대도시와 광역교통망을 중심으로 관광거점을 육성하고, 시·도 간 관광자원·교통망·콘텐츠를 연계하여 관광객의 이동·체류·소비가 주변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으로 확산되는 다핵·연계형 관광공간으로 설정

◦3대 특별관광권은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특성과 고유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관광개발과 권역 내부의 관광자원과 거점을 연계하여 체류와 순환을 강화하는 자립·특화형 관광공간으로 설정

(나) 5대 초광역 관광권

1)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 수도권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를 포함한 권역이며, 기본방향은 K-컬처를 세계와 지역으로 잇는 대한민국 관광관문, 수도권 육성

- 서울시는 관광의 즐거움이 서울의 활력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Tournomics City, Seoul, 인천시는 세계를 품고 일상이 머무르는 글로벌 K-관광도시 인천, 경기도는 일상이 여행이 되는 글로벌 초연결 관광지대, 경기도

○ K-컬처와 고부가 관광산업 결합으로 글로벌 관광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관문과 K-컬처를 연계해 관광허브를 구축하며, 도시·해양·수변·평화생태자원을 연계한 다핵형 체류관광지대 조성을 통해 초연결·포용·상생 기반 수도권 관광생태계 구축

2) 중부권 (충북, 충남, 대전, 세종)

○ 충청권은 대전·세종 도시권을 중심으로 충북·충남지역을 포함한 권역이며, 기본방향은 과학·문화와 내륙·서해를 잇는 대한민국 관광중심축, 중부권 육성

- 대전시는 지역문화와 도시 경험이 관광으로 이어지는 관광도시 대전, 세종시는 행정·문화의 미래도시와 로컬 문화가 교차하는 지속가능한 융복합 관광도시 세종, 충청북도는 호수와 숲으로 머무는 치유관광 충북, 충청남도는 스쳐가는 곳에서 머무는 곳으로, 대한민국 대표 해륙 휴양 관광도시 충남

○ 역사문화·과학·행정도시 자원을 연결한 중부권 특화 관광콘텐츠를 육성하고, 해양과 내륙을 연계한 치유·휴양관광지대를 조성, 로컬관광과 야간경제를 기반으로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관광생태계 조성하며, 광역교통망과 핵심 관광거점을 활용한 초연결 체류관광권을 구축하여 스마트·포용·협력 기반의 중부권 관광경쟁력을 강화

3) 대경권 (대구, 경북)

○ 대경권은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포함한 권역으로, 기본방향은 천년의 유산과 미래 혁신을 잇는 글로벌 관광 중심, 대경권 육성

- 대구시는 세계인이 모이는 곳,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 대구, 경상북도는 새로운 경북, 세계와 통하는 K-관광의 중심

○ 천년유산에 미래기술을 더한 혁신관광 콘텐츠 육성과 K-헤리티지 관광루트 구축, 대구 도시관광 기능을 활용해 경북으로 체류관광을 확산시키고, 관광성과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는 균형성장 기반을 마련

4) 서남권 (전남, 광주)

○ 서남권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단일하게 구성된 권역이며, 기본방향은 자연 속에 의향·예향·미향으로 머무는 전남광주, 글로컬 관광특별시 육성

○ 의향·예향·미향 관광콘텐츠를 활성화하고, 해양·섬·생태 자원을 활용한 치유·체험 중심의 고부가 융복합 관광을 육성하며, 관문기능 강화와 국제관광 확대, 관광 동선 연계를 통해 외래객 유입 및 체류·소비 기반을 강화하고,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주도의 관광생태계를 조성

5)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 동남권은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를 포함한 권역으로, 기본방향은 세계로 열린 해양·산업·생태 융합관광 중심, 동남권 육성

- 부산시는 세계인이 찾고 머무는 글로벌 관광허브도시, 부산, 울산시는 머무는 모든 공간, 에너지가 되는 복합관광도시 울산 「Ulsan, Stay, Energized」, 경상남도는 하늘길, 바닷길로 뻗어가는 동북아 K-웰니스 허브 경남

○ 해양·산업·생태·K-컬처를 융합한 관광경쟁력을 강화하고, 스마트·데이터 기반의 통합 관광목적지를 조성하며, 국제관문과 지역거점을 연결하는 초광역 관광생활권을 구축하여 체류경제와 지역가치가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관광권을 육성

(다) 3대 특별 관광권

1) 강원권

○ 강원권은 강원특별자치도만 단일하게 포함하는 권역으로, 기본방향은 다양한 강원다움으로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

○ 강원형 생태관광·힐링 브랜드와 지속가능한 관광환경을 구축하고, 기존 관광자원과 로컬감성을 활용·고도화하여 글로벌 체류형 복합관광지를 조성하고 특화 콘텐츠를 발굴하며, 융복합형 관광생태계와 지역 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

2) 전북권

○ 전북권은 전북특별자치도만 단일하게 포함하는 권역으로, 기본방향은 전북의 맛과 쉼, 세계가 찾는 전북관광

○ 세계가 찾는 전북관광 기반을 구축하고 맛·쉼·문화 관광콘텐츠 고도화하며 전북형 로컬 관광 자원 브랜드화, 체류·재방문 관광상품 개발, 지속가능·편리한 관광수용태세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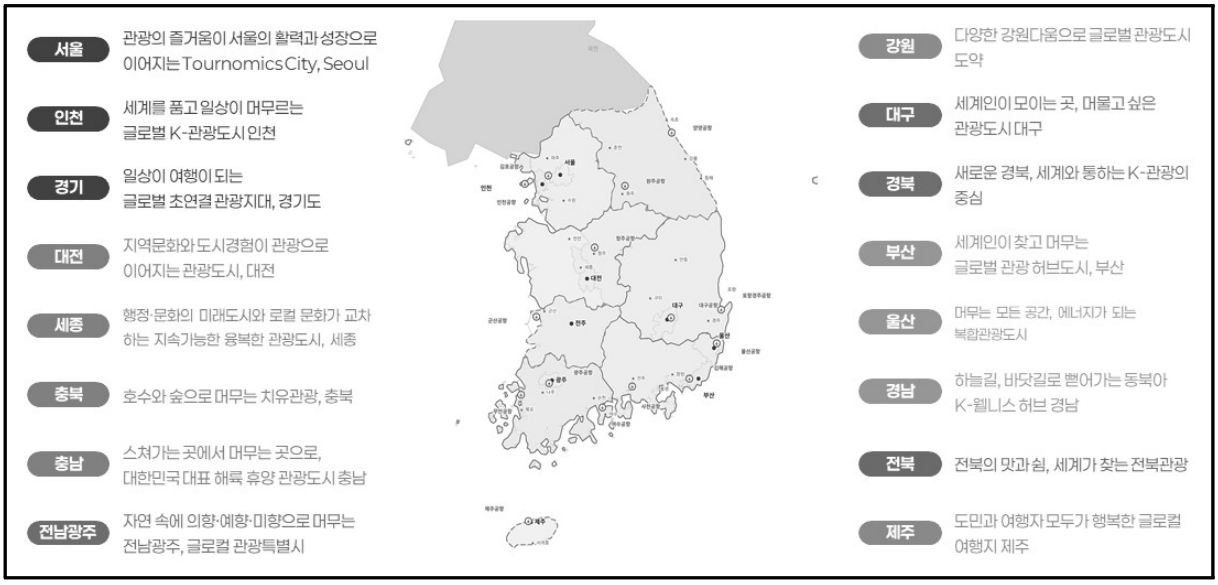
3) 제주권

◦ 제주권은 제주특별자치도만 단일하게 포함하는 권역으로, 기본방향은 도민과 여행자 모두가 행복한 글로컬 여행지 제주

◦ 책임관광 육성으로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과 지속가능성 강화, 치유와 함께하는 지역관광체계 확립으로 새로운 관광산업생태계로 도약, 청정이미지를 담은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특화관광 육성, 참여와 공존을 통한 지역관광 혁신역량 제고

(3) 16개 시·도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2027~2031)은 제8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2027~2031)과 수립 시기가 동일하며,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권역계획의 권역별 방향 반영



(그림 9.1.3-10)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16개 시·도 개발방향

9.1.4 권역별 추진 계획

가. 수도권

(1) 관광권역 방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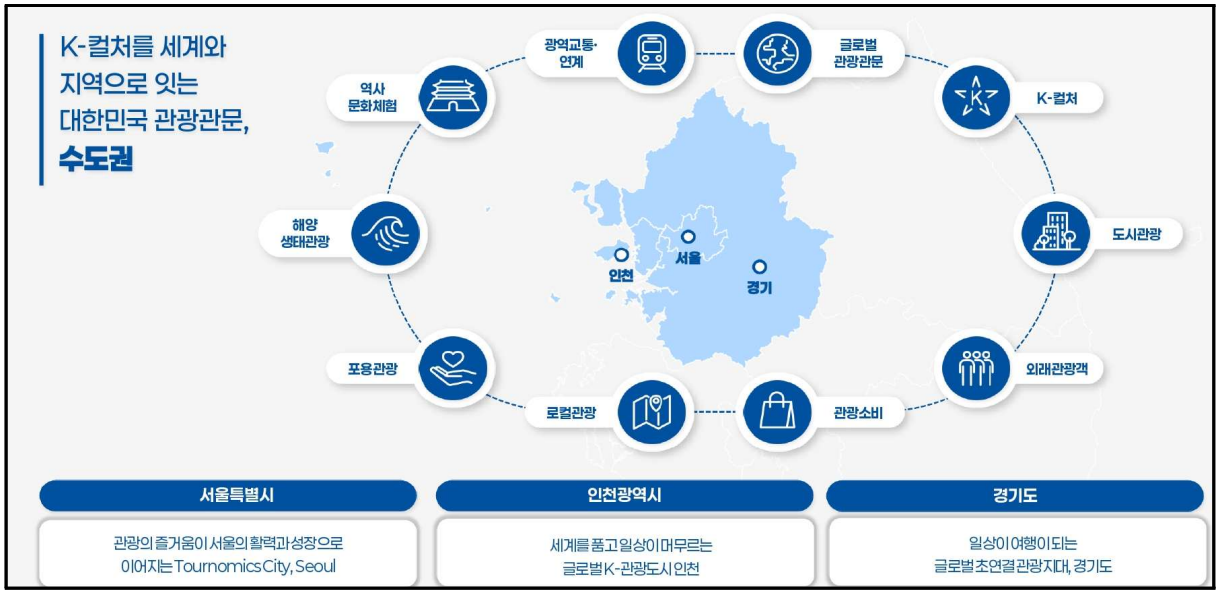
(가) 목표 및 전략

◇ 목표 ◇
K-컬처를 세계와 지역으로 잇는 대한민국 관광관문, 수도권

◦ 수도권은 서울의 K-컬처·공연·패션·쇼핑·미식 등 글로벌 도시관광 기능, 인천의 국제공항·항만과 개항장·해양·섬 관광자원, 경기의 역사문화·생태·농촌·레저·휴양 등 다채로운 체험관광 자원을 보유

- 서울의 K-컬처와 도시관광 서비스를 중심으로 인천의 국제관문·해양관광 기능, 경기의 생태·역사문화·체험관광 자원을 연계하고, 공항·항만·광역철도·도로 등 광역교통망을 활용하여 외래관광객의 이동과 체류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하는 다핵 관광체계 구축

○ 수도권을 대표하는 주요 키워드는 '글로벌 관광관문', 'K-컬처', '도시관광', '외래관광객', '관광소비', '로컬관광', '포용관광', '해양·생태관광', '역사문화체험', '광역교통·연계' 등으로 도출



(그림 9.1.4-1) 수도권 개발방향

(나) 발전방향

1) 글로벌 관문과 K-컬처를 연계한 대한민국 대표 관광허브 구축

○ 인천국제공항·인천항을 통해 유입되는 환승·기항 관광수요를 서울의 K-컬처·미식·뷰티·의료·쇼핑 및 경기의 DMZ·세계유산·테마파크·지역관광으로 연계하여, 수도권의 관문 기능이 권역 내 방문·체류·소비로 이어지는 광역관광체계를 구축

○ 서울은 글로벌 K-컬처와 고부가 도시관광의 중심지, 인천은 공항·항만과 복합리조트·MICE·크루즈를 기반으로 한 국제관문, 경기는 로컬·생태·평화·휴양관광의 확장 목적지로 역할을 분담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허브로 육성

2) K-컬처와 고부가 관광산업을 결합한 글로벌 관광경쟁력 강화

○ 한류·공연·게임·뷰티·미식 등 K-컬처를 중심으로 MICE, 의료·웰니스, 블레저, 크루즈, 산업관광 등 고부가 관광산업을 융합하고, 서울의 문화콘텐츠와 경기·인천의 복합관광거점을 연계한 수도권 대표 관광상품을 개발

○ 서울의 도심관광·한강·야간관광, 경기의 K-컬처밸리·수원 MICE 복합단지·화성국제테마파크, 인천의 영종 복합리조트·송도 MICE·개항장 등을 권역별 핵심거점으로 육성하여 외래관광객의 체류기간과 관광소비를 확대

3) 도시·해양·수변·평화생태자원을 연계한 다핵형 체류관광지대 조성

○ 서울의 역사문화·한강·도심생활문화, 경기의 DMZ·경기바다·산악·하천 및 세계유산, 인천의 섬·해양·개항장·강화 역사생태자원 등 수도권의 다층적인 관광자원을 특화하고, 광역관광루트와 체류형 콘텐츠로 연결

○ 일부 핵심지역에 집중된 관광수요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원도심과 노후·유휴공간을 관광명소로 재생하고, 지역 고유의 생활문화·상권·축제·농촌체험 등을 활용한 로컬관광을 활성화하여 도심과 지역, 내륙과 해양이 연결되는 다핵형 관광공간을 형성

4) 초연결·포용·상생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수도권 관광생태계 구축

○ 수도권의 철도·도로·항공·해운 교통망과 시티투어·관광정보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AI·관광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정보·예약·결제 서비스를 확대하여 행정구역과 이동수단의 경계 없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스마트 관광환경을 조성

○ 무장애 관광, 관광안전, 탄소중립 및 ESG 관리를 강화하고 혼잡·소음·환경부담 등 관광성장의 부정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관광성과가 지역상권·소상공인·관광기업·주민에게 확산되는 상생협력 구조를 구축

(2) 시·도별 전략

(가) 서울

1) 현황 및 문제점

가) 서울관광의 빠른 회복과 관광수요의 개별화

○ 코로나19 이후 서울시의 외래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는 가운데 K-컬처, 미식, 뷰티·웰니스, 의료, MICE 등 관광목적과 관심 분야가 다양해지고, 개별여행 중심의 관광행태가 확대되는 경향

나)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광활동의 시·공간적 편중 지속

○ 서울시는 문화·역사·한강·축제·공연·쇼핑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광객의 방문과 소비는 일부 핵심 관광지역과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어 서울 전역의 관광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다는 한계 보임

다) 관광객 다양화 및 활동범위 확대에도 관광 이용환경의 불편함은 여전히 존재

○ 관광객의 국적과 연령, 여행방식이 다양해지고 활동지역도 확대되고 있으나 언어, 관광정보, 이동, 예약·결제, 디지털 서비스, 관광약자 접근성 등 관광여정 전반에서 이용상의 제약은 지속

라) 관광산업 성장에도 지역·업종 간 관광성과는 편차 보임

○ 관광객의 증가 및 관광소비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관광의 경제적 성과가 일부지역과 업종에 집중되고, 지역상권·소상공인·관광기업·주민 등으로 확산되는 구조는 상대적으로 미흡

마) 관광성장과 함께 도시·지역사회가 부담해야 할 문제는 남아 있음

○ 관광수요 회복과 관광활동 확대에 따라 혼잡, 소음, 쓰레기, 환경부담, 주민갈등 등 관광성장의 부정적 영향은 남아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 및 관광객·시민 간 공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2) 비전 및 전략

◇ 서울특별시 비전 및 목표 ◇	
관광의 즐거움이 서울의 활력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Tournomics City, Seoul	
◇ 전 략 ◇	
1. 고부가가치 관광도시	3. 누구나 편리한 관광도시
2. 365일 즐거운 관광도시	4. 상생협력 관광도시

3) 전략별 발전방향

가) 서울다운 관광경험을 관광소비와 고부가가치로 연결

○ 서울만의 차별화된 관광경험을 고부가 관광 상품과 연계함으로써 체류·소비를 확대하고, 관광의 경제적 가치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구상

나) 관광경험의 시간적 확장으로 365일 즐거운 관광도시 구현

○ 계절과 시간대별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도시관광 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관광경험의 공간적·시간적 확대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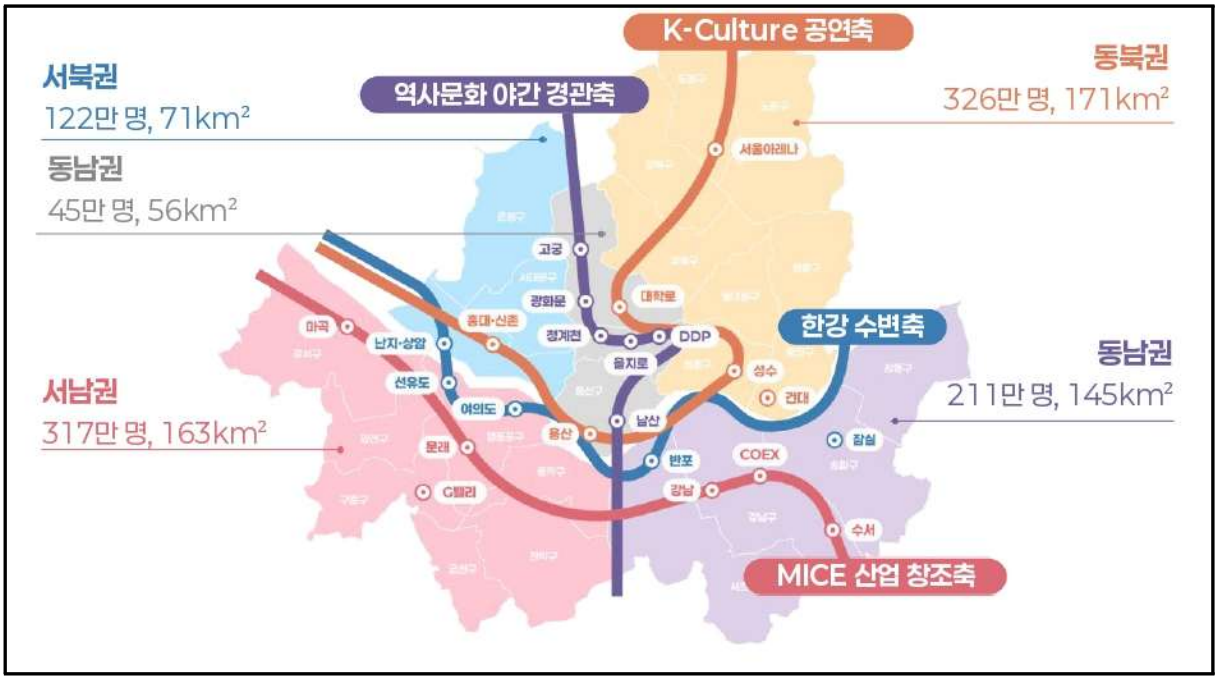
다)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경험하는 관광환경 조성

○ 관광객의 특성과 관계없이 누구나 서울 전역의 관광자원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교통·디지털 접근성 등 관광여정 전반의 이용환경 개선

라) 관광성과를 지역과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 구축

○ 관광의 경제적 성과가 지역사회 및 관광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관광성장에 따른 부담을 함께 관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상생 관광도시 구현

4) 기본구상도



(나) 인천

1) 현황 및 문제점

가) 글로벌 관문 기능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통과형' 관광구조

○ 2025년 방한 외래관광객 중 인천 도착객이 1,264만 명(전체의 66.7%)에 달하는 반면, 외래관광객의 인천 방문율은 6.1%에 그쳐 공항·항만의 관문 이점이 인천 내 방문·체류·소비로 충분히 전환되지 못하는 상황

나) 원도심 관광거점의 침체·노후화와 이를 대체할 신규 관광중심지 부재

○ 월미관광특구 외국인관광객 규모 위축 및 원도심 일대 관광시설의 노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인천관광을 견인할 새로운 관광중심지 형성 요구

다) '인천다움' 콘텐츠의 차별성 부족과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 과제

○ 168개 도서·1,076㎞ 해안선, 개항장 근대문화유산, 서해5도 평화자원 등 다층적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인천 고유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콘텐츠 및 신규 트렌드 대응은 다소 미흡

라) 군·구 간 관광예산 양극화와 민간자본 의존형 사업의 부진

○ 군·구 관광예산이 감소 추세인 가운데 옹진군·강화군 2개 군이 전체 약 90%를 차지하는 등 기초자치단체 간 편차가 크며, 대규모 민자 관광개발사업도 추진 부진·지연

2) 비전 및 전략

○ 4대 핵심키워드(글로벌 K-관광도시, 경험과 일상, 다층적 자산·콘텐츠, 자생력)와 3대 정책방향(인바운드 급성장기 대응 재도약,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 광역시 여건에 맞는 자생적 추진역량 강화)을 토대로 비전·목표·전략 체계 설정

◇ 인천광역시 비전 및 목표 ◇
세계를 품고 일상이 머무르는 글로벌 K-관광도시 인천

◇ 전 략 ◇

1. 신관광 수요 대응형 차별적 매력 강화
2. 경쟁력 있는 관광명소 확충·고도화
3. 권역별 관광특화와 균형발전
4. 글로벌 수준의 관광환경 조성
5. 인천관광 고도화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

3) 전략별 발전방향

가) 신관광 수요 대응형 차별적 매력 강화

○ 인천 고유 관광매력과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기반을 활용하여 K-컬처·MICE·의료·웰니스·크루즈 등 고부가 관광시장을 집중 육성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지속 대응할 수 있는 콘텐츠 발굴·육성 체계 확립

나) 경쟁력 있는 관광명소 확충·고도화

○ 인바운드 대응형 신규 관광중심지의 발굴·조성 및 노후 관광거점의 정비·고도화를 병행 추진하여 인천관광을 견인할 경쟁력 있는 관광공간 확보

다) 권역별 관광특화와 균형발전

○ 행정체제 개편(2026. 7.)과 영종~신도 평화도로 개통 등 관광권·생활권 변화를 반영한 5대 관광소권의 자원·입지 특성에 따라 소권별 특화 방향 설정

○ 소권 간 기능 중복을 지양하고 소권별 차별화된 기능·역할을 부여하여 인천 전역의 관광매력을 균형 있게 발전

라) 글로벌 수준의 관광환경 조성

○ 환승·기항 수요를 지역관광으로 연계하는 관광상품·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불편 요인의 상시 점검·개선과 관광교통 체계 혁신을 통해 관광수용태세를 글로벌 수준으로 제고

○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과 탄소중립·ESG 가치를 반영한 지속가능 관광 관리, 관광지 안전·환경 관리 강화를 병행하여 환대와 품격의 관광환경 구현

마) 인천관광 고도화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

○ 시 자체사업 중심의 추진모델을 정립하고, 시·군·구·민간 협력 거버넌스와 관광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통해 자생적 추진역량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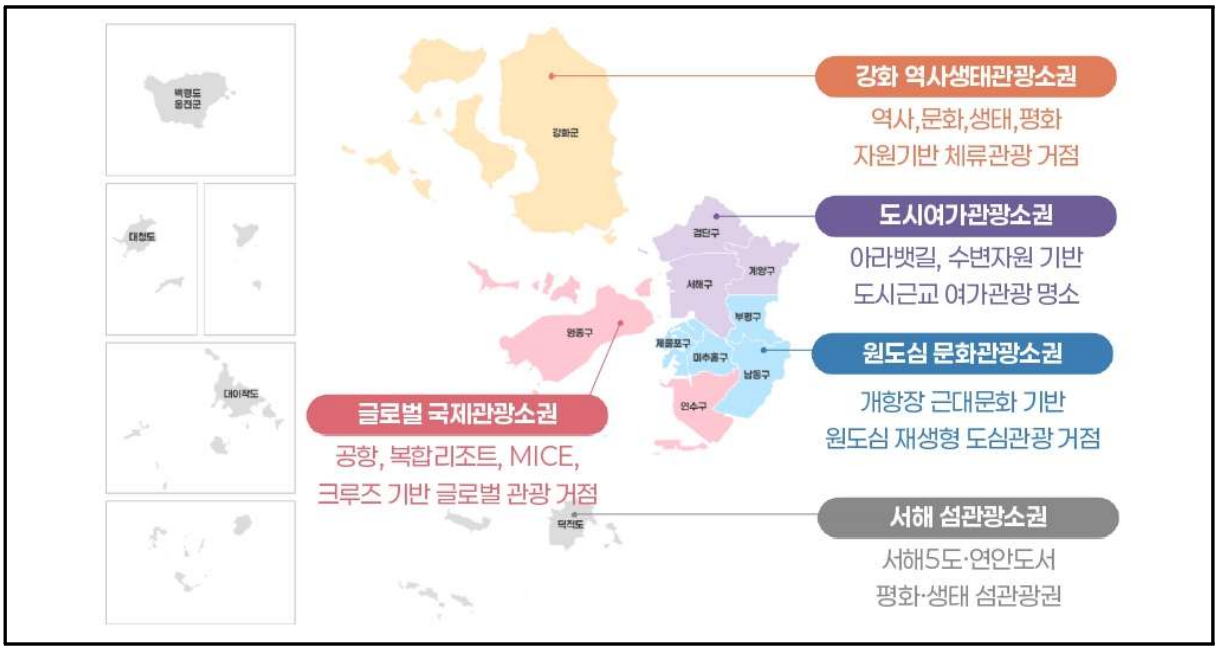
○ 데이터·통계 기반의 모니터링·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계획의 실행력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인천관광 통합브랜드를 정립·확산하여 글로벌 K-관광도시로서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

4) 기본 구상도

가) 인천 관광 공간체계는 5개 소권(小圈)으로 구분

○ 관광객의 실제 이동패턴과 관광자원의 기능적 연계성, 행정체제 개편 등을 반영하여 인천권 관광 공간체계를 5개 소권(小圈)으로 구분하고, 소권별로 차별화된 관광 기능과 역할 부여

소권 구분	핵심 기능·역할
제1소권 글로벌 국제관광소권 (영종구·연수구·옹진군 북도면)	공항·복합리조트·MICE·크루즈 기반 글로벌 관광거점
제2소권 원도심 문화관광소권 (제물포구·미추홀구·부평구·남동구)	개항장 근대문화 기반 원도심 재생형 도심관광 거점
제3소권 도시여가관광소권 (서해구·검단구·계양구)	아라뱃길·수변 자원 기반 도시근교 여가관광 명소
제4소권 강화 역사생태관광소권 (강화군)	역사·문화·생태·평화 자원 기반 체류관광 거점
제5소권 서해 섬관광소권 (옹진군, 북도면 제외)	서해5도·연안도서 평화·생태 섬관광권



(다) 경기

1) 현황 및 문제점

가) 높은 관광수요, 숙박·체류로 이어지지 못하는 당일관광 중심의 관광구조 지속

◦ 2024년 국내여행 5,880만 회로 전국 1위이며 당일여행은 4,927만 회로 전국의 28.1%를 차지하는 반면 숙박여행은 952만 회로 전국 7위에 그쳐 높은 방문수요 대비 낮은 체류 수준

◦ 높은 방문수요가 장기체류와 지역 내 관광소비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지역자원과 숙박·미식·체험을 연계한 로컬여행 콘텐츠 및 상품 확대 필요

나) 다양한 복합 관광자원 보유, 대표 관광브랜드화 및 지역별 인지도이용·편차 존재

◦ DMZ·경기바다·세계유산·자연·생태·역사문화·농촌체험·테마파크·축제 등 다양한 관광자원이 분포하고 임진각·파주 DMZ·수원화성·제부도·두물머리 등 12개소가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

◦ 일부 관광지에 집중된 방문수요를 분산하고 지역별 관광매력을 높이기 위한 DMZ·경기바다·경기산악·경기수변 등 대표 관광자원의 특화 및 브랜드화 필요

다) 방한 외래관광시장 회복에 비해 경기도 방문·체류 전환 미흡

◦ 2024년 경기도 외래방문객은 약 164만 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외래객의 지역 방문율은 서울 78.4%, 인천 16.2%, 경기 10.0%로 경기도 방문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주요 방한시장별 수요 특성을 반영한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마케팅 강화를 통한 경기도 방문·체류 확대 필요

라) 관광사업체의 양적 기반은 크나 숙박·고부가 관광산업으로의 연계·고도화 미흡

◦2025년 관광사업체 7,211개소, 종사자 30,355명으로 서울에 이어 전국 2위 규모이며 유원시설업·야영장업·관광편의시설업 등에서 높은 공급 비중 보유

◦관광숙박업 객실은 19,306실로 전국 4위 수준이며 일부 업종에 사업체가 집중되어 있어 MICE·의료웰니스·신산업관광·축제 등과 연계한 체류형·고부가 관광산업으로의 확장 필요

마) 개별여행 중심 관광행태에 대응한 광역 관광교통·정보서비스 연계 및 데이터 활용 미흡

◦경기도 여행의 개별여행 비중은 97.4%, 자가용 이용 비중은 72.2%로 개별 이동 중심의 관광행태가 뚜렷하며 지하철·고속·시외버스 이용도 증가 추세

◦16개 시·군의 시티투어, 72개 관광안내소, 146개 문화관광해설 거점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시·군 단위로 분산되어 있어 광역 단위 관광교통·정보서비스 연계와 관광 이동·소비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선 필요

2) 비전 및 전략

◇ 경기도 비전 ◇ 일상이 여행이 되는 글로벌 초연결 관광지대, 경기도	
◇ 전 략 ◇	
1.경기로컬여행(G-Local)기반 및 거점 확충	2.경기로컬여행(G-Local) 고도화
3.경기형 특화 관광거점 육성 및 브랜드화	4.고부가 관광거점 및 상품 육성
5.경기관광 글로벌 인지도 제고	6.교통·라이프스타일 경계 없는 포용 관광환경 구축
7.데이터·AI·협력 기반 시공간 경계 없는 혁신 관광생태계 구축	

3) 전략별 발전방향

가) [목표 1] '도민과 관광객에게 모두 특별한 NO.1 로컬여행 목적지, 경기도 (G-Local)'

① 전략 1 : 경기로컬여행 기반 및 거점 확충

◦경기형 로컬여행 기반 확충은 도민의 일상 여가공간인 하천, 호수, 저수지 등의 수변자원 및 공원 등을 명소화하는 사업 및 지역 내 노후·유휴공간과 시설을 도민과 관광객을 위한 명소로 전환하는 사업 포함

◦경기도 내 신규 로컬여행 거점 및 명소를 육성할 수 있는 사업 전개

② 전략 2 : 경기로컬여행 고도화

○ 경기로컬여행의 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를 지원하고, 지역 내 다양한 민간부문 협력에 기반한 경기로컬여행 추진체계 및 역량강화 추진

나) [목표 2] '세계인이 찾고 머무는 글로벌 여행 목적지, 경기도 (G-Initiative)'

① 전략 3 : 경기형 특화 관광거점 육성 및 브랜드화

○ 경기형 특화 관광거점 육성 및 브랜드화는 경기도 관광의 핵심 자원인 DMZ 평화생태관광, 서해안의 경기바다(G-Sea), K-등산 열풍 수요를 유인할 수 있는 경기산악(G-Mountain), 한강/임진강·남한강·북한강·한탄강 등의 경기수변(G-River)에 기반한 관광거점 및 명소 육성, 선형 네트워킹 구축, 브랜드화 등의 사업 포함

② 전략 4 : 고부가 관광거점 및 상품 육성

○ 경기도가 추진 중인 K-컬처 밸리, 수원 MICE 복합단지, 화성국제테마파크 등 고부가 관광거점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

○ 고부가 관광거점 육성과 함께 경기도 내 체류시간 연장 및 여행자들의 소비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MICE 연계 블레저 투어, 의료&웰니스 투어, 신 산업관광, 축제관광 등 고도화 추진

③ 전략 5 : 경기관광 글로벌 인지도 제고

○ 경기도의 글로벌 여행목적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 자체 홍보 마케팅 강화 및 서울, 인천과 협력한 신규 시장 개척을 추진사업으로 설정

다) [목표 3] '경계 없이 즐기는 포용·혁신 기반 구축 (G-Inno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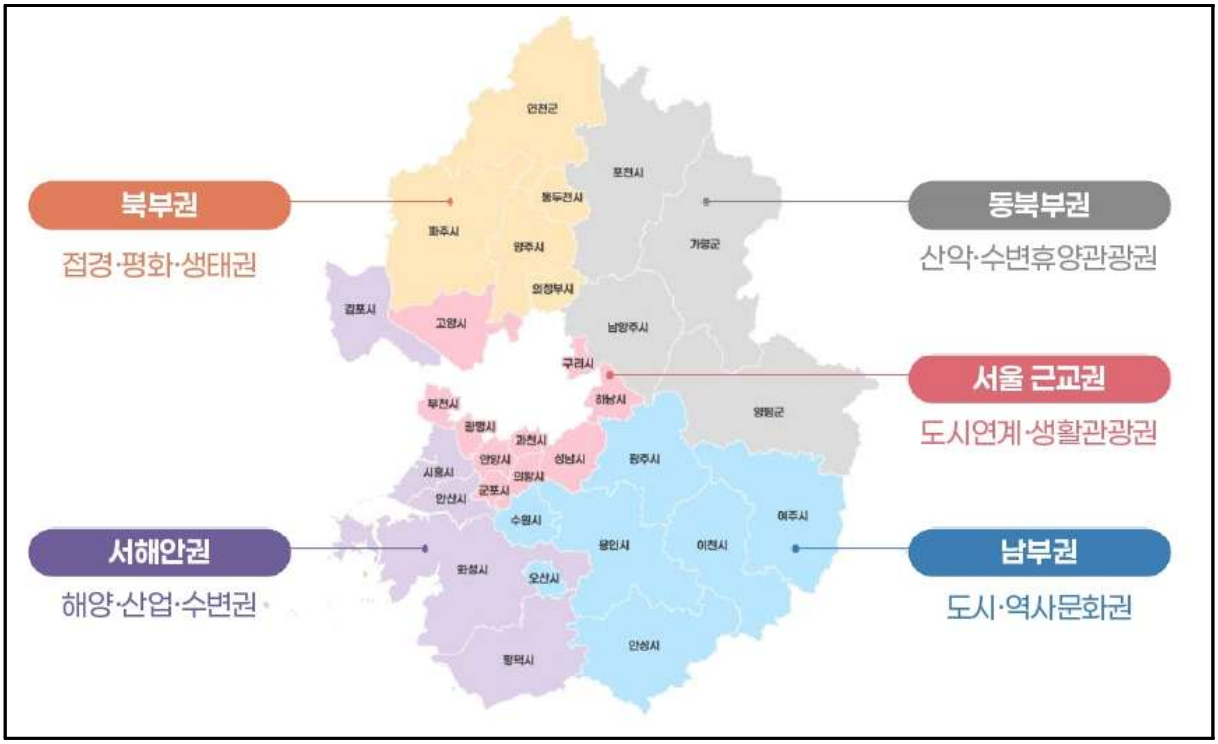
① 전략 6 : 교통·라이프 스타일 경계 없는 포용 관광환경 구축

○ 교통·라이프 스타일 경계 없는 포용 관광환경은 경기도민과 관광객 누구나 편리하고, 다양한 관광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는 관광기반 구축 및 상품 육성 사업 포함

② 전략 7 : 데이터·협력 기반 시공간 경계 없는 혁신 관광생태계 구축

○ AI기술로 시공간 제약 없는 혁신 관광환경 구축 사업은 경기 관광산업의 AX 전환 지원 및 스마트관광 기반 구축 등의 사업 및 지속가능한 혁신 경기관광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 포함

4) 기본 구상도



나. 중부권

(1) 관광권역 방향성

(가) 목표

◇ 목표 ◇
과학·문화와 내륙·서해를 잇는 대한민국 관광중심축, 중부권

○ 중부권은 대전의 과학·연구개발·MICE·미식·야간관광 기능, 세종의 한글·행정문화·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관광 기능, 충남의 백제 역사문화와 서해안·해양·농촌관광 자원, 충북의 호수·산악·지질·동굴·레저 등 내륙 생태관광 자원을 보유

- 대전의 과학·도시관광 서비스와 세종의 한글·행정문화 기능을 중심으로 충남의 백제 역사문화·서해안 해양관광, 충북의 호수·산악·지질생태 관광자원을 연계하고, 청주국제공항·KTX 오송역·대전역과 광역도로망을 활용하여 관광객의 이동과 체류를 권역 전반으로 확산하는 다핵 관광체계 구축

○ 중부권을 대표하는 주요 키워드는 ‘과학관광’, ‘한글·행정문화’, ‘역사문화체험’, ‘내륙생태관광’, ‘서해안관광’, ‘로컬미식·축제’, ‘체험·레저관광’, ‘야간관광’, ‘광역교통·거점연계’, ‘체류관광’ 등으로 도출



(그림 9.1.4-2) 중부권 개발방향

(나) 발전방향

1) 해양과 내륙의 자연자원을 연결한 광역 치유·휴양관광지대 조성

○ 충남의 서해안·갯벌·해양·농촌자원과 충북의 호수·산림·백두대간, 세종의 생태·힐링 자원을 연계하여 해양치유, 산림치유, 웰니스, 농촌휴양을 아우르는 중부권 대표 치유·휴양관광벨트를 구축

○ 충남은 서천 갯벌에서 천수만·가로림만으로 이어지는 해양레저·생태관광 거점, 충북은 호수와 숲을 활용한 내륙형 웰니스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고, 권역별 자연자원과 숙박·야간·체험 콘텐츠를 결합하여 당일관광 중심의 구조를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

2) 역사문화·과학·행정도시 자원을 융합한 중부권 특화 관광콘텐츠 육성

○ 충남의 백제문화·내포문화·금강문화와 충북의 인문·역사자원, 대전의 과학기술·도시문화·미식, 세종의 국립박물관단지·국가 상징공간을 연계하여 중부권만의 역사문화·과학·행정 융합 관광콘텐츠를 개발

○ 대전은 지역문화와 과학기술을 결합한 도시관광 및 야간경제관광의 중심지, 세종은 행정·문화와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미래도시 관광거점, 충남·충북은 역사문화와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한 체류목적지로 기능을 분담하여 중부권 관광의 차별성과 다양성을 강화

3) 광역교통망과 핵심 관광거점을 활용한 초연결 체류관광권 구축

○ 청주국제공항·오송역과 대전의 광역교통 기능을 중부권 관광의 관문으로 활용하고, 충남 서해안과 백제문화권, 충북 호수·산림권, 대전 도심관광권, 세종 행정문화권을 연결하는 광역 관광루트와 공동 관광상품을 개발

○ 공항과 철도 이용객이 권역 내 방문·숙박·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통·관광정보·예약·결제 서비스를 통합하고, 시·도 간 관광교통 및 콘텐츠 연계를 강화하여 개별 관광거점을 하나의 여행경험으로 연결하는 중부권 순환형 관광체계를 구축

4) 로컬관광과 야간경제를 기반으로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관광생태계 조성

○ 충남·충북의 농촌·생활문화·로컬미식, 대전의 원도심·상권·축제, 세종의 조치원과 읍·면 지역의 로컬문화 및 유휴공간을 관광콘텐츠로 전환하고, 숙박·미식·쇼핑·야간관광을 결합하여 지역 내 체류와 소비를 확대

5) 스마트·포용·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중부권 관광경쟁력 강화

○ 대전의 과학기술 기반과 세종의 스마트도시 역량을 활용하여 AI·관광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관광서비스를 구축하고, 무장애 관광환경과 관광안전·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포용적 관광환경을 조성

(2) 시·도별 전략

(가) 대전

1) 현황 및 문제점

가) 로컬 콘텐츠를 통해 확보한 관광경쟁력을 지역 내로 확산하는 관광정책 강화 필요

○ 성심당을 축으로 원도심 일원에서 두루치기, 칼국수 등 미식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관광 루트가 형성되었고 꿈씨 패밀리의 인지도 상승 또한 대전시 관광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

○ 다만, 관광객의 활동 범위가 원도심에 제한적인 점, 성심당을 비롯해 맛집, 쇼핑 중심의 관광 행태가 제한적인 점 등 대전시 관광 현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관광 행태 및 패턴의 확장성을 도모하고 지역관광으로 확산을 도모하는 관광정책 강화 필요

나) 특정 공간 및 상권에 편중된 관광 소비 고착화에 대응하는 대전시 관광 패러다임 고도화 필요

○ 현재 대전시 관광의 상승세 흐름은 맞으나, 성심당, 원도심 관광객 맛집, 백화점 등의 쇼핑시설에 편중된 소비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을 관광콘텐츠 및 상품 개발, 지역 관광자원 및 상권과 연계한 코스 및 루트 다각화, 자치구에서 개최하는 축제/이벤트를 포함한 문화행사 육성 등으로 대전시 관광 패러다임 고도화 전략 필요

다) 초광역 관광으로의 관광권 범위 확대에 따른 충청권 관문·거점 도시 기능 강화

○ K-관광,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한 관광권 개발 등 기존 광역권 관광 경계를 넘어선 초광역 관광권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관광 정책 흐름에서 대전시가 충청권 관광의 관문이자 거점 도시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관광 전략 필요

라) 야간관광의 기반을 활용한 야간경제관광으로의 관광생태계 구축

○ 야간관광 특화도시를 통해 대전시 야간관광의 기반은 확대·구축되었으나, 관광수요의 체류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현황으로 기존 야간관광자원과 지역 상권을 결합한 구조의 야간경제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고 육성하는 전략 필요

2) 비전 및 전략

◇ 대전광역시 비전 ◇

지역문화와 도시 경험이 관광으로 이어지는 관광도시, 대전

◇ 전 략 ◇

1. 지역문화 기반 로컬관광 고도화
2. 도시 경험 기반 체류형·야간경제관광 거점화
3. 권역별·소권별 관광거점자원 개발 및 관광공간 활성화
4. 지역관광 생태계 및 경쟁력 강화

3) 전략별 발전방향

가) 지역문화 기반 로컬관광 고도화

○ 대전시에 내재된 고유한 장소성·역사성·지역성을 발굴하여 관광자원으로 체계화 및 고도화하고 경험·소비·체류 활동과 결합된 관광콘텐츠로 전환하여 대전시 지역관광의 근간 형성

나) 도시 경험 기반 체류형·야간경제관광 거점화

○ 대전시의 도시공간과 생활환경에서 관광객이 머물고, 즐기고, 소비하는 관광경험 공간으로 전환하고 권역별 관광자원과 상권을 연결한 야간경제관광 거점화를 통해 지역 내 체류·소비 확산을 유도하는 근간 형성

다) 권역별·소권별 관광거점자원 개발 및 관광공간 활성화

○ 권역별·소권별로 대표하는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개발 및 육성을 통해 관광거점 공간으로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관광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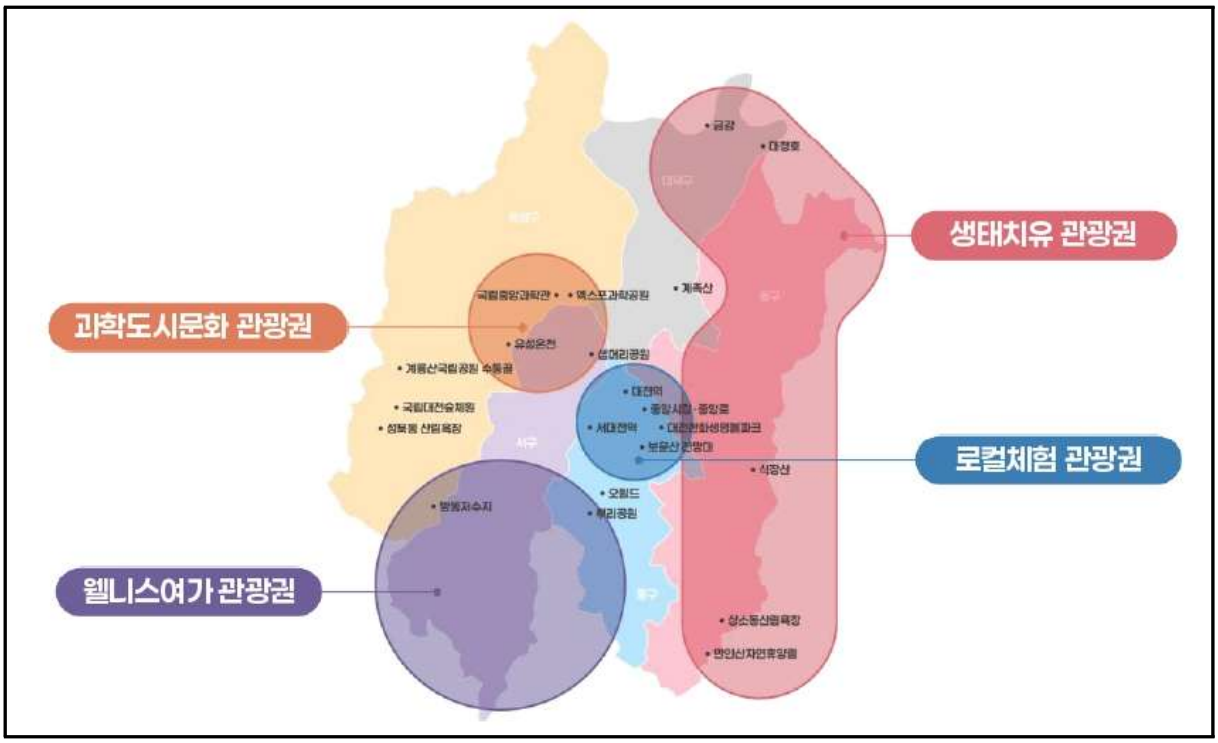
◦ 관광자원-관광거점-관광공간-관광동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공간 체계를 구축하고, 각 권역이 보유한 자원 특성과 지역 특성을 관광 기능으로 전환·발전시켜 대전시 전역의 관광공간 경쟁력 강화

라) 지역관광 생태계 및 경쟁력 강화

◦ 대전시 관광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광자원·관광공간·관광 콘텐츠·관광사업체·지역 주체 간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관광의 생산·유통·소비가 지역 내 선순환 하는 관광생태계 조성

◦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상인, 문화예술인, 로컬 크리에이터 등 민간 주체가 관광의 생산자로 참여하는 지역주도형 관광개발체계와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 구조 체계 마련

4) 기본구상도



(나) 세종

1) 현황 및 문제점

가) 국립박물관단지의 순차적 개관, 국가상징구역 계획 등 국립 문화시설의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에 국립어린이박물관이 2023년 개관하였고, 국립디자인박물관(2029년 개관 예정)부터 2031년까지 5개 박물관이 순차적으로 개관 예정

◦또한, 국가상징구역의 조성 계획 등 신도심 문화관광시설 확충으로 관광객 유입 역량 확대에 따른 관광정책 개편 수립 필요

나) K-컬처, 스크린 투어리즘의 확산 및 트렌드 변화에 대한 관광 정책화 방안 필요

◦BTS 뮤직비디오 촬영지가 글로벌 관광지로 각광받기 시작한 것을 전후로 OTT 시장의 성장과 K-컬처의 확산이 국내 스크린 투어리즘 경쟁력 강화에 영향력이 확대

◦이에 세종시는 참교육, 스트릿 레스토랑 파이터, 하이영업중 등 주요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의 촬영지로 주목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스크린 투어리즘의 관광 전략 확대 필요

다) 로컬 관광의 지속적인 강세 및 고도화 추세로 읍면 지역의 관광 기능 강화

◦코로나19 전후로 로컬 관광이 관광 활동에 핵심 테마 축으로 자리매김하였고 하이퍼 로컬, 로코노미 등 로컬 테마의 흐름이 지속

◦따라서 이를 겨냥한 읍면 지역의 로컬 문화, 정취, 스토리 등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및 콘텐츠화를 통해 읍면 지역의 관광 기능 강화 방안 필요

라) 디지털화, AI 등 관광 부문의 디지털 활용 확산을 관광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환경구축 필요

◦세종시는 스마트도시의 대표 시범도시로서 다양한 스마트 기술이 도시 곳곳에서 테스트 및 실용화

◦따라서 이를 상용화하는 단계에서 관광 부문에 적용하여 스마트·디지털 관광 환경을 구축하고 스마트도시의 이미지를 연계한 관광 전략화 필요

2) 비전 및 전략

◇ 세종특별자치시 비전 ◇

행정·문화의 미래도시와 로컬 문화가 교차하는 지속가능한 융복합 관광도시, 세종

◇ 전 략 ◇

1. 관광 거점 명소화를 통한 관광벨트 구축 기반 마련
2. 상반된 매력이 공존하는 세종시 특화 콘텐츠 개발
3. 체류형 관광 및 야간경제관광 기반 구축
4. 무장애 관광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

3) 전략별 발전방향

가) 관광거점 명소화를 통한 관광벨트 구축 기반 마련

◦신도시(동지역)의 국립 문화시설과 국가 상징 공간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관광 콘텐츠 도입, 조치원읍(구도심)의 고유 로컬 문화와 소도시 정서 등의 관광 테마 강화로 신도심과 구도심의 관광거점 기능 강화

나) 상반된 매력이 공존하는 세종시 특화 콘텐츠 개발

◦ 신도시(동지역)의 도시적인 매력과 외곽지역의 로컬·농촌·생태·힐링이 대비되는 매력을 특화 콘텐츠로 개발하고 공간 간·자원 간·테마 간 이원적인 매력을 특화한 콘텐츠를 통해 관광 진흥 도모

다) 체류형 관광 및 야간경제관광 기반 구축

◦ 체류형 관광 경제 기반 구축 및 야간관광 활성화 전략 도출로 '머무는 세종'으로의 관광 성장 동력과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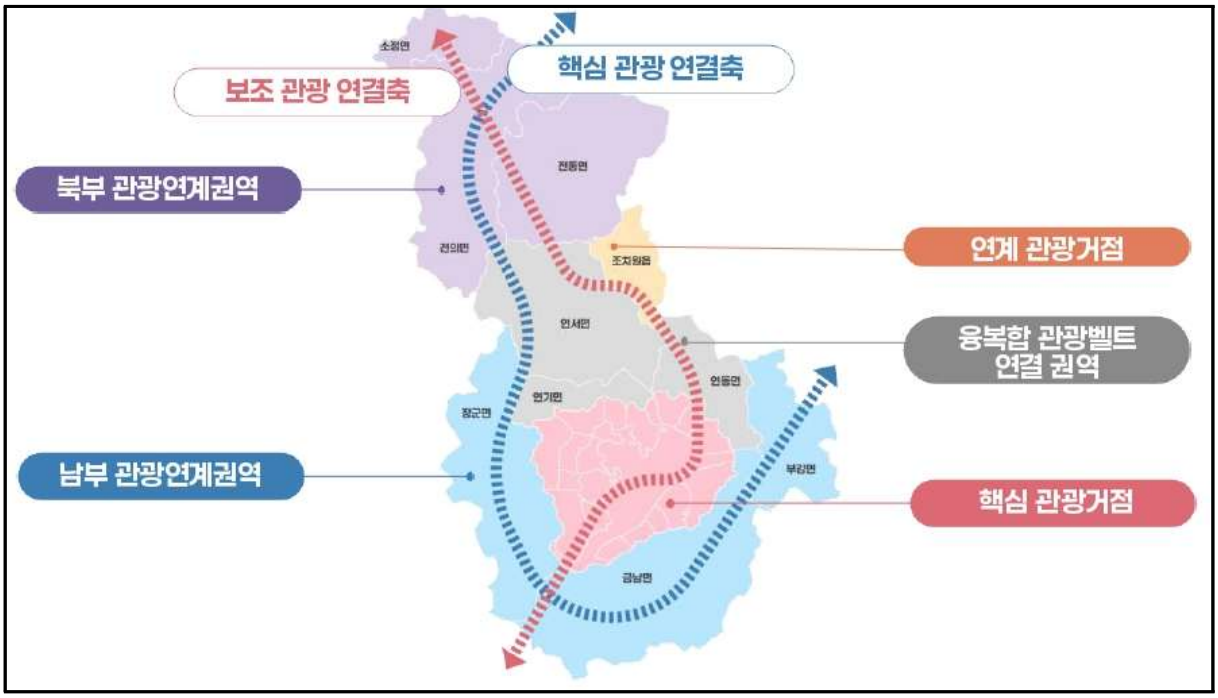
◦ 산림자원과 웰니스 자원, 농촌과 로컬 테마, 노후화되고 방치된 읍면지역의 유휴시설을 활용한 숙박 연동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체류형 관광지로의 도약 기반 마련

라) 무장애 관광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

◦ 관광 편의시설, 안내체계, 교통편의 및 인프라, 무장애 관광 체계 등 관광의 기초적인 수용태세개선으로 누구나 관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관광 편의 서비스 품질 개선, 지역관광 생태계 기반인 인적자원과 민간 참여 확대 등으로 지역 상생 기반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 체계 구축

4) 기본 구상도



(다) 충북

1) 현황 및 문제점

가) 관문은 급성장, 체류는 정체-경유형 구조 지속

◦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2022년 317만 명 → 2025년 467만 명(국제선 비중 0.1% → 41.6%), 오송역 승하차객 958만 명 → 1,250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충북 여행 1회 평균 여행일수는 1.56일(2025 국민여행조사)에 머물러 관문 성장이 숙박·소비로 연결되지 못함

나) 북부 편중·남부 소외의 권역 불균형과 공간적 단절

◦ 제7차 계획의 “강호축”은 교통SOC 개념에 머물러 광역 관광루트로 구현되지 못하였고, 11개 시·군 중 6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체류 유도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가 지역 존속의 과제로 부상

다) 노후한 관광(단)지·관광특구와 콘텐츠 부재

◦ 관광지 22개소, 관광단지 1개소, 관광특구 3개소 대부분이 2000년 전후 지정되어 리뉴얼이 부재하고, 전반적 관광만족도는 17개 시·도 중 11위로 자원 대비 수용태세 개선 필요

라) 호수·산림·웰니스 자원 대비 낮은 목적지 경쟁력

◦ 757개 호수, 국립공원 3개소, 자연휴양림 18개소와 6년 연속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운영 등 자원 우위에도, 방문객 관심(휴식·힐링 45.6%, 레포츠 39.3%)을 하나의 여정으로 묶는 시그니처 콘텐츠와 체류형 상품 부재

마) 외래관광 부진과 정책 전환기 대응체계 부재

◦ 2024년 충북 방문 외래객 약 267만 명(전국 1.8%)으로 도 단위 최하위권이며, 지역 주도형 K-관광개발(중부권 관광대권·관광소권)·관광권 프로젝트·농촌관광벨트 등 정책 전환에 맞춰 도가 방향·표준·운영체계를 이끄는 추진구도로 전환 필요

2) 비전 및 전략

◇ 충청북도 비전 및 목표 ◇
호수와 숲으로 머무는 치유관광, 충북

◇ 전 략 ◇

1. [SPACE] 고품격 체류 인프라 및 거점 현대화
2. [CONTENTS] 내륙의 바다·백두대간, K-자연 콘텐츠 확충
3. [HUMAN] 로컬 활력 증진 및 글로벌 교류 활성화
4. [PLATFORM] 관광 생태계 고도화 및 미래 성장 기반

3) 전략별 발전방향

가) [SPACE] 고품격 체류 인프라 및 거점 현대화

○ 호수·산림·도심권에 민관 협력형 체류 거점을 균형 배치하고, 노후 관광지와 관광특구를 웰니스·야간·체험형 목적지로 재생하여 권역별 체류·소비 기능을 완성

나) [CONTENTS] 내륙의 바다·백두대간, K-자연 콘텐츠 확충

○ 거점·코스·인증·데이터를 통합한 충북 대표 치유관광 브랜드를 구축하고, 두 치유 벨트를 권역 연결의 실체로 조성하며, 야간·실감미디어 콘텐츠로 숙박 전환을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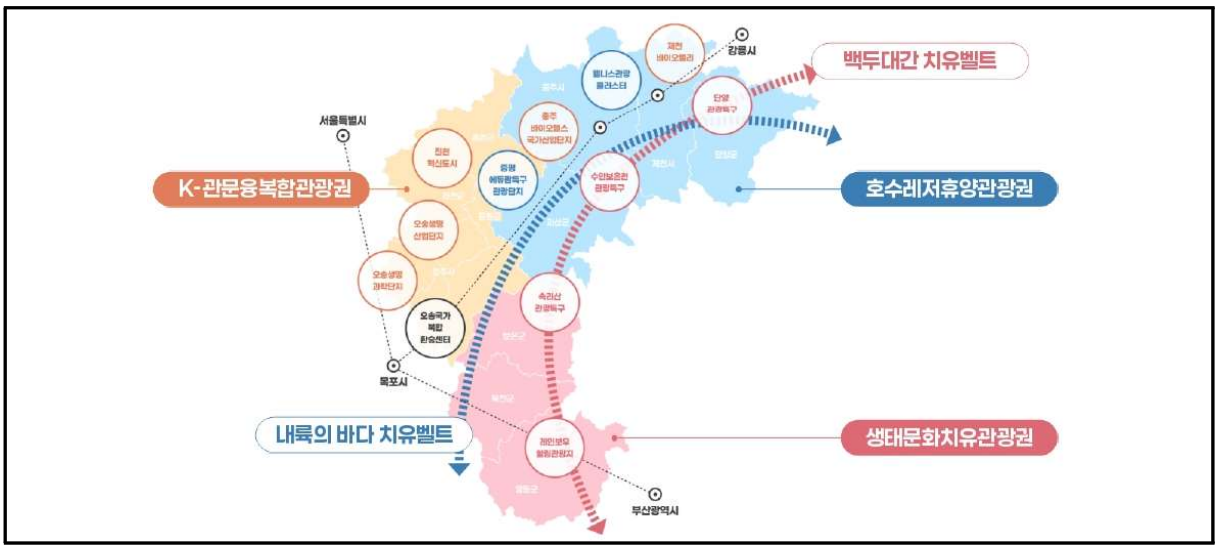
다) [HUMAN] 로컬 활력 증진 및 글로벌 교류 활성화

○ 시·군 축제를 광역 브랜드로 고도화하고, 인문자산 스토리 여정과 주민 주도 생활 관광으로 관계인구를 확대하며, 글로벌 청년 교류와 포용관광 환경을 조성

라) [PLATFORM] 관광 생태계 고도화 및 미래 성장 기반

○ 청주국제공항·오송역을 목적지형 관문으로 재정의하고, 고부가 K-MICE·스마트관광 플랫폼·관광 전담기구 등 실행 기반을 구축

4) 기본 구상도



(라) 충남

1) 현황 및 문제점

가) 단순 방문 관광에서 쉬고 힐링하는 관광으로의 변화에 대한 포지셔닝 필요

◦과거 단순 경관 관람, 명승지 관람 등의 관광 행태에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경험과 휴식을 중요한 방문 요인으로 적용하고 있어 휴식, 웰니스, 치유, 미식, 산책, 명상 등 일상에서 벗어난 감각적·가치적 경험에 대한 관광 수요를 유입할 수 있는 충청남도 관광의 포지셔닝 필요

나) 단기 방문 중심 관광에서 체류·생활관광으로의 전환 필요

◦관광과 일상의 경계가 약화되고 모호해지는 추세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가속화되면서 워케이션, 한 달 살기, 장기체류, 생활관광 등이 확대되면서 관광객은 지역에서의 일상과 문화를 경험하는 가치에 중점을 두는 활동에 대한 선호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

◦충청남도는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의 우수한 접근성으로 당일관광의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체류형 관광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트렌드를 반영하고 다양한 체류 목적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콘텐츠 도입을 통해 체류형 관광 지역으로 전환하는 전략 필요

다) 나만의 경험 중시로 변화하는 관광수요에 대응 필요

◦최근 관광객은 자신만의 관심과 취향, 개성에 따라 여행지를 선택하고 지역의 음식·골목·문화·사람·공동체 등 지역에서의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백제문화, 금강문화, 내포문화, 해양문화, 농촌·산림문화 등 다양성을 공유하고 있는 충청남도만의 특성을 특화한 공간·콘텐츠·상품·프로그램·코스/루트 등의 브랜드 전략화 필요

라) 지방소멸 시대에 필요한 지역관광 소비생태계 구축에 대한 노력 요구

◦충청남도는 공주시, 보령시를 비롯해 9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 내 소비가 정체되고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로 역외유출이 심화되고 있어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지역관광 소비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경제 체계 마련 필요

2) 비전 및 전략

◇ 충청남도 비전 ◇

스쳐가는 곳에서 머무는 곳으로, 대한민국 대표 해륙 휴양 관광도시 충남

◇ 전 략 ◇

1. 글로벌 해양레저생태관광 거점화
2. 오감힐링 휴양관광 특화
3. 체류형 휴양관광 기반 마련
4. 지속가능 융복합 관광콘텐츠 개발
5. 관광환경·편의 기반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

3) 전략별 발전방향

가) 글로벌 해양레저생태관광 거점화

- 차별화된 유형의 해양레저 관광콘텐츠 개발과 관광 환경 구축으로 해양레저관광 거점 기능 강화
- 서천 갯벌과 생태 관광의 대표 이미지를 가진 서천군을 기점으로 천수만과 가로림만까지 연결되는 해양생태관광 사업추진을 통해 글로벌 해양생태관광의 거점화 도모

나) 오감힐링 휴양관광 특화

- 충청남도가 보유한 해양, 갯벌, 산림, 농촌, 생태, 음식, 문화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관광자원과 매력을 활용하여 힐링과 휴양에 특화된 관광 전략 마련
- 충청남도에 특화된 해양 치유, 산림 치유, 치유 농업 등의 치유 자원을 연계·활용하여 콘텐츠 차별화 및 강화하는 사업 추진

다) 체류형 휴양관광 기반 마련

- 체류형 휴양관광의 거점화 목표 달성을 위한 인프라와 공간 조성을 확대하고 지역별·권역별 특화 인프라 및 콘텐츠를 도입하며, 그와 연계한 시스템 및 콘텐츠 도입을 통해 체류형 관광의 활성화를 주도하는 관광자원(시설)으로 육성함

라) 지속가능 융복합 관광콘텐츠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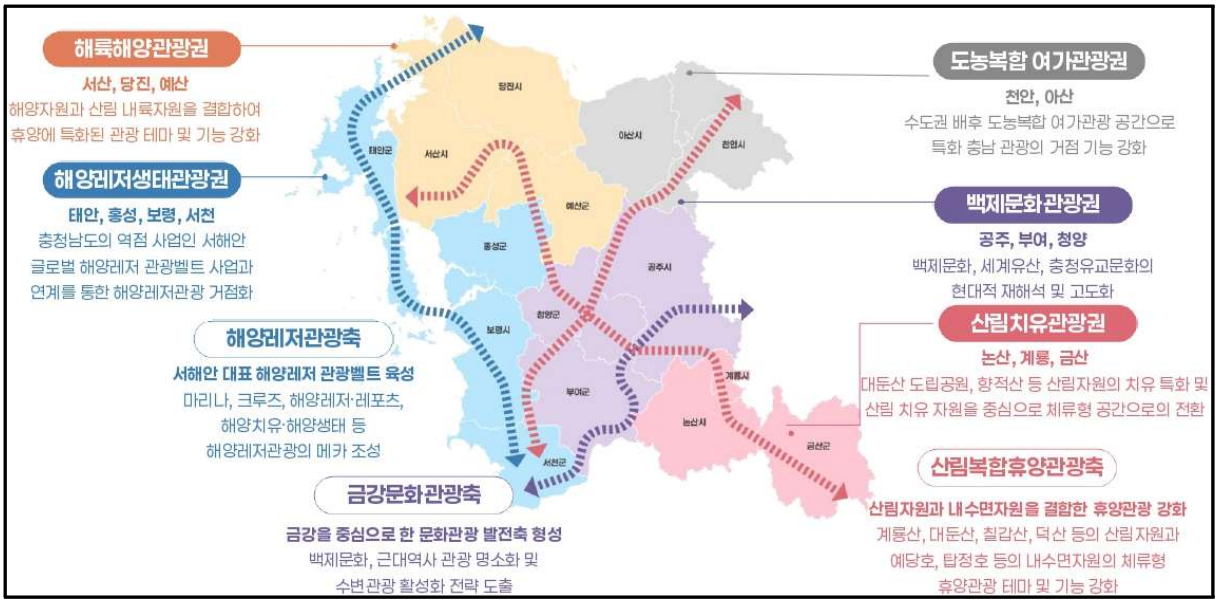
- 충청남도의 생태, 자연, 문화유산 등이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관광 기반의 지역 상생 전략 추진
- 관광자원의 속성 테마별 융복합, 문화·예술·농업·MICE 등 타 산업과의 융복합 등을 통해 관광 산업과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 증대 및 관광객 유입 확대 도모

◦ 체류형 관광지역으로의 전환을 위해 숙박과 콘텐츠가 결합된 공간 리브랜딩, 충청남도 지역만의 체류형 인프라 구축, 야간관광 활성화, 로컬 미식 및 쇼핑 활성화, 생활관광 및 로컬관광의 결합 등 전략 융복합을 통해 체류 관광의 환경 조성

마) 관광환경 · 편의 기반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

◦ 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른 관광 경험 증가로 관광 편의 서비스와 쾌적한 관광 환경에 대한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변화 흐름에 맞춰 관광수용태세 등의 관광 환경 개선을 통해 충청남도 관광의 긍정적인 이미지 확산 도모

4) 기본 구상도



다. 서남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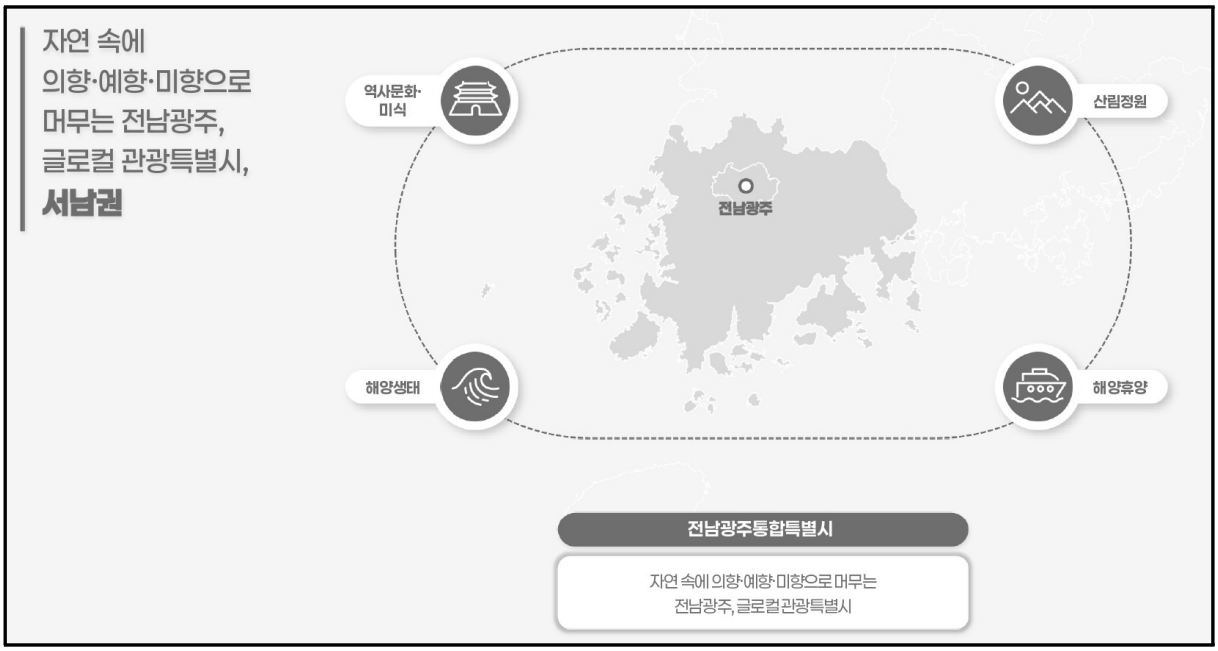
(1) 관광권역 방향성

(가) 목표

◇ 목표 ◇
자연 속에 의향·예향·미향으로 머무는 전남광주, 글로컬 관광특별시

◦ 전국 최대 규모의 해안선·도서·갯벌과 국립공원·세계유산, 도심 문화예술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자원 보유가 고부가 콘텐츠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태로 활용 방식의 전환

◦ 서남권을 대표하는 주요 키워드는 ‘섬·해양관광’, ‘미식·로컬관광’, ‘축제·이벤트’, ‘생태·힐링’, ‘문화·예술’, ‘광역연계·접근성’ 등으로 도출



(그림 9.1.4-3) 서남권 개발방향

(나) 발전방향

1) 해양·생태·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 융복합관광 전환

○ 타 권역과 차별화되는 해양·산림 자원 등 생태 자원을 보전하면서 치유·체험·웰니스 콘텐츠로 고도화하고, 문화예술·MICE 산업과 연계한 광역 관광상품 육성하여 고부가 융복합관광으로 전환

2) 대한민국 대표 의향·예향·미향 관광콘텐츠 활성화

○ 지역별로 운영되던 역사문화·예술·미식 콘텐츠를 남도 브랜드로 연계하여 권역 단위 관광콘텐츠로 활성화

3) 관광 동선 연계를 통한 체류·소비 기반 강화

○ 지점 간 연계로 권역 단위 관광 동선을 구축하고 체류 기반을 확충하여 체류가 지역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 마련

4) 관문 기능 강화와 국제관광 확대

○ 공항·항만의 국제 수용 기능을 정비하고 크루즈 유치와 지역 문화기술·MICE산업 연계 기반을 확충하여 외래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 관문과 광주·전남 관광거점 간 연계를 통해 권역 내 방문 확산

5) 통합 운영체계 구축과 지역 주도 관광생태계 조성

○ AI·관광데이터 기반의 광주·전남 통합 운영과 관광정보·추천·예약 서비스 연계로 여행 전 과정을 연결하는 스마트 관광환경 및 지역 주도의 관광생태계 조성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 현황 및 문제점

1) 해양·생태·문화예술 자원 보유 대비 고부가 관광콘텐츠 전환 필요

○ 전남권은 전국 최대 규모의 해안선·도서·갯벌과 국립공원·세계유산 등 해양·생태·휴양 자원이 풍부하고, 광주권은 ACC·광주비엔날레·5·18·남도미식 등 문화예술·도시형 관광자원을 보유

○ 방대한 자원 보유에도 고부가 콘텐츠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태로 활용 방식의 전환 필요

2) 관광자원 간 연결성 확보를 위한 지점·콘텐츠 연계 강화 필요

○ 전남권은 섬·해양·산림·생태·역사문화·농산어촌자원이 넓게 분포하고, 광주권은 광주송정역을 비롯한 광역교통과 MICE·문화예술·상업서비스가 집중된 도시형 관광거점을 형성

○ 관광지점은 전국에서 가장 많으나 지점당 방문객 수는 전국 평균 이하 수준으로, 일부 지점에 관광객이 집중되는 등 관광자원 간 연결성과 지역별 격차가 존재하여 단일 지점만으로는 방문 유인 확보가 어려워 지점·콘텐츠 간 연계를 통한 보완 필요

3) 체류여건 대비 지역 소비 연계 부족으로 소비 구조 개선 필요

○ 숙박객 비율과 평균 체류시간은 전국 평균 이상인 반면 개별 목적지 단위의 소비 및 숙박 부문 소비 비중은 낮은 수준으로, 체류가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의 보완 필요

4) 국제관광자원 보유 대비 외래관광객 유입 부족으로 수용·연계 기반 강화 필요

○ 무안국제공항을 비롯한 공항·항만 관문과 여수·순천 등 국제 관광거점 보유, 광주권의 K-컬처·문화예술·민주인권 자원과, 전남권의 세계유산·섬·갯벌·해양생태·남도미식 등 외래관광객에게 차별화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함께 존재

○ 방한 외래관광객은 증가하는 반면 권역 방문 비율은 낮은 수준으로, 공항·항만의 국제 수용 기능과 지역 문화기술·MICE산업 연계 기반의 확충 필요

5) 행정통합에 따른 통합 운영 및 지역관광 생태계 기반 구축

○ 통합으로 광주권과 전남권의 자원을 하나의 권역에서 운영할 여건이 마련된 상황으로 통합 운영 관리체계 및 공공·민간·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 기반 마련

(나) 비전 및 전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비전 및 목표 ◇
자연 속에 의향·예향·미향으로 머무는 전남광주, 글로컬 관광특별시

◇ 전 략 ◇
1. 해양·생태·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 융복합관광 전환
2. 대한민국 대표 의향·예향·미향 관광콘텐츠 활성화
3. 관광 동선 연계를 통한 체류·소비 기반 강화
4. 관문 기능 강화와 국제관광 확대
5. 통합 운영체계 구축과 지역 주도 관광생태계 조성

(다) 전략별 발전방향

1) 해양·생태·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 융복합관광 전환

○ 타 권역과 차별화되는 해양·산림 자원 등 생태 자원을 보전하면서 치유·체험·웰니스 콘텐츠로 고도화하고, 문화예술·MICE 산업과 연계한 광역 관광상품 육성하여 고부가 융복합관광으로 전환

2) 대한민국 대표 의향·예향·미향 관광콘텐츠 활성화

○ 지역별로 운영되던 역사문화·예술·미식 콘텐츠를 남도 브랜드로 연계하여 권역 단위 관광콘텐츠로 활성화

3) 관광 동선 연계를 통한 체류·소비 기반 강화

○ 지점 간 연계로 권역 단위 관광 동선을 구축하고 체류 기반을 확충하여 체류가 지역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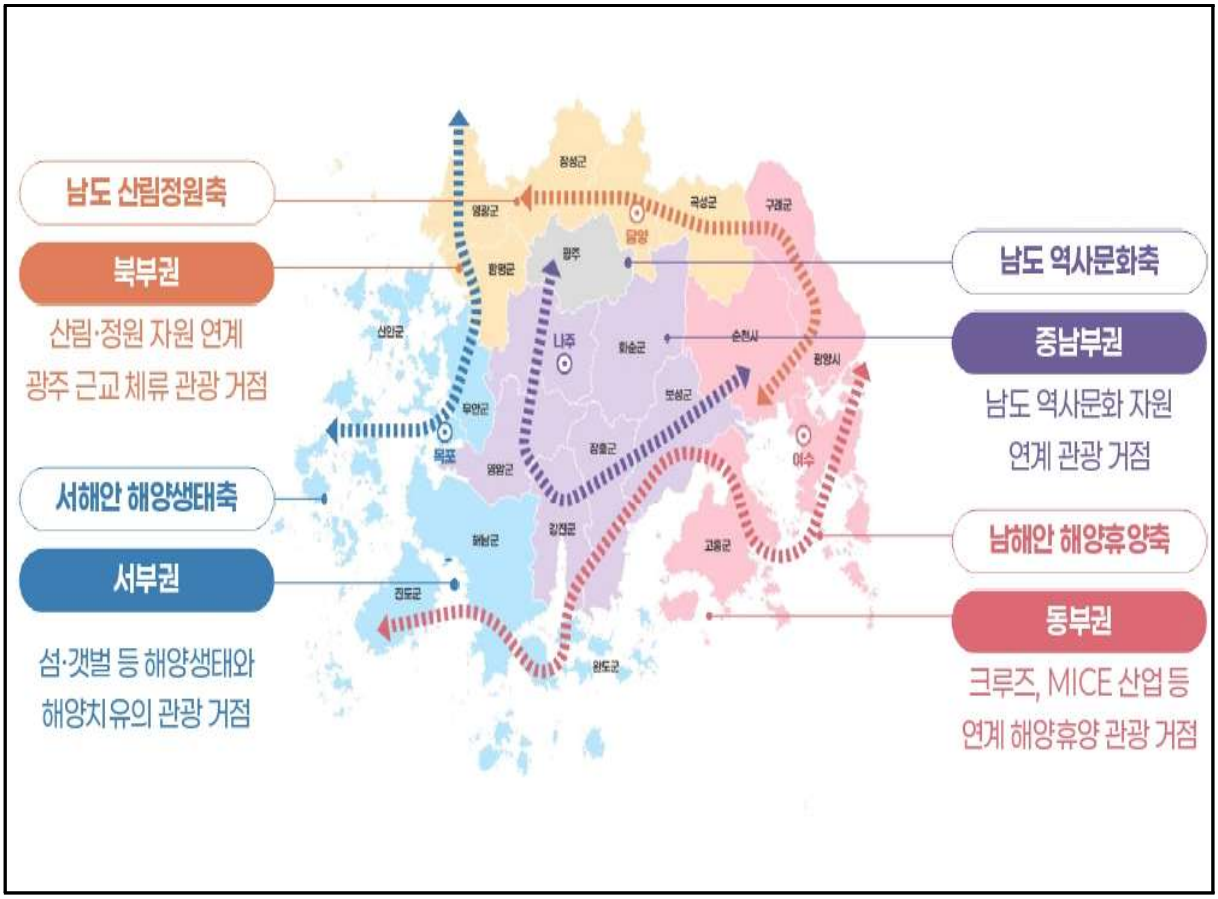
4) 관문 기능 강화와 국제관광 확대

○ 공항·항만의 국제 수용 기능을 정비하고 크루즈 유치와 지역 문화기술·MICE산업 연계 기반을 확충하여 외래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 관문과 광주·전남 관광거점 간 연계를 통해 권역 내 방문 확산

5) 통합 운영체계 구축과 지역 주도 관광생태계 조성

○ AI·관광데이터 기반의 광주·전남 통합 운영과 관광정보·추천·예약 서비스 연계로 여행 전 과정을 연결하는 스마트 관광환경 및 지역 주도의 관광생태계 조성

(라) 기본 구상도



라. 대경권

(1) 관광권역 방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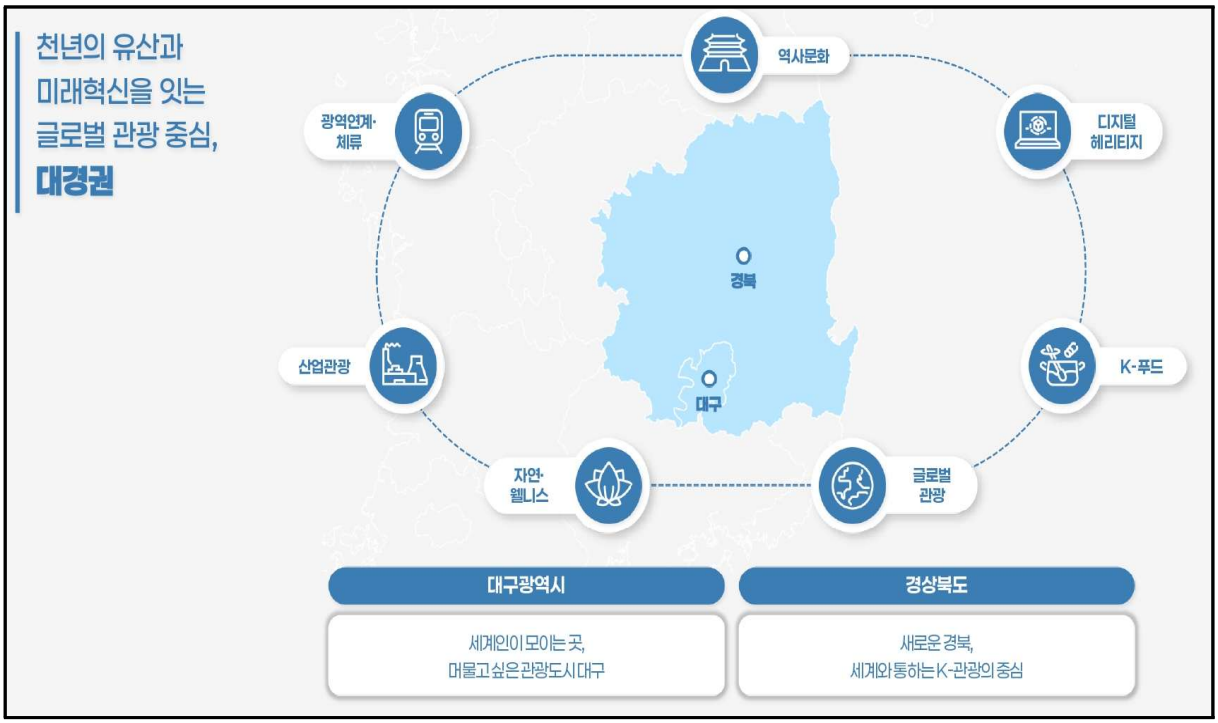
(가) 목표

◇ 목표 ◇
천년의 유산과 미래혁신을 잇는 글로벌 관광 중심, 대경권

○ 대구·경북권은 대구의 국제관문·도시관광·미식·의료웰니스 관광과 경북의 신라·가야·선비문화, 역사문화유산, 동해안·산림·생태관광 등의 관광자원과 기능을 보유

- 대구의 공항·KTX 등 관문 기능과 도시문화·K-푸드 등, 경북의 신라왕경·안동 고택·대가야 등 역사문화자원과 자연·생태관광을 연계하고, 디지털 헤리티지와 미래산업 관광 등을 결합하여 대경권을 하나의 초광역 관광권으로 연결할 수 있는 핵심 기반

○ 대경권을 대표하는 주요 키워드는 '역사문화', '디지털 헤리티지', 'K-푸드', '글로벌 관광', '자연·웰니스', '산업관광', '광역연계·체류' 등으로 도출



(그림 9.1.4-4) 대경권 개발방향

(나) 발전방향

1) 천년 역사문화를 연결하는 K-헤리티지 관광루트 구축

○ 신라왕경·대가야·안동 고택·선비문화 등 경북의 역사문화유산과 대구의 근대문화·예술자원을 연결하여, 대경권의 시대별 역사와 생활문화를 연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광역 역사문화 관광루트 구축

○ 경주·안동 등 개별 관광지 방문에 머물던 역사문화관광을 고택숙박·전통음식·공연·야간관광·지역축제와 결합하고, 경북형 파라도르 등 역사건축물을 활용한 체류형 헤리티지 관광으로 고도화

2) 대구의 도시관광 기능을 활용한 경북 체류관광 확산

○ 대구의 공항·KTX 등 광역교통과 숙박·쇼핑·공연·미식·의료관광 등 도시관광 서비스 기능을 활용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유입 기반을 강화하고, 대구에서 관광정보·편의서비스와 도시형 관광콘텐츠를 통합적으로 제공

○ 대구 도심과 군위·팔공산을 경북의 경주·안동·포항 등 주요 관광거점 및 북부·동해안·남서부 관광권과 연계하여 관광객의 이동 범위와 체류 시간, 지역 소비 확대

3) 천년유산에 미래기술을 더한 혁신관광 콘텐츠 육성

○ 신라왕경 디지털 재현과 AI·실감미디어·메타버스 기반 스마트 해설을 확대하여 역사문화유산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보완하고, 전통유산을 현대적으로 경험하는 대경권 특화 디지털 헤리티지 콘텐츠 육성

○ 대구의 의료·뷰티·공연·스포츠·K-푸드와 경북의 세계유산·웰니스·지역미식을 연계하고, 바이오헬스케어·로봇·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미래산업을 산업견학·MICE·교육·비즈니스 관광과 결합하여 새로운 관광시장 창출

4) 관광성과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는 균형성장 기반 마련

○ 경주·포항 중심의 관광수요를 안동·영주·문경 등 북부권과 백두대간·낙동강·동해안·울릉 등 권역 전반으로 확산하고, 생활관광·워케이션·로컬창업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의 방문인구와 생활인구 확대

○ 기존 관광지·관광단지의 재생과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생태자원 보전과 기후·재난 대응을 병행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성장 기반 구축

(2) 시·도별 전략

(가) 대구

1) 현황 및 문제점

가) 대구 관광 정체성 확립 및 관광 경쟁력 강화 등 관광도시로서의 입지 개선

○ 대구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으나, 경쟁 도시 대비 차별화된 관광 브랜드와 도시 이미지 구축은 미흡한 상황으로 대구만의 관광 정체성 확립이 요구

○ 또한, 개별 관광지 방문 관광 구조에서 벗어나 체류·소비·경험 중심의 관광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권역 내 구·군별 특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동 다변화 전략 마련이 필요

나) 국내·외 관광수요 회복을 위한 관광시장 변화 대응 및 수용 기반 강화 필요

○ 코로나19 이후 대구의 관광객 회복 수준은 타 지역 대비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 및 새로운 관광수요를 반영한 관광 콘텐츠 및 서비스 환경 조성이 요구

○ 주요 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수요분석과 차별화된 관광객 유치 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향후 관광객 증가 및 대구경북신공항 조성 등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숙박시설, 관광 서비스 품질, 안내·편의체계 등 관광산업 전반의 관광 수용 기반 강화 필요

다) 관광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및 통합 관리 기반 강화 필요

○ 대구는 미식, 근대문화, K-컬처, 의료·뷰티, 공연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관광 분야별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분야별 추진 주체와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인 관광산업 진흥에 한계 존재

○ 관광 관련 전담 조직 강화, 공공기관·유관기관·관광산업 간 협력체계 강화하고, 분야별 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종합적 관광정책 추진 기반 마련 필요

라) 도심·외곽 관광자원 연계 및 공간 경쟁력 강화 필요

○ 대구시는 새롭게 편입된 군위군을 포함해 외곽지역의 역사·문화·자연·생태 관광자원 활성화 필요

○ 기존 도심 관광자원 간 연계를 통한 관광객 이동 범위 확대, 권역별 특성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공간구조 마련을 위해 지역 간 연계 동선 구축 요구

마) 디지털 전환 및 지속가능 관광 대응 기반 강화 필요

○ 관광산업은 AI·데이터 기반 서비스, 친환경·지속가능 관광 등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어 대구 역시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관광산업과 신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한 미래형 관광모델 요구

2) 비전 및 전략

◇ 대구광역시 비전 ◇
세계인이 모이는 곳,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 대구

◇ 전 략 ◇
1. 체류형 관광 · 고부가가치 관광 육성
2. 대구 특화 K-컬처 · 랜드마크로 관광도시 인지도 제고
3. 도심과 자연을 연결한 취향 맞춤 관광 구현
4. 초광역 연결과 공항 기반 관광시장 확장
5. 신기술 활용·환경 대응 강화로 지속가능한 미래 관광생태계 구축

3) 전략별 발전방향

가) 체류형 관광 · 고부가가치 관광 육성

○ 대구가 보유한 의료관광·웰니스·MICE·야간관광·체류관광 등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은 관광산업 기반을 활용하고, 체험성 강화 등 관광환경 조성을 통해 관광객의 체류·소비 증대

나) 대구 특화 K-컬처 · 랜드마크로 관광도시 인지도 제고

○ 방한관광 확대 흐름에 대응하고 대구의 외래관광 수요 회복을 위해, 대구의 문화·예술·미식·역사 등 지역 특화 콘텐츠를 고도화하고 연계성을 강화하여 차별화된 관광 브랜드 및 도시 이미지를 구축

다) 도심과 자연을 연결해 타겟별 취향 맞춤 관광 구현

○ 도심의 문화·상권과 외곽의 산림·생태·수변 자원을 연계하고, 세대·관심·여행 목적별 맞춤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하여 대구 관광 활동의 다변화 및 체류 권역을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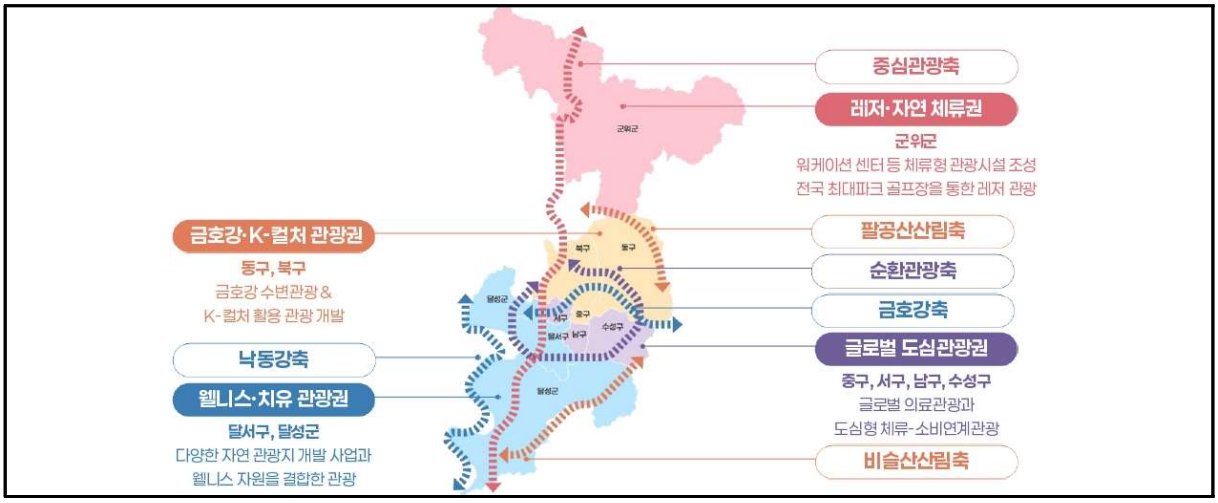
라) 초광역 연결과 공항 기반 인바운드 강화

○ 광역 교통·관광자원 간 연계를 강화해 대구를 대경권 관광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공항을 기반으로 외래관광객 유치 및 글로벌 관광시장 대응력을 강화

마) 신기술 활용·환경 대응 강화로 지속가능한 미래 관광생태계 구축

○ AI·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와 관광산업 간 융합을 추진하고, 관광 전담 조직 및 네트워크 강화, 무장애·기후변화 대응 기반 구축 등을 통해 대구 관광산업 생태계 안정화를 위한 기반 마련

4) 기본 구상도



(나) 경북

1) 현황 및 문제점

가) 최상급 역사문화·생태자원을 실질적 관광성과로 전환하기 위한 가치사슬 고도화 필요

- 신라·유교·가야 3대문화권이 공존하며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전국 최다 수준의 문화유산을 보유한 국내 최대의 역사문화 집적지로서 '한국 속의 한국' 정체성 확보
- 백두대간·낙동강·동해안과 울릉·독도를 아우르는 입체적 생태자원을 함께 보유하여 사계절·전 유형 관광이 가능한 자원 기반 구축
- 다만 자원의 보유가 방문·소비 성과로 충분히 전환되지 못하고 있어, 콘텐츠화·상품화·브랜드화로 이어지는 관광 가치사슬의 고도화 필요

나) 경주·포항 중심의 관광거점 역량을 북부·서부권으로 확산하는 균형발전형 개발 요구

- 경주·포항을 중심으로 한 남동권이 방문수요와 관광기반을 고루 갖추어 경북 관광을 선도하는 검증된 거점으로 기능
- 북부권과 서부권은 유교문화·백두대간 등 우수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접근성과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성장 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는 상황
- 도내 전 시·군으로 관광 파급효과를 확산하기 위한 권역별 맞춤형 균형발전 개발 전략 요구

다) 확대되는 방문수요를 체류와 소비로 연결하는 체류형 관광기반 확충 필요

- 광역 교통망 확충에 힘입어 방문규모가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체험·휴양형 관광자원이 도내 전역에 고르게 분포
- 다만 당일·경유형 방문 비중이 높아 체류일수와 1인당 소비지출이 낮은 편으로, 방문수요를 체류와 소비로 연결하는 구조 전환 필요
- 관광숙박시설이 주요 관광거점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만큼, 통합신공항 개항 이후 늘어날 대규모·고급 숙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체류형 숙박 인프라의 단계적 확충 필요

라) 도 전역에 확보된 관광(단)지 기반의 실효적 활용을 위한 재정비와 민간투자 활성화 요구

- 관광지와 관광단지가 도 전역에 고루 지정되어 향후 관광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적 기반 확보
- 다만 조성계획 대비 미조성 구역이 상당하고 민자 유치와 킬러콘텐츠 확보가 지연된 지구가 있어 사업 완결성 제고 필요
- 신규 조성 중심에서 기존 관광(단)지의 평가·정비·재구조화와 민간투자 유도 중심으로 개발방식 전환 요구

마) 통합 신공항·영일만항의 국제관문 효과를 극대화하는 수용태세 정비와 지속가능 관리 필요

- 통합 신공항 개항과 영일만항 활용, 고속·광역 철도망 확충으로 국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
- 접근성 개선 효과를 실제 방문과 소비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다국어 안내·환승교통·예약결제 등 외래관광 수용태세의 선제적 정비 필요
- 인구감소 대응 정책재원을 관광과 연계하여 지역활력 창출 수단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폭염·집중호우·산불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탄소중립·안전 기반의 지속가능 관광개발 체계 구축 필요

2) 비전 및 전략

◇ 경상북도 비전 ◇	
새로운 경북, 세계와 통하는 K-관광의 중심	
◇ 전 략 ◇	
1. 글로벌 스탠더드 K-관광 허브 구축	2.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 조성
3. 지역 주도 맞춤형 관광 개발	4.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 확충

3) 전략별 발전방향

가) 글로벌 스탠더드 K-관광 허브 구축

- 통합신공항과 영일만항을 항공·해양 양대 국제관문으로 설정하고 광역교통·숙박·MICE·다국어 안내·스마트 관광서비스를 연계한 원스톱 수용태세를 구축하여 세계인이 쉽게 찾고 편안하게 머무는 국제 관광기반 완비
-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축적된 국제적 인지도와 회의 인프라를 글로벌 마케팅 및 국제행사 유치로 연결하여 외래관광 수요를 권역 전체로 확산
- 관광빅데이터와 주요 외래시장 분석에 기반한 표적 마케팅을 전개하고 온라인 유통채널과의 제휴를 확대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지속적 방문 유도

나)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 조성

- 백두대간·낙동강·동해안·울릉 등 생태민감 자원은 환경수용력과 탐방객 분산을 전제로 관리하고 저탄소 관광인프라와 친환경 이동수단을 확충하여 탄소중립 관광모델로 전환
- 무장애·열린관광 환경을 고도화하고 주민참여형 관광사업과 수익공유 구조를 확산하여 관광의 혜택이 지역사회 전체로 환원되는 포용적 관광생태계 구축

다) 지역 주도 맞춤형 관광 개발

◦ 권역 전역을 단일 관광권으로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북부·동해안·남서부의 권역별 핵심자산을 명확히 하고 다핵분산형 거점과 권역 간 연계코스를 통해 관광수요를 균형 있게 분산

◦ 인구감소지역과 재해피해지역은 워케이션·생활관광·회복적 관광·로컬창업과 연계하여 방문인구와 생활인구를 동시에 확대하는 지역활력형 관광개발 추진

◦ 기존 관광(단)지는 전면 재평가를 거쳐 재생·정비 방향을 설정하고 민간투자 유치와 킬러콘텐츠 발굴을 통해 권역별 명품 관광(단)지로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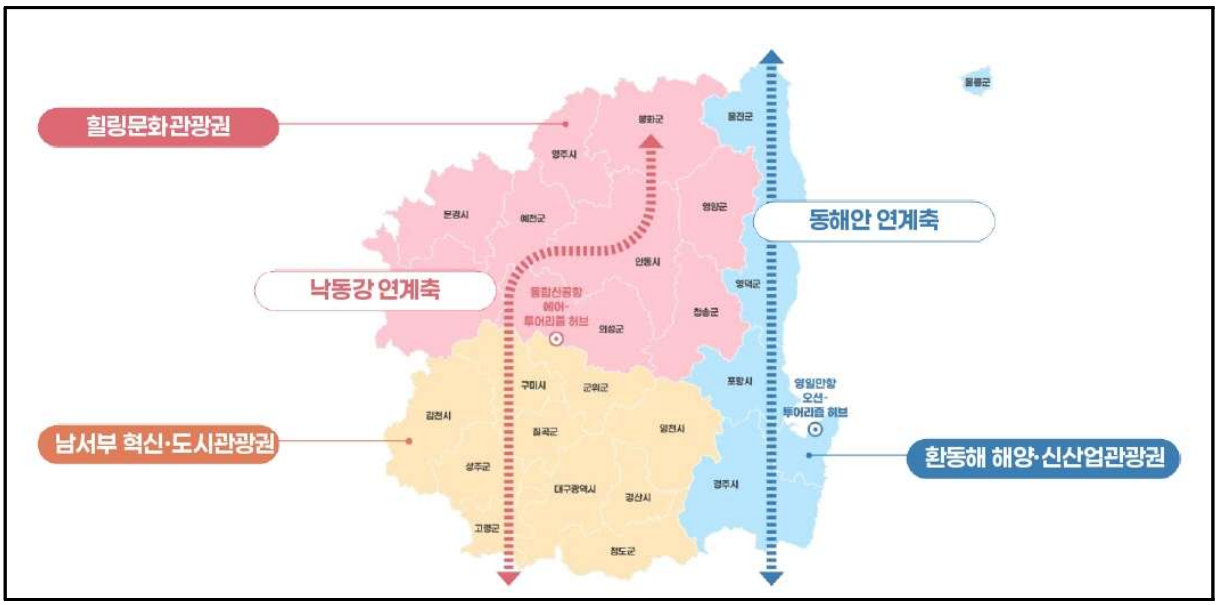
라)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 확충

◦ 세계유산·웰니스·미식을 프리미엄 콘텐츠의 세 축으로 설정하고 관람형 관광에서 체류형·참여형·프라이빗 상품으로 전환하여 관광의 고부가가치화 도모

◦ 실감형 디지털 해설과 다국어 스마트 관광서비스를 결합하여 3대문화권 역사문화 자원의 국제적 접근성과 상품 경쟁력 제고

4) 기본 구상도

◦ 3대 관광권역(힐링문화관광권·환동해 해양·신산업관광권·남서부 혁신·도시관광권), 2허브(통합신공항 에어-투어리즘 허브·영일만 오션-투어리즘 허브), 3대 발전축(백두대간 생태·치유축·낙동강 역사·생활축·동해안 해양·레저축), 4대 연계축으로 구성된 개방형 관광공간구조 설정



마. 동남권

(1) 관광권역 방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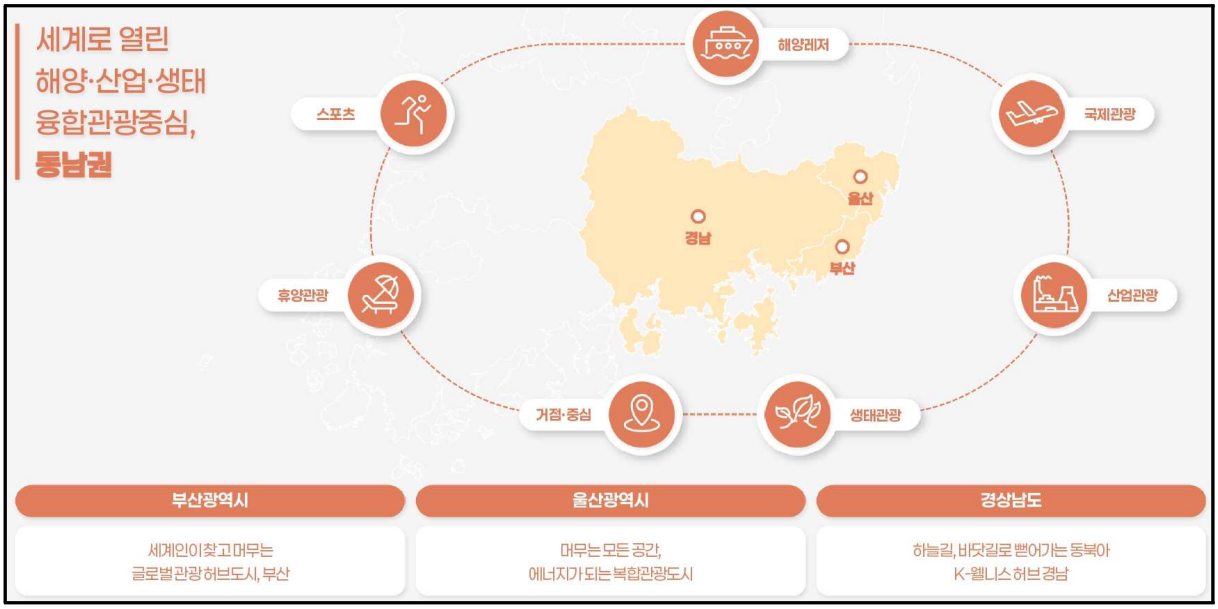
(가) 목표

◇ 목표 ◇
세계로 열린 해양·산업·생태 융합관광 중심, 동남권

○ 부산·울산·경남권은 부산의 국제관문·도시관광, 울산의 산업·생태관광, 경남의 남해안 해양·문화·휴양관광 등 지역별로 차별화된 관광자원과 기능을 보유

- 부산의 해양관광·K-컬처·미식·야간관광, 울산의 산업유산·태화강·영남알프스, 경남의 섬·연안·해양레저·역사문화 등은 동남권을 하나의 초광역 관광권으로 연계할 수 있는 핵심 기반

○ 동남권을 대표하는 주요 키워드는 '해양레저', '국제관광', '산업관광', '생태관광', '거점·중심', '휴양관광', '스포츠' 등으로 도출



(그림 9.1.4-5) 동남권 개발방향

(나) 발전방향

1) 국제관문과 지역거점을 연결하는 초광역 관광생활권 구축

○ 김해국제공항·부산항 등 국제관문과 부산·울산·경남의 주요 관광거점 및 체류지역을 연결하여 관광객의 이동·체류·소비가 행정구역을 넘어 확산되는 초광역 관광공간체계 구축

○ 부산은 국제관문과 도시관광 허브, 울산은 산업·생태·세계유산 융합거점, 경남은 남해안 해양·문화·웰니스 체류거점으로 기능을 특화하고, 광역교통·관광패스·통합관광상품을 통해 하나의 관광목적지로 연계

2) 해양·산업·생태·K-컬처 융합관광 경쟁력 강화

○ 부산의 해양·K-컬처·미식·야간관광, 울산의 산업·생태·세계유산, 경남의 남해안 섬·해양레저·역사문화·웰니스 등 지역별 특화자원을 결합하여 동남권만의 고부가가치 융합관광 콘텐츠 육성

○ 조선·자동차·항만·물류·에너지·항공우주 등 동남권의 성장산업을 견학·체험·교육·MICE 및 디지털 콘텐츠와 연계하여 산업기반을 새로운 관광매력과 미래 관광 성장동력으로 전환

3) 스마트·데이터 기반의 통합 관광목적지 조성

○ 공항·항만·철도와 주요 관광거점 간 광역교통을 연계하고, 초광역 관광패스·관광셔틀·수하물 배송·통합 예약 및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여 여행 전 과정을 연결하는 관광 환경 조성

○ 부산·울산·경남의 관광정보와 이동·체류·소비 데이터를 통합하고, AI 기반 다국어 안내·여행경로 추천·혼잡 예측 등을 통해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관광수요의 권역 내 분산과 효율적인 관광지 관리 지원

4) 체류경제와 지역가치가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관광권 육성

○ 해양레저·스포츠·미식·야간관광·웰니스·워케이션·로컬라이프 등을 결합하여 당일·경유형 관광을 숙박형 관광으로 전환하고, 관광객의 체류시간·지역소비·재방문 확대

○ 주민·상인·청년·로컬기업이 관광상품의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여 관광소비가 지역소득으로 환류되는 구조를 구축하고, 생태·해양·세계유산의 보전, 탄소중립 및 관광수용력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권 육성

(2) 시·도별 전략

(가) 부산

1) 현황 및 문제점

가) 관광수요 증가를 체류·소비 성과로 연결하는 관광산업의 양적·질적 동반성장 필요

○ 외래관광객 증가와 글로벌 여행지로서의 인지도 상승으로 관광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관광경험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

○ 이를 지역 내 체류와 소비로 연결하여 관광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체류기간 연장과 1인당 소비 확대를 중심으로 관광객 규모와 체류·소비성과가 함께 확대되는 양적·질적 동반성장 중심의 관광정책 전환 및 관광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필요

나) 글로벌관문 기능을 체류형 관광수요로 연결하는 목적지 전략 강화

- 항공과 해운, 고속철도, 고속도로가 집결하는 남부권 관문도시로서 우수한 접근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관광객의 유입과 이동을 지원하는 광역교통 기반도 지속적으로 확충
- 유입되는 관광수요를 부산 내 체류와 남부권 연계관광으로 확장하여 국제관문 기능이 단순 유입·경유를 넘어 체류형 관광목적지 및 광역 관광허브 기능으로 확장될 수 있는 전략 강화 필요

다) K-컬처와 부산 고유자산을 활용한 다채로운 관광경험 확장

-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행사와 해양도시 이미지, 영화, 미식, 야간관광 등 다양한 관광자산을 축적하고 있어, 부산의 장소성과 도시문화를 활용한 K-컬처 기반의 유니크한 관광 경험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보유
- 이를 부산 대표 관광경험과 차별화된 도시관광 브랜드로 통합·고도화하여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글로벌 관광목적지로서의 경쟁력 강화 필요

라) 권역 간 관광기능 연계를 통한 관광수요의 지역 균형 확산 필요

- 동부산 주요 해안지역에 집중된 관광수요를 중부산과 서부산으로 확대하고, 각 권역의 관광자원의 특성을 적극 활용 필요
- 지역별 특성을 기반으로 3대 관광권의 기능 분담과 상호 연계 보완을 강화하여 관광객의 이동과 체류를 부산 전역으로 확산하고, 신규 관광 거점과 다양한 관광경험을 확충하여 증가하는 관광수요를 부산 전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관광공간 구조로 전환 필요

마) 관광성장에 대응한 도시수용력 및 통합관리체계 확립

- 관광수요 확대에 따라 주요 관광지역의 혼잡과 주민 생활환경 등 도시수용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역별, 시기별 관광수요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 확대
- 관광객의 이동과 분산, 주민 수용성 및 관광환경 변화를 상시적으로 진단·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관광관리체계 확립 필요
- 다국어 안내, 교통·결제·예약 등 외래관광객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숙박요금 급등·가격 불투명성 등 관광서비스의 신뢰 저해 요인을 개선하여 편리하고 안심하며 머물 수 있는 관광수용태세 확립 필요

2) 비전 및 전략

◇ 부산광역시 비전 ◇
세계인이 찾고 머무는 글로벌 관광허브도시, 부산

◇ 전 략 ◇
1.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누리는 공존형 도시 관광
2. 머무름과 소비가 확대되는 체류 경제형 관광
3. 바다·도시·자연이 연결되는 입체형 관광
4. 광역연계·AI 기반의 미래형 관광

3) 전략별 발전방향

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누리는 공존형 도시 관광

- 생활권의 자연·역사자원을 일상적으로 이용 가능한 여가공간으로 전환하고, 유휴공간과 축제·공연을 상시형 콘텐츠로 고도화하여 관광 기능이 시민의 생활권으로 융화
- 생활밀착형 관광모델을 부울경의 생활권 자원과도 함께 적용하여, 초광역 차원에서도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누리는 공존관광으로 확장

나) 머무름과 소비가 확대되는 체류 경제형 관광

- 해안·항만과 원도심의 유휴공간에 치유·레저·숙박 기능을 복합적으로 집적하여 단순 방문이 소비와 체류로 이어지는 경제구조를 구축
- 부산에서 형성된 해양체류 기반을 남해안 관광망까지 연계함으로써, 남부권 체류경제를 주도하는 글로벌 해양관광 중심지로 도약

다) 바다·도시·자연이 연결되는 입체형 관광

- 해양과 내륙의 관광거점을 보행·수상 인프라로 물리적으로 연결하여 흩어져 있던 개별 관광 공간을 하나의 연속된 관광축으로 전환
- 부산에서 완성된 바다·도시·자연의 관광축을 울산 해안과 경남 낙동강·남해안까지 이어붙여, 남부권 전역을 아우르는 입체관광망으로 완성

라) 광역연계·AI 기반의 미래형 관광

- 인접지역과의 관광 동선을 실질적으로 확충하고 안내·예측·결제 전 과정을 AI·데이터 기반으로 통합하여 이용자 경험을 하나의 서비스로 연결
- 부산에서 구축한 관광시스템을 부울경 공동의 교통·관광데이터와 연계하여, 세계인이 남부권 전역을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체계로 확대

4) 기본 구상도

가) 3대 관광권

- 동부산관광권: 해양관광 집적기반과 해안 및 내륙 휴양기능을 연계한 글로벌 해양체류관광권 육성
- 중부산관광권: 글로벌 관문과 원도심 도시문화 기능을 연계한 복합도시관광권 육성
- 서부산관광권: 낙동강 생태자원과 체류기반을 활용한 신규 관광성장권 육성

나) 3대 Core

- 낙동강 Core: 낙동강 수변자원을 활용한 내륙형 휴양·체험 관광거점 육성
- 다대포 Core: 낙동강 하구와 서부해안을 연결하는 생태·해양 체류관광거점 육성
- 영도 Core: 태종대와 해양경관을 중심으로 힐링·치유 및 체류형 해양관광거점 육성

다) 2대 확장연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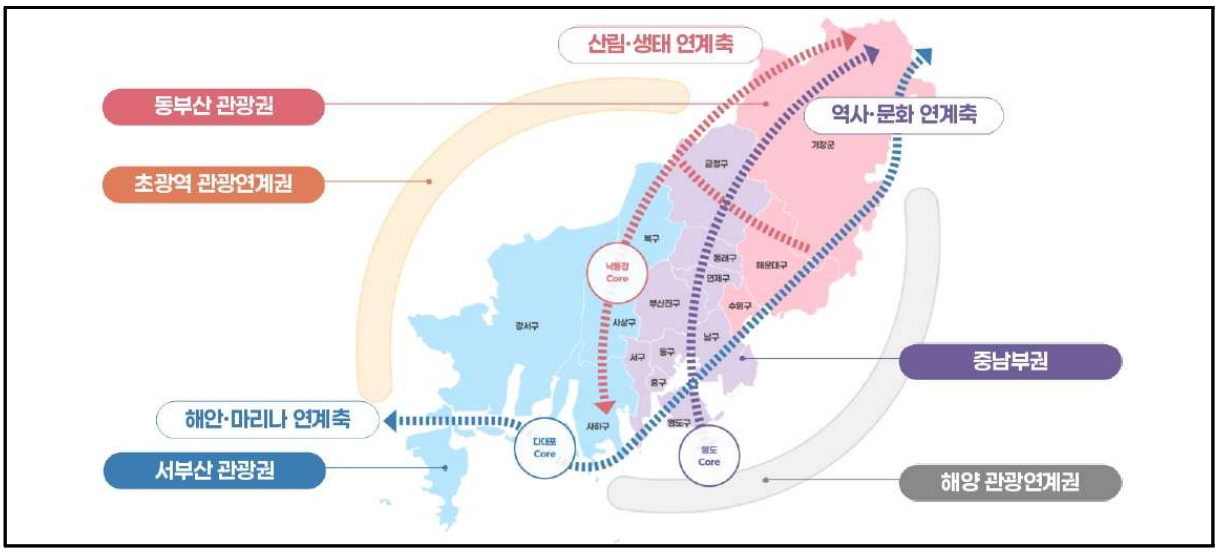
- 해양관광 연계권: 해안 관광거점과 해상교통을 연결한 해양관광 네트워크 구축
- 초광역관광 연계권: 부산, 울산, 경남의 관광거점을 연계한 동남권 초광역관광권 형성

라) 3대 관광자원 연계축

- 해안과 마리나, 산림과 생태, 역사와 문화 자원을 연결하여 권역 간 이동과 관광 연속성 강화

마) AI 기반 관광체계

- 관광정보와 이동 데이터를 통합하여 맞춤형 관광동선과 권역별 수요 분산을 지원하는 AI·데이터 기반 관광 운영체계 구축



(나) 울산

1) 현황 및 문제점

가) 관광수요 회복과 관광자원의 경쟁력 강화에도 불구하고 체류·소비 중심의 관광도시 전환은 미흡

- 코로나19 이후 관광수요가 회복되고 태화강국가정원, 대왕암공원, 영남알프스 등 대표 관광자원의 인지도 확대와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생태·문화유산의 국제적 가치도 상승
- 산업도시 중심의 이미지에서 생태·문화·관광도시로 전환할 여건은 마련되고 있으나, 관광활동은 여전히 개별 관광지와 당일 방문에 집중되어 숙박·체험·야간관광·지역 소비로의 연계가 미흡

나)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에 비해 관광거점 간 연계와 관광동선의 연결성은 미흡

- 울산은 대왕암공원·슬도, 태화강국가정원, 반구천의 암각화, 영남알프스 등 산·강·바다·도시·세계유산을 아우르는 다양한 관광자원 보유
- 그러나 주요 관광거점이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고 관광지 간 대중교통과 관광동선의 연계가 미흡하여 개별 관광자원이 하나의 관광경험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어 울산역·공항 등 주요 관문에서 관광거점까지의 이동과 관광지 간 2차 이동의 편의성 개선이 요구

다) 관광객 중심의 이동·이용 편의 강화와 관광서비스 전반의 질적 개선 필요

- 울산은 광역교통 접근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울산 도착 이후 주요 관광거점까지의 2차 이동과 관광지 간 연계교통이 충분하지 않아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이 낮으며, 여행 전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이용하는 데 한계
- 이에 따라 주요 교통거점과 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교통 및 순환이동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내·예약·체험 등 분산된 관광정보를 통합·연계하여 관광객이 도착부터 이동·관광·체험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서비스 환경을 구축 필요

라) 관광객 방문이 지역소비와 관광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연계구조 미흡

- 울산은 주요 관광지 방문객이 원도심·전통시장·골목상권 등 지역 내 소비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성을 반영한 음식·쇼핑·체험·관광상품 부족
- 이에 관광거점과 지역상권을 연계하고 주민·상인·청년·관광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소비와 관광산업 성장이 선순환하는 관광생태계 강화 필요

마) 세계유산·생태관광 확대에 대응한 글로벌 관광수용태세 및 지속가능한 관광관리 강화 필요

-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등으로 울산의 국제관광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으나, 외래관광객 수용태세와 관광자원 보전·관리체계는 여전히 보완 필요
- 향후 국제관광 콘텐츠와 이동·이용 편의를 강화하는 동시에 친환경 이동, 분산관광, 자원보전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갖춘 관광도시 육성 요구

2) 비전 및 전략

◇ 울산광역시 비전 ◇

머무는 모든 공간, 에너지가 되는 복합관광도시 울산「Ulsan, Stay Energized」

◇ 전 략 ◇

1. (편리한 관광, Seamless Smart) 관광 이동을 연결하는 스마트·무장벽 관광환경 구축
2. (함께하는 관광, Value Share) 관광가치가 지역에 환류되는 로컬 관광경제 구축
3. (지속가능한 관광, Net-Zero Eco) 보전과 성장이 공존하는 재생형 관광도시 구축
4. (잇는 관광, Hyper-Connect) 핵심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통합 관광목적지 구축
5. (머무는 관광, Deep Stay) 체류시간과 소비를 확대하는 체류경제형 관광도시 구축
6. (견인하는 관광, Tourism Anchor) 복합관광거점 중심의 관광수요·투자 견인 기반 구축

3) 전략별 발전방향

가) 관광 이동을 연결하는 스마트·무장벽 관광환경 구축

- (관광객 관점의 Seamless Journey 구현) 관광객의 접근·이동·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단절을 최소화하여 도착부터 관광까지 끊김 없는 관광여정을 구현
- (스마트·포용형 관광수용태세 고도화) 디지털 전환과 관광수요 다양화에 대응하여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스마트·유니버설 관광서비스 체계 확립

나) 관광가치가 지역에 환류되는 로컬 관광경제 구축

- (관광가치의 지역 내 선순환 구조 강화) 관광수요와 소비가 지역상권·기업·주민으로 확산되어 관광의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지역에 축적되는 구조로 전환
- (지역주도형 관광생태계 확장) 시민·청년·기업·로컬 주체의 참여와 협업을 확대하여 지역이 관광의 생산자이자 수혜자가 되는 관광생태계 조성

다) 보전과 성장이 공존하는 재생형 관광도시 구축

- (보전에서 가치재생으로 지속가능 관광 전환) 생태·세계유산 등 핵심자원의 보전과 활용을 조화시키고 관광을 통해 환경·문화·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재생관광 지향
- (글로벌 수준의 Destination Stewardship 강화) 탄소중립, 관광수용력, 주민참여 등 지속가능성 원칙을 관광개발 전반에 적용하여 책임 있는 국제 관광목적지 관리체계 구축

라) 핵심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통합 관광목적지 구축

○ (개별 관광지에서 네트워크형 관광공간으로 전환) 분산된 관광거점의 기능과 정체성을 강화하고 자원·콘텐츠·동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도시 전체가 하나의 관광목적지로 작동하는 구조 구축

○ (지역을 넘어서는 광역 관광네트워크 확장) 울산 내부 권역 간 연결을 넘어 주변 도시와 관광시장까지 연계하여 울산의 광역관광 허브 및 결절기능 강화

마) 체류시간과 소비를 확대하는 체류경제형 관광도시 구축

○ (방문경제에서 체류경제(Stay Economy)로 전환) 관광정책의 중심을 방문객 수에서 체류시간·숙박·소비·재방문으로 전환하여 머무는 시간이 지역의 가치가 되는 관광구조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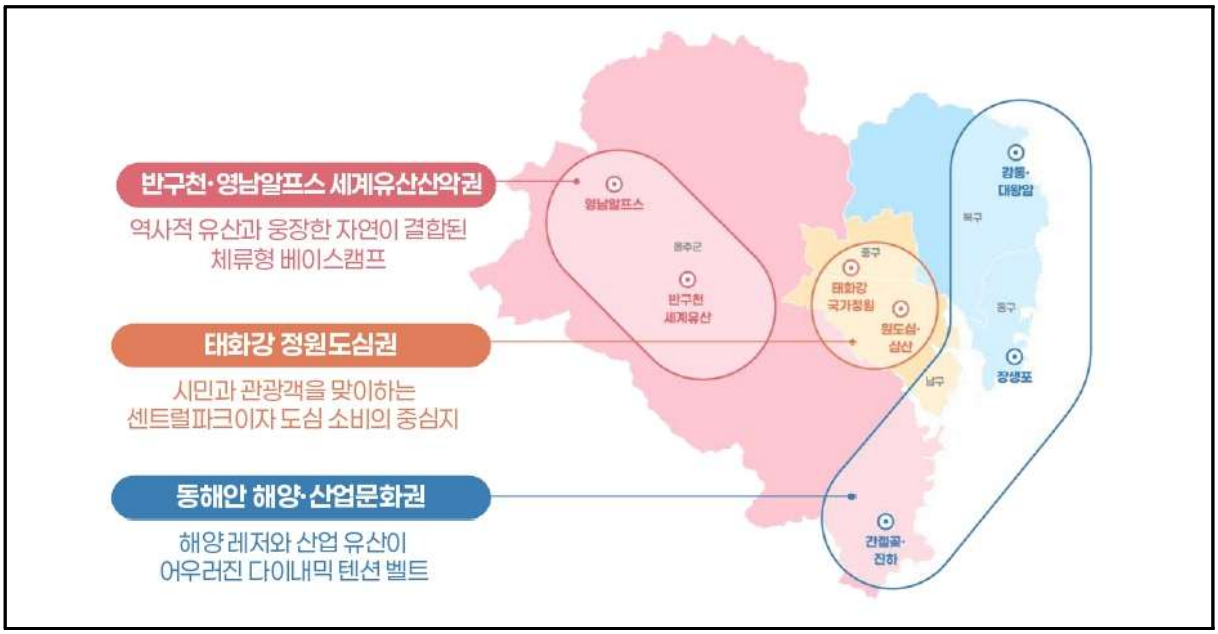
○ (시간과 경험을 확장하는 체류콘텐츠 고도화) 야간·미식·웰니스·레저·문화 등 경험 요소를 융합하여 낮에서 밤으로, 당일에서 숙박으로 관광시간과 경험영역을 확장

바) 복합관광거점 중심의 관광수요·투자 견인 기반 구축

○ (전략적 Tourism Anchor 중심의 성장거점 육성) 관광수요와 체류기능을 집적할 수 있는 핵심거점을 선택적으로 육성하여 울산관광의 집객력과 목적지 경쟁력을 강화

○ (투자와 지역성장을 확산하는 관광성장축 구축) 전략거점에 대한 공공·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그 파급효과를 주변 관광권역과 지역경제로 확산하여 울산관광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

4) 기본 구상도



(다) 경남

1) 현황 및 문제점

가) 방문수요에 비해 체류형 관광환경이 부족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제한

- 풍부한 자원과 높은 방문수요에도 숙박·야간관광·체험·음식·지역 내 이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당일·경유형 관광이 지속
- 감성숙소, 워케이션, 반려동물 동반여행, 장기체류 등 세분화된 수요에 대응하는 체류 기반 확충이 필요

나) 관광수요의 지역·계절 편중과 신규 관광시장 유입 부족

- 자연경관, 해양관광, 계절형 축제와 일부 시·군에 수요가 집중되고 인접지역 중심의 방문구조가 형성
- 수도권·외래관광객·청년층·장기체류객 등 신규시장을 개척하고 관광효과를 경남 전역으로 확산할 필요

다) 개별 관광자원 중심 개발로 권역 연계와 통합 브랜드가 미흡

- 관광자원이 시·군 및 개별 관광지 단위로 활용되어 자원 간 연계효과와 경남 전체의 차별적 이미지형성이 제한적
- 남해안권·지리산권·가야문화권·낙동강권의 스토리와 관광루트를 연결하고 통합 브랜드 강화 필요

라) 시·군별 정책·사업추진 역량 차이와 지역 내 관광소비 순환구조 부족

- 18개 시·군의 재정·전담인력·정책역량 차이가 관광서비스 품질과 사업성과의 편차 발생
- 도의 조정·지원 기능과 시·군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로컬업체가 참여하여 관광소비가 지역소득으로 환류되는 구조 마련

마) 기후위기·재난·환경규제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필요

- 해양·섬·산림·하천 자원 비중이 높아 태풍, 폭염, 산불 등 기후위기와 전염병·안전사고에 취약하며 환경규제로 사업 장기화 가능성도 존재
- 예방-대응-회복의 위기관리와 저밀도·친환경·주민참여형 개발방식 전환 필요

2) 비전 및 전략

◇ 경상남도 비전 ◇

하늘길, 바닷길로 뻗어가는 동북아 K-웰니스 허브 경남

◇ 전 략 ◇

1. 글로벌 관문 연계 세계 수준의 관광인프라·콘텐츠 경쟁력 강화
2. 경남형 관광매력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 브랜드 가치 제고
3. 여행에서 생활로 이어지는 경남형 체류관광 활성화
4. 관광소비의 지역 내 순환을 통한 도민 체감형 경제효과 확대

3) 전략별 발전방향

가) 글로벌 관문 연계 세계 수준의 관광인프라·콘텐츠 경쟁력 강화

- 공항·항만·철도 등 광역교통망과 관광거점을 연계하고, 기존 관광지의 노후시설·콘텐츠·체류기능을 재정비
- 남해안 해양관광, 세계유산·역사문화, 산림·웰니스 자원을 고품격 복합콘텐츠로 육성하며 AI 기반 다국어 안내, 맞춤형 코스, 통합 모빌리티 등 스마트 수용태세를 강화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편리하게 방문·체류할 수 있는 기반 구축

나) 경남형 관광매력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 브랜드 가치 제고

- 남해안권·지리산권·가야문화권·낙동강권의 대표자원을 특화관광거점으로 육성하고 주변 관광지, 축제, 지역상권을 하나의 광역관광상품과 루트로 연결
- 시·군 및 인접 지자체와 초광역 관광벨트·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고, 남해안·세계유산·웰니스를 경남의 핵심 이미지로 통합 브랜드화하여 국내외 인지도와 시장 확장성 도모

다) 여행에서 생활로 이어지는 경남형 체류관광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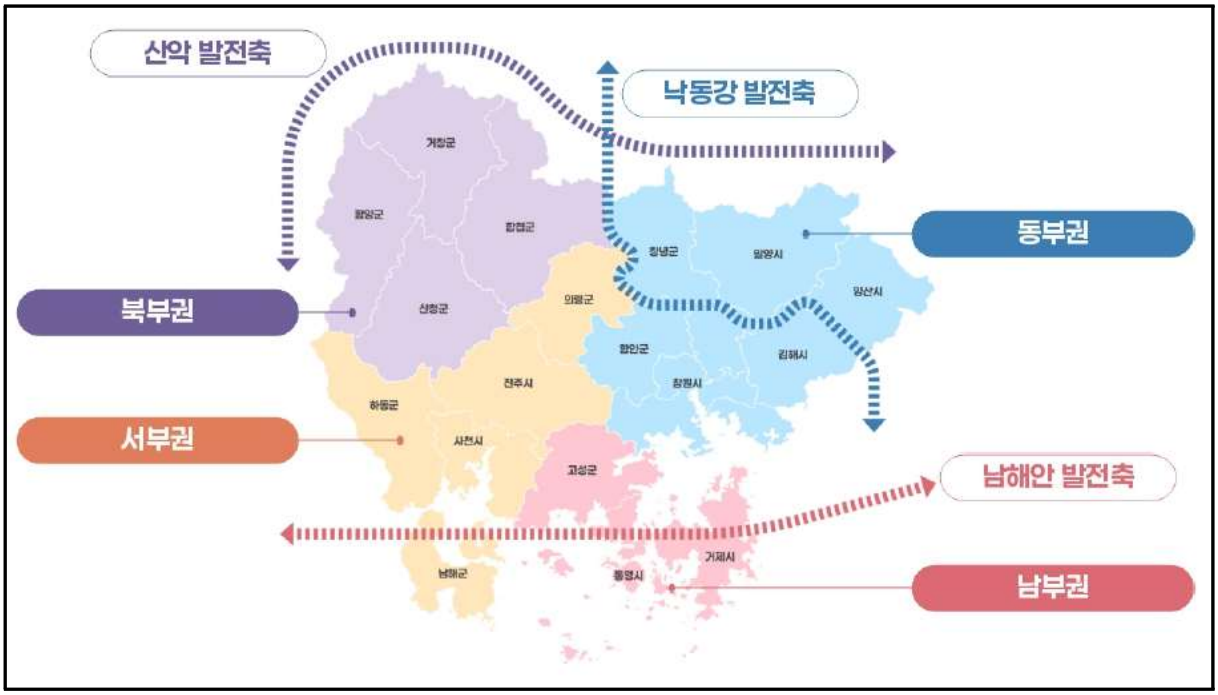
- 웰니스·치유, 농어촌·로컬라이프 체험, 워케이션, 반려동물 동반여행 등 변화하는 수요에 맞춘 생활밀착형 프로그램과 체류공간을 확충
- 숙박·야간관광·미식·체험 등을 결합한 체류형 상품으로 방문객의 체류시간과 재방문을 늘리고, 지역의 일상과 관계를 형성하는 관계인구·생활인구로 전환하여 지역 활력 증진의 선순환 구축

라) 관광소비의 지역 내 순환을 통한 도민 체감형 경제효과 확대

- 지역주민, 로컬업체, 상인, 청년창업자, DMO가 관광상품의 기획·운영에 참여하도록 하고 전통시장·로컬푸드·특산품·문화예술·축제를 숙박·체험·쇼핑과 연계

◦ 관광소외지역에는 소규모 체류공간과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소비를 경남 전역으로 분산하며, 시·군 역량 지원과 성과관리로 관광소비가 주민소득과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환류 도모

4) 기본 구상도



바. 강원권

(1) 현황 및 문제점

(가) 강원자치도 특별법을 통한 효율적 규제 완화 및 관광개발 여건 개선

◦ 산림이용진흥지구, 농촌활력촉진지구, 환경영향평가 특례,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 등을 통한 효율적인 관광개발·활용 가능

◦ 지역별 특성화된 이미지를 활용한 관광활성화 방안 모색

(나) 강원특별자치도 주도의 5+1 첨단전략산업 집중육성

◦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미래에너지, 푸드테크, ICT 등 중점 육성 산업과 융복합한 강원형 관광자원 및 체험형 콘텐츠 개발 필요

◦ 강원이 지닌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강원관광의 분야 개발

(다) 철도 SOC 확충을 통한 접근성 향상

- 2025년 동해선 ITX 개통에 이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동해북부선(강릉~제진역) 개통, GTX-B 춘천연장, GTX-D 원주신설 등이 계획되어 있어 국내외 관광객들의 지속적인 접근성 개선 기대
- 광역 교통망을 활용한 지자체 및 주요 관광자원 연계를 통하여 강원특별자치도를 하나의 관광권으로 확대 조성

(라) 계절적 편중화 해결을 위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필요

- 여름 · 겨울에 관광 콘텐츠가 집중되어 있고, 봄 · 가을 콘텐츠는 상대적으로 약한 현상을 보이고 있어, 관광객들의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문제 발생
- 강원특별차지도의 자연 · 관광 · 문화자원 연계 모색 및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지역특화형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변화하는 관광수요 대응 필요

(마)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 글로벌 인프라 조성 필요

- 시설 노후화에 따라 쾌적한 시설을 찾는 수요에 대한 대응력 약화
- 숙박형 관광개발을 통한 관광객의 체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광 인프라 확충 및 지속적인 시설정비 · 재생사업 · 모니터링을 통한 관광수용태세 정비 필요

(2) 비전 및 전략

◇ 강원특별자치도 비전 ◇
다양한 강원다움으로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

◇ 전 략 ◇
1. 강원형 생태관광 힐링 브랜드 구축
2. 기존 관광자원 · 로컬감성의 활용 및 고도화
3. 융복합형 관광생태계 구축 및 연계 · 협력체계 구축
4. 글로벌 체류형 복합관광지 조성 및 콘텐츠 발굴
5. 지속가능한 관광환경 구축

(3) 전략별 발전방향

(가) 강원형 생태관광 힐링 브랜드 구축

- 강원이 지닌 풍부한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자연 속에서 힐링,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 콘텐츠를 구축하여, 생태관광의 다양한 매력적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거점으로 도약

(나) 기존 관광자원 · 로컬감성의 활용 및 고도화

◦ 기존 강원자원이 지닌 특색 발굴 및 활용을 통하여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 자산 기반의 유무형 레거시 활용을 통한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 확보

(다) 융복합형 관광생태계 구축 및 연계 · 협력체계 구축

◦ 관광산업과 강원의 문화 · 역사 · 산업 · 미식자원과의 융복합을 통하여 강원 정체성을 콘텐츠화하고, 관광자원 및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강원관광의 다양화 및 차별성 확보

(라) 글로벌 체류형 복합관광지 조성 및 콘텐츠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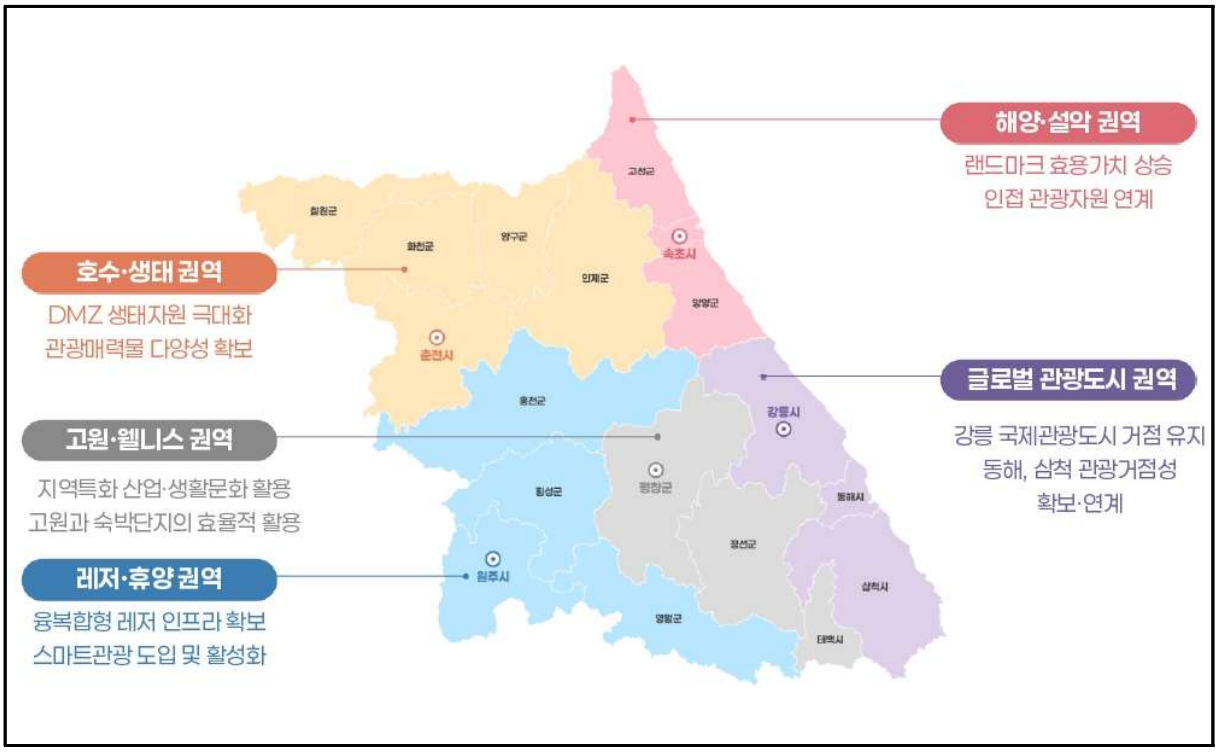
◦ 글로벌 관광 수용태세 구축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도모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발굴 및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

(마) 지속가능한 관광환경 구축

◦ 지속적인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관광객들에게 관광활동 편의성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 참여 모델 도입을 통하여 안정적인 관광개발 및 운영 확보

(4) 기본 구상도

◦ 소권 지정 기준 : 관광자원 연계성, 생활권, 교통망



사. 전북권

(1) 현황 및 문제점

(가) 내국인·전주권 중심 관광구조로 글로벌 관광시장 확대에 한계

○ 전북 관광은 전주한옥마을 등 일부 대표 관광지와 내국인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외래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안내·상품 유통·MICE 기반 등이 충분하지 않아 세계유산과 새만금 등 글로벌 관광자원의 국제관광 수요 전환 필요

(나) 풍부한 관광자원에 비해 융·복합형 관광콘텐츠의 경쟁력 미흡

○ 음식·발효·역사문화·생태·산악·해양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체류형 관광콘텐츠가 부족해 관광객 체류시간과 소비지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계절형·관람형 관광에 편중되어 있어 자원 간 연계와 체험·미식 분야를 결합한 야간·실감·웰니스·치유관광 콘텐츠 고도화 필요

(다) 관광수요와 기반시설의 지역·계절 편중으로 로컬관광 확산에 한계

○ 관광수요가 전주권과 봄·가을 등 특정 지역·시기에 집중되고 숙박·편의시설과 관광사업체도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14개 시·군의 고유한 산악·생태·수변·해양·생활문화 자원을 차별화된 관광브랜드와 지역거점으로 육성 필요

(라) 당일·단기 방문 중심의 관광구조로 체류와 소비 확대가 제한적

○ 전북 방문객은 당일 또는 1박 2일 중심의 단기 체류형 행태를 보이고 숙박·여행업 분야의 관광 소비 비중도 낮아, 숙박·야간관광·상권·교통·체험을 연계하여 관광객의 이동과 체류, 소비 및 재방문으로 이어지는 관광상품 체계 구축 필요

(마) 관광지 간 연계 교통체계 미흡으로 광역 관광교통망 구축 필요

○ 동부 산악권과 농촌지역은 자가용 중심 이동 의존도가 높아 외래관광객과 고령층 관광객의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으며, 광역 순환형 관광교통 체계도 미흡한 상황으로 새만금·전주권·동부산악권을 연결하는 광역관광교통망 확충 필요

(2) 비전 및 전략

◇ 전북특별자치도 비전 및 목표 ◇
전북의 맛과 쉼, 세계가 찾는 전북관광

◇ 전 략 ◇

1. 세계 찾는 전북관광 기반 구축
2. 맛·쉼·문화 관광콘텐츠 고도화
3. 전북형 로컬관광 자원 브랜드화
4. 체류·재방문 관광상품 개발
5. 지속가능·편리한 관광수용태세 확립

(3) 전략별 발전방향

(가) 세계가 찾는 전북관광 기반 구축

○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과 MICE산업을 육성하고 세계유산·관광특구·새만금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전북 관광시장을 국내 중심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고 국제관광 거점으로서의 경쟁력 강화

(나) 맛·쉼·문화 관광콘텐츠 고도화

○ 전북의 음식·발효·역사문화 자원에 웰니스·치유, 야간관광, 실감콘텐츠 및 축제를 결합하여 전북다운 관광경험을 창출하고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관광 만족도 제고

(다) 전북형 로컬관광 자원 브랜드화

○ 14개 시·군의 대표 관광지와 산악·생태·수변·해양 등 지역 고유자원을 발굴·연계하여 차별화된 전북형 관광브랜드로 육성하고 지역별 관광거점의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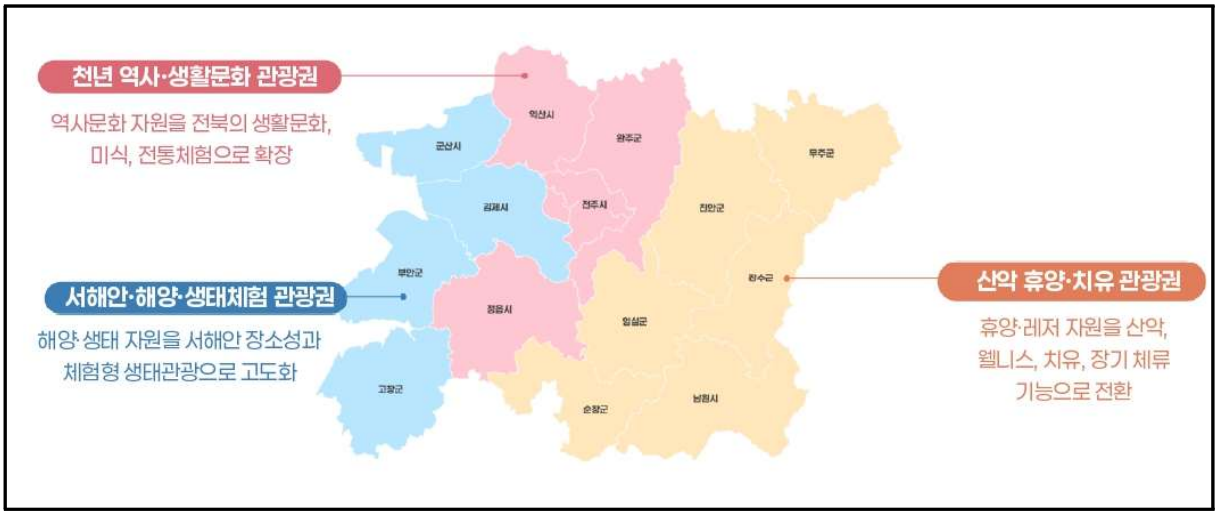
(라) 체류·재방문 관광상품 개발

○ 숙박·스테이 거점과 체류형 관광상권을 확충하고 투어패스, 반값여행, 투어버스 및 관광길 등 이동·소비 연계상품을 활성화하여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 재방문이 이어지는 관광경제 구조 확립

(마) 지속가능하고 편리한 관광수용태세 확립

○ 관광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고 무장애·안전·서비스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관광기업과 전문 인력 육성 및 주민상생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4) 기본 구상도(안)



아. 제주권

(1) 현황 및 문제점

(가) 관광시장 구조 및 관광행태 변화

○ 내국인 개별여행객, 외국인 관광객, 크루즈 관광객 등 관광수요가 다양화되고, 유럽·북미 등 구미주 시장까지 관광시장 다변화가 진행 중

※ 2026년 9월 기준 크루즈 입도객 누적 규모 50만 명 상회

○ 관광객 수 중심에서 체류기간·관광소비·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질적 성과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시장별 특성과 소비행태를 반영한 대응체계는 지속적인 고도화 필요

※ 2026년 7월 제주 전체 카드 소비금액 3,851억 원, 외국인 카드 소비금액 733억 원

(나) 자연경관 중심 관광구조와 콘텐츠 다양화 한계

○ 제주는 청정 자연환경과 생태·문화자원을 기반으로 관광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여전히 자연경관 관람 중심의 관광 비중이 높은 상황

○ 웰니스·MICE·스포츠·미식·문화·체험 등 관광수요가 다양화됨에 따라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체류형·고부가가치 관광콘텐츠 확충 필요

(다) 디지털 관광환경 확산과 관광산업 혁신 요구

○ 관광정보 탐색·예약·이동·소비 등 여행 전 과정의 디지털화와 AI 기술 확산으로 관광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

○ 제주 관광 AX 대전환, AI 기반 글로벌 제주관광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 중이나 관광데이터의 연계·분석과 AI 기반 맞춤형 관광서비스의 고도화 필요

(라) 지속가능성 및 섬 지역 특성에 따른 관광정책 과제

○ 관광산업 성장과 함께 환경보전, 교통·생활환경 부담, 주민수용성 등 관광객·업계·지역주민 간 공존과 상생의 중요성이 확대

○ 항공·해운에 의존하는 섬 지역 특성상 육지부 초광역 관광권과 접근여건이 상이하여 제주의 독립적인 관광권과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 필요

(2) 비전 및 전략

◇ 제주특별자치도 비전 ◇
도민과 여행자 모두가 행복한 글로컬 여행지 제주

◇ 전 략 ◇

1. 관광 육성으로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과 지속가능성 강화
2. 치유와 함께하는 지역관광체계 확립으로 새로운 관광산업생태계로 도약
3. 청정이미지를 담은 지역고유자산을 활용한 특화관광 육성
4. 참여와 공존을 통한 지역관광 혁신역량 제고

(3) 전략별 발전방향

(가) 책임관광 육성으로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과 지속가능성 강화

- 관광객·업계·주민 간 공존과 상생을 기반으로 관광소비·지역경제 기여 등 질적 성장 중심의 관광체계 확립
- 자연·문화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기본으로 관광정보 안내, 관광객 분산, 위기대응 등 책임관광 수용태세 강화

(나) 치유와 함께하는 지역관광체계 확립으로 새로운 관광산업생태계로 도약

- 청정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힐링·웰니스 등 변화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고, 문화·미식·스포츠·MICE 등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 관광과 지역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여 관광소비가 지역경제와 주민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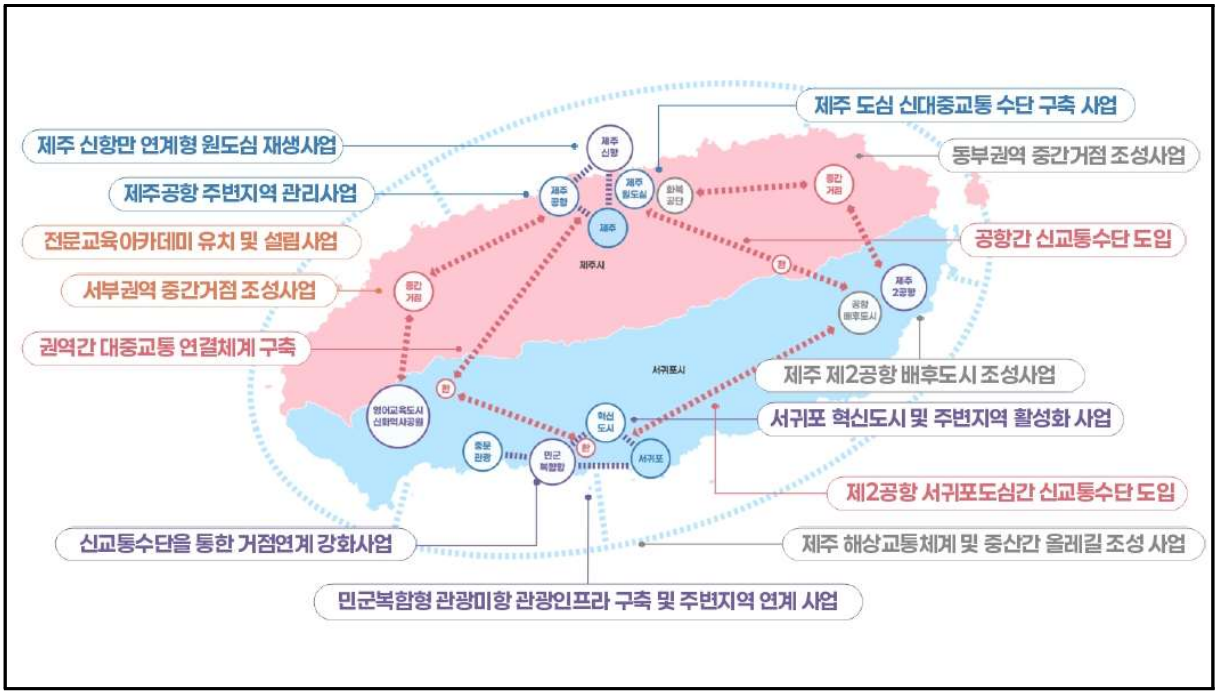
(다) 청정이미지를 담은 지역고유 자산을 활용한 특화관광 육성

- 자연·생태·해양·문화·마을 등 제주 고유자원을 활용한 체험·콘텐츠 중심의 특화관광 육성
- AI·디지털 기술을 관광정보 및 콘텐츠와 접목하여 관광객 편의성을 높이고 제주 특화 관광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라) 참여와 공존을 통한 지역관광 혁신역량 제고

- 주민·관광사업자·지역기업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여 지역 주도의 관광역량과 관광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
- AI·데이터 기반 관광시장 분석과 시장별 맞춤형 마케팅을 통해 관광시장 다변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4) 기본 구상도(안)


제주 도심 신대중교통 수단 구축 사업
제주 신항만 연계형 원도심 재생사업
동부권역 중간거점 조성사업
제주공항 주변지역 관리사업
전문교육아카데미 유치 및 설립사업
공항간 신교통수단 도입
서부권역 중간거점 조성사업
권역간 대중교통 연결체계 구축
제주 제2공항 배후도시 조성사업
서귀포 혁신도시 및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
제2공항 서귀포도심간 신교통수단 도입
신교통수단을 통한 거점연계 강화사업
제주 해상교통체계 및 중산간 올레길 조성 사업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광인프라 구축 및 주변지역 연계 사업

9.2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 국가 환경정책과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2027~2031)에 제시된 환경계획에 대한 부합성을 검토하였음

9.2.1 국가 환경 정책

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1) 개요

(가) 수립 시기 : 2019년 12월

(나) 목적

○ 인구 감소, 기술 혁신과 저성장 시대 등 사회·경제적 전환에 대비하여 국가환경정책의 방향을 모색해야 함

○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 통합 물관리, 환경정의, 국토-환경계획의 통합관리 등 새로운 환경정책 수요를 반영한 국가환경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해야 함

○ 최상위 국가환경종합계획으로서의 위상 정립과 실효성을 제고해야 함

○ 사회·경제적 전환과 새로운 환경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새롭게 수립함

(다) 근거 법령 : 「헌법」 제35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 「헌법」 제35조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주요 내용

(가) 생태계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토 생태용량 확대

○ 국토환경 연결성 확보와 자연회복으로 국토 생태용량을 증가

- 한반도 국토생태축 연결성 확보
- 자연환경 보전·복원 활성화로 생태용량 순증 실현, 자연자원의 합리적 관리 강화

○ 모두가 누리는 자연혜택으로 생태복지를 실현

- 생물다양성·생태계서비스 인식 및 가치 증진
- 생태계서비스 기반의 국가·지역 정책의사결정 추진
- 국토생태벨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연혜택 증진

○ 지속가능한 녹색도시·지역으로 도약

- 미래 공간환경 이슈를 고려한 친환경적 공간관리 강화
- 지속가능한 도시·지역 도약모델 개발과 확산
- 탄소제로 및 스마트 녹색도시 조성

○ 연안 및 해양 환경의 생태건강성 강화

- 연안 및 해양환경 위해요인의 체계적 관리
- 해양공간 통합관리체계 정착과 육상-해양 통합관리 지향

(나) 사람과 자연이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한 통합 물관리

○ 물순환 건전성과 수요·공급의 조화를 고려한 물서비스 강화

- 건강한 물순환 회복으로 기후변화에 강한 도시 구축
- 저류-방류, 수질-수량-수생태계를 연계한 종합적 댐 운영
- 유역별 수요관리 우선 고려 및 하수 재이용 등 대체 수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물공급 체계 구축

○ 수질오염관리 선진화로 안전한 물환경 조성

- 수질오염총량제 고도화 및 미량물질관리 등 수질오염관리체계 강화
- 사전예방적 비점 오염원 관리 강화
- 유역 단위 하수도 관리 정책 추진

○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 및 생태계서비스 가치 실현

- 하천/하구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 및 연속성 확보
- 수생태계 생물다양성 관리 강화 및 건강성 관리시스템 구축
- 수생태계 건강성 관리를 통한 생태서비스 가치 실현

○ 유역기반·참여기반의 통합 물관리로의 전환

- 물관련 법령·계획 정비와 물정보 통합·공유, 혁신성장 체계 마련
- 지역발전과 연계한 유역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 5대강 고유의 물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다)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해결을 추진함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비전 마련
- 환경친화적 에너지·산업·도시정책 강화
-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대한 국민소통 강화

○ 위해성에 기반한 공기질을 관리함

- 위해성 기반의 대기오염물질 감시 강화
- 오존 대응 강화
-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

○ 생활주변유해인자·화학물질·제품 관리를 강화함

- 수용체 중심 환경관리 강화
- 환경오염 민감·취약계층의 건강 우선 보호
- 화학물질 사전위해성 관리 강화
- 생활화학제품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
- 미세플라스틱 관리기반 구축

(라) 기후환경 위기에 대비된 저탄소 안심사회 조성

○ 저탄소 안심사회 기반을 구축함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제도 기반 강화
-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 연계를 통한 공동편익 극대화
- 저탄소 안심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생활양식 정착

○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함

- 온실가스 장기 배출목표 설정과 주기적 갱신 강화
- 저공해자동차 획기적 확대 등 탈내연기관 자동차로 전환
- 탄소가격화 강화 및 규제정책과의 조화

○ 기후위험 대응과 신(新)기회 창출을 현실화시킴

- 기후변화 적응 내재화를 통한 기후탄력성 확보
- 지역주도 기후위험 대응과 취약지역·계층 집중관리
- 공공기관 및 산업계 기후위험 대응과 신(新)기회 창출 촉진
- 기후위험 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체계 구축

ㅇ미래의 환경안보 관리를 강화함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사성 폐기물 안전규제체계 선진화 추진
- 기후-기술-사회 등 복합환경재해 목록화 및 관리 강화
- 지정학적 요건을 고려한 동북아 환경재해 관리 강화

(마) 모두를 포용하는 환경정책으로 환경정의 실현

ㅇ환경정의 구현과 녹색사회로의 전환

- 환경정의제도화 및 정책 추진
- 녹색 사회전환을 위한 포괄적 전략 추진

ㅇ수용체 관점의 환경개선

- 공간적·계층적 환경불평등 평가·진단 및 개선기반 구축
- 공간적·계층적 환경불평등 개선사업 강화
- 미래세대, 동식물까지 포용하는 환경정의 확장 모색

ㅇ환경정보의 알권리와 피해자 구제 강화

- 환경정보 제공의 획기적 확대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 국민의 실질적 참여기회 강화
- 환경책임·피해구제, 분쟁조정 및 환경소송 제도의 개선으로 교정적 환경정의 강화

(바) 산업의 녹색화와 혁신적 R&D를 통한 녹색순환경제 실현

ㅇ환경R&D의 미래지향적 혁신

- 미래대응형 유망환경기술 개발 추진
- 사회문제해결형-정책연계형 핵심기술 개발 확대

ㅇ물질순환과 친환경경영에 기초한 산업 녹색화

- 순환경제모델 정립 및 확산
- 순환자원의 자원가치 극대화
- 플라스틱 폐기물 및 유해폐기물의 책임관리 강화
- 일회용품 규제 등 친환경소비 촉진을 위한 관리 강화
- 기업 및 공공기관의 친환경경영 정착

ㅇ환경일자리 창출과 환경가치 제고

- 환경분야 창업·벤처·강소기업 육성 및 전방위 지원
- 환경 일자리 창출과 전문인력 육성
- 환경비용 내부화와 규제 선진화
- 시장과 ICT를 활용한 친환경 가치 창출
- 자원순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새로운 물질순환가치 창출

(사) 지구환경보전을 선도하는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현

ㅇ항구적인 남북환경협력 이행

- '한반도 환경통일'을 위한 기반 구축
-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현을 위한 남북협력사업 이행

ㅇ동북아 환경협력 발전

- 동북아 월경성 환경오염 대응 협력체제 구축
- 동북아 생태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가능한 이용
- 양자·다자간 환경협력을 동북아 지역협력으로 발전

ㅇ국제협약의 성실한 이행·선도와 개발도상국 협력확대

- 기후변화 등 국제협력의 이행과 공조
- 지구생물다양성 증진 노력 강화
-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기술 협력 확대
-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지원 및 협력 강화

나.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

(1) 개요

(가) 수립시기 : 2021년 1월

(나) 법적 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0조

ㅇ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이행

(다) 계획의 범위

ㅇ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ㅇ지속가능발전 위한 비전, 목표, 추진전략과 원칙, 기본정책 방향, 주요 지표의 관한 사항

ㅇ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통합적 추진, 성과지표 관리, 국민 참여 및 국제협력 강화

(2) 주요내용

(가) 고품질 환경서비스 확보

○ 깨끗한 대기질 확보

-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위험 최소화
-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와 제작차 기준 강화
- 지역·업종특성을 고려한 대기유해물질관리 강화
- 생활오염원 관리대책 강화

○ 도시 생태공간 확충

- 도심 속 자연생태공간 확대
- 인문·예술·생태가 어우러진 도심 친수공간 조성
- 도시 숲 조성과 연결성 강화

○ 사전예방적 국토환경 관리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 강화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확대 및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강화
-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 및 이용체계 구축

○ 오염배출 관리 체계 선진화

- 사업장 환경관리를 통합관리 방식으로 전환
- 폐기물 수거·처리시스템 개선

(나) 생태계서비스의 가치 확대

○ 육상 및 담수 생태계 보전

- 국토생태축 연결성 확보
-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 건강한 서식처 확충을 위한 국가보호지역 확대
- 생태계서비스 평가 관리

○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위협요인 저감

-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체계 마련
- 야생생물자원 보전 및 복원 기반 강화
- 생물다양성 유지·증진 및 위협요인 저감
- 산림자원의 가치제고

○ 연안·해양 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

- 연안·해양 오염원 관리 강화
- 연안·해양 보호구역 확대
- 해양수산생태계 건강성 유지·보전
-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자원관리체계 혁신

(다) 깨끗한 물 이용 보장과 효율적 관리

○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 보장

-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공급
- 농어촌 지역 상수도 확충
- 노후 상수도 교체 및 인프라 강화

○ 상수원 수질개선 대책 강화

- 지류·지천 중심으로 수질개선
- 유해물질의 공공수역 배출 감축
- 오염총량제에 의한 수질관리 기반 강화
- 농·축산업 분야 비점오염 절감유도

○ 물순환 체계 강화

- 통합물관리 기반 마련
- 전 국토의 물의 저류·함양 기능 유지 및 향상
-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생태유량 확보 및 수질 개선
- 물이용요금 현실화 및 상수도 수요관리 강화
-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시설 확충

다.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

(1) 개요

(가) 근거 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 동 조항에 따라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전 예방적 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

(나) 대책기간 및 주기

○ 4차 대책 기간은 2026년~2030년, 5년마다 수립·시행

(2) 추진 과제

○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과제는 기후위험의 과학적 감시·예측, 기후재난 예방, 국민 건강과 취약계층 보호, 물관리 및 기반시설 안전 강화, 농·수산업과 생태계 의 적응역량 제고 등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기후위기 적응기술의 개발과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 전반의 회복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함

○ 주요 내용

추진 과제	주요 내용
기후위기 감시·예측 강화	기후변화 관측 및 예측기술 고도화, 기후위험 정보 제공 확대
기후재난 예방 및 대응 강화	폭염·홍수·가뭄·산불 등 기후재난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국민 건강 및 취약계층 보호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폭염·한파에 따른 건강 피해 예방
물관리 및 수재해 대응	홍수·가뭄 위험 관리, 수자원 확보, 물순환 체계 개선
기반시설의 기후회복력 강화	도로·철도·항만·전력 등 주요 기반시설의 기후위험 대응력 강화
농·수산업 및 산업 적응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피해를 줄이고 산업별 적응역량 강화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전	생물다양성 보호, 생태계 변화 감시, 자연환경의 회복력 증진
기후위기 적응기술 개발	기후위험 예측·평가 기술 및 피해 저감 기술 개발·활용
적응정책 추진체계 강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적응대책 이행점검 및 평가 강화

라.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2016~2025) / *제4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2026~2035) 현재 수립 중

(1) 개요

(가) 계획의 성격과 역할

1) 기본계획의 법적 성격

○ 「자연환경보전법」 제8조 규정에 근거한 장기종합계획(2016~2025)

○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자연환경분야 부분 계획

○ 우리나라 자연환경분야 최상위 종합계획

2) 기본계획의 역할

○ 향후 10년간의 우리나라 자연환경 여건을 전망하고, 정책적 대응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

○ 지자체와 민간단체, 국민, 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권역별 시책과 협력과제 추진방안을 제시

○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역할 확대를 위해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추진과제를 제시

(2) 주요 내용

(가) 자연생태계 서식지 보호

○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현

- 국가핵심/광역/도시·생활공간 생태축 관리체계 정립
- 국가핵심/광역/도시·생활공간 생태축별 보전·복원 추진

○ 국제적 수준의 보호지역 확대 및 관리 강화

- 국제 수준의 보호지역 확대
- 보호지역 관리·관리기반 강화

(나) 야생생물 보호·복원

○ 야생생물 보호·관리 강화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강화 및 서식지 내·외 보전 확대
- 밀렵·밀거래·불법채취 근절대책 강화

○ 외래·유해생물로부터 안전한 자연환경

- 외래생물 관리강화
- 야생동물 질병 관리 강화 및 안전관리 기반 강화
-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 확대
- 기후변화 대응 야생생물 보호·관리

(다)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생활공간

○ 도시 및 마을 생태계 보전·복원

- 도시 및 마을 생활공간 생태환경 조사 및 평가
- 도시 및 마을 생활공간 생태계 보전·복원

○ 생활공간 생태계 보전 기반 강화

- 생활공간 생태계 관리기반 확립
- 생태복원 제도적 기반 및 모니터링 기반 마련

(라) 자연혜택의 현명한 이용

○ 국민에게 더 가까운 자연환경 조성 및 자연혜택 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

- 국립공원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 균형,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
- 문화와 어우러지는 자연혜택 증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확대
- 생태계서비스 평가 기반 마련 및 평가·관리

○ 생물자원의 확보와 이용

- 생물자원 조사·발굴 및 통합 DB 구축
- 생물자원 활용가치 제고, 나고야의정서 대응 및 이익공유 활성화

(마) 자연환경보전 기반 선진화

○ 자연보전과 개발의 조화 및 자연환경보전 조사 및 기술개발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동성 강화
- 자연분야 환경영향평가 제도·운영 선진화
- 자연환경보전 조사체계 개선, 정보화 추진
- 자연환경보전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

○ 인식증진, 교육 및 참여 및 자연환경보전 정책 평가·조정

- 인식증진 및 참여 확대, 생물다양성 교육 강화
- 자연환경보전 정책 평가지수 개발, 지역 자연환경보전 추진체계 확립

(바) 자연환경보전 협력 강화

○ 국가/지자체/지역 주민 협력과제 발굴 및 추진

- 부처 간·지자체·지역주민 협력 강화

○ 우리나라의 자연환경보전 국제적 역할 강화

- 국제사회 역할 확대를 위한 기반 강화, 자연환경 국제협력사업 추진

○ 남북·동북아 자연환경보전 협력 확대

- 접경지역 및 북한의 자연환경 보전 협력 확대
- 동북아 자연환경보전 협력 확대

마.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

(1) 개요

(가) 근거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나) 계획기간 및 주기

○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연동계획으로 수립 및 시행함

○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된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2023 년 4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되었으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녹색산업 육성 등을 종합적 검토 실시

(다) 주요 추진과제

○ 기후변화 대응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기후변화 정책의 철학과 비전 제시

○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과 지구 온난화 적응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및 에너지 등 유관계획과 정합성 확보

구 분	추진 과제	주요 내용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무탄소 전원 활용	원자력·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활용 통한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자원순환 및 순환경제 확대
	국토의 저탄소화	건물·수송·국토 전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탄소배출 저감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과학기술 혁신	탄소중립 기술 개발과 규제 개선
	녹색산업 육성	핵심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신시장 창출
	녹색금융 및 투자 확대	탄소중립 친화적인 재정·금융 지원체계 구축
함께하는 탄소중립	국민 실천	에너지 절약 및 탄소중립 생활문화 확산
	지역 주도 전환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
	정의로운 전환	산업구조 변화 따른 근로자 고용안정과 기업 전환 지원
능동적인 탄소중립	기후위기 적응	기후재난 대응 및 사회 전반 기후위기 적응역량 강화
	국제협력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국제 온실가스 감축 참여
	이행점검 강화	정책 추진상황 점검,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바.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2027~2031)의 부합성 검토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2016~2025),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과 본 계획인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2027~2031)과의 환경보전에 대한 부합성을 검토하였음.

(1)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과의 부합성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기후환경 위기에 대비된 저탄소 안심사회 조성'은 온실가스 감축, 탈내연기관 자동차 전환 및 지역주도 기후위험 대응을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2027~2031) 관광개발사업 탄소 감축 목표 설정, 제로에너지시설 도입,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 및 노후 관광시설 녹색전환 과제는 저탄소 전환 방향과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됨. 아울러 상위계획의 국토 생태용량 확대·자연혜택 증진 및 녹색순환경제 방향은 생태관광 확대, 유휴자원 재생과 책임관광 추진 방향과 연계됨.

(2)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고품질 환경서비스 확보', '생태계서비스의 가치 확대', '깨끗한 물 이용 보장과 효율적 관리' 등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관광(단)지의 친환경 교통수단 전환은 깨끗한 대기질 확보 정책과 관련되며, 해양·산림관광자원 발굴 및 생태관광 확대 과제는 연안·해양 생태계 보호와 생태계서비스 가치 확대 정책과 방향상 연계되어 부합함

(3)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의 부합성

○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기후재난 예방·대응, 물관리 및 수재해 대응, 기반시설 기후회복력 강화,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전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관광개발기본계획의 노후 관광시설 개선 및 생태관광지의 지속가능한 관리 방향은 기반시설·생태계 적응역량 강화와 연계되어 부합함

(4)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과의 부합성

○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은 자연생태계 서식지 보호, 자연혜택의 현명한 이용, 생태관광 활성화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관리 등을 제시하고 있음.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자연자원 활용 생태관광 확대, 자연생태관광지 보전 및 환경친화적 관광모델 개발 과제는 자연혜택의 지속가능한 이용 방향과 부합함

(5)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국토의 저탄소화', '무탄소 전원 활용', '지역주도 전환', '기후위기 적응'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관광개발사업 탄소 감축 목표 설정, 관광(단)지 제로에너지시설 도입, 관광단지 교통수단 친환경 전환 및 노후 관광지의 녹색관광시설 전환은 건물·수송 부문 저탄소화와 지역주도 전환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됨.

〈표 9.2.1-1〉 국가환경정책과의 부합성 검토

국가환경정책	주요내용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2027~2031)	추진 과제	비고
제5차 국가환경 종합계획 (2020~2040)	기후환경 위기에 대비된 저탄소 안심사회 조성	○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관광부문 실천 ○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관광개발 강화	○ 관광개발 탄소부출 관리 및 중립 목표 이행 ○ 관광시설의 그린 리모델링 및 에너지 전환 ○ 기후위기 적응형 관광개발 추진	p.137 ~141
	국토생태 용량 확대 및 녹색순환 경제 실현	○ 생태계 보존·복원 기반의 관광자원 활용	○ 생태복원형 관광지 육성 ○ 생태계 서비스 기반의 자연친화적 관광 모델 개발 및 확산 ○ 자연 순환을 고려한 관광자원 이용·관리	p.142 ~144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21~2040)	고품질 환경서비스 확보	○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관광개발 강화 ○ 지역 이동 편의를 높이는 관광교통 체계 개선	○ 관광시설의 그린 리모델링 및 에너지 전환 ○ 방한 4천만 시대를 위한 지역 관문 다변화 및 수용력 확충 ○ 초광역 관광권 광역 연계교통망 구축 ○ 수요맞춤형 관광교통서비스 확충 ○ 이동이 관광이 되는 신개념 관광교통 자원화	p.137 ~141 p.149 ~154
	생태계 서비스 가치 확대	○ 생태계 보존·복원 기반의 관광자원 활용	○ 생태복원형 관광지 육성 ○ 생태계 서비스 기반의 자연친화적 관광 모델 개발 및 확산 ○ 자연 순환을 고려한 관광자원 이용·관리	p.142 ~144

〈표 계속〉 국가환경정책과의 부합성 검토

국가환경정책	주요내용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2027~2031)	세부 과제	비고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2026~2030)	기반시설 기후 회복력 강화	◦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관광부문 실천 ◦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관광개발 강화	◦ 관광개발 탄소부출 관리 및 중립 목표 이행 ◦ 관광시설의 그린 리모델링 및 에너지 전환 ◦ 기후위기 적응형 관광개발 추진	p.137 ~141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전	◦ 생태계 보존·복원 기반의 관광자원 활용	◦ 생태복원형 관광지 육성 ◦ 생태계 서비스 기반의 자연친화적 관광 모델 개발 및 확산 ◦ 자연 순환을 고려한 관광자원 이용·관리	p.142 ~144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2016~2025)	자연환경 보전 기반 선진화, 지역협력	◦ 지역 고유 문화·예술 콘텐츠의 관광자원화	◦ K-콘텐츠를 활용한 한류 관광거점 조성 ◦ 지역특화 문화예술관광도시 조성 ◦ 건축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p.126 ~128
	자연혜택 현명한 이용	◦ 생태계 보존·복원 기반의 관광자원 활용	◦ 생태복원형 관광지 육성 ◦ 생태계 서비스 기반의 자연친화적 관광 모델 개발 및 확산 ◦ 자연 순환을 고려한 관광자원 이용·관리	p.142 ~144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 성장 기본계획 (2023~2042)	국토의 저탄소화, 무탄소 전원 활용	◦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관광부문 실천 ◦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관광개발 강화	◦ 관광개발 탄소부출 관리 및 중립 목표 이행 ◦ 관광시설의 그린 리모델링 및 에너지 전환 ◦ 기후위기 적응형 관광개발 추진	p.137 ~141

9.2.2 국제 환경 동향·협약·규범

가. 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 발효일 2016년 11월)

(1) 개요

◦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 2021년 1월부터 적용될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기후변화협약으로 2016년 발효됨. 파리협약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보편적 첫 기후합의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있음

(2) 주요내용

○ 장기목표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키로 하고,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하였음

○ 또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량은 각국이 제출한 자발적 감축목표(INDC)를 그대로 인정하되 2020년부터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도록 하였음

○ 이와 함께 정기적인 이행 상황 및 달성 경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점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종합적 이행 점검 시스템을 도입해 2023년에 최초로 실시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음

○ 감축목표 유형은 선진국은 절대량 방식을 유지하며, 개도국은 자국 여건을 감안해 절대량 방식과 배출 전망치 대비 방식 중 채택하도록 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UN 기후변화협약 중심의 시장 이외에도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협력도 인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 매커니즘 설립에 합의하였음

○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꾸준히 감소시켜 이번 세기 후반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데 합의하였음

나. 생물다양성협약

(1) 목적

○ 이 협약의 목적은 이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추구될 것인 바, 유전자원과 유전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를 고려한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관련기술의 적절한 이전 및 적절한 재원제공 등을 통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그 구성요소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며, 또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임

(2) 원칙

○ 국가는 국제연합헌장과 국제법의 원칙에 의거하여 자신의 환경정책에 따라 자신의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또한 자신의 관할 또는 통제지역안에서의 활동으로 다른 국가의 환경 또는 자신의 관할권 이원지역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할 책임을 짐

(3) 관할 범위

○ 다른 국가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리고 이 협약에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의 규정이 각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경우, 자신의 관할권안의 지역
- 국가의 관할권 또는 통제권하에서 수행된 과정 및 활동의 경우, 그 효과가 미치는 장소에 관계없이 그 국가의 관할지역안 또는 관할권 이원지역

(4) 협력

○ 각 체약당사자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및 그 밖의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다른 체약당사자와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권한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가능한한 그리고 적절히 협력

(5)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일반적 조치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전략·계획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특히 이 협약에 명시된 해당 체약당사자와 관련된 조치를 반영하는 기존의 전략·계획 또는 프로그램을 취지에 맞게 수정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관련 개발분야별 또는 분야간별 계획·프로그램 및 정책에 가능한 한 그리고 적절히 통합

(6) 현지내 보전

○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호지역제도 또는 특별조치 필요지역제도를 수립

○ 필요한 경우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호지역 또는 특별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설정 및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지역내외에 관계없이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중요한 생물자원을 규제 또는 관리

○ 생태계 및 천연서식지의 보호와 자연환경에서의 종의 적정한 개체군의 유지를 촉진

○ 보호지역에 대한 보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호지역의 인접지역에서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

○ 특히 계획 또는 그 밖의 관리전략의 개발과 시행을 통하여 악화된 생태계를 회복·복구시키며 위협받는 종의 회복을 촉진

○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생명공학에 의한 생물변형체의 이용 및 방출에 연관된 위험을 규제·관리 또는 통제하는 방법을 수립 또는 유지

○ 생태계·서식지 또는 종을 위협하는 외래종의 도입을 방지하고 이들 외래종을 통제·박멸

○ 생물다양성과 그 구성요소에 대한 현재의 이용이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양립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

○ 국내입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취하여 온 원주민사회 및 현지사회의 지식·혁신적 기술 및 관행을 존중·보전 및 유지하고, 이러한 지식·기술 및 관행 보유자의 승인 및 참여하에 이들의 보다 더 광범위한 적용을 촉진하며, 그 지식·기술 및 관행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장려

○ 멸종위기에 처한 종 및 개체군의 보호를 위한 입법 및/또는 그 밖의 규제적인 규정을 제정 또는 유지

○ 제7조에 따라 생물다양성에 대한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이 확인되는 경우, 활동의 관련 진행과정 및 유형을 규제 또는 관리

○ 가호 내지 타호에 규정된 현지내 보전을 위하여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재정적 및 그 밖의 지원을 제공하는데 협력

(7) 현지외 보전

○ 가급적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원산국안에서 그 구성요소 현지외 보전을 위한 조치를 채택

○ 가급적 유전자원의 원산국안에서 식물·동물 및 미생물의 현지외 보전 및 연구를 위한 시설을 설립·유지

○ 위협받는 종의 회복 및 복구를 위한 조치와 적절한 조건하에서 이들을 천연서식지로 재반입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

○ 다호의 규정에 따라 임시로 특별한 현지외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생태계와 종의 현지내 개체군이 위협받지 아니하도록 현지외 보전목적을 위하여 천연서식지로부터의 생물자원의 수집을 규제하고 관리

○ 가호 내지 라호에 규정된 현지외 보전을 위한 재정적 및 그 밖의 지원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의 현지외 보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데 있어서 협력

(8)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 생물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고려를 국가정책결정에 통합

○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물자원의 이용에 관련된 조치를 채택

○ 보전 또는 지속가능한 이용요건에 부합되는 전통적인 문화적 관행에 따른 생물자원의 관습적인 이용을 보호하고 장려

○ 생물다양성이 감소된 퇴화지역에서의 복구활동을 개발·시행하도록 현지주민을 지원

○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방법을 개발하는데 있어 정부기관과 민간부문간의 협력을 장려

(9) 연구 및 훈련

○ 생물다양성과 그 구성요소의 확인·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조치에 관한 과학·기술 교육계획 및 훈련계획을 수립·유지하며,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필요를 위하여 이러한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지원을 제공

○ 무엇보다도 과학·기술 자문보조기관의 권고의 결과로 채택된 당사자총회의 결정에 따라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연구를 촉진·장려

○ 제16조·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생물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방법을 개발하는데 있어 생물다양성 연구에서의 과학적 발전의 이용을 촉진·협력

(10) 공공교육 및 홍보

○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촉진·증진시키며,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러한 이해를 전파시키고 이러한 주제사항들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촉진·장려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교육·홍보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적절히 협력

(11) 영향평가 및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에 중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제안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는 적절한 절차를 도입하고 적절한 경우 이러한 절차에 공공의 참여를 허용

○ 생물다양성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계획 또는 정책의 환경에 대한 효과가 정당히 고려되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도입

○ 적절히 양자·지역 또는 다자간 약정의 체결을 장려함으로써 상호주의 기초위에서 다른 나라 또는 자신의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자기 나라의 관할권 또는 통제아래 있는 활동에 관한 통지·정보교환 및 협의 촉진

ㅇ자기 나라의 관할 또는 통제아래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위험 또는 피해로서 다른 나라의 관할 지역안 또는 자신의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에 긴박하고 중대한 위험 또는 피해가 있는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에게 즉시 그러한 위험 또는 피해를 통고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험 또는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자연발생적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생물다양성에 중대하고 긴박한 위험이 될 활동 또는 사건에 대한 긴급대처를 위한 국가조치를 증진하며, 그러한 국가노력을 보완하고, 적절한 경우 그리고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가 합의하는 경우, 공동비상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

(12) 유전자원의 접근

ㅇ국가가 자신의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하는 권한은 해당국가의 정부에 있으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국가입법에 따름

ㅇ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체약당사자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 협약의 목적에 반하는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

ㅇ이 협약의 목적상 이 조와 제16조 및 제19조에 언급된 체약당사자가 제공하는 유전자원은 그 자원의 원산국인 체약당사자 또는 이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자가 제공하는 것만을 의미

ㅇ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 허용된 경우, 그 접근은 상호합의된 조건과 이 조의 규정에 따름

ㅇ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그 자원을 제공하는 체약당사자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체약 당사자의 사전통고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함

ㅇ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체약당사자가 제공한 유전자원에 기초한 과학적 연구를 그 체약당사자의 완전한 참여와 가능한 경우 그 체약당사자의 영토안에서 개발·수행하도록 노력

ㅇ각 체약당사자는 연구·개발의 결과와 유전자원의 상업적 및 그밖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적절히 그리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설치된 재정체계를 통하여 입법적·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공유는 상호합의된 조건에 따름

(13) 기술·과학협력

- 체약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국제기관 및 국내기관을 통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술·과학협력을 증진
-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국가정책의 개발 및 이행을 통하여 다른 체약당사자 특히 개발도상국인 체약당사자와 기술·과학협력을 증진한다. 이러한 협력을 증진함에 있어 인적자원의 개발 및 제도구축을 통한 국가능력의 개발과 강화에 특별한 관심이 주어져야 함
- 당사자총회는 제1차 회의에서 기술·과학협력의 증진 및 촉진을 위하여 자료교환기구 체제의 설치방안을 결정
- 체약당사자는 이 협약의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 국내입법과 정책에 따라 현지 기술 및 전통적 기술을 포함한 기술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협력방안을 장려하고 개발한다. 이를 위하여 체약당사자는 인력양성과 전문가의 교류에 대한 협력을 증진
- 체약당사자는 상호합의 조건하에 이 협약의 목적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프로그램 및 합작투자의 수립을 증진

(14) 생물다양성협약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생물자원이 풍부하지 못하며 기술선진국도 아닌 우리나라 입장에서 국제적인 생물자원 및 유전자원 보호 움직임과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 움직임은 해외의 생물자원 확보와 국내 고유기술 개발 등 생명공학기술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앞으로 생물 및 유전자원을 활용하여 개발한 생명공학기술은 환경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자원제공국에 대한 기술이전의 우선권 부여 및 적절한 대가의 지불 등이 예견되고 있다. 결국 해외생물자원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생물다양성협약은 국내 관련산업에의 발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 그러나 생물다양성 보전이 국내산업에 주는 다음의 긍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음
  - 자생 동식물 자원의 보전 및 개발을 통한 지역산업의 촉진
  - 생물자원을 이용한 제품개발을 통해 전통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새로운 시장개척 가능성 증대
  - 생태계 보전 및 미화를 통한 관광 및 레저산업 발전에의 기여

- 국내 고유생물 및 유전자원의 보전 및 확보와 이를 이용한 생명공학 원천기술의 개발과 생물산업의 발전 촉진 등

다.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2027~2031)과 국제 환경 동향·협약·규범의 부합성

○ 기후변화협약에서 제시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본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관광부문 실천'을 제시함으로써 탄소중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제시함으로써 기후변화협약과 부합성을 나타내고 있음

○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및 유전자원 이용이익의 공정한 공유를 목적으로 함.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2027~2031)의 생태관광지 보전과 환경친화적 관광모델 개발은 보전·지속가능한 이용 원칙에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표 9.2.2-1〉 국제환경협약과의 부합성

국가환경정책	주요내용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2027~2031)	세부 과제	비고
기후변화협약	온실가스 감축	○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관광부문 실천 ○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관광개발 강화	○ 관광개발 탄소부출 관리 및 중립 목표 이행 ○ 관광시설의 그린 리모델링 및 에너지 전환 ○ 기후위기 적응형 관광개발 추진	p.137 ~141
생물다양성 협약	생물 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 생태계 보존·복원 기반의 관광자원 활용	○ 생태복원형 관광지 육성 ○ 생태계 서비스 기반의 자연친화적 관광 모델 개발 및 확산 ○ 자연 순환을 고려한 관광자원 이용·관리	p.142 ~144
	생태계·서식지 부정적 영향 최소화	○ 생태계 보존·복원 기반의 관광자원 활용	○ 생태복원형 관광지 육성 ○ 생태계 서비스 기반의 자연친화적 관광 모델 개발 및 확산 ○ 자연 순환을 고려한 관광자원 이용·관리	p.142 ~144

9.3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9.3.1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2027~2031)은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계획으로 10년 단위로 관광개발의 효율적인 관광개발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수정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제1차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 제2차 해양생태계보전관리 기본계획,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생태관광 중장기 발전계획 등의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계획하였음

가.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2027~2031)의 정책방향 및 계획 지침

(1) 관광다양성 확보와 연계협력 관광개발 추진

세부 전략	추진 과제	세부 과제
융복합 관광콘텐츠 발굴 및 확대	(문화·산업) 대표 문화콘텐츠의 국제관광 경쟁력 제고	○ 세계문화유산 등 역사문화자원의 국제관광 경쟁력 제고 ○ 선호도 높은 대중문화 콘텐츠를 관광자원으로 전환 ○ 문화예술자원 및 지역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
	(개인별) 관광수요 트렌드를 반영한 세밀한 관광개발 추진	○ 세대별 요구를 수용하는 특화 관광자원 개발 ○ 일과 관광의 시공간적 경계를 허무는 워케이션 관광지 육성 ○ 초개인화 시대 고객 맞춤형 도시관광 활성화
	(미래) 기술과 희소가치가 집약된 미래형 관광자원 발굴	○ 관광공간을 확장하는 희소 관광자원 발굴 ○ 신기술이 접목된 기술융합형 체험관광 확대 ○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메타버스형 관광개발 추진
다자간 연계협력 기반의 관광개발 확대	(정부·지자체) 정부와 지자체의 연계 관광개발 추진	○ 광역관광권 효과를 창출하는 광역관광개발체계 개선 ○ 지역이 수립하는 특화형 지역관광자원 개발과 운영 ○ 관광객을 집객 및 확산시키는 지역관광 거점 확대
	(중앙부처) 관광다양성 확보를 위한 부처간 협력 강화	○ 치유 및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관광자원 발굴 ○ 공동체 회복을 유도하는 농산어촌 마을관광 활성화 ○ 생애주기를 고려한 복지형 산림관광 확대 ○ 항공, 육상 등에서 즐기는 레저스포츠관광 생활화
	(국제) 남북 및 동북아 연계 관광자원 개발	○ 공동자원을 활용한 DMZ 관광교류 협력거점 조성 ○ 환동해권와 환황해권 기반의 북한관광 연계 활성화 ○ 공동관광권 형성을 위한 한·중·일 관광개발협력체계 구축

(2) 관광의 일상화에 대응한 관광편의기반 조성

세부 전략	추진 과제	세부 과제
관광환경의 품질 제고 및 기능 개선	(숙박) 관광 숙박시설 확충 및 명소화	◦ 소도시 및 도농지역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편의서비스 개선 ◦ 숙박시설 재생을 통한 숙박 & 체험 명소 전환 ◦ 마을호텔 중심의 체류관광 활성화
	(음식쇼핑) 음식 및 쇼핑관광의 체험 관광자원화	◦ 궁중, 사찰, 퓨전 음식 등 특화음식 체험 관광자원화 ◦ 명물, 명인, 명소와 연계한 관광기념품 발굴 및 육성 ◦ 쇼핑 공간을 쇼핑문화 체험공간으로 전환
	(교통) 교통기점부터 관광지까지 연결하는 관광교통체계 개선	◦ 자가용 중심에서 대중교통과 연계된 관광교통체계로 전환 ◦ 매력적 관광교통수단 개발 확대 및 교통수단의 관광자원화 ◦ 개인맞춤형 모빌리티와 공유차량 활성화
스마트하고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	(안내정보) 데이터 기반 관광정보 및 안내체계 개선	◦ 외국인관광객 관광편의를 위한 개인맞춤형 스마트 관광정보 제공 ◦ 관광객 관광행태를 반영한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확대 ◦ 정부, 지자체, 민간 관광정보 서비스 통합 제공
	(무장애)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 기능 개선	◦ 관광약자의 이용편의성을 제고하는 무장애관광 확대 ◦ 무장애 관광 루트를 확대하는 열린 관광도시 조성 ◦ 외국인 관광객 지방 분산을 위한 관광편의 시설 확충
	(안전)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	◦ K-방역과 연계한 관광지의 관광객 수용력 정비 ◦ 비대면 관광편의 서비스 제공 공간 확대 ◦ 관광객 위험요인의 포괄적 관리가 가능한 국내 안전관광 대응체계 구축

(3) 사람과 지역이 주도하는 관광생태계 조성

세부 전략	추진 과제	세부 과제
지역 주도의 관광산업 진흥	(지역민) 지역주민 관광참여 확대	○ 지역주민 비즈니스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관광두레 2.0 추진 ○ 지역주민 제안형 지역관광사업 추진체계 마련 ○ 지역생활문화콘텐츠로 지역민과 관광객이 교류하는 지역관광놀이터 조성
	(지역 관광산업) 지역관광개발과 관광산업 연계 확대	○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 확대 운영 ○ 관광소비를 직접화하는 관광서비스 거점으로서 지역 관광단위 관광상권 활성화 ○ 관광지 등 관광자원 운영사업체의 관광업종 편입
	(지역관광자원) 지역성을 담은 관광콘텐츠 개발과 부가가치화	○ 한달 살기 등 장기 체류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여 생활관광 활성화 ○ 비관광 자원에 관광기능을 도입한 SOC 관광자원화 ○ 자연관광원형, 경험소비 등을 담은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개발공급
지역관광개발 추진역량 제고	(추진주체) 혁신적인 지역관광 추진주체의 발굴과 양성	○ 로컬 크리에이터 등 창의적인 민간주체 육성 ○ 지역관광협의회 등 지역관광 추진조직 확대 및 내실화 ○ 지방자치단체 광역연합형 관광지원 조직 설립
	(역량강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자체 관광개발 역량 강화	○ 지방 이양된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 체계 마련 ○ 관광자원 개발과 운영에 민간참여 확대 지원 ○ 지역관광시설 관리운영 실태 및 성과관리 정례화
	(전문성제고) 지역관광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지역관광 역량을 제고하고 효과를 진단하는 지역관광 R&D 기능 도입 ○ 관광개발기획사 등 지역관광 전문 자격 제도 도입 ○ 지역관광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방공무원 관광직 신설

(4) 관광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성 제고

세부 전략	추진 과제	세부 과제
탄소중립을 달성을 위한 관광부문 실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관광개발	◦ 관광개발사업 추진 시 탄소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 ◦ 탄소 중립 평가지표 개발 및 개발사업 평가시 적용 ◦ 신재생 에너지 단지의 관광자원화
	저탄소화를 지향하는 관광(단)지 개발 및 운영	◦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 시 제로 에너지 시설 도입 의무화 ◦ 권역계획 지침에 탄소중립 목표 설정 ◦ 관광단지 내외부 교통수단을 친환경 모빌리티로 전환
	지역주도의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 지원	◦ 지자체를 중심으로 노후 관광지 시설을 녹색관광시설로 전환 ◦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우수 관광개발 모델 발굴 ◦ 탄소 중립 전환에 따른 지역관광 취약분야 보호정책 추진
관광자원의 적정 개발과 이용	자연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확대	◦ 국제적 수준의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자연생태 관광지 보전 ◦ 생태관광 지역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순환체계 구축 ◦ 자연공원을 활용한 환경친화적 관광지 모델 개발
	유휴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재생 전환	◦ 재생가능한 자원과 버려진 공간의 관광자원화 ◦ 월드컵 경기장 등 메가 이벤트 시설의 기능 복합화로 관광자원 활용 ◦ 지역 유휴자원의 데이터베이스(DB)화 및 관리
	오버투어리즘 극복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	◦ 관광밀집 지역의 오버투어리즘 관리 체계 구축 ◦ 오버투어리즘 진단 지표 개발 ◦ 관광객이 실천하는 책임관광 제시 및 이행 유도

(5) 관광자원의 효율적 관리

세부 전략	추진 과제	세부 과제
효율적인 관광개발을 위한 법제도 정비	관광지 등 법률적 관광개발 제도 개선	◦ 생애주기 및 위계별(국제, 지역 등) 관광지 차등화 ◦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이 가능한 관광단지 조성 ◦ 관광특구 평가체계 내실화 및 관광 거점 기능화
	관광개발 위상강화를 위한 법률 정비	◦ 관광진흥법 분법을 통한 독립적 관광개발 법률 마련 ◦ 지역관광발전을 견인하는 지역관광진흥법 제정 ◦ 법률에 근거한 관광개발 수단 확대 추진
	관광계획 추진체계 정비	◦ 관광부문 법정계획 체계 정비 ◦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 지침 마련 ◦ 관광개발계획 모니터링체계 구축
전(全)주기 관광자원 관리체계 구축	과학적 관광자원 관리기반 마련	◦ 지역관광통계 생산 및 관리방안 마련 ◦ 과학적 증거 기반 지역관광 진단체계 구축 ◦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자원 관리 강화
	관광개발 평가 및 컨설팅 제도 체계화	◦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 법제화 ◦ 지자체 관광개발 정책에 대한 종합 컨설팅 지원 ◦ 관광개발계획을 대상으로 관광계획평가제도 도입
	관광자원의 통합 관리	◦ TDSS 기반 관광자원 통합관리 시스템구축 ◦ 관광자원 통합관리를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 지자체 관광자원 개발 및 관리 매뉴얼 개발

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1) 계획의 연혁

◦ 제1차 국토종합계획(1972~1981) : 고도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을 목표로 수도권과 동남해안 공업벨트 중심의 거점개발 추진

◦ 제2차 국토종합계획(1982~1991) : 인구의 지방정착과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수도권 집중억제와 권역개발을 추진

◦ 제3차 국토종합계획(1992~2001) : 국민 복지향상과 환경보전을 목표로 서해안 산업지대와 지방 도시 육성을 통한 지방 분산형 국토개발 추진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 지역 간의 통합, 동북아 지역과의 통합을 목표로 균형개발,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개방형 통합국토 추진

◦ 계획기간 변경(10년→20년), 2006년과 2011년에 수정계획 수립·운영

(2) 계획의 특징

(가) 계획의 성격

○ 국가의 장기적인 국토정책 방향과 전략을 선도하는 방향 제시자로서 부문·하위계획에 대해 가이드라인 역할과 새로운 국가계획 수립 모델을 선도

○ 지침형 정책계획 : 국토정책 방향과 전략을 선도하는 방향 제시자 역할 강회

- 부문·지역별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되,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고려해야할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계획 수립
- 정책 과제별 계획지침을 통해 부문·하위계획의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국토계획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

○ 실증기반 계획 : 부문·하위계획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실증적 자료·분석 제공

- 국토 현황과 여건변화 전망에서 객관적인 분석 자료 활용, 계획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분석결과를 공개하여 부문 및 지역계획 수립시 활용
- 계획 모니터링-국토계획 평가를 연동하여 계획수립 이후 지속적인 관리와 정책 환류를 통해 계획의 실효성 확보

○ 소통·협력 계획 : 꾹민과 함께 만드는 최초의 국토종합계획 수립과정 구현

- 계획수립 과정에서 중앙부처·지자체·전문가뿜남 아니라 미래 세대인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청년)과 일반 국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의견 수렴
- 온라인 플렛폼(www.cntp.kr) 구축·운영, 국민참여단을 구성하여 미래 국토상과 핵심가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환경과 개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공론화
- 국토의 과잉 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종합계획과 환경종합계획의 연동 추진



(그림 9.3.1-1)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성격과 역할

(나) 계획의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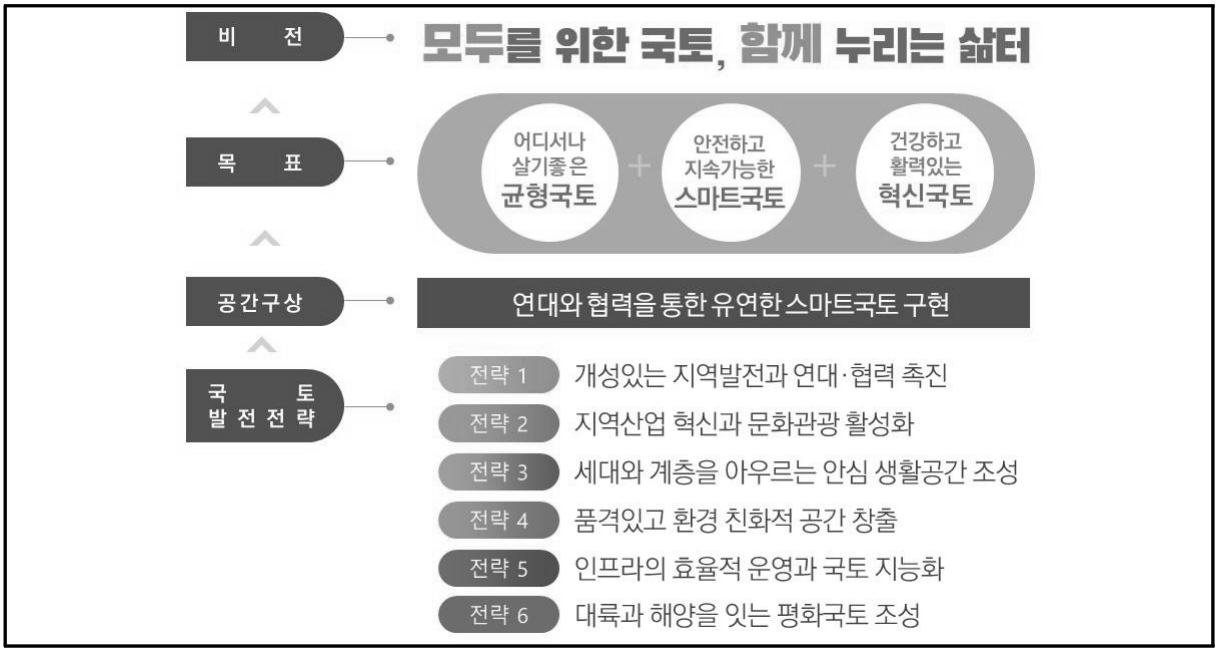
○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국토의 백년대계 실현을 지향하며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설정

○ 모두를 위한 국토

- 다양한 세대와 계층, 지역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포용국가 기반을 갖추고, 좋은 일자리와 안전하고 매력적인 정주환경을 갖춰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지속가능한 국토를 조성

○ 함께 누리는 삶터

- 삶의 질, 건강 등 우리 국민이 중요시하는 가치를 주거공간, 생활공간, 도시공간 등 다양한 국토공간에서 구현하고 깨끗하고 품격있는 국토 경관 조성과 산지, 해양, 토지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로 행복한 삶터를 구현



(그림 9.3.1-2) 계획의 기조 : 비전, 목표, 전략

(다) 추진전략

1)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 지역 간 연대·협력을 통해 경쟁기반 구축

- 산업, 관광, 문화 등 지역 수요를 기반으로 교통, 행정 등에 대해 지역간 협력하여 국가 및 지역발전 기반을 확보

- 기존산업 개선, 신산업 유치 등 지역 주도의 발전전략 마련, 교통인프라·정주여건 등 지원기반 개선

○ 지역 특성을 살린 상생형 균형발전 추진

- 수도권은 지방과의 상생발전, 교통·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수도권 내 균형발전, 질적 성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지방대도시권은 인근 지역과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연계하여 경쟁력있는 중추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주변 지역 간 광역·순환형 인프라 구축
- 농산어촌은 생활서비스 집약화 등 정주여건 개선과 매력 제고로 유입·체류 인구 정착을 확대하고, 낙후·위기지역 지원 내실화

2) 지역 산업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지역산업생태계 회복력 제고

- 기존산업 혁신과 미래 신산업의 지역과 연계하여 지역 혁신성장 공간 확충하고 일터-삶터-쉼터가 조화된 미래형 복산업공간 조성·확산

○ 매력있는 문화공간 조성과 협력적 관광 활성화

-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해 특색있는 문화공간을 창출하고 주변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다양한 협력사업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쇠퇴관광지·시설의 문화적 재생을 통해 지역활력 거점으로 활용

3)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 인구 감소에 대응한 유연한 도시개발·관리

- 합리적 인구예측을 통해 기반시설계획을 현실화하고 도심내 복합개발, 난개발 방지 등 도시의 적정개발과 관리, 집약적 도시공간구조 개편 추진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도시·생활공간 조성

- 저출산·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사회통합형 생활공간을 조성, 보육·복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SOC의 질적 확충, 다양한 주거공간 확충

○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와 주거공간의 선진화

-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적정주거기준 검토 등을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 미래형 주거서비스 확대

○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국토대응체계 구축

- 재난대응 범위를 확정하여 전 주기 방재체계 구축, 지역별 통합 대응체계 구축, 지능형 국토방재기반 조성

4) 품격있고 환경 친화적 공간 창출

○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

- 건축물·교통분야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바람길 등 미세먼지 분산에 유리한 도시공간구조 유도 등 기후변화 대응 국토환경 조성
- 국토생태축 보전·복구, 도시내 녹색인프라 확충 등 국토환경관리 네트워크 구축과 오염·방지공간 재생추진

○ 국토자원의 미래가치 창출과 활용도 제고

- 국토 경관 및 도로·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디자인 개선을 통한 경관품격 제고, 도시 전체 통합적 관점의 경관관리 추진, 일상생활 경관 향상

5)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지능화

○ 네트워크형 교통망의 효율화와 대도시권 혼잡 해소

- 국가 간선망의 효율화를 통해 전국을 2시간대로 연결하고, GTX 등 주요거점을 30분대로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 대심도 지하도로 추진
- 자율주행차와 개인용 이동수단, 하이퍼루프 등에 대비한 미래형 교통체계 개편 검토

○ 인프라의 전략적 운영과 포용적 교통정책 추진

- 생애주기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노후 인프라의 적기 개량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유지관리 고도화
- 어린이·고령 보행자 맞춤형 안전환경 조성 등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 추진, 교통이용플랫폼의 통합(MaaS) 등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 향상

○ 지능형 국토·도시공간 조성

- 신규 스마트시티 조성, 기존도시의 스마트화를 통한 생활편의 향상 등 성장 단계별·지역별 차별화된 스마트공간 조성
- 토지·지하공간·교통 등 국토정보 통합을 통한 가상국토 플랫폼 구축과 블록체인 도입 등 국토정보 보안체계 정비

6)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 한반도 신경제구상 이행과 경제 협력

- 남한과 북한의 협력을 통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국가로 발전
- 비무장지대(DMZ)에 유엔기구, 생태기구 유치 등 국제평화지대화 추진

○ 한반도-유라시아 경제공동체 육과 글로벌 위상 제고

-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설립하고 TCR, TMGR, TSR 등과 연결·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륙연결형 교통망 구축
- 신북방·신남방 정책, 도시개발모델 추출 등 교류·협력의 선도국가 위상 제고

다.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1) 계획의 배경

○ 인구 감소, 기술 혁신과 저성장 시대 등 사회·경제적 전환에 대비한 국가환경정책 방향 모색

- 인구감소 및 초고령화 시대의 빠른 도래와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환경정책 패러다임 제시
- 경제성장률 둔화와 저성장 추세에 대응하고 빅데이터, AI, 센서기술, 자율자동차 등 기술혁신과 데이터경제 시대에 대비하는 환경정책방향 마련 필요
- 미세먼지, 기후위험, 화학물질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 생활과 맞닿아 있는 환경문제의 적극적 해법 마련

○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 통합 물관리, 환경정의, 국토-환경계획의 통합관리 등 새로운 환경정책 수요를 반영한 국가환경 비전과 전략 마련

- 통합 물관리, 친환경에너지 전환 등으로 자원·경제정책의 녹색화를 확대하고 성과창출 도모
-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과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 마련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시행으로 환경정책의 공간화 및 공간환경 관리 전략 마련

○ 최상위 국가환경종합계획으로서의 위상 정립과 실효성 제고

- 지방분권화 진전, 국민 참여요구 증대 등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환경정책 거버넌스 모델 구축
- 환경부문 관련 계획과 하위 시·도, 시·군·구 환경보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통해 최상위 계획으로서 위상 정립 및 실효성 제고

○ 사회·경제적 전환과 새로운 환경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새롭게 수립

※ 2015년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을 수립하여 추진해왔으나, 사회 경제 전반위 녹색전환을 견인하고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훈령에 따라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연계하기 위하여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을 수립

(2) 계획의 성격과 특징

(가) 계획의 성격

○ 정책전략으로서의 계획

- 환경분야 최상위계획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미래 20년 정책전략 마련
- 환경관리 핵심 전략별 계획내용과 지침을 통해 하위계획의 수립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수립 이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계획 간 정합성 확보 및 컨설팅 등 지원 강화

○ 데이터기반의 계획

- 환경분야의 다양한 데이터를 토대로 일관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계획 수립
- 환경-경제 전망모형에 기초한 환경오염배출 전망 분석과 생태환경, 생활환경, 기후변화 등 공간환경DB구축 및 GIS분석 등을 토대로 환경관리 및 공간환경전략 마련

○ 소통·협력을 통한 계획

- 계획수립 과정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공무원, 지방연구원,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국민, 특히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직접참여와 온라인 소통장 등 '국민참여단'운영을 통해 계획 수립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은 계획수립 기간 동안 실무협의 등을 통해 미래이슈와 대응전략 등을 공유함으로써 양 계획 간의 적합성 강화

(나) 계획의 특징과 의의

○ 인구감소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최초의 계획으로 국토 생태용량 확대 지향

- 계획기간 중 인구감소를 불가피한 여건변화로 인식하여 인구소멸지역의 재자연화, 우수자연 보전 노력 강화, 도시 미래상으로 콤팩트 스마트 시티 설정 등 사람과 자연의 공존·번영을 위한 국토 생태용량 제고 지향

○ 환경정의와 녹색전환을 반영한 최초의 계획으로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지향

-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탈석탄, 탈내연기관, 탈플라스틱 등 저탄소 순환경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차별 없는 환경을 향유토록 환경정의 및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핵심 환경전략으로 마련

○ 국토계획-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위한 최초의 협력계획으로 기저계획(基底計劃)을 지향

-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국토종합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한 협력적 수립과정을 운용하고 국토생태축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간환경계획과 연계하여 광역~지방의 초연결 생태축 구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저계획으로서의 충실한 역할 수행

(다) 환경관리 7대 핵심전략

1) 생태계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토 생태용량 확대

가) 정책방향

현재(As-Is)	➡	미래 방향(To-Be)
백두대간 중심의 국토생태축 관리	➡	국가-광역-도시를 잇는 생태축 확립
생태용량 지속 감소, 인간 중심 자연 관리	➡	생태용량 순흥 전환, 자연과 인간의 상생
도시노후화, 자연훼손 등 도시 지속성 저하	➡	스마트기술, 탄소제로 등 도시 지속성 도약

나) 주요쟁책 과제

ㅇ국토환경 연결성 확보와 자연회복으로 국토 생태용량 증가

- 한반도 국토생태축 연결성 확보
- 자연환경 보전·복원 활성화로 생태용량 순증 실현
- 자연자원의 합리적 관리 강화

ㅇ모두가 누리는 자연혜택으로 생태복지 실현

- 생물다양성·생태계서비스 인식 및 가치 증진
- 생태계서비스 기반 국가·지역의 정책의사결정 추진
- 국토생태벨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연혜택 증진

ㅇ지속가능한 녹색도시·지역으로 도약

- 미래 공간환경 이슈를 고려한 친환경적 공간관리 강화
- 지속가능한 도시·지역 도약모델 개발과 확산
- 탄소제로 및 스마트 녹색도시 조성
- 지역정주생태계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ㅇ연안 및 해양 환경의 생태건강성 강화

- 연안 및 해양환경 위해요소의 체계적 관리
- 해양공간 통합관리체계 정착과 육상-해양 통합관리 지향

2) 사람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한 통합 물관리

가) 정책방향

현재(As-Is)	➡	미래 방향(To-Be)
수자원 확보 위주의 인프라 건설 및 단편적 도시물순환정책	➡	이수·치수·수생태를 고려한 댐·보 운영 및 도시물순환 정책 추진
물공급 위주의 물이용 서비스	➡	물수요·안전성·재이용을 종합 고려한 물이용서비스 강화
오염원 관리 위주의 물환경 관리	➡	미량물질 등 신규오염원 관리 강화 및 수용체를 고려한 물환경 정책 추진
「물관리기본법」등 통합 물관리 법적 기반 마련	➡	물관리 정보 통합·공유체계 및 유역 거버넌스 확립

나) 주요쟁책 과제

○ 물순환 건전성과 수요·공급의 조화를 고려한 물서비스 강화

- 건강한 물순환 회복으로 기후변화에 강한 도시 구축
- 저류-방류, 수질-수량-수생태계를 연계한 종합적 댐 운영
- 유역별 수요관리 우선 고려 및 하수 재이용 등 대체 수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물공급체계 구축

○ 수질오염관리 선진화로 안전한 물환경 조성

- 수질오염총량제 고도화 및 미량물질관리 등 수질오염관리체계 강화
- 사전예방적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 유역 단위 하수도 관리 정책 추진

○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 및 생태서비스 가치 실현

- 하천/하구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 및 연속성 확보
- 수생태계 생물다양성 관리 강화 및 건강성 관리시스템 구축
- 수생태계 건강성 관리를 통한 생태서비스 가치 실현

○ 유역기반·참여기반의 통합 물관리로의 전환

- 물관리 법령·계획 정비와 물정보 통합·공유, 혁신성장 체계 마련
- 지역발전과 연계한 유역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 5대 강 고유의 물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3)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가) 정책방향

현재(As-Is)	➡	미래 방향(To-Be)
대기정책으로 미세먼지 관리	➡	에너지-산업-도시환경정책으로 미세먼지 관리
매체별 환경오염관리	➡	수용체 중심 환경오염관리
화학물질에 대한 사후관리	➡	전과정 관리를 통한 유기적 화학물질 관리

나) 주요쟁책 과제

○ 미세먼지의 근본적 해결 추진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비전 마련
- 환경친화적 에너지·산업·도시정책 강화
-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대한 국민소통 강화

○ 위해성에 기반한 공기질 관리

- 위해성 기반의 대기오염물질 감시 강화
- 오존 대응 강화
-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

○ 생활주변유해인자·화학물질·제품 관리 강화

- 수용체 중심 환경관리 강화
- 환경오염 민감·취약계층의 건강 우선 보호
- 화학물질 사전위해성 관리 강화
- 생활화학제품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
- 미세플라스틱 관리기반 구축

4) 기후환경 위기에 대비된 저탄소 안심사회 조성

가) 정책방향

현재(As-Is)	➡	미래 방향(To-Be)
감축과 적응 정책 이원화	➡	감축과 적응 정책의 균형과 공편익 강화
정책 및 계획 수립에 초점	➡	실행과 실천 중심, 이행 점검 강화
정부주도 기후변화 위험관리	➡	시민·기업과 함께하는 기후변화 대응
환경재해 중심 관리	➡	미래 환경안보 위험 예측과 대응력 확대

나) 주요쟁책 과제

○ 저탄소 안심사회 기반 구축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제도 기반 강화
-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 연계를 통한 공동편익 극대화
- 저탄소 안심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생활양식 정착

○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추진

- 온실가스 장기 배출목표 설정과 주기적 갱신 강화
- 저공해자동차 획기적 확대 등 탈내연기관 자동차로 전환
- 탄소가격화 강화 및 규제정책과의 조화

○ 기후위험 대응과 신기회 창출 현실화

- 기후변화 적응 내재화를 통한 기후탄력성 확보
- 지역주도 기후위험 대응과 취약지역·계층 집중관리
- 공공기관 및 산업계 기후위험 대응과 신(新)기회 창출 촉진
- 기후위험 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체계 구축

○ 미래 환경안보 관리 강화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사성 폐기물 안전규제체계 선진화 추진
- 기후-기술-사회 등 복합환경재해 목록화 및 관리 강화
- 지정학적 요건을 고려한 동북아 환경재해 관리 강화

5) 모두를 포용하는 환경정책으로 환경정의 실현

가) 정책방향

현재(As-Is)	➡	미래 방향(To-Be)
환경정의와 녹색사회 실현 제도 미비	➡	환경정의 제도 구현 및 사회전반에 걸친 녹색전환 전략 추진
전반적인 공급 중심의 환경 개선	➡	수용체를 고려한 균등한 환경 개선
환경정보의 양적 공개 확대	➡	국민이 알고 싶은 효용성 있는 정보 공개
先피해입증, 後피해구제 및 책임부여	➡	先피해구제 및 책임부여, 後피해입증

나) 주요쟁책 과제

○ 환경정의 구현과 녹색사회로의 전환

- 환경정의제도화 및 정책추진
- 녹색 사회전환을 위한 포괄적 전략 추진

○수용체 관점의 환경개선

- 공간적·계층적 환경불평등 평가·진단 및 개선기반 구축
- 공간적·계층적 환경불평등 개선사업 강화
- 미래세대, 동식물까지 포용하는 환경정의 확장 모색

○환경정보의 알권리와 피해자 구제 강화

- 환경정보 제공의 획기적 확대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 국민의 실질적 참여기회 강화
- 환경책임·피해구제, 분쟁조정 및 환경소송 제도의 개선으로 교정적 환경정의 강화

(6) 산업의 녹색화와 혁신적 R&D를 통한 녹색순환경제 실현

(가) 정책방향

현재(As-Is)	➡	미래 방향(To-Be)
환경기술-산업 발전 정체	➡	환경기술 혁신, 환경산업 생태계 확충
대량생산-소비-폐기의 선형경제	➡	자원 전과정 이용, 순환경제 체제 정착
직접 규제 중심의 환경정책	➡	사회적 환경비용을 반영한 정책 설계

나) 주요쟁책 과제

○환경R&D의 미래지향적 혁신

- 미래대응형 유망환경기술 개발 추진
- 사회문제해결형-정책연계형 핵심기술 개발확대

○물질순환과 친환경경영에 기초한 산업 녹색화

- 순환경제모델 정립 및 확산
- 순환자원의 자원가치 극대화
- 플라스틱 폐기물 및 유해폐기물의 책임관리 강화
- 일회용품 규제 등 친환경소비 촉진을 위한 관리 강화
- 기업 및 공공기관의 친환경경영 정착

○환경일자리 창출과 환경가치 제고

- 환경분야 창업·벤처·강소기업 육성 및 전방위 지원
- 환경 일자리 창출과 전문인력 육성
- 환경비용 내부화와 규제 선진화

- 시장과 ICT를 활용한 친환경 가치 창출
- 자원순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새로운 물질순환가치 창출

7) 지구환경보전을 선도하는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현

가) 정책방향

현재(As-Is)	➡	미래 방향(To-Be)
남북 간 유리된 환경관리 및 정책	➡	남북간 통합환경관리를 위한 기반 조성
전시성 성격의 남북환경 협력	➡	지속가능하며 구체성 있는 남북 환경협력사업 시행

나) 주요쟁책 과제

○ 항구적인 남북환경협력 이행
- '한반도 환경통일'을 위한 기반 구축
-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현을 위한 남북협력사업 이행

○ 동북아 환경협력 발전
- 동북아 월경성 환경오염 대응 협력체제 구축
- 동북아 생태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가능한 이용
- 양자·다자간 환경 협력을 동북아 지역협력으로 발전

○ 국제협약의 성실한 이행·선도와 개발도상국 협력 확대
- 기후변화 등 국제협력의 이행과 공조
- 지구생물다양성 증진 노력 강화
-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기술 협력 확대
-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지원 및 협력 강화

라. 제1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방향 연구

(1) 계획의 배경 및 필요성

○ 농촌과 도시의 소득 격차가 크며, 농촌 내에서 소득 격차도 확대됨에 따라 주민들의 소득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이 요구

○ 농촌사회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인구 유입이 필요

○ 농촌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6차산업화가 대안으로 부각

○ 정부는 6차산업화의 확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지역산업 기반의 한계 등으로 인해 참여 주체들의 상당수가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해법 모색이 요구

○ 정부의 6차산업화 육성 방향과 전략을 기본계획을 통해 제시 필요

(2) 비전

○ 농업·농촌자원의 융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촌경제 활성화

(3) 목표

○ 농·인증자 매출액 증가율 : (2014) 11.2% → (2016) 5.0% → (2020) 5.0%

○ 6차산업 창업자수 : (2014) 760개소 → (2016) 1,600개소 → (2020) 3,000개소

○ 농촌체험마을 방문객 : (2014) 549만명 → (2016) 600만명 → (2020) 800만명

(4) 추진전략

○ 6차산업 창업·보육·성장·시장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 특색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산업 클러스터 육성

○ 서비스 개선과 적극적인 방문객 유치를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

(5) 중점추진 과제

○ 6차산업화 기반조성

- 기초통계 구축
- 지원체계 정비
- 지원기관 역량 강화
- 6차산업 브랜드가치 제고

○ 6차산업화 경영체 육성

- 창업·보육 지원 강화
- 6차산업 판매 플랫폼 구축
- 인증사업자 지정·관리 체계화
- 성공모델 발굴·확산

○ 지역단위 6차산업 촉진

- 6차산업화 지구 조성

- 규제특례 발굴·적용
- 전후방산업 연계 인프라 구축

○ 농촌관광 활성화

- 농촌관광상품 다양화
- 농촌관광 수용태세 개선
-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
- 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2018~2027)

(1) 수립배경 및 의의

○ (법정계획) 제1차 산촌진흥기본계획(2008~2017)이 종결됨에 따라 여건변화 등을 반영한 후속 법정계획을 수립·시행할 시점

○ (국가역할)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해 산촌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국가의 중추적 역할이 요구

○ (공간창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청정한 생활환경 등 산촌이 지닌 매력과 가치를 극대화한 국토공간으로 창출할 필요

(2) 수립근거

○ 「산림기본법」 제28조에서 제30조 및 「임업·산촌진흥법」 제23조 등에 동 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둠

(3) 계획의 성격과 범위

○ 산촌진흥 정책의 발전방향과 중장기 비전 제시

○ 산촌진흥을 위한 국가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제시

○ 지자체 산촌진흥계획의 수립 기준과 작성방향 제시

(4) 비전

○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산촌

(5) 목표

○ 지역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산촌특구를 조성하여 산촌 거점권역 육성

○ 산촌을 생태적으로 건강하며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조성

○ 산촌 기반 휴양·생태관광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소득원 확대

(6) 추진과제

○ 늘 푸르고 건강한 생태산촌
- 산촌경관자원 개발 및 가치 제고
- 산촌마을의 생활환경 관리 강화
-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재해 예방 강화
-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활성화

○ 창의적인 융복합의 풍요산촌
- 청정임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 산림경영 여건 개선 및 산촌 경영역량 강화
- 산촌 6차산업화 등 신규 비즈니스 육성

○ 정이 넘치고 찾고 싶은 휴양산촌
- 산촌마을 생태·체험관광 자원 발굴
- 산촌관광·휴양 프로그램 개발·홍보
- 산림복지시설과 연계한 장기체류형 마을 조성
- 산촌관광·휴양 서비스의 품질 향상

○ 쾌적하고 활기찬 행복산촌
- 산촌생태마을 사후관리 강화 및 운영 활성화
- 산촌개발사업 규모 확대 및 추진방식 개편
- 주민 행복서비스 향상으로 삶의 질 제고
- 산촌특구 유형별 거점권역 육성
- 도시 청년·은퇴세대의 귀산촌 붐 조성

○ 협력과 상생의 공동체 산촌
- 산촌 리더 양성 및 마을 간 협력·공유 확산
- 산촌마을 주민 간 유대·협력 강화
- 지자체·지역주민 중심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산촌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정비

바.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2019~2028)

(1) 계획 수립의 배경

○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해양생태계 지속적 훼손

○ 지난 10년간 ‘해양공간계획법’ 제정 등 해양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설립’등 인프라 구축

○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2019~2028)을 통해 지낸 10년 간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향후 10년의 미래 전망에 대비한 새로운 정책수단 마련 필요

(2) 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비전

○ 다함께 누리는 풍요로운 해양생태계의 혜택

(4) 목표

○ 해양생물 및 해양생태계 서식지 보전

○ 해양생태계서비스 혜택 증진

○ 해양생태계 거버넌스 구축·운영 강화

(5)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 해양생태계 서식지 보호

- 해양생태 네트워크 구현
-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강화
- 훼손된 해양생태계 복원 확대

○ 해양생물 보호·복원

- 해양보호 생물 보호·복원
- 안전한 해양생태계 조성
- 기후변화 대응 해양생물 보호·관리

○ 해양생태계 서비스 혜택 증진

- 생태계기반 해양공간 통합관리 추진
- 해양생태계서비스 평가 체계 구축
- 해양생태계서비스 증진

○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반 선진화

- 해양생태계 조사 선진화
- 해양생태계 평가 강화
- 해양생태계 관린 연구개발 강화
- 해양생태계 보전 인식 증진

○ 해양생태계 거버넌스 체계화

- 국가·지자체·지역주민 협력 추진체계 확립
- 국제 동향 적극 대응
- 동북아 해양생태계 협력 확대

사.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

(1) 개요

○ (수립목적)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정책방향 및 부문별 이행대책 수립

○ (수립시기) 2023년 4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확정

○ (계획기간) 2023~2042년(20년간), 5년마다 연동계획으로 수립·시행

○ (법적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2) 중점 추진 방향

○ (온실가스 감축)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감축대책 추진 및 이행점검 강화

○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에너지 활용 확대와 에너지 수요관리 및 효율 개선 추진

○ (녹색기술·산업 육성)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금융·투자 확대

○ (녹색국토·생활) 건물·수송 부문의 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 교통체계 확산 및 탄소중립 생활문화 정착

○ (기후위기 적응) 기후재난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국민 건강과 사회기반시설 기후위험 대응력 제고

○ (지역주도 및 국제협력)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탄소중립 추진, 정의로운 전환 지원 및 국제 온실가스 감축 협력 확대

(3) 비전 체계

ㅇ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 무탄소 전원 활용 확대,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 국토의 저탄소화

ㅇ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 탄소중립 과학기술 혁신
- 녹색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 녹색금융 및 투자 확대

ㅇ함께하는 탄소중립

- 국민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확대
-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
-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지원

ㅇ능동적인 탄소중립

- 기후위기 적응역량 강화
- 국제협력 및 국제감축사업 추진
- 정책 이행점검 및 성과평가 체계 강화

아. 생태관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ㅇUN은 2020년을 ‘생태관광의 해’로 정하여 자연기반의 관광을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2017년은 ‘지속가능 관광의 해’로 정하여 환경, 경제,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관광의 역할 강조

ㅇ국내에서는 2013년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생태관광의 개념정의, 생태관광지역 지정제 도입 및 한국생태관광협회를 명문화

ㅇ지속가능 관광으로서의 생태관광의 내실화와 저변 확대, 지역경제 회복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역관광 정책의 중요성 관계부처들을 중심으로 확대

ㅇ현재까지의 이행성과와 여건변화를 기반으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및 체계적 성과평가·환류방안 마련 필요

ㅇ이행성과 및 여건변화를 기반으로 생태관광 활성화 중장기 로드맵 및 체계적 성과평가·환류 방안 마련 필요

(2) 추진근거

○ 현재 계획의 법적근거는 없으나,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2013~2018)의 후속계획 성격

(3) 내용적 범위

○ 총괄 및 정책연구 분야

- 생태관광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총괄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법령 및 제도개선, 평가지표 개발 등

○ 역량강화 및 수익창출 분야

- 생태관광지역 주민역량강화 및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인식제고 및 홍보방안 마련, 이익환원체계 구축 등

○ 자연생태 및 협력 분야

- 자연친화적 생태관광 육상, 우수 생태자원 발굴, 보호지역 외 생태관광 활용가능지역 발굴, 국제협력 및 표준화 등

(4) 시간적 범위

○ 향후 10년(2021~2030)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계획 수립(단기 3개년, 중기 3개년, 장기 4개년)

○ 2018년 기준의 통계 및 조사자료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최신자료 활용

(5) 연구의 추진체계 및 방법

○ 생태관광 관련 주요국 사례분석 및 국내 생태관광 추진 성과 평가

○ 국내 생태관광 추진성과 및 미비점, 한계분석, 개선필요 요소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

○ 정책, 역량, 자연생태, 국제협력 등의 분야에 대한 전략과 추진과제 도출

(6) 전략 및 이행과제

○ (비전) 자연의 풍요로움과 생태공감 확산을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보

○ 자연생태적 지속가능성 향상

- 생태관광지역 자원관리 체계화
-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저변 확대
- 생태 경제 기반 확립

○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도모

- 생태관광지역 주민역량 강화,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 생태관광지역 소득향상 및 이익환원, 생태관광 가치증진을 위한 전략적 홍보

○ 지속가능한 법·제도적 뒷받침 마련, 스마트 생태관광 정책추진 기반 확보

○ 생태관광 지원조직의 체계화와 역할 분담

자.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2027~2031)과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1)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의 연계성

- 국토계획의 지역 특성 기반 발전, 연대·협력, 지역산업 및 문화관광 활성화 방향은 수정계획의 「역동적인 지역관광 생태계 육성」 및 「연계·협력 기반의 관광효과 확산」과 연계됨. 수정계획은 주민참여형 지역관광, 지역관광 전문인력·조직·기업 육성, 관광과 지역상권·산업의 연계 강화, 초광역 관광협력권 육성 및 지역 간 관광교통 연계를 제시
- 지역 문화자원의 가치 제고와 글로벌 관광경쟁력 강화 방향은 「관광자원의 매력과 가치 제고」의 K-콘텐츠 한류 관광거점, 지역특화 문화예술관광도시, 건축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및 디지털 참여형 관광콘텐츠 개발과 내용상 연계됨
- 남북관광 재개에 대비한 남북관광 연계 모델 마련’ 및 ‘한·중·일 공동 관광권 협력체계 구축과 내용상 연계됨

(2)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과의 연계성

- 국토 생태용량 확대 및 자연혜택 증진 방향은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이용·관리」의 생태복원형 관광지 육성, 생태계서비스 기반 자연친화적 관광모델 개발·확산과 직접적인 정책방향상 연계됨
- 저탄소 사회 전환 및 기후위험 대응 방향은 관광개발 탄소배출 관리·중립 목표 이행, 노후 관광시설 녹색전환, 기후위기 적응형 관광개발과 연계됨. 관광지별 기후리스크 취약성 진단과 그린리모델링 등은 정책수단 차원의 대응 과제임.
- 순환경제 및 자연자원의 합리적 이용 방향은 유휴·노후 관광자원의 재생과 활용, 관광수용력 기반의 오버투어리즘 관리 및 책임관광 문화 확산과 연계됨

(3) 제1차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 농촌관광 활성화 및 농촌 융복합산업의 지역 부가가치 창출 방향은 「역동적인 지역관광 생태계 육성」의 ‘6차 산업을 통한 지역관광 활력 증진’, 주민참여형 지역관광 발굴·운영 확대, 관광과 지역상권·산업의 연계 강화와 연계됨
- 농촌관광의 체류 및 체험 기반 확충 방향은 「관광자원의 매력과 가치 제고」의 체류형 마을호텔 육성, 지역식문화 관광자원화, 웰니스 관광 고도화 등과 내용상 부합함

(4)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 산촌마을 생태·체험관광, 산림휴양 및 지역정주 여건 개선 방향은 수정계획 '휴양·치유 기반의 웰니스 관광 고도화', '생태계서비스 기반 자연친화적 관광모델 개발 및 확산'과 연계됨
- 지역 주민의 관광사업 참여와 산촌관광의 운영역량 강화 방향은 주민참여형 지역관광 발굴·운영 확대, 주민 관광사업체의 자립·성장 지원 및 지역관광 전문인력·조직·기업 육성과 연계됨

(5)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기본계획과의 연계성

- 해양생태계 보전, 생태자원 가치 증진 및 협력적 관리 방향은 수정계획의 갯벌·연안 등 생태복원형 관광지 육성, 생태계서비스 기반 자연친화적 관광모델 개발과 연계됨
- 해양관광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지역·부처 간 협력 방향은 「연계·협력 기반의 관광효과 확산」에서 제시한 크루즈 및 섬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범부처 지역관광 융합개발사업 추진과 연계됨. 다만 관광 활성화가 곧 해양생태 보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호·관리 조건의 병행이 요구됨

(6)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

- 상위계획의 국토 저탄소화, 무탄소 전원 활용, 지역 주도 전환 방향은 수정계획의 '관광개발 탄소배출 관리 및 중립 목표 이행', '노후 관광시설의 녹색전환' 등과 연계됨
- '기후위기 적응' 방향은 수정계획의 '기후위기 적응형 관광개발 추진'과 연계되며, 관광지 기후리스크 취약성 진단 등은 탄소배출 감축과 구별되는 적응 정책수단으로 제시됨

(7) 생태관광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 생태관광지역의 자연생태 가치 보전, 지역주민의 참여·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편익 환원 방향은 수정계획의 '생태복원형 관광지 육성', '생태계서비스 기반 자연친화적 관광모델 개발·확산', '주민참여형 지역관광 발굴·운영 확대' 및 '관광 편익의 지역 환류 공유모델 확산'과 연계됨
- 생태관광의 지속적 관리와 추진기반 강화 방향은 「관광개발 제도·관리체계 혁신」의 관광개발 관련 계획의 연계 모니터링,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관광개발 표준지침 및 가이드라인 고도화와 연계됨

〈표 9.3.1-1〉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주요내용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2027~2031)	세부 과제	비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2040)	지역발전·연대협력	○ 전략 4. 역동적인 지역관광 생태계 육성	○ 주민참여형 지역관광 발굴·운영 확대 ○ 지역관광 전문인력·조직·기업 육성 ○ 지역상권·산업 연계 강화	p.160 ~161
	지역산업·문화관광 활성화	○ 전략 1. 관광자원의 매력과 가치 제고	○ 디지털기술 기반 참여형 관광콘텐츠 개발 ○ K-콘텐츠를 활용한 한류 관광거점 조성 ○ 지역특화 문화예술관광도시 조성	p.125 ~127
	광역 및 국제 연계	○ 전략 5. 연계·협력 기반의 관광효과 확산	○ 5극3특 연계 초광역 관광협력권 육성 ○ 남북관광 재개에 대비한 남북관광 연계 모델 마련 ○ 한·중·일 공동 관광권 협력체계 구축	p.171 ~176
	생태계·자연혜택 보전	○ 전략 2.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이용·관리	○ 생태복원형 관광지 육성 ○ 생태계서비스 기반 자연친화적 관광모델 개발 및 확산	p.142 ~143
	저탄소 사회·기후위험 대응	○ 전략 2.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이용·관리	○ 생태복원형 관광지 육성 ○ 생태계서비스 기반 자연친화적 관광모델 개발 및 확산	p.142 ~143
		○ 전략 2.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이용·관리	○ 관광개발 탄소배출 관리 및 중립 목표 이행 ○ 관광시설의 그린 리모델링 및 에너지 전환 ○ 기후위기 적응형 관광개발	p.138 ~141
	녹색순환경제·환경관리	○ 전략 2.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이용·관리	○ 유휴시설·노후관광지 재생을 통한 관광자원화 ○ 관광 수용력 기반 오버투어리즘 관리	p.145

〈표 계속〉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주요내용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2027~2031)	세부 과제	비고
제1차 농촌융복합 산업육성 기본계획	농촌관광·6차 산업 연계	○ 전략 4. 역동적인 지역관광 생태계 육성	○ 주민참여형 관광 발굴·운영 확대 ○ 6차 산업을 통한 지역관광 활력 증진	p.161 ~163 p.166 ~167
	체류·농촌체험 확대	○ 전략 1. 관광자원의 매력과 가치 제고	○ 체류형 마을호텔 육성 ○ K-푸드의 글로벌 관광자원화	p.133 ~134
제2차 산촌진흥 기본계획	산림휴양·산촌 생태관광	○ 전략 1·2. 관광자원 매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이용·관리	○ 휴양·치유 기반 웰니스 관광 고도화 ○ 생태복원형 관광지 육성 ○ 생태계 서비스 기반의 자연친화적 관광 모델 개발 및 확산	p.129 ~130 p.142 ~143
	산촌 주민 참여	○ 전략 4. 역동적인 지역관광 생태계 육성	○ 주민 관광사업체 자립·성장 지원 ○ 지역관광 전문인력·조직·기업 육성	p.161 ~163 p.165 ~166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해양생태 보전·생태 복원	○ 전략 2.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이용·관리	○ 갯벌·연안 등 생태복원형 관광지 육성 ○ 자연친화적 관광모델 개발	p.142 ~143
	해양협력·지속가능한 이용	○ 전략 5. 연계·협력 기반의 관광효과 확산	○ 크루즈 및 섬관광 활성화 지원 확대 ○ 범부처 지역관광 융합개발사업	p.178 ~179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국토 저탄소화·지역 주도 전환	○ 전략 2.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이용·관리	○ 탄소배출 관리·중립 목표 이행 ○ 관광시설의 그린 리모델링 및 에너지 전환	p.138 ~140
	기후위기 적응	○ 전략 2.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이용·관리	○ 기후위기 적응형 관광개발	p.141
생태관광 중장기 발전계획	생태관광·지역 환류	○ 전략 2·4. 지속가능한 이용·관리 및 지역관광 생태계 육성	○ 생태복원형 관광지 육성 ○ 주민참여형 지역관광 확대 ○ 관광 편익 지역 환류 공유모델	p.142 p.161 ~164
	추진기반·관리체계 강화	○ 전략 6. 관광개발 제도·관리체계 혁신	○ 관광개발 표준지침 및 가이드라인 고도화 ○ 관광개발 단계별·맞춤형 컨설팅 강화 ○ 관광개발 관련 계획의 연계 모니터링 추진	p.182 ~183

9.3.2 계획 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가. 비전

(1) 모두가 누리는 관광, 관광으로 성장하는 대한민국

○ ‘모두가 누리는 관광’은 국민과 지역주민, 국내외 관광객, 현재와 미래세대가 관광의 기회와 경험, 관광개발로 창출되는 편익을 함께 향유하는 것을 의미

○ 단순히 누구나 여행할 수 있다는 포용적 의미를 넘어, 관광객은 좋은 관광경험을 누리고, 지역주민은 관광으로 창출되는 편익을 누리며, 미래세대는 보전된 관광자원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관광개발 지향

- 관광 향유의 포용성 + 국민 체감 + 지역 간 격차 완화 + 지속가능성

○ ‘관광으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은 관광객 수나 산업 규모의 성장에 한정되지 않고, 관광자원의 가치, 관광시장, 지역산업과 일자리, 지역역량이 함께 성장하는 것을 의미

○ 관광자원의 가치 제고와 글로벌 관광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실현, 2031년에는 국민과 지역주민, 국내외 관광객, 현재와 미래세대가 관광의 기회와 편익을 함께 누리고, 관광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여 지역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실현, 기존 계획의 ‘관광으로 행복한 국민’을 계승하면서도 대상을 지역주민·외래관광객·미래세대까지 확장



나. 계획 목표

(1) 세계적 관광매력을 갖춘 글로벌 관광

○ K-컬처에 대한 국제적 관심 확대와 국가 간 관광객 유치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관광자원과 관광경험을 세계인이 선택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고

○ 글로벌 관광은 외래관광객 수의 양적 확대에 한정되지 않으며, 지역 고유자원의 매력과 차별성, 콘텐츠와 서비스의 품질, 접근성과 편의성, 안전성 등 관광경험 전반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의미

○ 자연·문화자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생활문화와 산업, 음식, 예술, 경관 등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발굴하고, K-컬처 및 첨단기술과 결합하여 세계적인 관광매력을 갖춘 자원과 콘텐츠로 발전

○ 신규 관광자원의 발굴·조성과 함께 기존 관광자원의 활용과 재생, 운영·관리 수준을 높여 세계인이 방문하고 만족하며 재방문을 고려하는 경쟁력 있는 관광환경 조성

○ 이에 기반 하여 지역 고유성과 한국적 매력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관광경험을 제공하고, 대한민국 관광의 국제적 위상과 관광경쟁력 제고

(2) 체류와 소비를 지역으로 확산하는 상생관광

○ 관광객 수의 증가가 일부 지역과 관광지의 방문에 그치지 않고, 여러 지역으로의 이동과 장기 체류 및 지역 내 소비로 연결되도록 관광시장의 질적 변화를 유도

○ 상생관광은 관광객에게 매력적이고 편리한 관광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가 지역의 상권·산업·일자리와 연결되어 관광객과 지역이 관광의 편익을 함께 누리는 것을 의미

○ 수도권과 일부 유명 관광지에 집중된 관광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하고, 관광거점과 주변 지역, 도시와 농산어촌, 지역 간 관광자원과 동선을 연계하여 관광객의 이동범위와 체류시간 확대

○ 단순 방문과 관람 중심의 관광에서 벗어나 숙박, 음식, 쇼핑, 문화·예술, 야간관광, 웰니스 등 지역의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경험하는 체류·소비형 관광 활성화

○ 관광객의 이동·체류·소비행태를 분석하여 관광교통, 관광정보, 결제, 안전, 여행 전 과정의 편의를 개선하고, 관광수요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 조성

○ 이를 토대로 관광객의 만족과 지역의 관광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함께 높이고, 관광수요의 지역 편중 완화와 지역 균형성장에 기여

(3) 관광가치와 지역 활력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관광

○ 관광개발이 단편적 시설 조성과 관광객 유치에 그치지 않고, 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개발·이용·보호·관리하고 관광으로 창출된 편익을 지역에 환류하여 관광자원의 가치 보전과 지역 활력이 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 형성

○ 지속가능관광은 지역의 환경적·사회적·문화적 수용력을 고려하여 관광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이용·보호·관리하고, 그 가치를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의미

○ 관광가치는 관광자원의 매력과 보전가치뿐만 아니라 관광을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편익, 관광객의 경험가치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포괄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민간기업, 지역관광조직 등 다양한 주체가 관광개발의 계획·조성·운영·관리 과정에 참여하고,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에 기반한 지역주도 관광개발 체계 구축

○ 관광으로 창출된 소득과 일자리 등 편익이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다시 관광자원의 보전·관리, 콘텐츠와 서비스 개선, 지역역량 강화에 재투자되는 환류구조 마련

○ 기후변화와 오버투어리즘, 관광시설 노후화 및 운영 부실 등에 대응하여 관광자원의 개발·이용·보호·관리를 균형 있게 추진하고, 관광개발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관리와 성과평가 강화

○ 이를 통하여 관광자원의 가치 제고가 지역 활력을 높이고, 높아진 지역 활력이 다시 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가치 향상으로 이어지는 관광개발의 선순환 실현

다. 계획 지표

○ (글로벌 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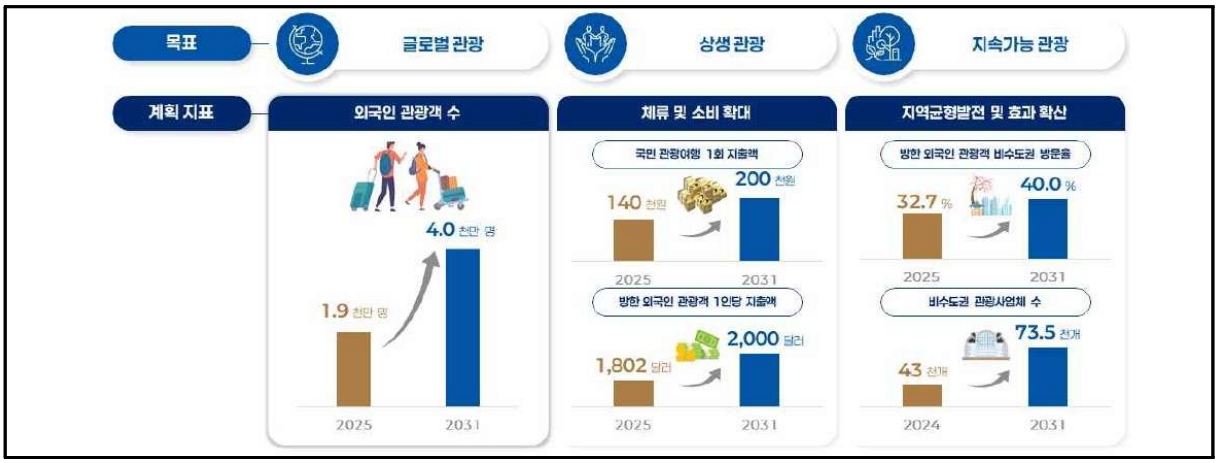
- 외국인 관광객 수 — 2025년 1.9천만 명 → 2031년 4천만 명

○ (상생 관광 : 체류 및 소비 확대)

- 국민 관광여행 1회 지출액 — 2025년 140천 원 → 2031년 200천 원
- 방한 외국인 관광객 1인 지출액 — 2025년 1,802달러 → 2031년 2,000달러

○ (지속가능 관광 : 지역균형발전 및 효과 확산)

- 방한 외국인 관광객 비수도권 방문율 — 2025년 23.2% → 2031년 30.0%
- 비수도권 관광사업체 수 — 2025년 60.5% → 2031년 70.0%



계획 지표

라. 추진 전략

(1) 전략 도출

(가) 6대 전략체계 계승과 정책 환경 변화 대응

○ 추진 전략은 자원·시장·주체라는 정책영역, 개발·이용·보호·관리라는 관광개발 기능, 입체적·스마트·지속가능·합리적이라는 방향성을 토대로 6대 전략 도출

○ 기존 계획에서 제시한 6대 전략체계는 관광자원, 관광환경, 지역 및 주체, 연계·협력, 제도·관리 등 관광개발의 핵심 정책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수정계획에서도 기본적인 전략 틀 유지

○ 다만 코로나19 이후 관광시장 변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관광수요의 다변화, 지역 간 연계·협력 확대 등 2022년 이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수정계획의 비전 및 목표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략별 정책방향과 추진내용 재구조화

(나) 수정계획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의 성과지향성 강화

○ 수정계획의 비전인 '모두가 누리는 관광, 관광으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전략체계의 상위 지향으로 설정하고, 관광의 향유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관광이 지역과 국가의 성장에 기여하도록 전략의 정책적 지향 명확화

○ 세계적 관광매력을 갖춘 글로벌 관광, 체류와 소비를 지역으로 확산하는 상생관광, 관광가치와 지역 활력이 선순환 하는 지속가능관광의 3대 목표를 6대 전략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핵심 성과로 설정

○ 이에 따라 관광자원의 공급과 개발 자체보다 세계적 관광매력의 창출, 관광 향유기회의 확대, 체류와 소비의 지역 확산, 관광가치와 지역 활력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등 전략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를 중심으로 전략별 방향 재설정

(다) 관광개발 정책영역의 확장과 유기적 연계

○ 관광자원의 개발과 확충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관광개발 영역을 넘어 관광자원의 매력과 가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 편리하고 안전한 관광환경, 지역관광 생태계, 지역·부문 간 연계·협력, 제도·관리체계까지 관광개발의 정책영역 확장

○ 개별 관광자원이나 시설 중심의 개발에서 나아가 관광객의 이동·체류·소비, 지역주민과 관광사업자 등 지역주체, 지역산업 및 지역 간 관계까지 포괄함으로써 관광자원과 관광환경, 지역주체와 산업, 공간 간 관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관광개발체계로 확장

○ '자원 발굴-기반 확충-체계 구축' 중심의 전략에서 '가치 제고-지속가능한 이용·관리-지역효과 확산-제도 혁신' 중심의 전략으로 고도화

(라) 개발·이용·보호·관리의 균형에서 관광가치와 지역 활력의 선순환

- 「관광진흥법」에서 제시하는 관광자원의 개발·이용·보호·관리라는 관광개발의 기본 기능을 균형 있게 반영하되, 관광자원의 신규 공급과 개발 중심에서 기존 자원의 가치 제고와 지속가능한 이용·관리까지 관광개발의 기능 강화
- 관광자원의 개발 성과가 개별 관광지에 머무르지 않고 관광객의 향유와 체류·소비 확대를 거쳐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에 파급되고, 이를 통해 형성된 지역 활력이 다시 관광자원의 매력과 가치를 높이는 선순환적 관광개발체계 지향
- 이를 통해 관광매력 제고, 관광 향유 및 체류 확대, 지역 내 소비와 효과 확산, 지역 활력 제고, 관광가치 재창출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구현

(2) 전략별 추진 방향

(가) 전략 1. 관광자원의 매력과 가치 제고

- 관광수요와 기술·산업 변화에 대응하여 관광자원의 영역과 활용 방식을 확장하고, 지역 고유자원의 재발견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해 차별화된 관광매력 강화
- 신규 관광자원 발굴 중심에서 기존 자원의 재해석 및 고도화와 콘텐츠 융복합으로 관광자원의 질적 가치를 높여 세계적 수준의 관광경쟁력 확보

(나) 전략 2.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이용·관리

-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성 요구에 대응하여 관광자원의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활용 확산
- 노후·유휴 관광자원의 재생과 관광객 집중 등 관광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관광자원과 지역사회의 회복력 강화

(다) 전략 3. 편리하고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

- 관광객의 이동·체류·관광활동 전 과정에서 교통·안내·정보·서비스의 연결성과 편의성을 높여 관광 만족도를 제고하고 원활한 관광활동을 지원하는 관광환경 조성
- 관광약자를 포함한 모든 관광객의 관광 접근성과 안전을 강화하고, 투명한 가격과 신뢰할 수 있는 관광서비스를 확산하여 안심하고 누리는 관광여건 마련

(라) 전략 4. 역동적인 지역관광 생태계 육성

- 주민·지역기업·관광사업자 등 다양한 지역주체의 참여와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자원·산업과 관광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지역관광 가치 창출
- 관광개발의 성과가 지역의 사업·일자리·소득 등 지역 활력으로 이어지는 자생적 관광 생태계 육성

(마) 전략 5. 연계·협력 기반의 관광효과 확산

- 행정구역과 개별 관광지의 경계를 넘어 지역·관광자원·산업 간 연계와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통해 관광공간과 관광경험의 범위 확장
- 광역·초광역 관광 연계와 지역 간 역할 분담을 통해 관광객의 이동·체류·소비를 지역으로 확산하고 관광개발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제고

(바) 전략 6. 관광개발 제도·관리체계 혁신

- 관광개발 환경과 정책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광개발 관련 계획·제도와 추진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정책 실행력 강화
- 관광자원의 개발·이용·보호·관리를 전 주기적으로 고려하고 계획부터 사업 추진·운영·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관광개발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 10년 후의 미래는 일상공간 관광자원화 되고 관광의 일상화가 보편화된 환경에서 행복과 삶의 질의 가치 중시하는 국민들의 중요한 권리로서 관광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관광 환경 조성 필요
- 국가관광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관광발전을 견인하는 관광자원 개발과 관리의 방향은 관광객(관광시장), 관광자원, 개발 주체(지자체, 지역주민, 민간 등)의 영역을 아우르고, 연계·협력하는 합리적 사고와 통합된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설정

마. 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2027~2031)은 “모두가 누리는 관광, 관광으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비전 아래 글로벌 관광·상생관광·지속가능관광의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6대 추진전략을 제시함
- 전략 1과 전략 3은 관광매력·안전·편의·접근성을 높여 글로벌 관광 목표에 대응하며, 전략 4와 전략 5는 지역주체 참여 및 지역 간 연계를 통한 체류·소비 분산으로 상생관광 목표를 뒷받침함

○ 전략 2는 탄소중립, 기후위기 적응, 생태자원 보전·복원, 노후·유휴 자원 재생, 오버투어리즘 관리 등을 통해 지속가능관광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전략 6은 정책 추진 및 자원 관리의 실효성을 지원함

○ 정량지표 5개는 외래관광객 유치, 관광소비 확대, 지역분산의 성과와 연결되므로 비전·목표·전략·지표 간 기본적인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됨

○ 전략체계 검토

구분	6대 추진전략	주요 연계목표	검토 내용
전략 1	관광자원의 매력과 가치 제고	글로벌 관광	기존 자원의 재해석, 문화·기술 융합, 관광매력 강화
전략 2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이용·관리	지속가능관광	탄소중립·기후적응, 생태보전·복원, 유휴자원 재생
전략 3	편리하고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	글로벌·상생관광	관광정보·교통·안전·무장애 이용 환경 개선
전략 4	역동적인 지역관광 생태계 육성	상생·지속가능관광	주민참여, 지역산업·일자리, 지역주도 운영
전략 5	연계·협력 기반의 관광효과 확산	상생관광	광역 관광연계, 체류·소비의 지역 확산
전략 6	관광개발 제도·관리체계 혁신	3대 목표 공통	전주기 관광자원 관리, 정책 실행력·성과관리

○ 정책내용의 검토

계획 목표	관련 추진전략	수정계획(안)의 내용 및 세부과제 사례	검토내용
글로벌 관광	전략 1 관광자원의 매력과 가치 제고	첨단 기술과 미래 테마 활용 관광콘텐츠 개발; 지역 고유 문화·예술 콘텐츠의 관광자원화; 관광수요 변화에 대응한 콘텐츠 개발	관광경험 및 고유자원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직접 연계
	전략 3 편리하고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	관광지·관광시설 안전관리체계 강화, 무장애 관광 및 여행정보·서비스 개선	관광 접근성과 경험 품질 지원
지속가능관광	전략 2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이용·관리	관광개발 탄소 감축, 기후위기 적응형 관광개발, 생태 복원형 관광지 육성	생태환경 보전 및 회복력 확보와 직접 연계
		유휴·노후 관광자원 재생, 관광수용력 기반 오버투어리즘 관리	개발·이용·보호·관리의 균형 지원
상생관광	전략 4 역동적인 지역관광 생태계육성	지역주민·지역기업·관광사업자참여 확대, 지역 산업·일자리·소득과 관광개발 성과 연결	지역사회 편익 확산에 직접 연계
	전략 5 연계·협력 기반의 관광효과 확산	광역·초광역 관광 연계 및 지역 역할 분담으로 이동·체류·소비의 공간적 확산	지역분산 목표와 직접 연계
지속가능관광	전략 4 역동적인 지역관광 생태계육성	지역 주도의 개발·운영 및 자생적 관광생태계 육성	지역사회 환류구조와 연계
글로벌·상생·지속가능관광	전략 6 관광개발 제도·관리체계 혁신	관광개발 관련 계획·제도 및 추진체계 개선, 관광자원 전 주기 관리	공통적 이행 기반으로 간접 지원

9.4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9.4.1 공간계획의 적정성

가.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22~2031)

○ 수도·강원·제주권

- 글로벌 K관광 미래평화 선도지대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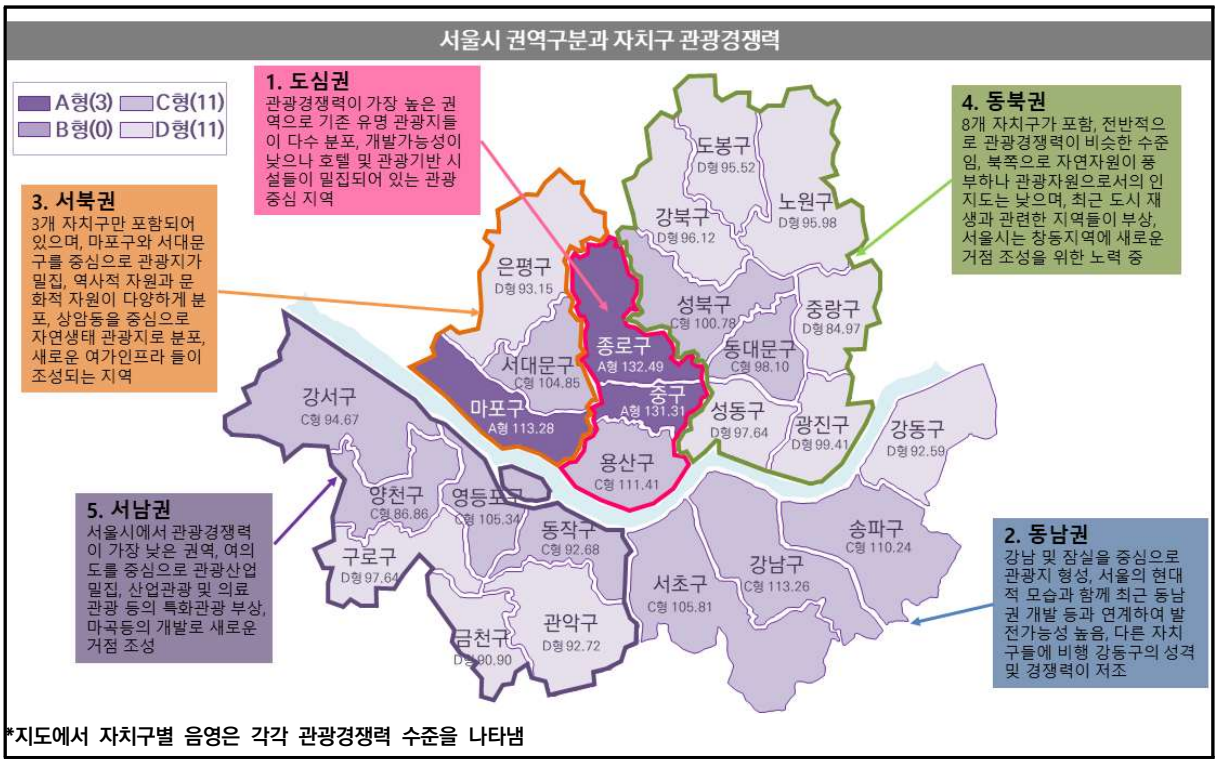
- 서울 : 서울의 관광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재도약

  •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관광도시 서울 구축

  • 스마트와 혁신으로 미래 관광도시 서울 구현

  • 서울시 및 자치구간 연계 협력으로 서울의 관광목적지로서의 위상 강화

  • 선택과 집중으로 서울시 관광생태계 안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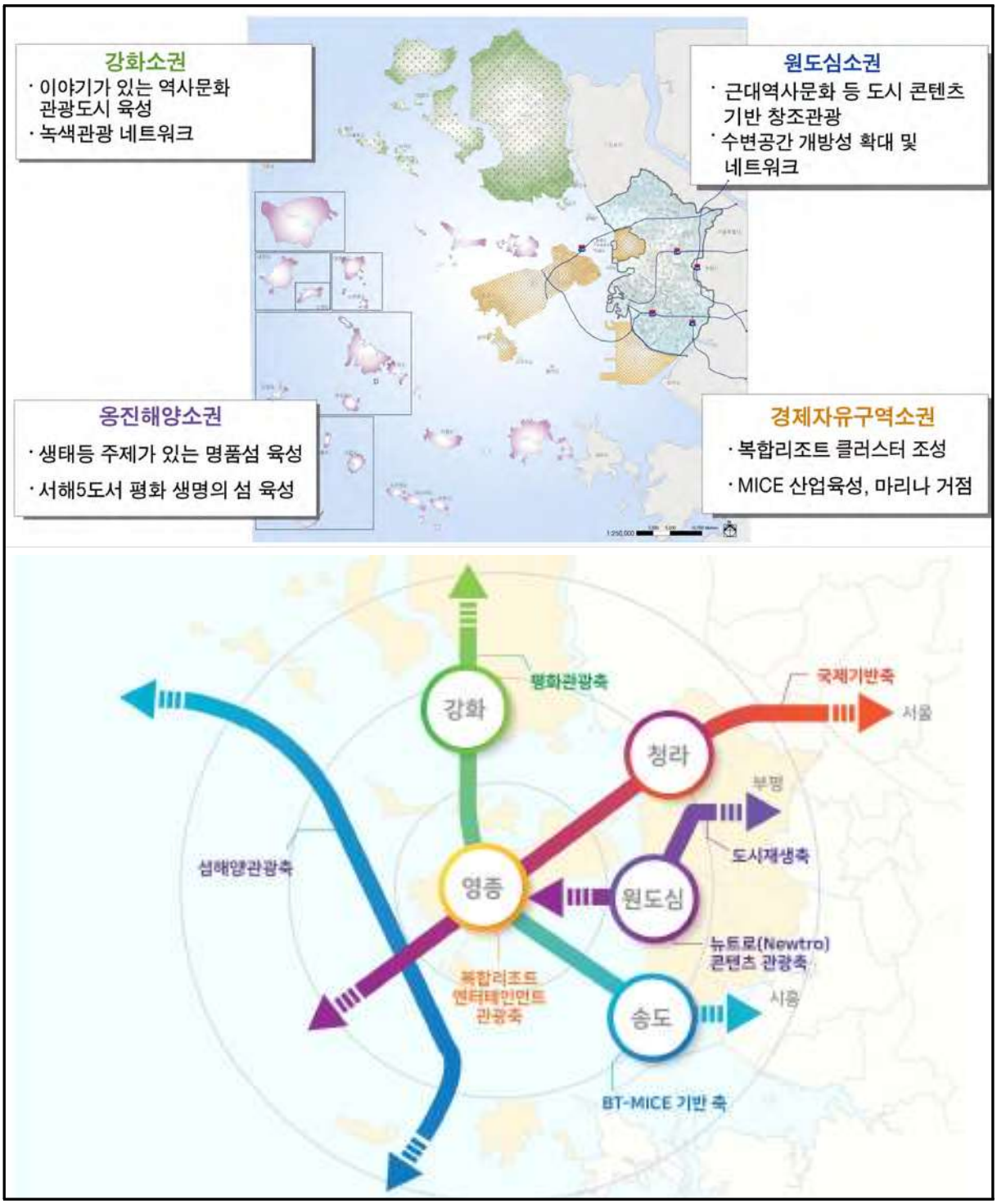
*지도에서 자치구별 음영은 각각 관광경쟁력 수준을 나타냄

- 인천 : 시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한 관광도시, 인천

  • 지역고유 특성인 '인천다움'발굴 및 '인천다움'의 관광 컨텐츠화

  •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인천 관광

  • 관광산업의 지역 내 산업연쇄망 강화를 통한 관광산업의 지역화 및 뿌리 내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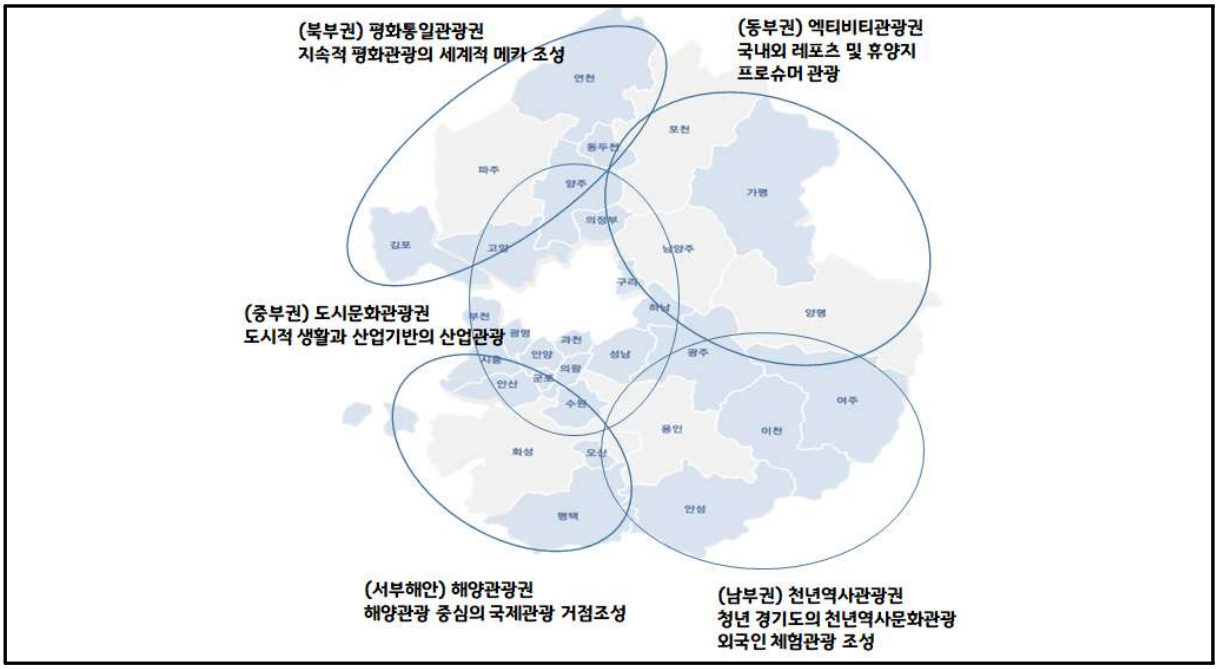
- 경기 : 새로운 발견이 있는 일상의 즐거운 나들이, 도민 중심의 천년 경기 관광

  • 도민 참여형 지역 주도 지속가능관광 생태계 구축

  • 트렌드 선도 천년 경기 그랜드관광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차별화

  • 경기도 균등발전을 위한 관광자원 역량 고도화

  • 관광혁신체계구축을 통한 경기도 스마트관광산업 활성화



- 강원도 : 세계인이 다시 찾는 생태·웰빙·휴양 관광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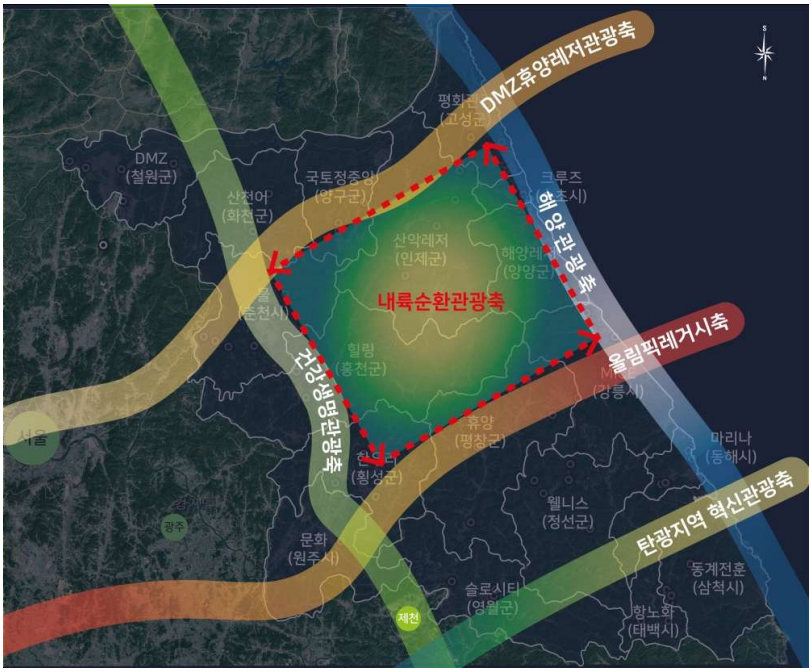
  • (공간전략) 사회, 기술, 환경, 경제 등 환경변화에 따른 관광공간의 변용에 대응

  • (시장전략) 사람을 생각하는 수요자 중심형 강원관광

  • (자원전략) 강원도의 개성을 드러내는 관광콘텐츠와 자원의 특화

  • (산업전략) 강원관광 비즈니스의 경쟁력 강화

  • (관리전략) 강원도 중심의 관광분권 체계화



[공간 구상(5대 관광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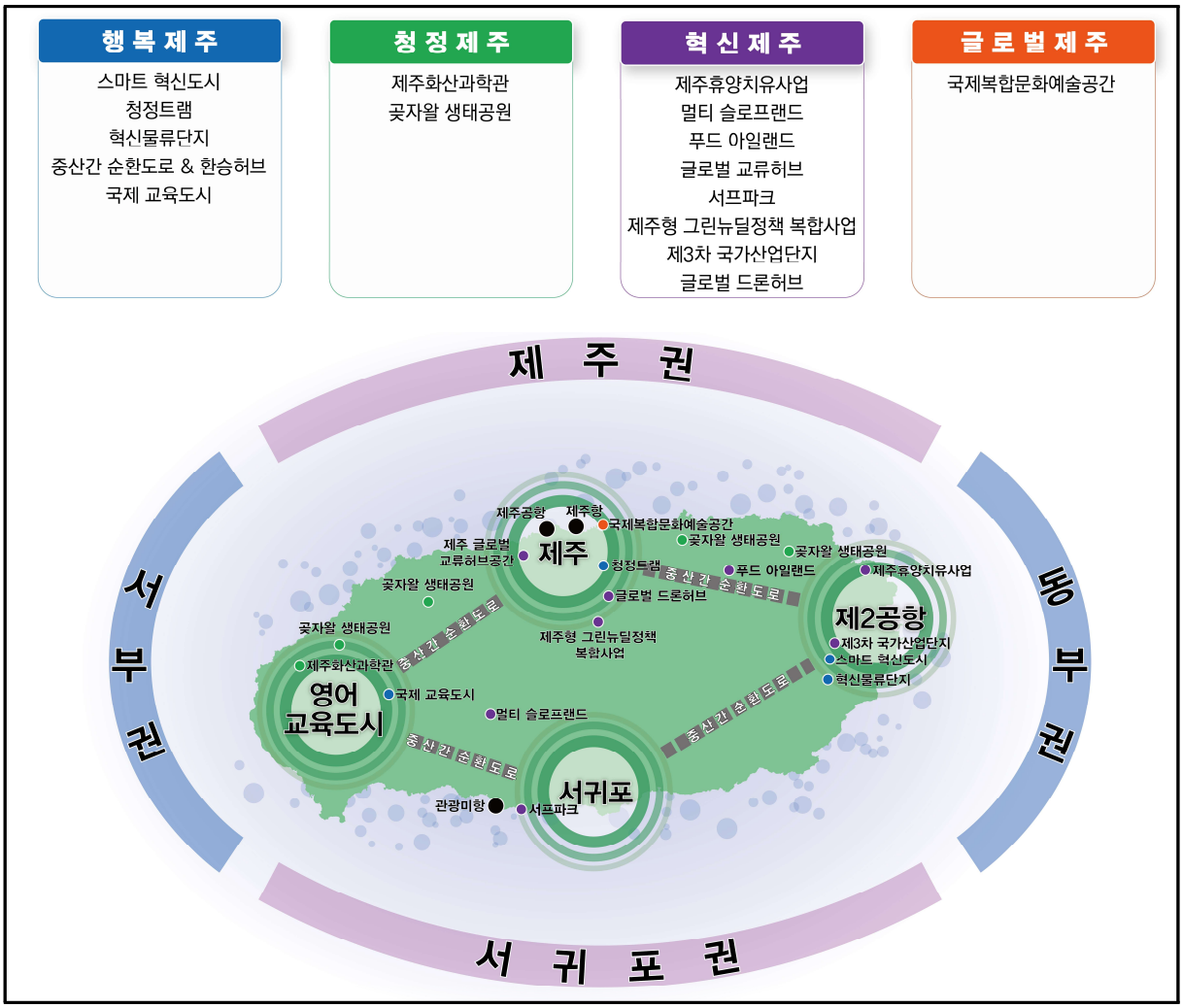
- 제주도 : 미래지향적인 청정자연유산 관광중심지역

  • 참여와 공존을 통한 지속가능 제주관광 혁신 역량 제고

  • 지식기반의 마케팅 체계 및 경쟁력 강화

  • 지역고유자산을 활용한 휴양형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 관광진흥의 가치 재정립



○ 충청권

- 과학기술기반의 중원문화관광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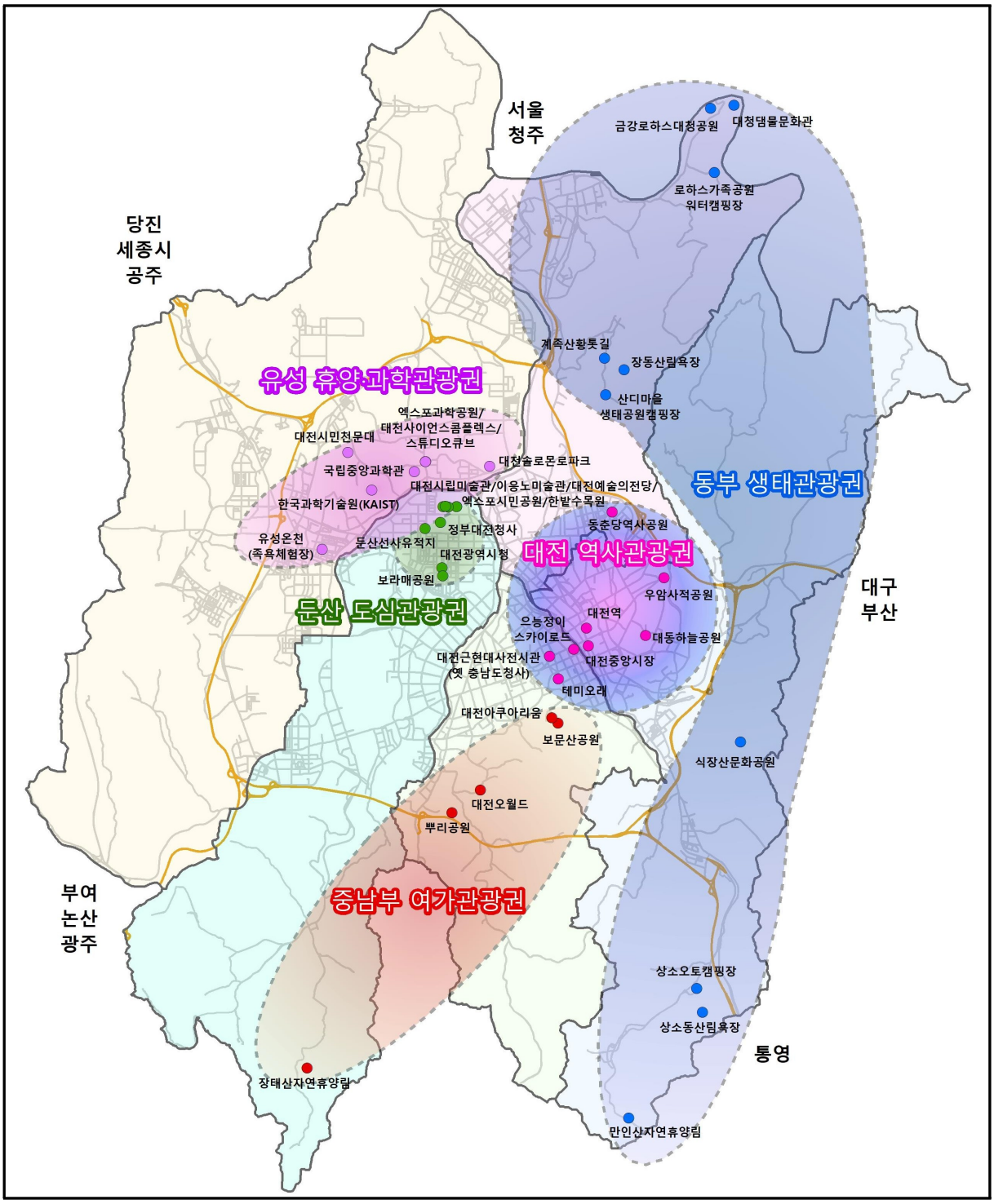
- 대전 : 소확행 경험 가치를 실현하는 중부권 허브 관광도시

  • 역사와 정체성 회복을 위한 지역관광 숙원사업 공간 창출

  • 분포된 녹색 자원을 활용한 관광 클러스터 이원화 계획 수립

  •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매력적인 테마형 대전관광 활성화

  • 관광 거점 매력성 확보와 관광산업 증진을 위한 맞춤형 마케팅 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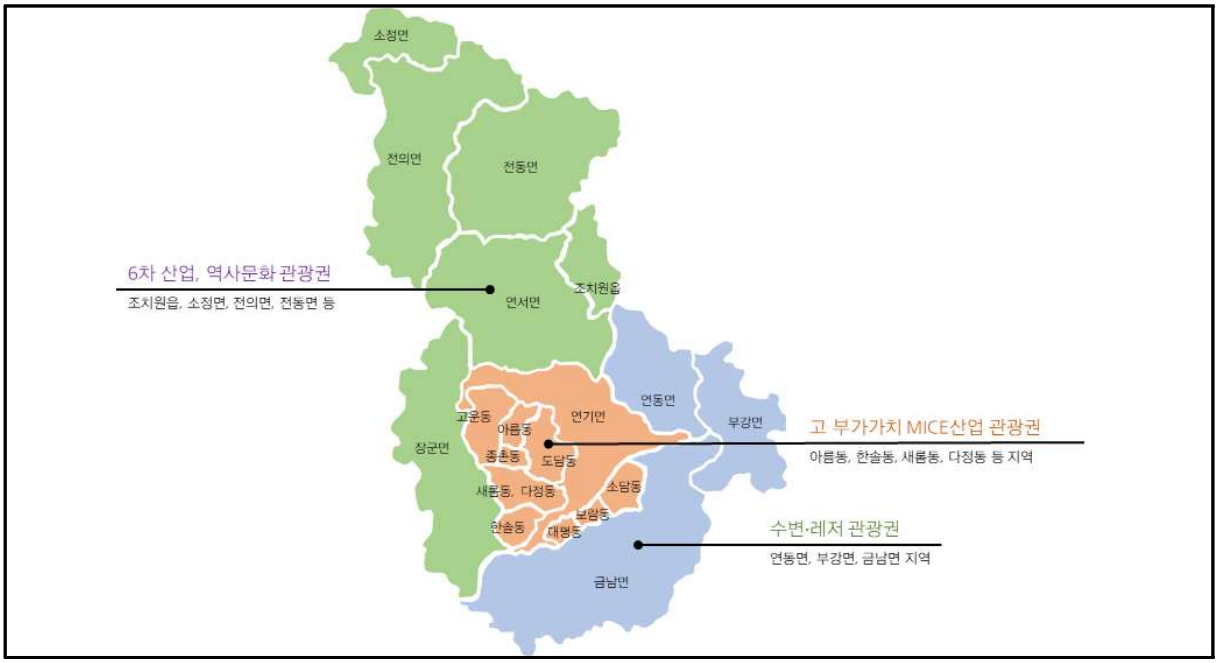
- 세종 : 스마트형 마이스(MICE) 융·복합 관광도시, 세종시

  • 비즈니스 관광과 의료관광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MICE 산업도시

  • 다양한 역사자원과 도시 인프라가 연계되는 융·복합 스마트 관광도시

  • 세종호수공원과 금강의 수변을 연계하는 수변형 랜드마크 도시

  • 6차 산업과 농촌체험이 함께하는 도농 복합형 관광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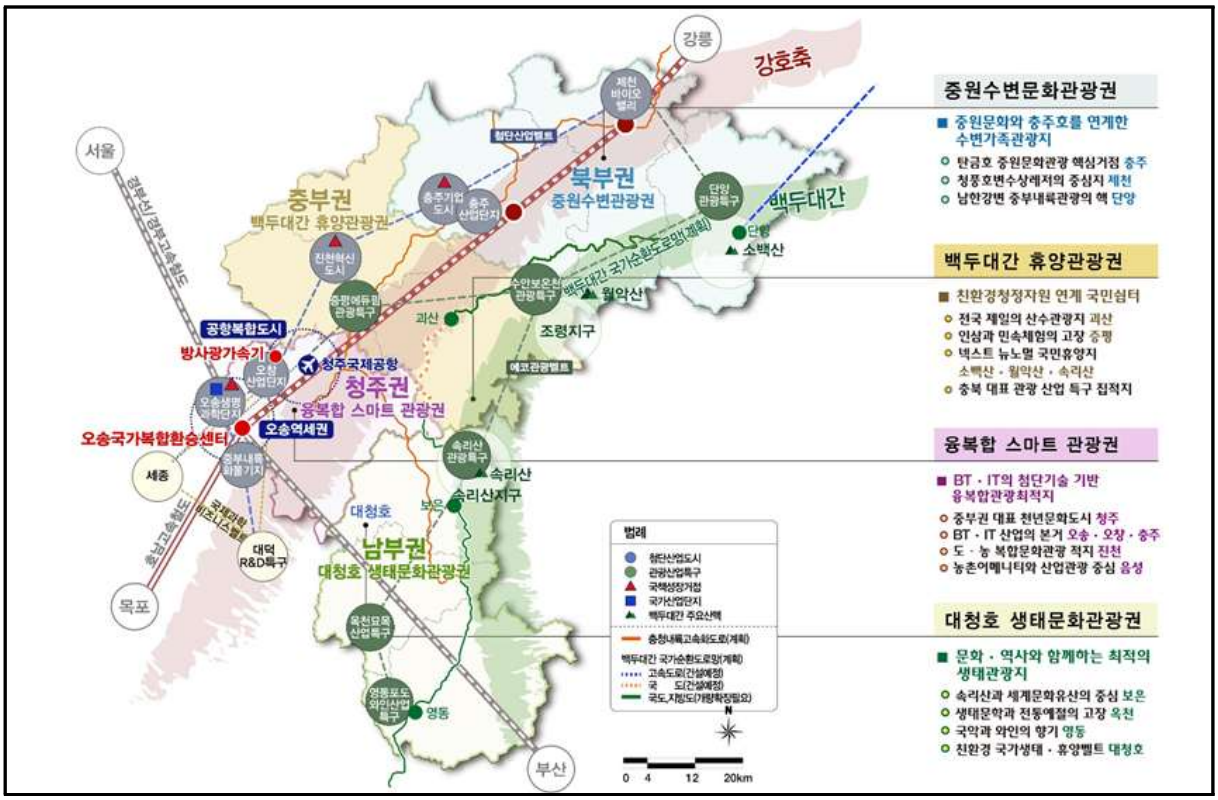
- 충북 : 미래관광 재설계 융·복합 관광거점, 충북

• 융복합관광 육성 및 관광산업 생태계 혁신

• 도시관광 매력 확충 및 디지털 관광콘텐츠 개발

• 백두대간·호수 등 자연자원 기반 청정관광의 국제수준 육성

• 충북 관광 브랜딩 및 스마트 관광수용태세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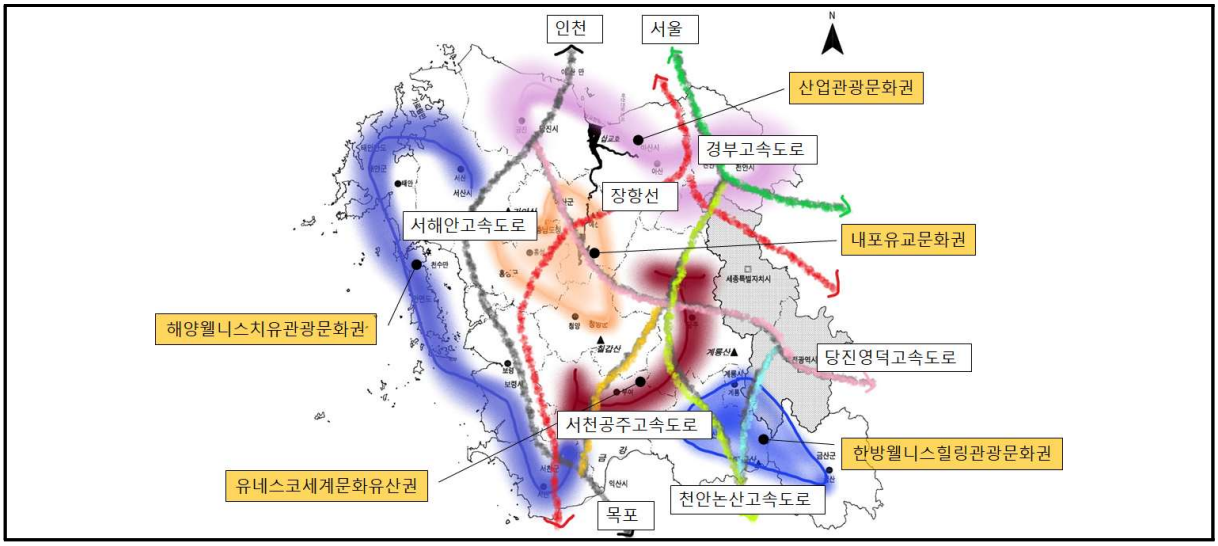


- 충남 : 일상을 선물하는 충남 발길이 머무는 관광도시 충남

  • 해륙자원(해양+내륙)을 활용한 여가체험 휴양지역 조성

  • 찬란한 히스토리와 동서양의 문화교차를 통한 디지로그관광 활성화 및 편의기반 조성

  •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공정관광기반 생태관광 및 탄소중립 섬관광 활성화



○ 전라권

- 다도해를 품은 문화예술관광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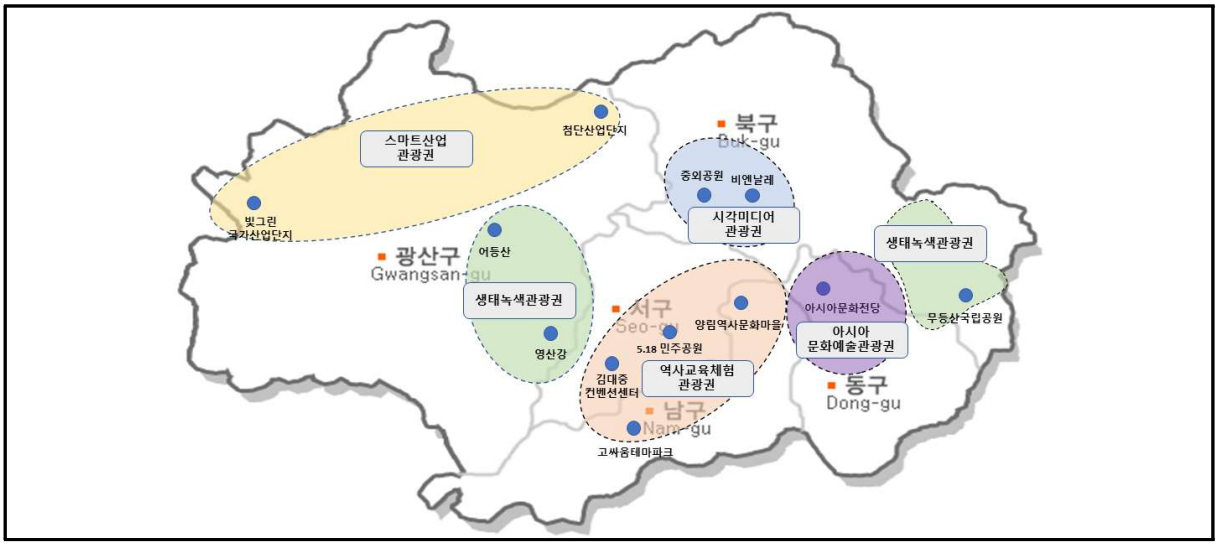
- 광주 : 문화예술과 산업을 아우르는 스마트관광도시 광주

  • 3향(예향, 의향, 미향)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 강화 및 도심 테마관광 활성화 도모

  • 실감형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스마트관광 플랫폼 조성

  • 생태예술관광 거점 조성 및 안전한 생태관광상품 개발

  • 도심관광과 웰니스 관광, 체류형 관광, 스포츠 융·복합 관광을 추진 및 지역연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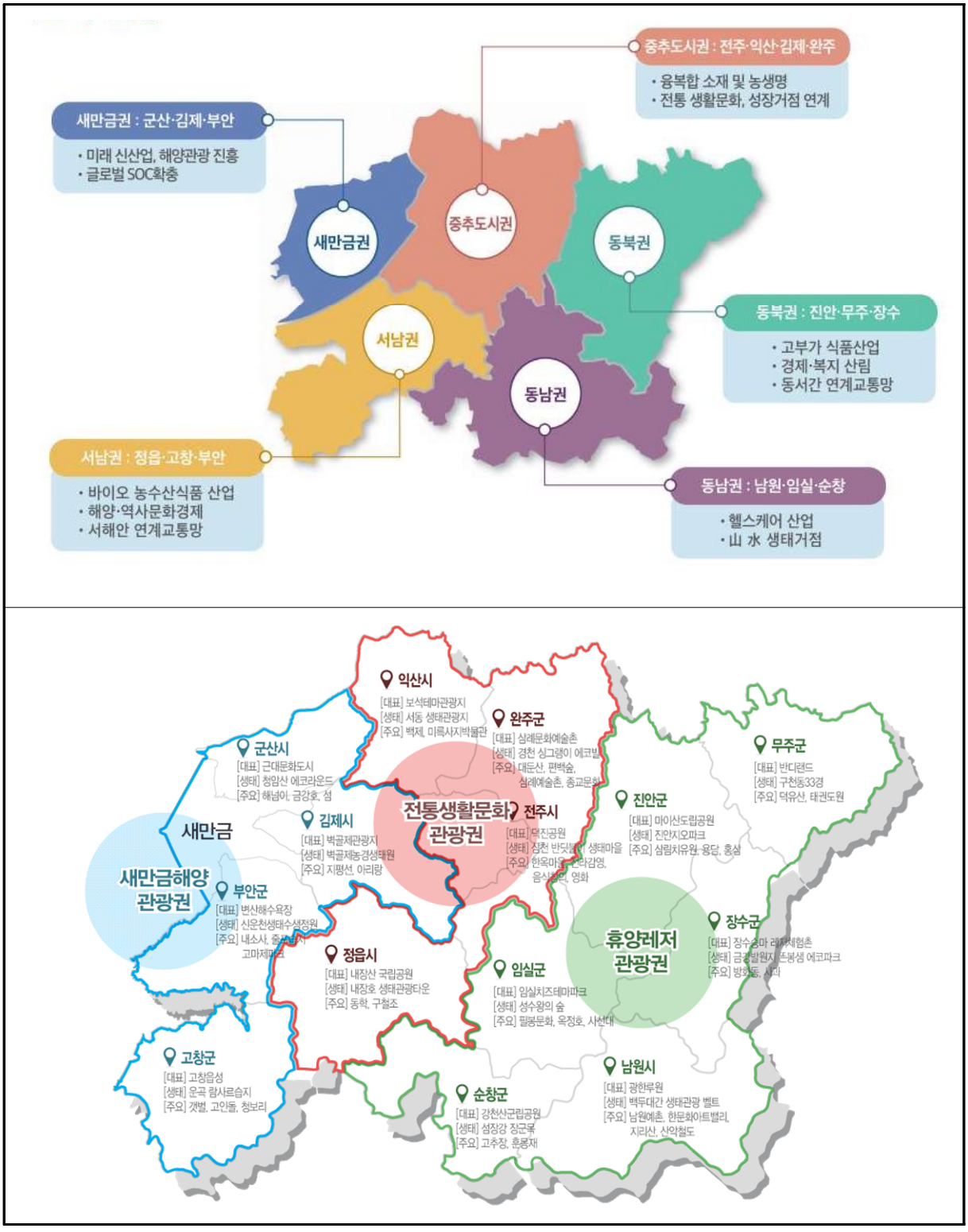


- 전북 : 천년 역사문화·체험관광 1번지

•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관광생태계 능동적 대응

•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을 통해 힐링 여행 관광지 육성

• 문화·관광자원의 재해석 및 재발견을 통해 고품격 관광상품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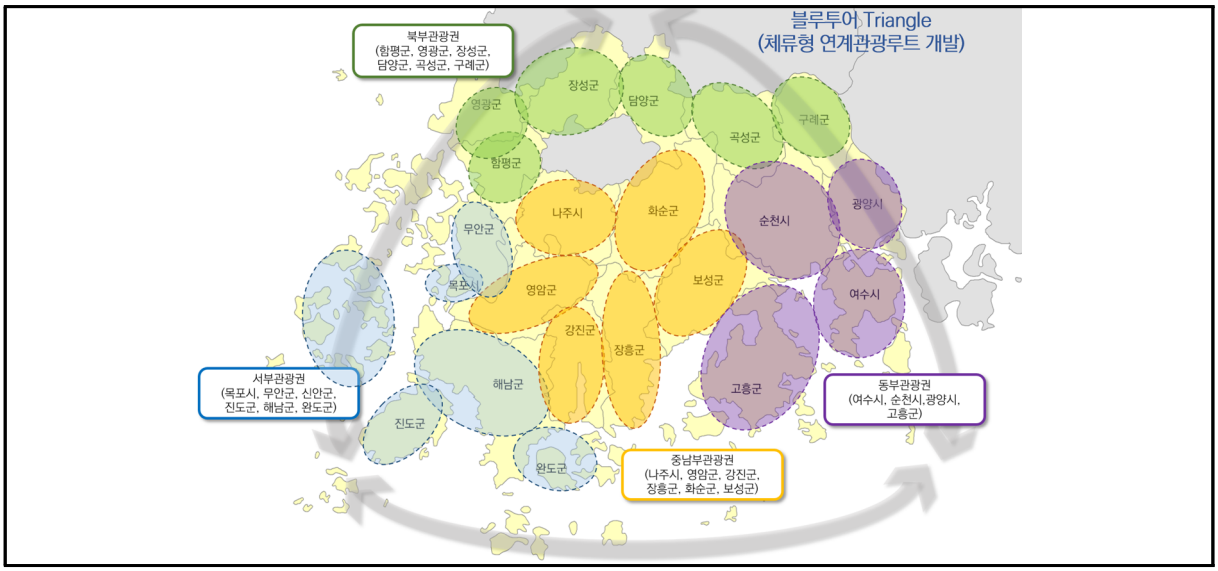
- 전남 : 해양·생태 관광중심, 블루투어 전남

  • 관광인프라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중심지 도약

  • 스마트형 블루투어 관광콘텐츠 발굴

  • 안전하고 편안한 체류형 연계관광루트 개발(블루투어 Triangle)

  •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 연대기적 에듀테인먼트형 관광



○ 대경권

- 유교문화에 기반한 역사문화 생태관광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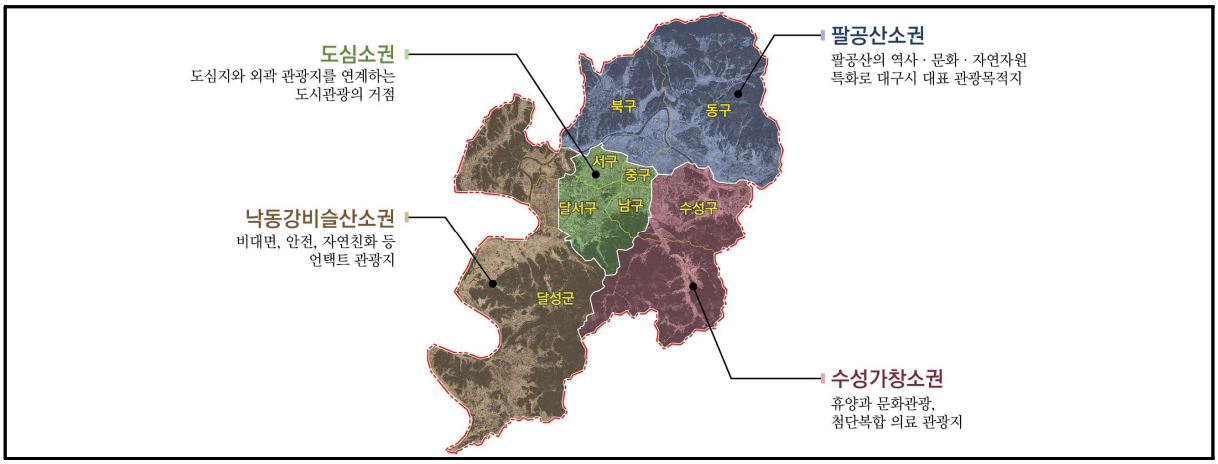
- 대구 : 대구형 관광뉴딜로 도약하는 글로컬 관광도시

  • 대구만의 매력적인 관광자원개발을 통한 체류형 관광도시 만들기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스마트 관광도시 만들기

  • 기후변화, 재난재해, 전염병 등으로부터 안전한 관광도시 만들기

  • 글로벌 관광도시를 위한 상생하는 관광도시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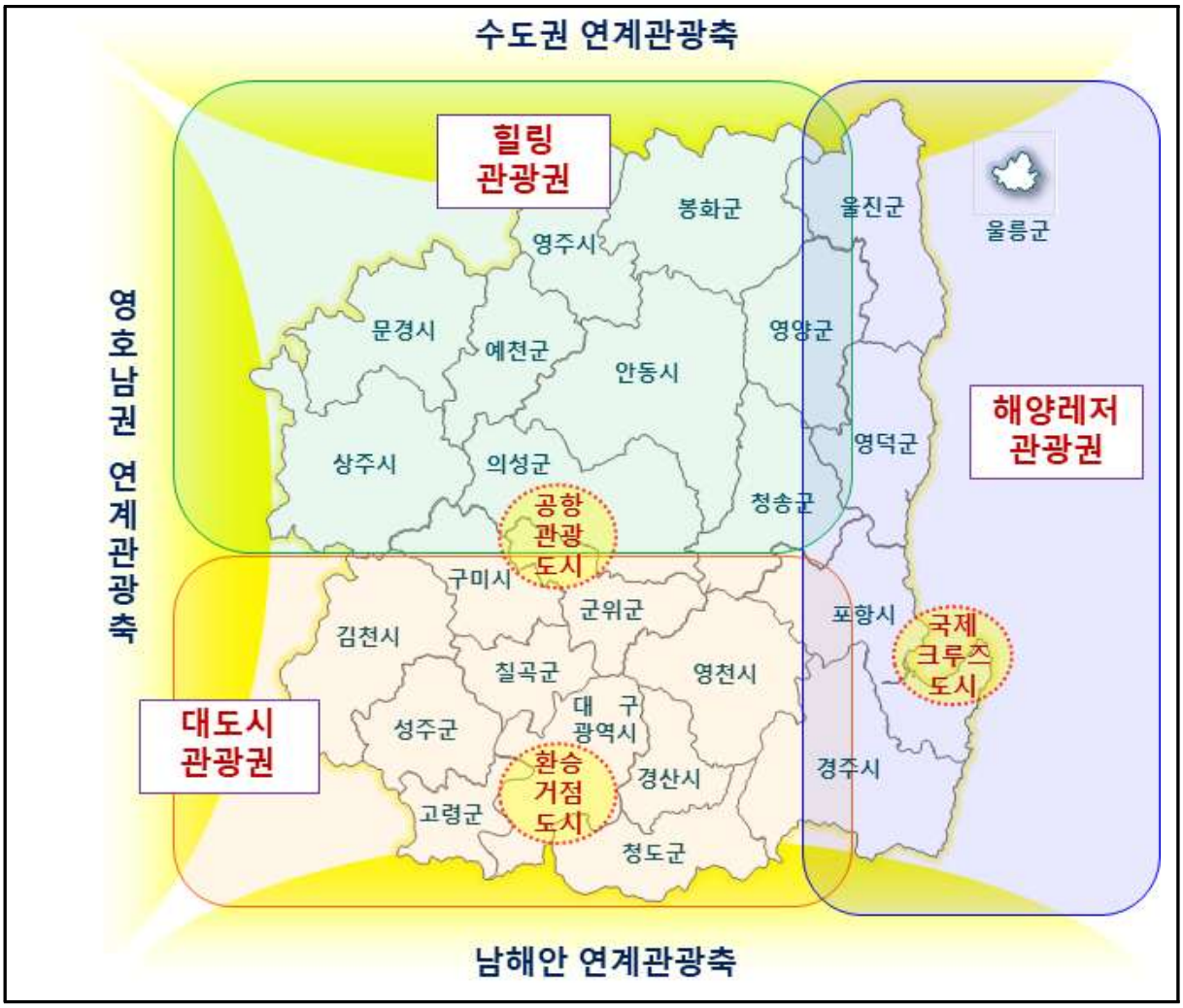
- 경북 : 세계로 열린 문화·생태 관광 거점

  • 글로벌 수준의 관광도시 조성

  • 권역별 명품 관광(단)지 개발 추진

  • 지속가능한 관광혁신체계 마련

  •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집중마케팅 전개



○ 부울경권

- 산업기반 해양레저문화 관광지대

- 부산 : 모두 함께 즐기는 관광도시, 부산

  • 2030 부산 세계박람회와 함께

  • 국제관광도시 브랜드와 함께

  • 안전한 해양레저관광과 함께

  • 스마트한 융·복합관광과 함께



〈제6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 소권 공간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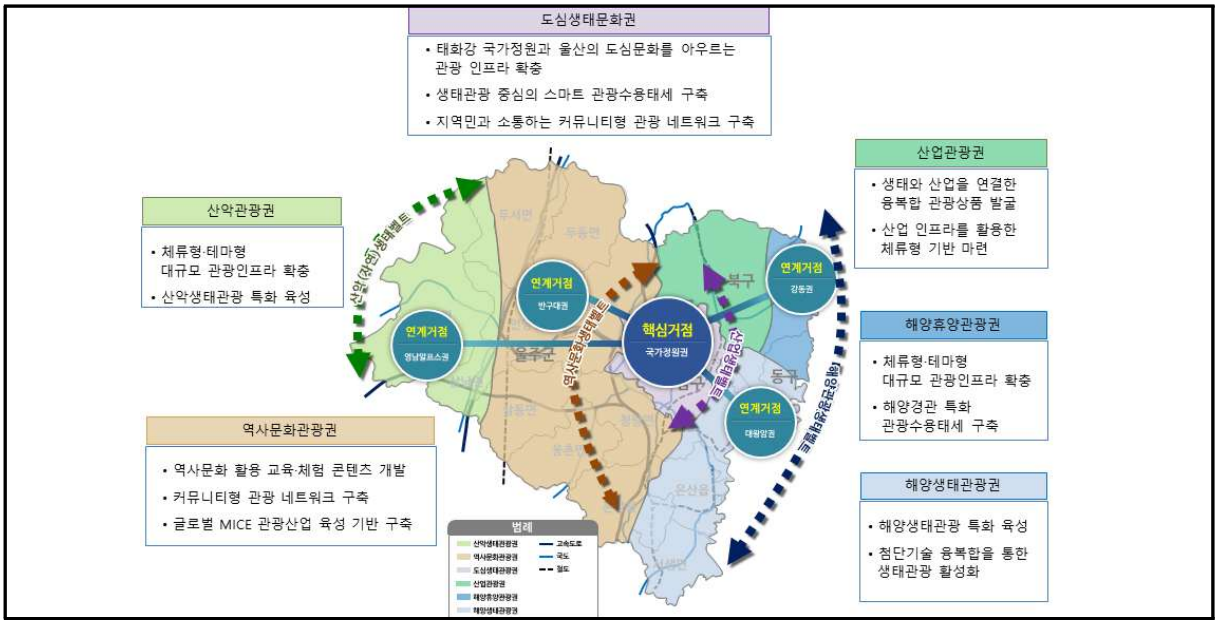
〈제7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 소권공간구상 예정도〉

- 울산 : 생태를 중심으로 해양, 산악, 산업, 역사문화관광이 어우러진 관광도시 어울림 생태관광도시

  • 친환경 생태문화 관광특화도시 조성

  • 영남권 대표 관광체류도시 조성

  • 관광객과 지역민이 중심이 되는 관광친화도시 조성



- 경남 : 도민의 행복한 삶이 관광으로 이어지는, 신 남부권 관광거점

  • 관광거점 육성 및 5대 광역관광벨트 조성

  • 지역의 자원과 산업기반을 활용한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 도민의 삶과 문화를 연계한 경남형 생활밀착형 공간 창출



나.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2027~2031)

(1) 수도권

(가) 관광권역 방향성

1) 목표 및 전략

◇ 목표 ◇
K-컬처를 세계와 지역으로 잇는 대한민국 관광관문, 수도권

○ 수도권은 서울의 K-컬처·공연·패션·쇼핑·미식 등 글로벌 도시관광 기능, 인천의 국제공항·항만과 개항장·해양·섬 관광자원, 경기의 역사문화·생태·농촌·레저·휴양 등 다채로운 체험관광 자원을 보유

-서울의 K-컬처와 도시관광 서비스를 중심으로 인천의 국제관문·해양관광 기능, 경기의 생태·역사문화·체험관광 자원을 연계하고, 공항·항만·광역철도·도로 등 광역교통망을 활용하여 외래관광객의 이동과 체류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하는 다핵 관광체계 구축

○ 수도권을 대표하는 주요 키워드는 ‘글로벌 관광관문’, ‘K-컬처’, ‘도시관광’, ‘외래관광객’, ‘관광소비’, ‘로컬관광’, ‘포용관광’, ‘해양·생태관광’, ‘역사문화체험’, ‘광역교통·연계’ 등으로 도출



2) 발전방향

가) 글로벌 관문과 K-컬처를 연계한 대한민국 대표 관광허브 구축

- 인천국제공항·인천항을 통해 유입되는 환승·기항 관광수요를 서울의 K-컬처·미식·뷰티·의료·쇼핑 및 경기의 DMZ·세계유산·테마파크·지역관광으로 연계하여, 수도권의 관문 기능이 권역 내 방문·체류·소비로 이어지는 광역관광체계를 구축
- 서울은 글로벌 K-컬처와 고부가 도시관광의 중심지, 인천은 공항·항만과 복합리조트·MICE·크루즈를 기반으로 한 국제관문, 경기는 로컬·생태·평화·휴양관광의 확장 목적지로 역할을 분담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허브로 육성

나) K-컬처와 고부가 관광산업을 결합한 글로벌 관광경쟁력 강화

- 한류·공연·게임·뷰티·미식 등 K-컬처를 중심으로 MICE, 의료·웰니스, 블레저, 크루즈, 산업관광 등 고부가 관광산업을 융합하고, 서울의 문화콘텐츠와 경기·인천의 복합 관광거점을 연계한 수도권 대표 관광상품을 개발
- 서울의 도심관광·한강·야간관광, 경기의 K-컬처밸리·수원 MICE 복합단지·화성국제테마파크, 인천의 영종 복합리조트·송도 MICE·개항장 등을 권역별 핵심거점으로 육성하여 외래관광객의 체류기간과 관광소비를 확대

다) 도시·해양·수변·평화생태자원을 연계한 다핵형 체류관광지대 조성

- 서울의 역사문화·한강·도심생활문화, 경기의 DMZ·경기바다·산악·하천 및 세계유산, 인천의 섬·해양·개항장·강화 역사생태자원 등 수도권의 다층적인 관광자원을 특화하고, 광역관광루트와 체류형 콘텐츠로 연결
- 일부 핵심지역에 집중된 관광수요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원도심과 노후·유휴공간을 관광명소로 재생하고, 지역 고유의 생활문화·상권·축제·농촌체험 등을 활용한 로컬관광을 활성화하여 도심과 지역, 내륙과 해양이 연결되는 다핵형 관광 공간을 형성

라) 초연결·포용·상생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수도권 관광생태계 구축

- 수도권의 철도·도로·항공·해운 교통망과 시티투어·관광정보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AI·관광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정보·예약·결제 서비스를 확대하여 행정구역과 이동수단의 경계 없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스마트 관광환경을 조성

◦무장애 관광, 관광안전, 탄소중립 및 ESG 관리를 강화하고 혼잡·소음·환경부담 등 관광성장의 부정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관광성과가 지역상권·소상공인·관광기업·주민에게 확산되는 상생협력 구조를 구축

3) 시·도별 전략별 발전방향

가) 서울

◦서울다운 관광경험을 관광소비와 고부가가치로 연결

-서울만의 차별화된 관광경험을 고부가 관광 상품과 연계함으로써 체류·소비를 확대하고, 관광의 경제적 가치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구상

◦관광경험의 시간적 확장으로 365일 즐거운 관광도시 구현

-계절과 시간대별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도시관광 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관광경험의 공간적·시간적 확대 도모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경험하는 관광환경 조성

-관광객의 특성과 관계없이 누구나 서울 전역의 관광자원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교통·디지털 접근성 등 관광여정 전반의 이용환경 개선

◦관광성과를 지역과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 구축

-관광의 경제적 성과가 지역사회 및 관광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관광성장에 따른 부담을 함께 관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상생 관광도시 구현



나) 인천

○ 신관광 수요 대응형 차별적 매력 강화

-인천 고유 관광매력과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기반을 활용하여 K-컬처·MICE·의료·웰니스·크루즈 등 고부가 관광시장을 집중 육성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지속 대응할 수 있는 콘텐츠 발굴·육성 체계 확립

○ 경쟁력있는 관광명소 확충·고도화

-인바운드 대응형 신규 관광중심지의 발굴·조성 및 노후 관광거점의 정비·고도화를 병행 추진하여 인천관광을 견인할 경쟁력 있는 관광공간 확보

○ 권역별 관광특화와 균형발전

-행정체제 개편(2026. 7.)과 영종~신도 평화도로 개통 등 관광권·생활권 변화를 반영한 5대 관광소권의 자원·입지 특성에 따라 소권별 특화 방향 설정

-소권 간 기능 중복을 지양하고 소권별 차별화된 기능·역할을 부여하여 인천 전역의 관광매력을 균형 있게 발전

○ 글로벌 수준의 관광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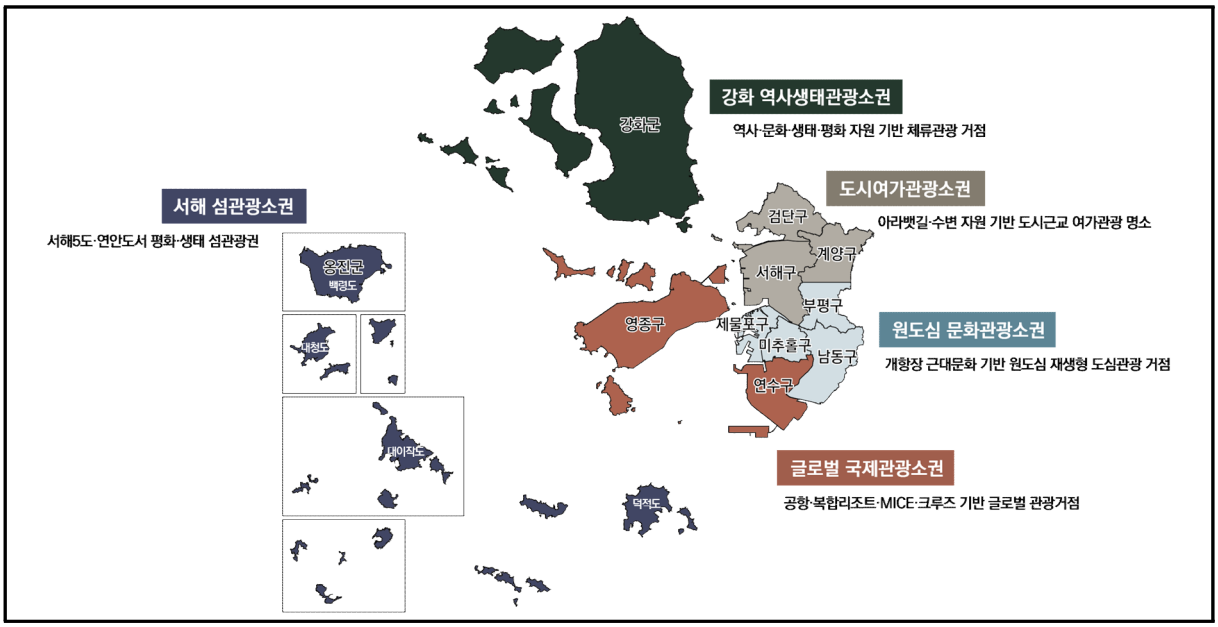
-환승·기항 수요를 지역관광으로 연계하는 관광상품·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불편 요인의 상시 점검·개선과 관광교통 체계 혁신을 통해 관광수용태세를 글로벌 수준으로 제고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과 탄소중립·ESG 가치를 반영한 지속가능 관광 관리, 관광지 안전·환경 관리 강화를 병행하여 환대와 품격의 관광환경 구현

○ 인천관광 고도화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

-시 자체사업 중심의 추진모델을 정립하고, 시·군구·민간 협력 거버넌스와 관광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통해 자생적 추진역량 확보

-데이터·통계 기반의 모니터링·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계획의 실행력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인천관광 통합브랜드를 정립·확산하여 글로벌 K-관광도시로서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



다) 경기

○ [목표 1] '도민과 관광객에게 모두 특별한 NO.1 로컬여행 목적지, 경기도 (G-Local)'

-전략 1 : 경기로컬여행 기반 및 거점 확충

- 경기형 로컬여행 기반 확충은 도민의 일상 여가공간인 하천, 호수, 저수지 등의 수변자원 및 공원 등을 명소화 하는 사업 및 지역 내 노후·유휴공간과 시설을 도민과 관광객을 위한 명소로 전환하는 사업 포함
- 경기도 내 신규 로컬여행 거점 및 명소를 육성할 수 있는 사업 전개

-전략 2 : 경기로컬여행 고도화

- 경기로컬여행의 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를 지원하고, 지역 내 다양한 민간부문 협력에 기반한 경기로컬여행 추진체계 및 역량강화 추진

○ [목표 2] '세계인이 찾고 머무는 글로벌 여행 목적지, 경기도 (G-Initiative)'

-전략 3 : 경기형 특화 관광거점 육성 및 브랜드화

- 경기형 특화 관광거점 육성 및 브랜드화는 경기도 관광의 핵심 자원인 DMZ 평화생태관광, 서해안의 경기바다(G-Sea), K-등산 열풍 수요를 유인할 수 있는 경기산악(G-Mountain), 한강/임진강·남한강·북한강·한탄강 등의 경기수변(G-River)에 기반한 관광거점 및 명소 육성, 선형 네트워킹 구축, 브랜드화 등의 사업 포함

-전략 4 : 고부가 관광거점 및 상품 육성

- 경기도가 추진 중인 K-컬처 밸리, 수원 MICE 복합단지, 화성국제테마파크 등 고부가 관광거점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
- 고부가 관광거점 육성과 함께 경기도 내 체류시간 연장 및 여행자들의 소비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MICE 연계 블레저 투어, 의료&웰니스 투어, 신 산업관광, 축제관광 등 고도화 추진

-전략 5 : 경기관광 글로벌 인지도 제고

- 경기도의 글로벌 여행목적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 자체 홍보 마케팅 강화 및 서울, 인천과 협력한 신규 시장 개척을 추진사업으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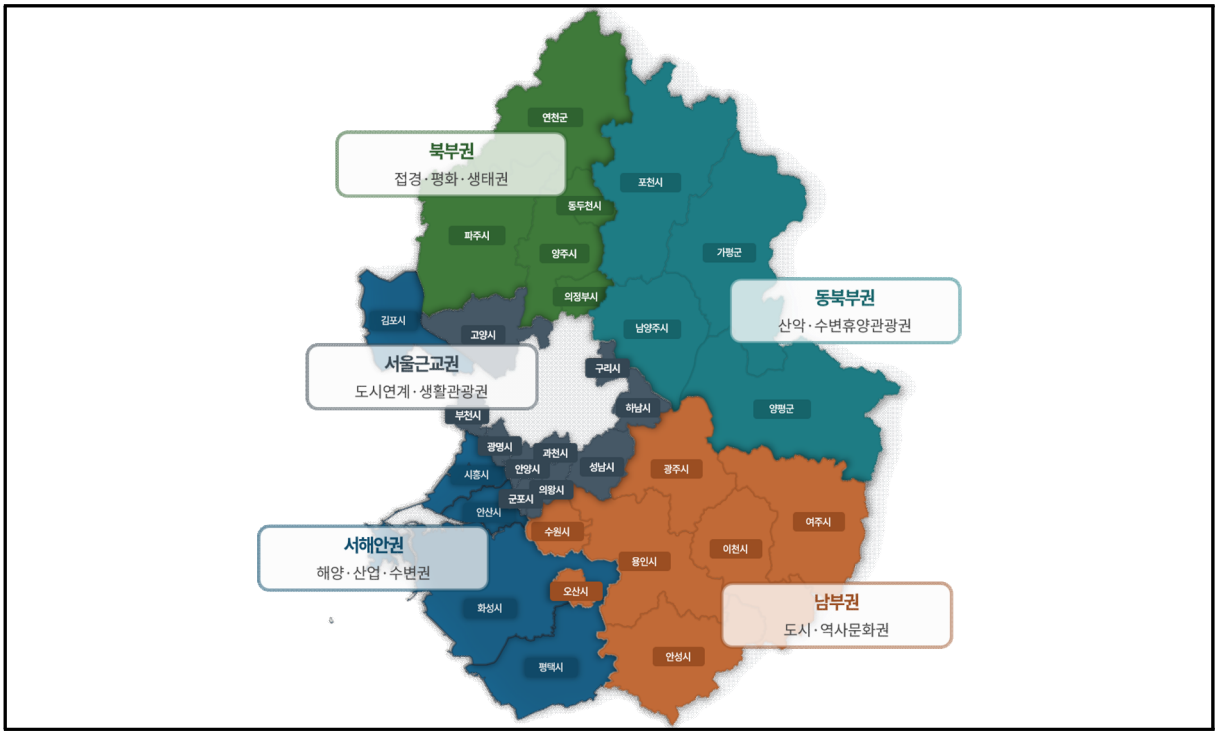
○ [목표 3] '경계없이 즐기는 포용·혁신 기반 구축 (G-Innovation)'

-전략 6 : 교통·라이프 스타일 경계 없는 포용 관광환경 구축

- 교통·라이프 스타일 경계 없는 포용 관광환경은 경기도민과 관광객 누구나 편리하고, 다양한 관광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는 관광기반 구축 및 상품 육성 사업 포함

-전략 7 : 데이터·협력 기반 시공간 경계 없는 혁신 관광생태계 구축

- AI기술로 시공간 제약 없는 혁신 관광환경 구축 사업은 경기 관광산업의 AX 전환 지원 및 스마트관광 기반 구축 등의 사업 및 지속가능한 혁신 경기관광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 포함



(2) 중부권

(가) 관광권역 방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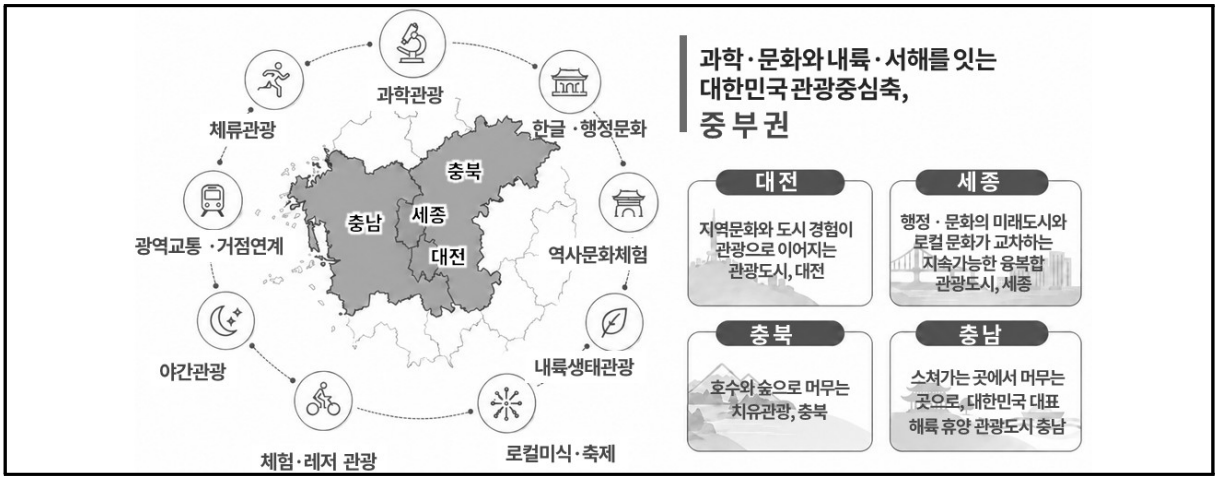
1) 목표

◇ 목표 ◇
과학·문화와 내륙·서해를 잇는 대한민국 관광중심축, 중부권

○ 중부권은 대전의 과학·연구개발·MICE·미식·야간관광 기능, 세종의 한글·행정문화·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관광 기능, 충남의 백제 역사문화와 서해안·해양·농촌관광 자원, 충북의 호수·산악·지질·동굴·레저 등 내륙 생태관광 자원을 보유

-대전의 과학·도시관광 서비스와 세종의 한글·행정문화 기능을 중심으로 충남의 백제 역사문화·서해안 해양관광, 충북의 호수·산악·지질생태 관광자원을 연계하고, 청주국제공항·KTX 오송역·대전역과 광역도로망을 활용하여 관광객의 이동과 체류를 권역 전반으로 확산하는 다핵 관광체계 구축

○ 중부권을 대표하는 주요 키워드는 '과학관광', '한글·행정문화', '역사문화체험', '내륙생태관광', '서해안관광', '로컬미식·축제', '체험·레저관광', '야간관광', '광역교통·거점연계', '체류관광' 등으로 도출



2) 발전방향

가) 글로벌 관문과 K-컬처를 연계한 대한민국 대표 관광허브 구축

○ 해양과 내륙의 자연자원을 연결한 광역 치유·휴양관광지대 조성

-충남의 서해안·갯벌·해양·농촌자원과 충북의 호수·산림·백두대간, 세종의 생태·힐링 자원을 연계하여 해양치유, 산림치유, 웰니스, 농촌휴양을 아우르는 중부권 대표 치유·휴양관광벨트를 구축

-충남은 서천 갯벌에서 천수만·가로림만으로 이어지는 해양레저·생태관광 거점, 충북은 호수와 숲을 활용한 내륙형 웰니스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고, 권역별 자연자원과 숙박·야간·체험 콘텐츠를 결합하여 당일관광 중심의 구조를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

○ 역사문화·과학·행정도시 자원을 융합한 중부권 특화 관광콘텐츠 육성

-충남의 백제문화·내포문화·금강문화와 충북의 인문·역사자원, 대전의 과학기술·도시문화·미식, 세종의 국립박물관단지·국가 상징공간을 연계하여 중부권만의 역사문화·과학·행정 융합 관광콘텐츠를 개발

-대전은 지역문화와 과학기술을 결합한 도시관광 및 야간경제관광의 중심지, 세종은 행정·문화와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미래도시 관광거점, 충남·충북은 역사문화와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한 체류목적지로 기능을 분담하여 중부권 관광의 차별성과 다양성을 강화

○ 광역교통망과 핵심 관광거점을 활용한 초연결 체류관광권 구축

-청주국제공항·오송역과 대전의 광역교통 기능을 중부권 관광의 관문으로 활용하고, 충남 서해안과 백제문화권, 충북 호수·산림권, 대전 도심관광권, 세종 행정문화권을 연결하는 광역 관광루트와 공동 관광상품을 개발

-공항과 철도 이용객이 권역 내 방문·숙박·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통·관광정보·예약·결제 서비스를 통합하고, 시·도 간 관광교통 및 콘텐츠 연계를 강화하여 개별 관광거점을 하나의 여행경험으로 연결하는 중부권 순환형 관광체계를 구축

○ 로컬관광과 야간경제를 기반으로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관광생태계 조성

-충남·충북의 농촌·생활문화·로컬미식, 대전의 원도심·상권·축제, 세종의 조치원과 읍·면 지역의 로컬문화 및 유휴공간을 관광콘텐츠로 전환하고, 숙박·미식·쇼핑·야간관광을 결합하여 지역 내 체류와 소비를 확대

○ 스마트·포용·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중부권 관광경쟁력 강화

-대전의 과학기술 기반과 세종의 스마트도시 역량을 활용하여 AI·관광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관광서비스를 구축하고, 무장애 관광환경과 관광안전·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포용적 관광환경을 조성

3) 시·도별 전략별 발전방향

가) 대전

○ 지역문화 기반 로컬관광 고도화

-대전시에 내재된 고유한 장소성 · 역사성 · 지역성을 발굴하여 관광자원으로 체계화 및 고도화하고 경험 · 소비 · 체류 활동과 결합된 관광콘텐츠로 전환하여 대전시 지역관광의 근간 형성

○ 도시 경험 기반 체류형 · 야간경제관광 거점화

-대전시의 도시공간과 생활환경에서 관광객이 머물고, 즐기고, 소비하는 관광경험 공간으로 전환하고 권역별 관광자원과 상권을 연결한 야간경제관광 거점화를 통해 지역 내 체류 · 소비 확산을 유도하는 근간 형성

○ 권역별 · 소권별 관광거점자원 개발 및 관광공간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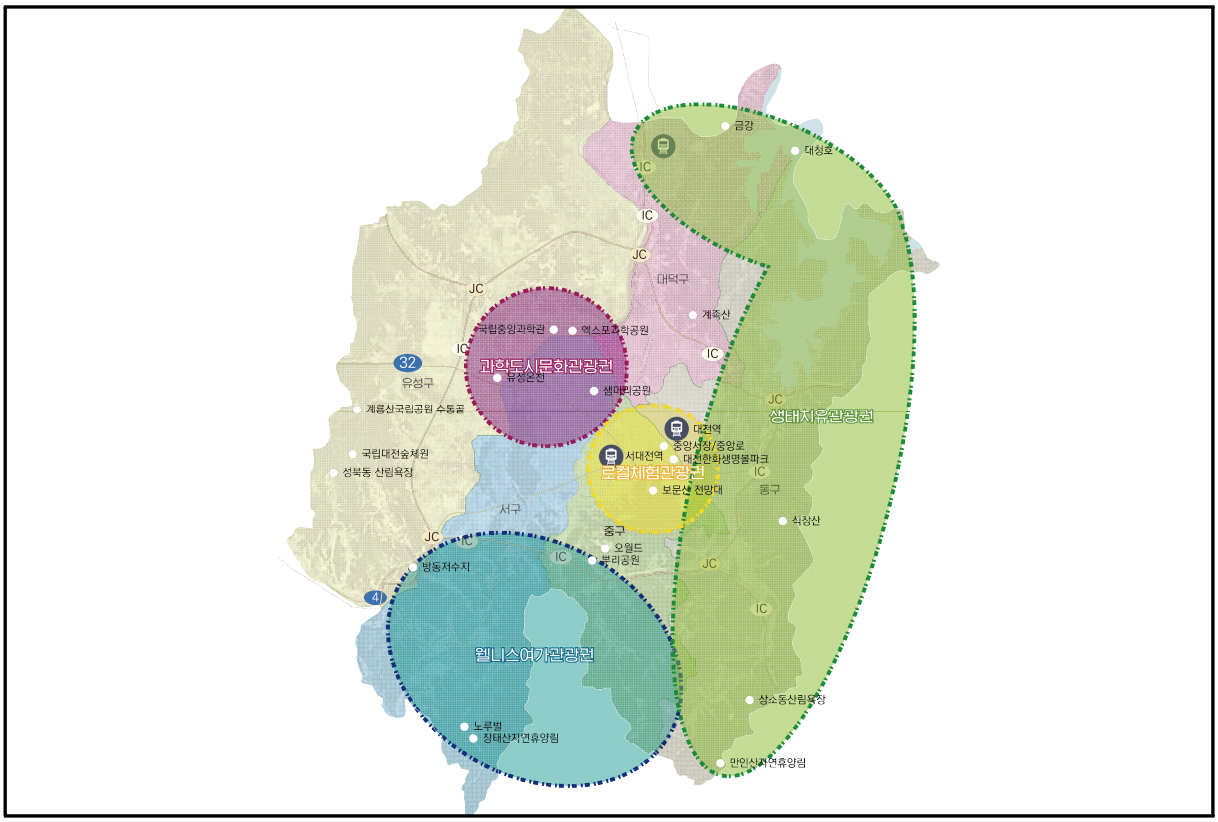
-권역별 · 소권별로 대표하는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개발 및 육성을 통해 관광거점 공간으로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관광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관광자원-관광거점-관광공간-관광동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공간 체계를 구축하고, 각 권역이 보유한 자원 특성과 지역 특성을 관광 기능으로 전환 · 발전시켜 대전시 전역의 관광공간 경쟁력 강화

○ 지역관광 생태계 및 경쟁력 강화

-대전시 관광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광자원 · 관광공간 · 관광 콘텐츠 · 관광사업체 · 지역 주체 간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관광의 생산 · 유통 · 소비가 지역 내 선순환 하는 관광생태계 조성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상인, 문화예술인, 로컬 크리에이터 등 민간 주체가 관광의 생산자로 참여하는 지역주도형 관광개발체계와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 구조 체계 마련



나) 세종

○ 관광거점 명소화를 통한 관광벨트 구축 기반 마련

-신도시(동지역)의 국립 문화시설과 국가 상징 공간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관광 콘텐츠 도입, 조치원읍(구도심)의 고유 로컬 문화와 소도시 정서 등의 관광 테마 강화로 신도심과 구도심의 관광거점 기능 강화

○ 상반된 매력이 공존하는 세종시 특화 콘텐츠 개발

-신도시(동지역)의 도시적인 매력과 외곽지역의 로컬·농촌·생태·힐링이 대비되는 매력을 특화 콘텐츠로 개발하고 공간간·자원간·테마간 이원적인 매력을 특화한 콘텐츠를 통해 관광 진흥 도모

○ 체류형 관광 및 야간경제관광 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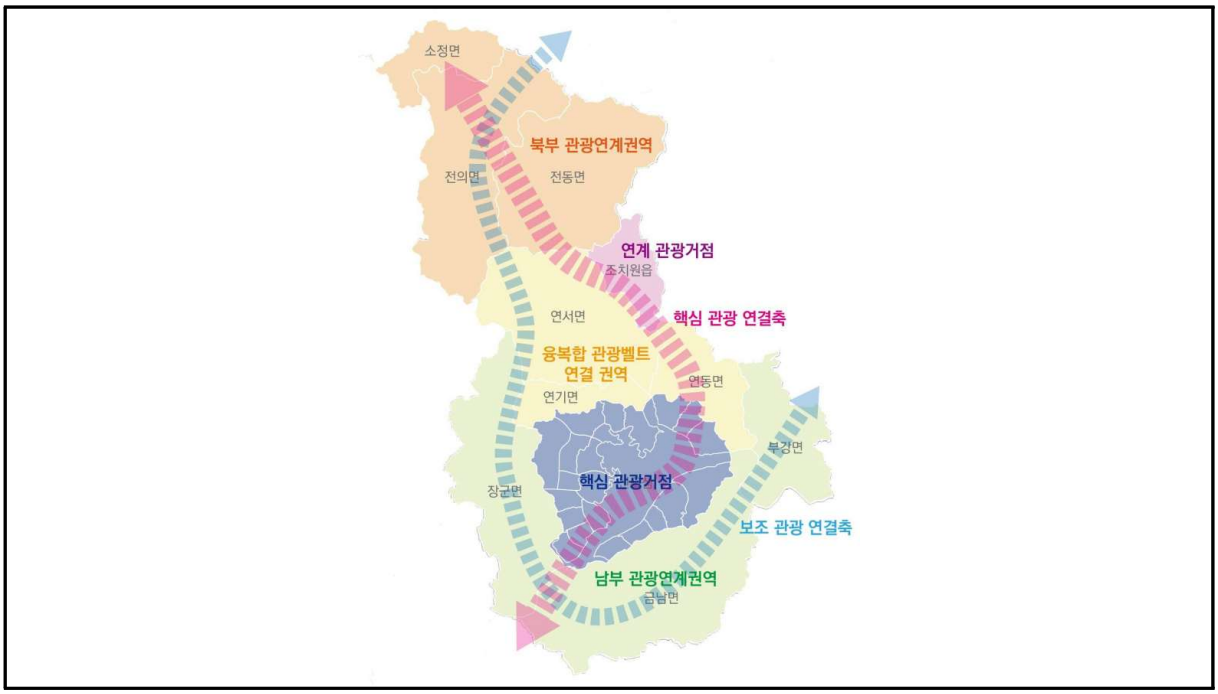
-체류형 관광 경제 기반 구축 및 야간관광 활성화 전략 도출로 '머무는 세종'으로의 관광 성장 동력과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 기반 마련

-산림자원과 웰니스 자원, 농촌과 로컬 테마, 노후화되고 방치된 읍면지역의 유휴시설을 활용한 숙박 연동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체류형 관광지로의 도약 기반 마련

○ 무장애 관광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

-관광 편의시설, 안내체계, 교통편의 및 인프라, 무장애 관광 체계 등 관광의 기초적인 수용태세개선으로 누구나 관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관광 편의 서비스 품질 개선, 지역관광 생태계 기반인 인적 자원과 민간 참여 확대 등으로 지역 상생 기반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 체계 구축



다) 충북

○ [SPACE] 고품격 체류 인프라 및 거점 현대화

-호수·산림·도심권에 민관 협력형 체류 거점을 균형 배치하고, 노후 관광지와 관광특구를 웰니스·야간·체험형 목적지로 재생하여 권역별 체류·소비 기능을 완성

○ [CONTENTS] 내륙의 바다·백두대간, K-자연 콘텐츠 확충

-거점·코스·인증·데이터를 통합한 충북 대표 치유관광 브랜드를 구축하고, 두 치유 벨트를 권역 연결의 실체로 조성하며, 야간·실감미디어 콘텐츠로 숙박 전환을 유도

○ [HUMAN] 로컬 활력 증진 및 글로벌 교류 활성화

-시·군 축제를 광역 브랜드로 고도화하고, 인문자산 스토리 여정과 주민 주도 생활 관광으로 관계인구를 확대하며, 글로벌 청년 교류와 포용관광 환경을 조성

○ [PLATFORM] 관광 생태계 고도화 및 미래 성장 기반

-청주국제공항·오송역을 목적지형 관문으로 재정의 하고, 고부가 K-MICE·스마트 관광 플랫폼·관광 전담기구 등 실행 기반을 구축



라) 충남

○ 글로벌 해양레저관생태관광 거점화

-차별화된 유형의 해양레저 관광콘텐츠 개발과 관광 환경 구축으로 해양레저관광 거점 기능 강화

-서천 갯벌과 생태 관광의 대표 이미지를 가진 서천군을 기점으로 천수만과 가로림만까지 연결되는 해양생태관광 사업추진을 통해 글로벌 해양생태관광의 거점화 도모

○ 오감힐링 휴양관광 특화

-충청남도가 보유한 해양, 갯벌, 산림, 농촌, 생태, 음식, 문화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관광자원과 매력을 활용하여 힐링과 휴양에 특화된 관광 전략 마련

-충청남도에 특화된 해양 치유, 산림 치유, 치유 농업 등의 치유 자원을 연계·활용하여 콘텐츠 차별화 및 강화하는 사업 추진

○ 체류형 휴양관광 기반 마련

-체류형 휴양관광의 거점화 목표 달성을 위한 인프라와 공간 조성을 확대하고 지역별·권역별 특화 인프라 및 콘텐츠를 도입하며, 그와 연계한 시스템 및 콘텐츠 도입을 통해 체류형 관광의 활성화를 주도하는 관광자원(시설)으로 육성함

○ 지속가능 융복합 관광콘텐츠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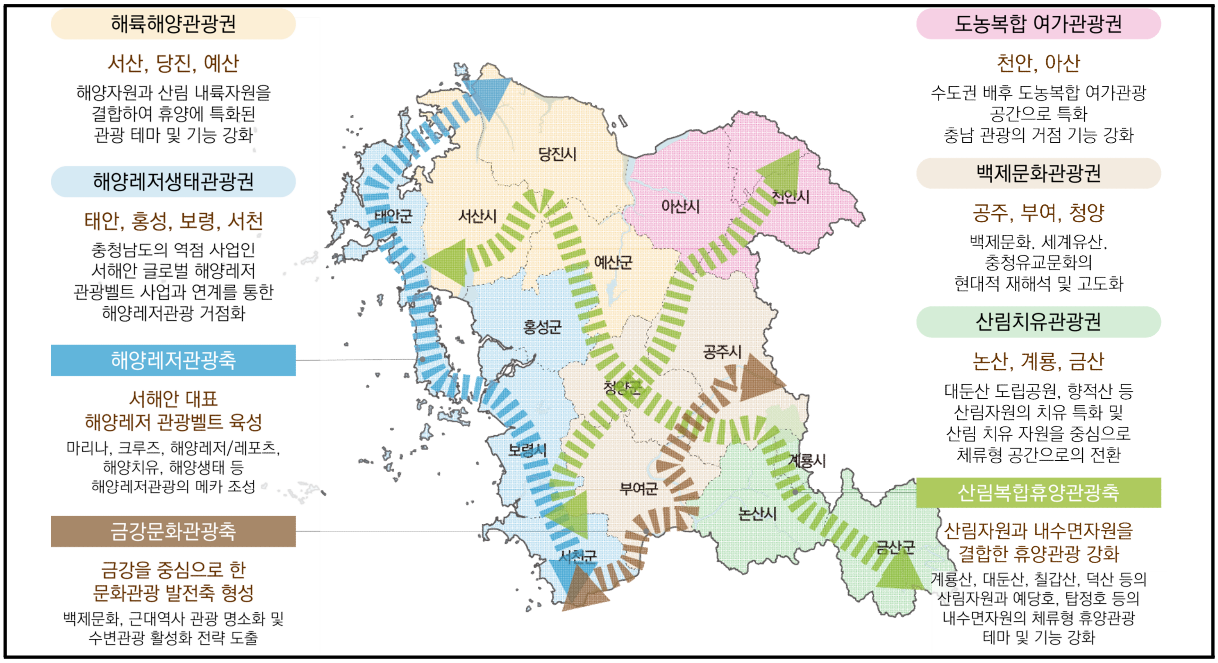
-충청남도의 생태, 자연, 문화유산 등이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관광 기반의 지역 상생 전략 추진

-관광자원의 속성 테마별 융복합, 문화·예술·농업·MICE 등 타 산업과의 융복합 등을 통해 관광 산업과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 증대 및 관광객 유입 확대 도모

-체류형 관광지역으로의 전환을 위해 숙박과 콘텐츠가 결합된 공간 리브랜딩, 충청남도 지역만의 체류형 인프라 구축, 야간관광 활성화, 로컬 미식 및 쇼핑 활성화, 생활관광 및 로컬관광의 결합 등 전략 융복합을 통해 체류 관광의 환경 조성

○ 관광환경·편의 기반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

-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른 관광 경험 증가로 관광 편의 서비스와 쾌적한 관광 환경에 대한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변화 흐름에 맞춰 관광수용태세 등의 관광 환경 개선을 통해 충청남도 관광의 긍정적인 이미지 확산 도모



(3) 서남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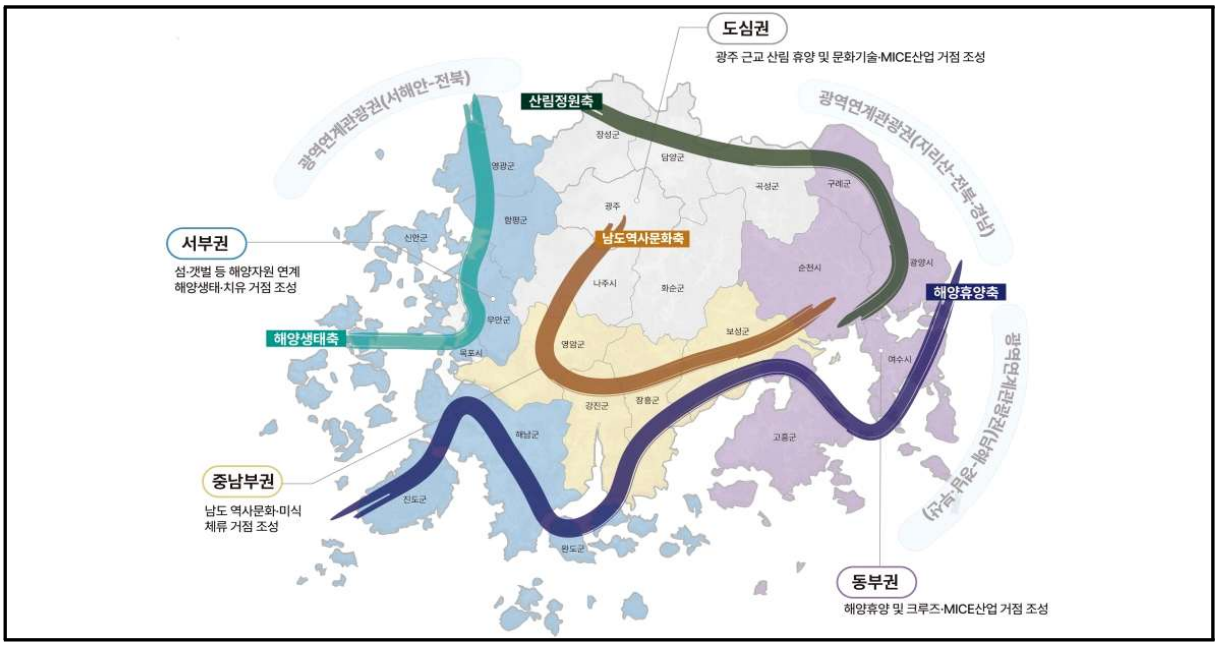
(가) 관광권역 방향성

1) 목표

◇ 목표 ◇
자연 속에 의향·예향·미향으로 머무는 전남광주, 글로컬 관광특별시

○ 전국 최대 규모의 해안선·도서·갯벌과 국립공원·세계유산, 도심 문화예술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자원 보유가 고부가 콘텐츠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태로 활용 방식의 전환

○ 서남권을 대표하는 주요 키워드는 '섬·해양관광', '미식·로컬관광', '축제·이벤트', '생태·힐링', '문화·예술', '광역연계·접근성' 등으로 도출



2) 발전방향

가) 해양·생태·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 융복합관광 전환

○ 타 권역에서 갖추기 어려운 다양한 해양·산림 자원 등 생태 자원을 보전하면서 치유·체험 중심의 고부가 융복합관광으로 전환

나) 대한민국 대표 의향·예향·미향 관광콘텐츠 활성화

○ 지역별로 운영되던 역사문화·예술·미식 콘텐츠를 남도 브랜드로 연계하여 권역 단위 관광콘텐츠로 활성화

다) 관광 동선 연계를 통한 체류·소비 기반 강화

○ 지점 간 연계로 권역 단위 관광 동선을 구축하고 체류 기반을 확충하여 체류가 지역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 마련

라) 관문 기능 강화와 국제관광 확대

○ 공항·항만의 국제 수용 기능을 정비하고 크루즈 유치와 지역 문화기술·MICE산업 연계 기반을 확충하여 외래관광객 유입 경로 확대

마) 통합 운영체계 구축과 지역 주도 관광생태계 조성

○ AI·관광데이터를 활용하여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권역으로 운영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관광생태계 조성

(4) 대경권

(가) 관광권역 방향성

1) 목표

◇ 목표 ◇
천년의 유산과 미래혁신을 잇는 글로벌 관광 중심, 대경권

○ 대구·경북권은 대구의 국제관문·도시관광·미식·의료웰니스 관광과 경북의 신라·가야·선비문화, 역사문화유산, 동해안·산림·생태관광 등의 관광자원과 기능을 보유

-대구의 공항·KTX 등 관문 기능과 도시문화·K-푸드 등, 경북의 신라왕경·안동 고택·대가야 등 역사문화자원과 자연·생태관광을 연계하고, 디지털 헤리티지와 미래산업 관광 등을 결합하여 대경권을 하나의 초광역 관광권으로 연결할 수 있는 핵심 기반

○ 대경권을 대표하는 주요 키워드는 '역사문화', '디지털 헤리티지', 'K-푸드', '글로벌 관광', '자연·웰니스', '산업관광', '광역연계·체류' 등으로 도출



2) 발전방향

가) 천년 역사문화를 연결하는 K-헤리티지 관광루트 구축

○ 신라왕경·대가야·안동 고택·선비문화 등 경북의 역사문화유산과 대구의 근대문화·예술자원을 연결하여, 대경권의 시대별 역사와 생활문화를 연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광역 역사문화 관광루트 구축

○ 경주·안동 등 개별 관광지 방문에 머물던 역사문화관광을 고택숙박·전통음식·공연·야간관광·지역축제와 결합하고, 경북형 파라도르 등 역사건축물을 활용한 체류형 헤리티지 관광으로 고도화

나) 대구의 도시관광 기능을 활용한 경북 체류관광 확산

○ 대구의 공항·KTX 등 광역교통과 숙박·쇼핑·공연·미식·의료관광 등 도시관광 서비스 기능을 활용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유입 기반을 강화하고, 대구에서 관광정보·편의서비스와 도시형 관광콘텐츠를 통합적으로 제공

○ 대구 도심과 군위·팔공산을 경북의 경주·안동·포항 등 주요 관광거점 및 북부·동해안·남서부 관광권과 연계하여 관광객의 이동 범위와 체류 시간, 지역 소비 확대

다) 천년유산에 미래기술을 더한 혁신관광 콘텐츠 육성

○ 신라왕경 디지털 재현과 AI·실감미디어·메타버스 기반 스마트 해설을 확대하여 역사문화유산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보완하고, 전통유산을 현대적으로 경험하는 대경권 특화 디지털 헤리티지 콘텐츠 육성

○ 대구의 의료·뷰티·공연·스포츠·K-푸드와 경북의 세계유산·웰니스·지역미식을 연계하고, 바이오헬스케어·로봇·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미래산업을 산업견학·MICE·교육·비즈니스 관광과 결합하여 새로운 관광시장 창출

라) 관광성과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는 균형성장 기반 마련

○ 경주·포항 중심의 관광수요를 안동·영주·문경 등 북부권과 백두대간·낙동강·동해안·울릉 등 권역 전반으로 확산하고, 생활관광·워케이션·로컬창업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의 방문인구와 생활인구 확대

○ 기존 관광지·관광단지의 재생과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생태자원 보전과 기후·재난 대응을 병행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성장 기반 구축

3) 시·도별 전략별 발전방향

가) 대구

○ 체류형 관광 · 고부가가치 관광 육성

-대구가 보유한 의료관광·웰니스·MICE·야간관광·체류관광 등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은 관광산업 기반을 활용하고, 체험성 강화 등 관광환경 조성을 통해 관광객의 체류·소비 증대

○ 대구 특화 K-컬처 · 랜드마크로 관광도시 인지도 제고

-방한관광 확대 흐름에 대응하고 대구의 외래관광 수요 회복을 위해, 대구의 문화·예술·미식·역사 등 지역 특화 콘텐츠를 고도화하고 연계성을 강화하여 차별화된 관광 브랜드 및 도시 이미지를 구축

○ 도심과 자연을 연결해 타겟별 취향 맞춤 관광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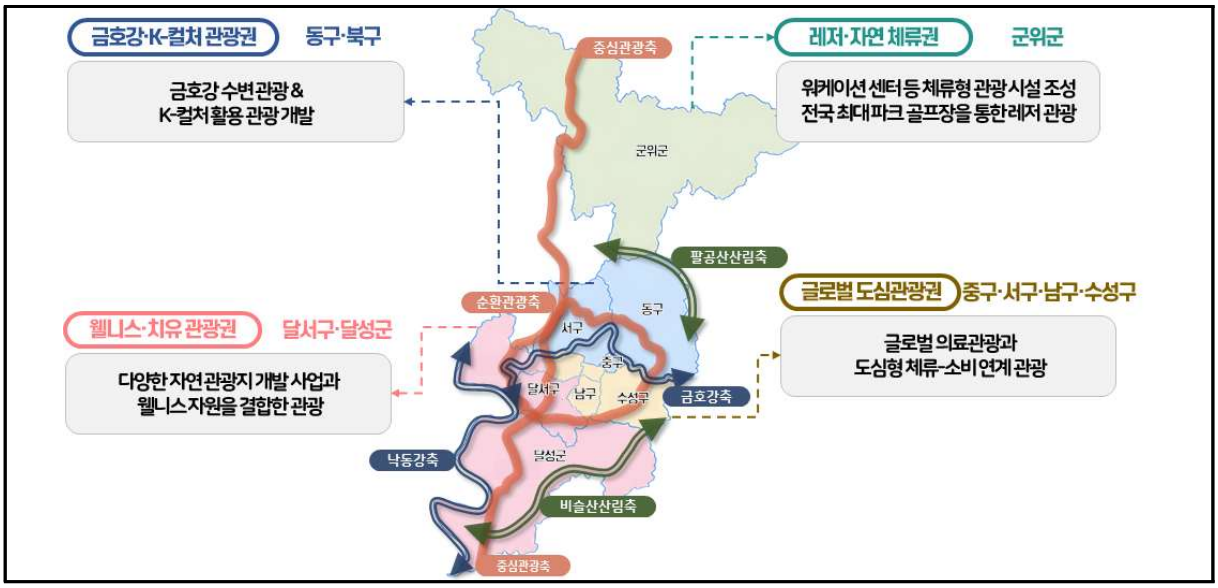
-도심의 문화·상권과 외곽의 산림·생태·수변 자원을 연계하고, 세대·관심·여행 목적별 맞춤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하여 대구 관광 활동의 다변화 및 체류 권역을 확장

○ 초광역 연결과 공항 기반 인바운드 강화

-광역 교통·관광자원 간 연계를 강화해 대구를 대경권 관광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공항을 기반으로 외래관광객 유치 및 글로벌 관광시장 대응력을 강화

○ 신기술 활용·환경 대응 강화로 지속가능한 미래 관광생태계 구축

-AI·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와 관광산업 간 융합을 추진하고, 관광 전담 조직 및 네트워크 강화, 무장애·기후변화 대응 기반 구축 등을 통해 대구 관광산업 생태계 안정화를 위한 기반 마련



나) 경북

○ 글로벌 스탠더드 K-관광 허브 구축

-통합신공항과 영일만항을 항공·해양 양대 국제관문으로 설정하고 광역교통·숙박·MICE·다국어 안내·스마트 관광서비스를 연계한 원스톱 수용태세를 구축하여 세계인이 쉽게 찾고 편안하게 머무는 국제 관광기반 완비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축적된 국제적 인지도와 회의 인프라를 글로벌 마케팅 및 국제행사 유치로 연결하여 외래관광 수요를 권역 전체로 확산

-관광빅데이터와 주요 외래시장 분석에 기반한 표적 마케팅을 전개하고 온라인 유통채널과의 제휴를 확대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지속적 방문 유도

○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 조성

-백두대간·낙동강·동해안·울릉 등 생태민감 자원은 환경수용력과 탐방객 분산을 전제로 관리하고 저탄소 관광인프라와 친환경 이동수단을 확충하여 탄소중립 관광모델로 전환

-무장애·열린관광 환경을 고도화하고 주민참여형 관광사업과 수익공유 구조를 확산하여 관광의 혜택이 지역사회 전체로 환원되는 포용적 관광생태계 구축

○ 지역 주도 맞춤형 관광 개발

-권역 전역을 단일 관광권으로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북부·동해안·남서부의 권역별 핵심자산을 명확히 하고 다핵분산형 거점과 권역 간 연계코스를 통해 관광수요를 균형 있게 분산

-인구감소지역과 재해피해지역은 워케이션·생활관광·회복적 관광·로컬창업과 연계하여 방문인구와 생활인구를 동시에 확대하는 지역활력형 관광개발 추진

-기존 관광(단)지는 전면 재평가를 거쳐 재생·정비 방향을 설정하고 민간투자 유치와 킬러콘텐츠 발굴을 통해 권역별 명품 관광(단)지로 고도화

○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 확충

-세계유산·웰니스·미식을 프리미엄 콘텐츠의 세 축으로 설정하고 관람형 관광에서 체류형·참여형·프라이빗 상품으로 전환하여 관광의 고부가가치화 도모

-실감형 디지털 해설과 다국어 스마트 관광서비스를 결합하여 3대문화권 역사문화 자원의 국제적 접근성과 상품 경쟁력 제고



※ 공간구상도 보완 제작 중

(5) 동남권

(가) 관광권역 방향성

1) 목표

◇ 목표 ◇
세계로 열린 해양·산업·생태 융합관광 중심, 동남권

○ 부산·울산·경남권은 부산의 국제관문·도시관광, 울산의 산업·생태관광, 경남의 남해안 해양·문화·휴양관광 등 지역별로 차별화된 관광자원과 기능을 보유

-부산의 해양관광·K-컬처·미식·야간관광, 울산의 산업유산·태화강·영남알프스, 경남의 섬·연안·해양레저·역사문화 등은 동남권을 하나의 초광역 관광권으로 연계할 수 있는 핵심 기반

○ 동남권을 대표하는 주요 키워드는 '해양레저', '국제관광', '산업관광', '생태관광', '거점·중심', '휴양관광', '스포츠' 등으로 도출



2) 발전방향

가) 국제관문과 지역거점을 연결하는 초광역 관광생활권 구축

- 김해국제공항·부산항 등 국제관문과 부산·울산·경남의 주요 관광거점 및 체류지역을 연결하여 관광객의 이동·체류·소비가 행정구역을 넘어 확산되는 초광역 관광공간체계 구축
- 부산은 국제관문과 도시관광 허브, 울산은 산업·생태·세계유산 융합거점, 경남은 남해안 해양·문화·웰니스 체류거점으로 기능을 특화하고, 광역교통·관광패스·통합 관광상품을 통해 하나의 관광목적지로 연계

나) 해양·산업·생태·K-컬처 융합관광 경쟁력 강화

- 부산의 해양·K-컬처·미식·야간관광, 울산의 산업·생태·세계유산, 경남의 남해안 섬·해양레저·역사문화·웰니스 등 지역별 특화자원을 결합하여 동남권만의 고부가가치 융합관광 콘텐츠 육성
- 조선·자동차·항만·물류·에너지·항공우주 등 동남권의 성장산업을 견학·체험·교육·MICE 및 디지털 콘텐츠와 연계하여 산업기반을 새로운 관광매력과 미래 관광 성장동력으로 전환

다) 스마트·데이터 기반의 통합 관광목적지 조성

- 공항·항만·철도와 주요 관광거점 간 광역교통을 연계하고, 초광역 관광패스·관광셔틀·수하물 배송·통합 예약 및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여 여행 전 과정을 연결하는 관광 환경 조성
- 부산·울산·경남의 관광정보와 이동·체류·소비 데이터를 통합하고, AI 기반 다국어 안내·여행경로 추천·혼잡 예측 등을 통해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관광수요의 권역 내 분산과 효율적인 관광지 관리 지원

라) 체류경제와 지역가치가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관광권 육성

- 해양레저·스포츠·미식·야간관광·웰니스·워케이션·로컬라이프 등을 결합하여 당일·경유형 관광을 숙박형 관광으로 전환하고, 관광객의 체류시간·지역소비·재방문 확대
- 주민·상인·청년·로컬기업이 관광상품의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여 관광소비가 지역소득으로 환류되네는 구조를 구축하고, 생태·해양·세계유산의 보전, 탄소중립 및 관광수용력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권 육성

3) 시·도별 전략별 발전방향

가) 부산

○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누리는 공존형 도시 관광

-생활권의 자연·역사자원을 일상적으로 이용 가능한 여가공간으로 전환하고, 유휴공간과 축제·공연을 상시형 콘텐츠로 고도화하여 관광 기능이 시민의 생활권으로 융화

-생활밀착형 관광모델을 부울경의 생활권 자원과도 함께 적용하여, 초광역 차원에서도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누리는 공존관광으로 확장

○ 머무름과 소비가 확대되는 체류 경제형 관광

-해안·항만과 원도심의 유휴공간에 치유·레저·숙박 기능을 복합적으로 집적하여 단순 방문이 소비와 체류로 이어지는 경제구조를 구축

-부산에서 형성된 해양체류 기반을 남해안 관광망까지 연계함으로써, 남부권 체류경제를 주도하는 글로벌 해양관광 중심지로 도약

○ 바다·도시·자연이 연결되는 입체형 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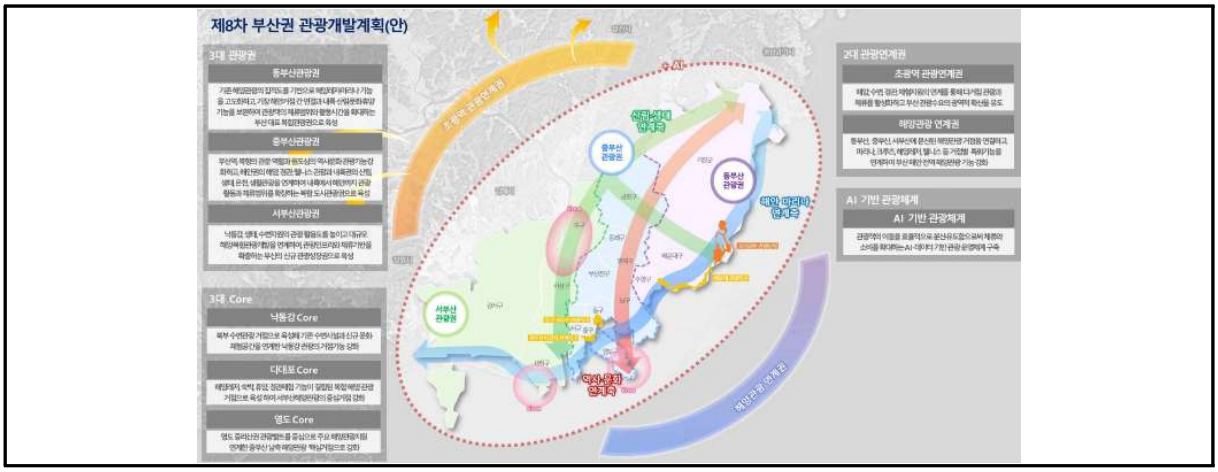
-해양과 내륙의 관광거점을 보행·수상 인프라로 물리적으로 연결하여 흩어져 있던 개별 관광 공간을 하나의 연속된 관광축으로 전환

-부산에서 완성된 바다·도시·자연의 관광축을 울산 해안과 경남 낙동강·남해안까지 이어붙여, 남부권 전역을 아우르는 입체관광망으로 완성

○ 광역연계·AI 기반의 미래형 관광

-인접지역과의 관광 동선을 실질적으로 확충하고 안내·예측·결제 전 과정을 AI·데이터 기반으로 통합하여 이용자 경험을 하나의 서비스로 연결

-부산에서 구축한 관광시스템을 부울경 공동의 교통·관광데이터와 연계하여, 세계인이 남부권 전역을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체계로 확대



나) 울산

○ 관광 이동을 연결하는 스마트·무장벽 관광환경 구축

-(관광객 관점의 Seamless Journey 구현) 관광객의 접근·이동·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단절을 최소화하여 도착부터 관광까지 끊김 없는 관광여정을 구현

-(스마트·포용형 관광수용태세 고도화) 디지털 전환과 관광수요 다양화에 대응하여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스마트·유니버설 관광서비스 체계 확립

○ 관광가치가 지역에 환류되는 로컬 관광경제 구축

-(관광가치의 지역 내 선순환 구조 강화) 관광수요와 소비가 지역상권·기업·주민으로 확산되어 관광의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지역에 축적되는 구조로 전환

-(지역주도형 관광생태계 확장) 시민·청년·기업·로컬 주체의 참여와 협업을 확대하여 지역이 관광의 생산자이자 수혜자가 되는 관광생태계 조성

○ 보전과 성장이 공존하는 재생형 관광도시 구축

-(보전에서 가치재생으로 지속가능 관광 전환) 생태·세계유산 등 핵심자원의 보전과 활용을 조화시키고 관광을 통해 환경·문화·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재생관광 지향

-(글로벌 수준의 Destination Stewardship 강화) 탄소중립, 관광수용력, 주민참여 등 지속가능성 원칙을 관광개발 전반에 적용하여 책임 있는 국제 관광목적지 관리체계 구축

○ 핵심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통합 관광목적지 구축

-(개별 관광지에서 네트워크형 관광공간으로 전환) 분산된 관광거점의 기능과 정체성을 강화하고 자원·콘텐츠·동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도시 전체가 하나의 관광목적지로 작동하는 구조 구축

-(지역을 넘어서는 광역 관광네트워크 확장) 울산 내부 권역 간 연결을 넘어 주변 도시와 관광시장까지 연계하여 울산의 광역관광 허브 및 결절기능 강화

○ 체류시간과 소비를 확대하는 체류경제형 관광도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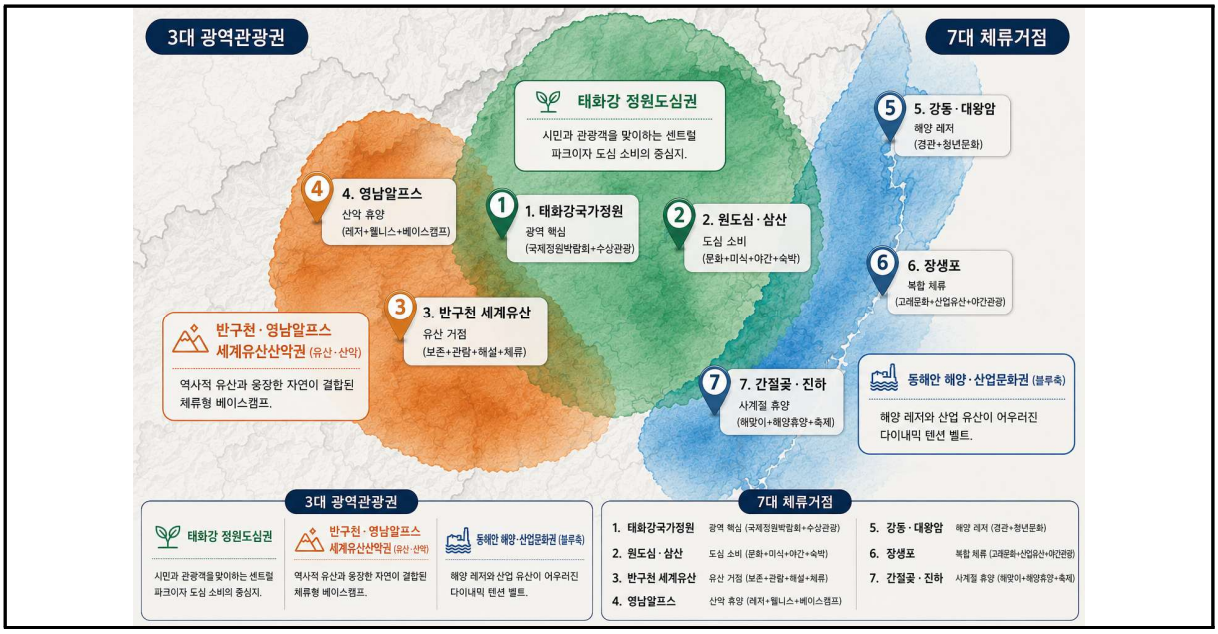
-(방문경제에서 체류경제(Stay Economy)로 전환) 관광정책의 중심을 방문객 수에서 체류시간·숙박·소비·재방문으로 전환하여 머무는 시간이 지역의 가치가 되는 관광구조 형성

-(시간과 경험을 확장하는 체류콘텐츠 고도화) 야간·미식·웰니스·레저·문화 등 경험 요소를 융합하여 낮에서 밤으로, 당일에서 숙박으로 관광시간과 경험영역을 확장

○ 복합관광거점 중심의 관광수요·투자 견인 기반 구축

-(전략적 Tourism Anchor 중심의 성장거점 육성) 관광수요와 체류기능을 집적할 수 있는 핵심거점을 선택적으로 육성하여 울산관광의 집객력과 목적지 경쟁력을 강화

-(투자와 지역성장을 확산하는 관광성장축 구축) 전략거점에 대한 공공·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그 파급효과를 주변 관광권역과 지역경제로 확산하여 울산관광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



다) 경남

○ 글로벌 관문 연계 세계 수준의 관광인프라·콘텐츠 경쟁력 강화

-공항·항만·철도 등 광역교통망과 관광거점을 연계하고, 기존 관광지의 노후시설·콘텐츠·체류기능을 재정비

-남해안 해양관광,세계유산·역사문화, 산림·웰니스 자원을 고품격 복합콘텐츠로 육성하며 AI 기반 다국어 안내, 맞춤형 코스, 통합 모빌리티 등 스마트 수용태세를 강화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편리하게 방문·체류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경남형 관광매력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 브랜드 가치 제고

-남해안권·지리산권·가야문화권·낙동강권의 대표자원을 특화관광거점으로 육성하고 주변 관광지, 축제, 지역상권을 하나의 광역관광상품과 루트로 연결

-시·군 및 인접 지자체와 초광역 관광벨트·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고, 남해안·세계유산·웰니스를 경남의 핵심 이미지로 통합 브랜드화 하여 국내외 인지도와 시장 확장성 도모

○ 여행에서 생활로 이어지는 경남형 체류관광 활성화

-웰니스·치유, 농어촌·로컬라이프 체험, 워케이션, 반려동물 동반여행 등 변화하는 수요에 맞춘 생활밀착형 프로그램과 체류공간을 확충

-숙박·야간관광·미식·체험 등을 결합한 체류형 상품으로 방문객의 체류시간과 재방문을 늘리고, 지역의 일상과 관계를 형성하는 관계인구·생활인구로 전환하여 지역 활력 증진의 선순환 구축

○ 관광소비의 지역 내 순환을 통한 도민 체감형 경제효과 확대

-지역주민, 로컬업체, 상인, 청년창업자, DMO가 관광상품의 기획·운영에 참여하도록 하고 전통시장·로컬푸드·특산품·문화예술·축제를 숙박·체험·쇼핑과 연계

-관광소외지역에는 소규모 체류공간과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소비를 경남 전역으로 분산하며, 시·군 역량 지원과 성과관리로 관광소비가 주민소득과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환류 도모



(6) 강원권

(가) 전략별 발전방향

1) 강원형 생태관광 힐링 브랜드 구축

○ 강원이 지닌 풍부한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자연속에서 힐링,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 콘텐츠를 구축하여, 생태관광의 다양한 매력적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거점으로 도약

2) 기존 관광자원 · 로컬감성의 활용 및 고도화

○ 기존 강원자원이 지닌 특색 발굴 및 활용을 통하여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 자산 기반의 유무형 레거시 활용을 통한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 확보

3) 융복합형 관광생태계 구축 및 연계 · 협력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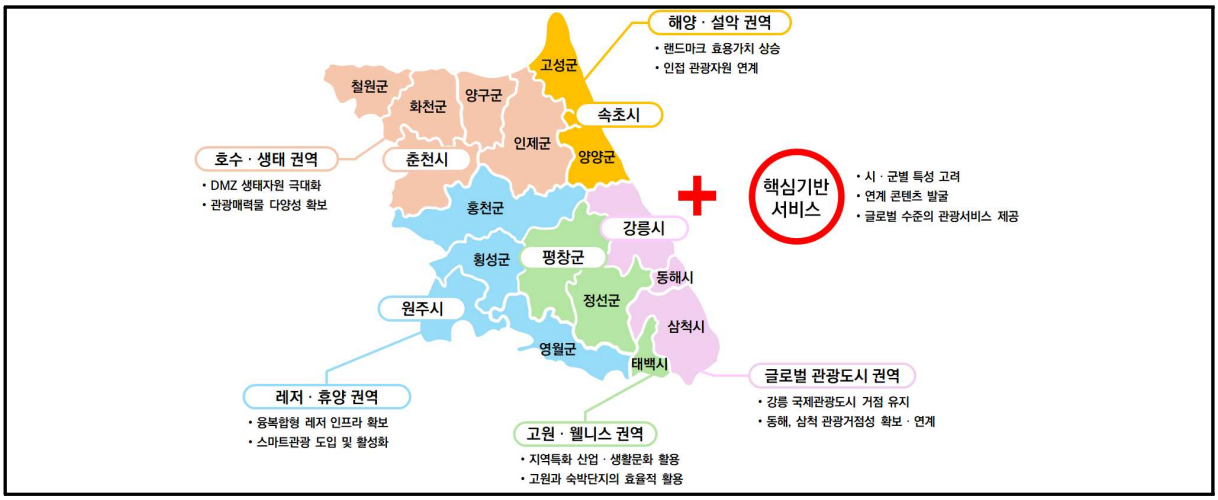
○ 관광산업과 강원의 문화 · 역사 · 산업 · 미식자원과의 융복합을 통하여 강원 정체성을 콘텐츠화하고, 관광자원 및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강원관광의 다양화 및 차별성 확보

4) 글로벌 체류형 복합관광지 조성 및 콘텐츠 발굴

○ 글로벌 관광 수용태세 구축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도모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발굴 및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

5) 지속가능한 관광환경 구축

○ 지속적인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관광객들에게 관광활동 편의성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 참여 모델 도입을 통하여 안정적인 관광개발 및 운영 확보



(7) 전북권

(가) 전략별 발전방향

1) 세계가 찾는 전북관광 기반 구축

○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과 MICE산업을 육성하고 세계유산·관광특구·새만금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전북 관광시장을 국내 중심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고 국제관광 거점으로서의 경쟁력 강화

2) 맛·쉼·문화 관광콘텐츠 고도화

○ 전북의 음식·발효·역사문화 자원에 웰니스·치유, 야간관광, 실감콘텐츠 및 축제를 결합하여 전북다운 관광경험을 창출하고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관광 만족도 제고

3) 전북형 로컬관광 자원 브랜드화

○ 14개 시·군의 대표 관광지와 산악·생태·수변·해양 등 지역 고유자원을 발굴·연계하여 차별화된 전북형 관광브랜드로 육성하고 지역별 관광거점의 경쟁력 강화

4) 체류·재방문 관광상품 개발

○ 숙박·스테이 거점과 체류형 관광상권을 확충하고 투어패스, 반값여행, 투어버스 및 관광길 등 이동·소비 연계상품을 활성화하여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 재방문이 이어지는 관광경제 구조 확립

5) 지속가능하고 편리한 관광수용태세 확립

○ 관광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고 무장애·안전·서비스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관광기업과 전문 인력 육성 및 주민상생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8) 제주권

(가) 전략별 발전방향

1) 책임관광 육성으로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과 지속가능성 강화

- 관광객·업계·주민 간 공존과 상생을 기반으로 관광소비·지역경제 기여 등 질적 성장 중심의 관광체계 확립
- 자연·문화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기본으로 관광정보 안내, 관광객 분산, 위기대응 등 책임관광 수용태세 강화

2) 치유와 함께하는 지역관광체계 확립으로 새로운 관광산업생태계로 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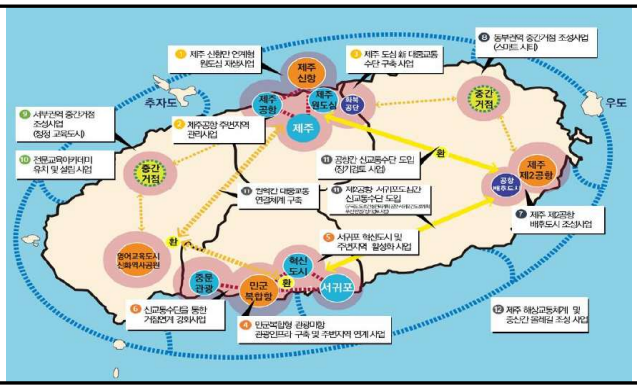
- 청정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힐링·웰니스 등 변화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고, 문화·미식·스포츠·MICE 등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 관광과 지역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여 관광소비가 지역경제와 주민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3) 청정이미지를 담은 지역고유 자산을 활용한 특화관광 육성

- 자연·생태·해양·문화·마을 등 제주 고유자원을 활용한 체험·콘텐츠 중심의 특화관광 육성
- AI·디지털 기술을 관광정보 및 콘텐츠와 접목하여 관광객 편의성을 높이고 제주 특화 관광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4) 참여와 공존을 통한 지역관광 혁신역량 제고

- 주민·관광사업자·지역기업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여 지역 주도의 관광역량과 관광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
- AI·데이터 기반 관광시장 분석과 시장별 맞춤형 마케팅을 통해 관광시장 다변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다. 공간계획의 적정성 검토

(1) 수도권

(가) 서울

구 분	내 용
현황 및 문제점	◦서울관광의 빠른 회복과 관광수요의 개별화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광활동의 시·공간적 편중 지속 ◦관광객 다양화 및 활동범위 확대에도 관광 이용환경의 불편함은 여전히 존재 ◦관광산업 성장에도 지역·업종 간 관광성과는 편차보임 ◦관광성장과 함께 도시·지역사회가 부담해야 할 문제는 남아있음
공간계획 적정성	◦서울을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으로 나누고 역사문화 야간경관축, K-컬쳐 공연축, MICE산업 창조축, 한강수변축 등으로 공간계획을 설정하여 기존 관광경쟁력 수준에 따라 구분한 공간계획을 반영하고 이를 더욱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로 구축함으로써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을 계승하는 공간계획을 수립

(나) 인천

구 분	내 용
현황 및 문제점	◦글로벌 관문 기능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통과형' 관광구조 ◦원도심 관광거점의 침체·노후화와 이를 대체할 신규 관광중심지 부재 ◦‘인천다움’ 콘텐츠의 차별성 부족과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 과제 ◦군·구 간 관광예산 양극화와 민간자본 의존형 사업의 부진
공간계획 적정성	◦관광객의 실제 이동패턴과 관광자원의 기능적 연계성, 행정체제 개편 등을 반영하여 인천권 관광 공간체계를 5개 소권(小圈)으로 구분하고, 소권별로 차별화된 관광 기능과 역할 부여하는 등의 공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한 관광도시 계획

(다) 경기

구 분	내 용
현황 및 문제점	◦높은 관광수요, 숙박·체류로 이어지지 못하는 당일관광 중심의 관광구조 지속 ◦다양한 복합 관광자원 보유, 대표 관광브랜드화 및 지역별 인지도·이용 편차 존재 ◦방한 외래관광시장 회복에 비해 경기도 방문·체류 전환 미흡 ◦관광사업체의 양적 기반은 크나 숙박·고부가 관광산업으로의 연계·고도화 미흡 ◦개별여행 중심 관광행태에 대응한 광역 관광교통·정보서비스 연계 및 데이터 활용 미흡
공간계획 적정성	◦일상이 여행이 되는 글로벌 초연결 관광지대 조성을 비전으로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의 권역 구분을 계승하고 북부권(접경·평화·생태권), 동북부권(산악·수변 휴양관광권), 남부권(도시·역사문화권) 서울근교권 (도시연계·생활관광권), 서해안권(해양·산업·수변권)으로 구상을 수정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2) 중부권

(가) 대전

구 분	내 용
현황 및 문제점	◦로컬 콘텐츠를 통해 확보한 관광경쟁력을 지역 내로 확산하는 관광정책 강화 필요 ◦특정 공간 및 상권에 편중된 관광 소비 고착화에 대응하는 대전시 관광 패러다임 고도화 필요 ◦초광역 관광으로의 관광권 범위 확대에 따른 충청권 관문·거점 도시 기능 강화 ◦야간관광의 기반을 활용한 야간경제관광으로의 관광생태계 구축
공간계획 적정성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의 관광권을 유지하면서 과학도시문화관광권, 로컬체험관광권, 생태체험관광권, 웰니스여가관광권으로의 구분을 통하여 본포된 녹색자원을 활용한 관광 클러스터 이원화 계획을 수립·분할·연결성을 통하여 생태연결축, 보전관광 등을 제시함으로써 공간 배치의 적정성을 제시

(나) 세종

구 분	내 용
현황 및 문제점	◦국립박물관단지의 순차적 개관, 국가상징구역 계획 등 국립 문화시설의 확충 ◦K-컬처, 스크린 투어리즘의 확산 및 트렌드 변화에 대한 관광 정책화 방안 필요 ◦로컬 관광의 지속적인 강세 및 고도화 추세로 읍면 지역의 관광 기능 강화 ◦디지털화, AI 등 관광 부문의 디지털 활용 확산을 관광산업 적용할 수 있는 환경구축 필요
공간계획 적정성	◦북부 관광연계권역, 연계 관광거점, 융복합 관광벨트 연결권역, 남부 관광연계권역, 핵심 관광거점의 공간계획과 핵심 관광 연결축, 보조 관광 연결축을 구성하는 등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의 관광개발과 생태관광 공간 균형 발전에 대한 공간계획을 계승

(다) 충북

구 분	내 용
현황 및 문제점	◦관문은 급성장, 체류는 정체-경유형 구조 지속 ◦북부 편중·남부 소외의 권역 불균형과 공간적 단절 ◦노후한 관광(단)지·관광특구와 콘텐츠 부재 ◦호수·산림·웰니스 자원 대비 낮은 목적지 경쟁력 ◦외래관광 부진과 정책 전환기 대응체계 부재
공간계획 적정성	◦백두대간·호수 등 자연자원 기반 청정관광의 국제수준 육성을 통해 융복합관광 육성 및 관광산업 생태계 혁신 등을 제시함으로써 미래관광 재설계 융·복합 관광거점의 보전·보호 생태관광의 공간분석을 적절히 수행하여 다양한 공간계획을 수립한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의 권역구상을 권역구상 핵심, 3권역, 2개 연계축으로 정돈하는 공간계획을 수립

(라) 충남

구 분	내 용
현황 및 문제점	◦단순 방문 관광에서 쉬고 힐링하는 관광으로의 변화에 대한 포지셔닝 필요 ◦단기 방문 중심 관광에서 체류 · 생활관광으로의 전환 필요 ◦나만의 경험 중시로 변화하는 관광수요에 대응 필요 ◦지방소멸 시대에 필요한 지역관광 소비생태계 구축에 대한 노력 요구
공간계획 적정성	◦글로벌 해양레저생태관광 거점화, 오감힐링 휴양관광 특화, 체류형 휴양관광 기반 마련, 지속가능 융복합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환경·편의 기반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하는 공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스쳐가는 곳에서 머무는 곳으로, 대한민국 대표 해륙 휴양 관광도시의 공간계획을 수립

(3) 서남권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 분	내 용
현황 및 문제점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광역 관광목적지 경쟁력 강화 필요 ◦긴 체류시간에 비해 지역 내 체류.소비로 전환은 부족, 체류시간과 관광소비 가치 제고 필요 ◦지역별 관광기능은 상호보완적이나 관광기반과 성과의 공간격차 존재, 거점 간 기능분담 필요 ◦국제관문과 글로벌 관광자원 보유, 외래관광객의 지역 확산은 제한적, 광역 인바운드 관광권 육성 필요 ◦행정통합으로 하나의 관광권 운영 기반 마련, 실질적인 통합 관광목적지 관리 체계 구축 필요
공간계획 적정성	◦전라남도와 광주시를 통합함으로써 광주의 문화예술·미식·민주인권 자원과 전남의 해양·생태·산림·역사문화 자원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고도화하고, 상호 연계 가능한 자원은 광역 관광상품으로 육성하여 권역의 방문목적성과 관광 부가가치 강화하는 등 권역 전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광역 관광운영 기반 공간계획을 구축

(4) 대경권

(가) 대구

구 분	내 용
현황 및 문제점	◦대구 관광 정체성 확립 및 관광 경쟁력 강화 등 관광도시로서의 입지 개선 ◦국내·외 관광수요 회복을 위한 관광시장 변화 대응 및 수용 기반 강화 필요 ◦관광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및 통합 관리 기반 강화 필요 ◦도심·외곽 관광자원 연계 및 공간 경쟁력 강화 필요 ◦디지털 전환 및 지속가능 관광 대응 기반 강화 필요
공간계획 적정성	◦대구의 문화·예술·미식·역사 등 지역 특화 콘텐츠를 고도화, 도심의 문화·상권과 외곽의 산림·생태·수변 자원을 연계, 공항을 기반으로 외래관광객 유치 및 글로벌 관광시장 대응력을 강화 등 대구 관광산업 생태계 안정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한 4개 권역의 공간계획 구축

(나) 경북

구 분	내 용
현황 및 문제점	◦최상급 역사문화·생태자원을 실질적 관광성과로 전환하기 위한 가치사슬 고도화 필요 ◦경주·포항 중심의 관광거점 역량을 북부·서부권으로 확산하는 균형발전형 개발 요구 ◦확대되는 방문수요를 체류와 소비로 연결하는 체류형 관광기반 확충 필요 ◦도 전역에 확보된 관광(단)지 기반의 실효적 활용을 위한 재정비와 민간투자 활성화 요구 ◦통합 신공항·영일만항의 국제관문 효과를 극대화하는 수용태세 정비와 지속가능 관리 필요
공간계획 적정성	◦3대 관광권역(힐링문화관광권·환동해 해양·신산업관광권·남서부 혁신· 도시관광권), 2허브(통합신공항 에어-투어리즘 허브·영일만 오션-투어리즘 허브), 3대 발전축(백두대간 생태·치유축·낙동강 역사·생활축·동해안 해양· 레저축), 4대 연계축으로 구성된 개방형 관광공간구조 설정

(5) 동남권

(가) 부산

구 분	내 용
현황 및 문제점	◦관광수요 증가를 체류·소비 성과로 연결하는 관광산업의 양적·질적 동반성장 필요 ◦글로벌관문 기능을 체류형 관광수요로 연결하는 목적지 전략 강화 ◦K-컬처와 부산 고유자산을 활용한 다채로운 관광경험 확장 ◦권역 간 관광기능 연계를 통한 관광수요의 지역 균형 확산 필요 ◦관광성장에 대응한 도시수용력 및 통합관리체계 확립
공간계획 적정성	◦3대 관광권(동부산관광권, 중부산관광권, 서부산관광권), 3대 Core(낙동강, 다대포, 영도), 2대 확장연계권(해양관광, 초광역관광), 3대 관광자원 연계축, AI기반 관광체계를 가지는 공간구조를 설정하여 세계인이 찾고 머무르는 글로벌 관광허브 도시의 공간계획을 수립

(나) 울산

구 분	내 용
현황 및 문제점	◦관광수요 회복과 관광자원의 경쟁력 강화에도 불구하고 체류·소비 중심의 관광도시 전환은 미흡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에 비해 관광거점 간 연계와 관광동선의 연결성은 미흡 ◦관광객 중심의 이동·이용 편의 강화와 관광서비스 전반의 질적 개선 필요 ◦관광객 방문이 지역소비와 관광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연계구조 미흡 ◦세계유산·생태관광 확대에 대응한 글로벌 관광수용태세 및 지속가능한 관광관리 강화 필요
공간계획 적정성	◦3대 광역관광권(태화강 정원도심권, 반구천·영남알프스 세계유산산악권, 동해안 해양·산업문화권), 7대 체류거점(태화강국가정원, 원도심·삼산, 반구천 세계유산, 영남알프스, 강동·대왕암, 장생포, 간절곶·진하)으로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보전과 핵심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통합 공간계획 구축

(다) 경남

구 분	내 용
현황 및 문제점	◦방문수요에 비해 체류형 관광환경이 부족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제한 ◦관광수요의 지역·계절 편중과 신규 관광시장 유입 부족 ◦개별 관광자원 중심 개발로 권역 연계와 통합 브랜드가 미흡 ◦시·군별 정책·사업추진 역량 차이와 지역 내 관광소비 순환구조 부족 ◦기후위기·재난·환경규제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필요
공간계획 적정성	◦웰니스·치유, 농어촌·로컬라이프 체험, 워케이션, 반려동물 동반여행 등 변화하는 수요에 맞춘 생활밀착형 프로그램과 체류공간을 확충하고 숙박·야간관광·미식·체험 등을 결합한 체류형 상품으로 방문객의 체류시간과 재방문을 늘리고, 지역의 일상과 관계를 형성하는 관계인구·생활인구로 전환하여 지역 활력 증진의 선순환 공간계획 구축

(6) 강원권

구 분	내 용
현황 및 문제점	◦강원자치도 특별법을 통한 효율적 규제 완화 및 관광개발 여건 개선 ◦강원특별자치도 주도의 5+1 첨단전략산업 집중육성 ◦철도 SOC 확충을 통한 접근성 향상 ◦계절적 편중화 해결을 위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필요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 글로벌 인프라 조성 필요
공간계획 적정성	◦지속적인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관광객들에게 관광활동 편의성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 참여 모델 도입을 통하여 안정적인 관광개발 및 운영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관광환경 구축을 위해 관광자원 연계성, 생활권, 교통망 등을 연결하는 공간계획 구축

(7) 전북권

구 분	내 용
현황 및 문제점	◦내국인·전주권 중심 관광구조로 글로벌 관광시장 확대에 한계 ◦풍부한 관광자원에 비해 융·복합형 관광콘텐츠의 경쟁력 미흡 ◦관광수요와 기반시설의 지역·계절 편중으로 로컬관광 확산에 한계 ◦당일·단기 방문 중심의 관광구조로 체류와 소비 확대가 제한적 ◦관광지 간 연계 교통체계 미흡으로 광역 관광교통망 구축 필요
공간계획 적정성	◦관광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고 무장애·안전·서비스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관광기업과 전문 인력 육성 및 주민상생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하는 공간계획의 수립

(8) 제주권

구 분	내 용
현황 및 문제점	◦관광시장 구조 및 관광행태 변화 ◦자연경관 중심 관광구조와 콘텐츠 다양화 한계 ◦디지털 관광환경 확산과 관광산업 혁신 요구 ◦지속가능성 및 섬 지역 특성에 따른 관광정책 과제
공간계획 적정성	◦청정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힐링·웰니스 등 변화하는 관광수요에 대응, 자연·생태·해양·문화·마을 등 제주 고유자원을 활용한 체험·콘텐츠 중심의 특화관광 육성하는 등의 공간계획 구축

(9) 공간계획의 적정성

○ 8대 국가전략 관광권과 3대 특별 관광권 체계 구축으로 수도권·중부권·대경권·동남권·서남권을 대상으로 대도시와 광역교통거점을 중심으로 관광자원·산업·콘텐츠를 연계하고, 시·도 간 광역협력사업을 통해 관광수요와 성과가 권역 전반으로 확산되는 초광역 관광체계를 구축, 강원권·전북권·제주권을 대상으로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특성과 지역 고유의 자연·문화·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관광발전모델을 구축하고, 인접 관광권과의 기능적 연계를 통해 관광경쟁력을 강화하는 공간계획을 구축하여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 상호 연계될 수 있는 공간계획을 수립함

라. 환경보전 지역·지구 지정 현황

○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환경 보전지역·지구 및 관리지역의 지정현황의 조사를 시행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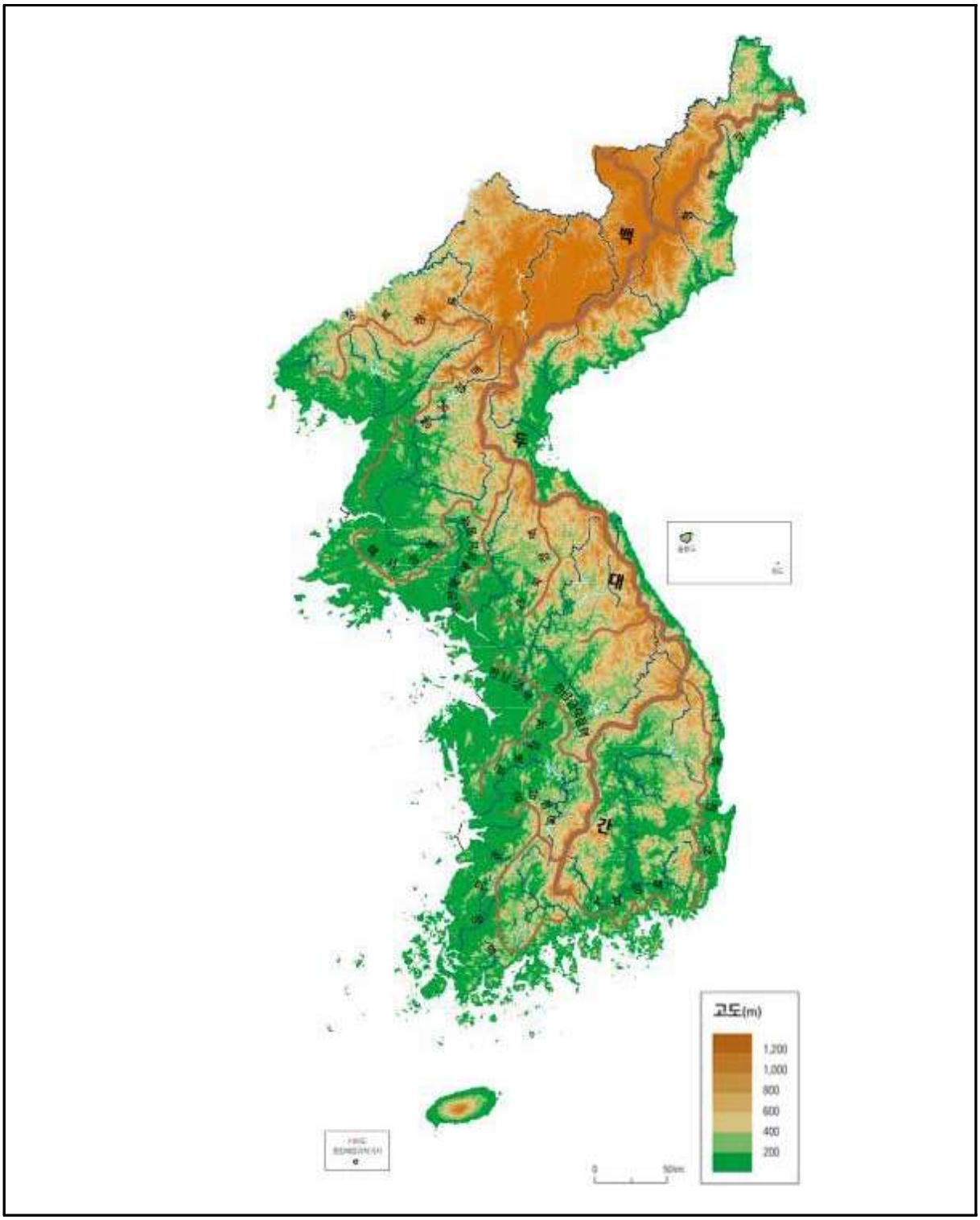
〈표 9.4.1-1〉 주요 환경 관련 지역·지구 지정 현황

환경보전 용도지역	내용(요약)	관련법
생태경관보전지역	핵심·완충·전이구역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보호구역	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법
습지보호지역	습지보호, 주변관리, 개선지역	습지보전법
자연공원	국립, 도립, 군립공원	자연공원법
지질공원	국가·세계지질공원	자연공원법
백두대간보호지역	핵심·완충구역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수변구역	친수구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대기관리권역	-	대기관리권역법
토양보전대책지역	1지역~3지역	토양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해역	환경보전,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관리법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 해양생태계보호, 해양생물보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지형

(가) 백두대간보호지역

○ 백두대간도에는 주요 산들의 분포를 선으로 연결하여 표현하였으며, 1대간, 1정간, 13정맥이 위치하고 있고, 이는 산지 이용 계획 수립과 이용에 쉽게 활용할 수 있음



(그림 9.4.1-1) 백두대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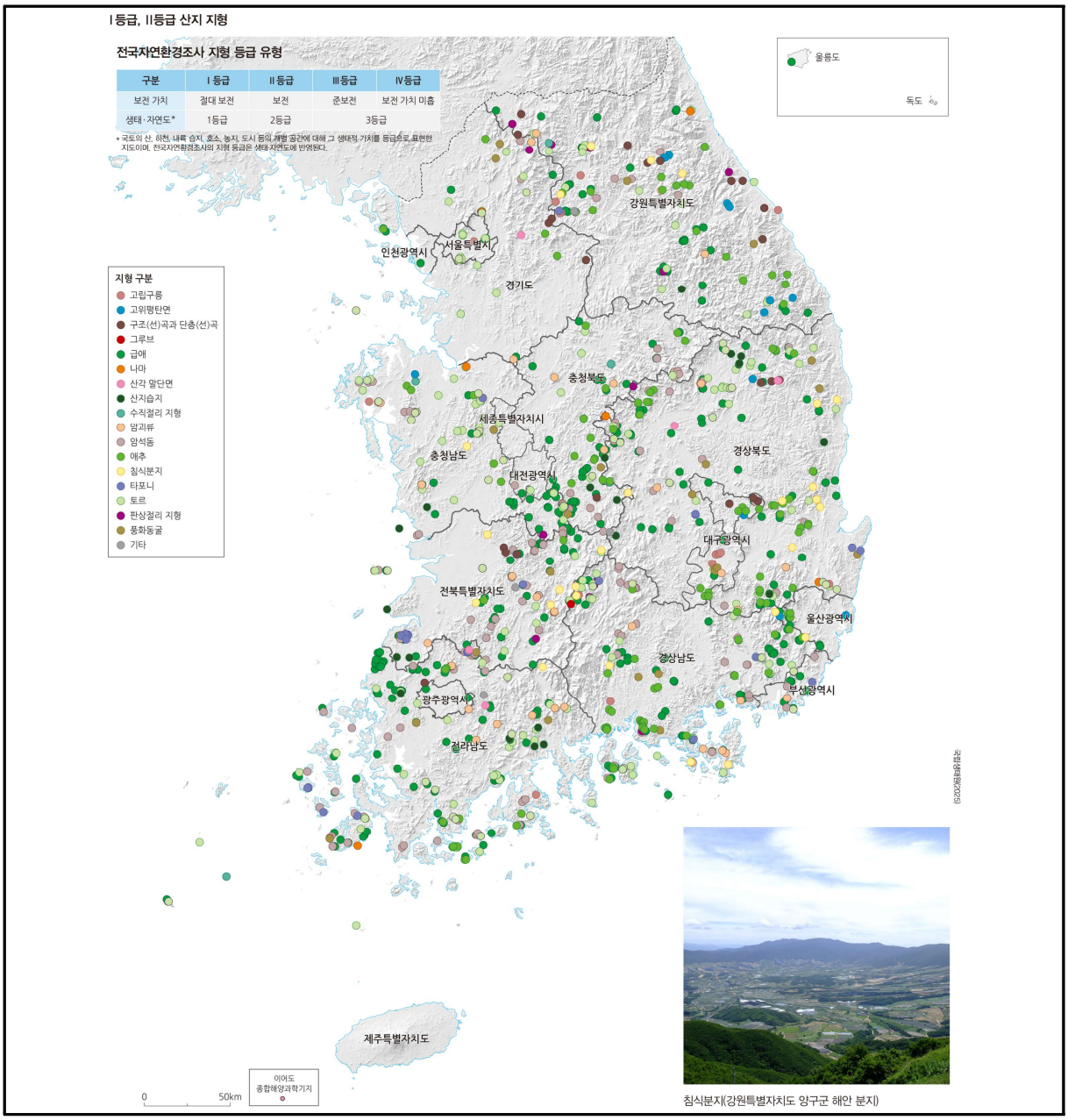
(나) 지형경관(산지)

◦ 자연환경 조사의 1등급 산지 지형은 주로 높은 산들이 분포하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지만, 도서 지역에도 많이 분포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산지는 고도가 높지 않으며, 한반도 동쪽의 지반 융기량이 서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높은 산지는 대부분 동쪽에 위치함

◦ 선캄브리아기의 변성암부터 중생대의 화성암과 퇴적암을 거쳐 신생대 3기층과 4기층까지의 기반암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등 지형 자원의 다양성이 매우 높음

◦ 1등급 산지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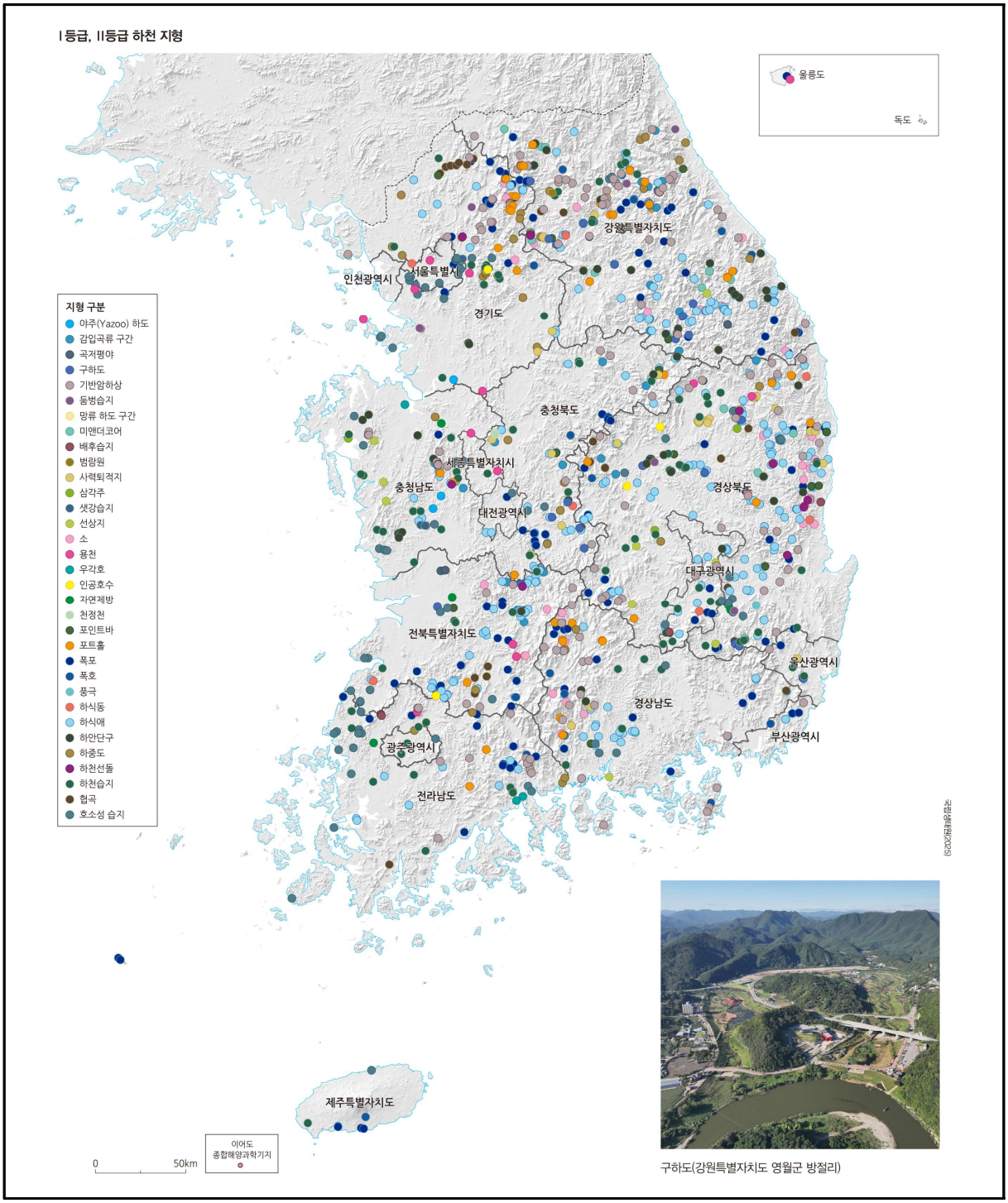


(그림 9.4.1-2) 1등급 산지 지형 분포도

(다) 지형경관(하천)

○ 자연환경 조사의 1등급 하천 지형은 하천 하류보다는 상류지역에 주로 분포함

- 범람원과 같은 대규모 하천 퇴적 지형은 대부분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하천 침식 지형으로는 폭포, 포트홀, 하식애 등이 있으며, 퇴적지형으로 범람원, 삼각주, 하천 습지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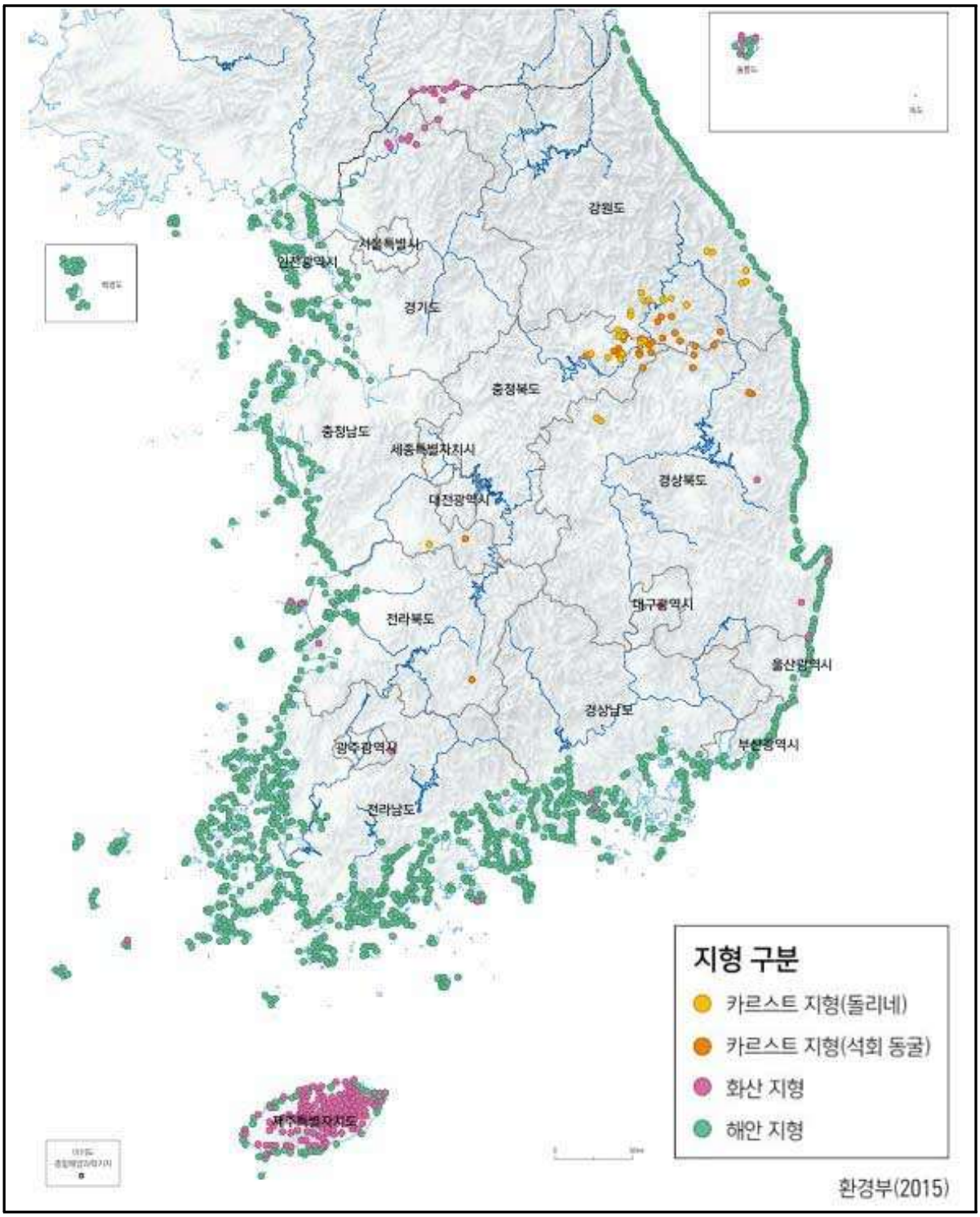


(그림 9.4.1-3) 1등급 하천 지형 분포도

(라) 지형경관(해안)

○ 자연환경 조사의 1등급 해안 지형은 전체 해안선을 따라 골고루 분포하는 편이지만 개발이 비교적 적게 이루어진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음

- 해안 지형은 구성물질에 따라 암석 해암, 모래 해암, 갯벌 해안으로 나눌 수 있음



(그림 9.4.1-4) 1등급 지형 경관 분포도

(2) 자연공원

(가) 생태경관 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생태·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며, 생태·경관 보전지역은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또는 지형·지질이 특이하여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하는 지역 등으로 규정함

〈표 9.4.1-2〉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현황

생태보전지역별	생태보전지역별	면적(km²)	지정일자
환경부지정	계	249.146	-
	지리산	20.2	1989.12.29
	섬진강수달서식지	1.834	2001.12. 1
	고산봉붉은박쥐서식지	8.78	2002. 5. 1
	동강유역	80.426	2002. 8. 9(2019.12.31)
	왕피천유역	102.841	2005.10.14.(2013. 7.17)
	소황사구	0.121	2005.10.28
	하시동안인사구	0.234	2008.12.17
	청도운문산	26.395	2010. 9. 9
	거금도 적대봉	8.365	2011. 1. 7
시도지사지정	계	38.187	-
	한강밤섬	0.279	1999.08.10
	둔촌동 자연습지	0.03	2000.03.06.(2013.07.04.)
	방이동습지	0.059	2002.04.15.(2005.11.24)
	탄천	1.151	2002.04.15
	진관내동습지	0.017	2002.12.30
	암사동습지	0.27	2002.12.30.
	고덕동한강고수부지	0.32	2004.10.20.(2007.12.27)
	청계산원터골	0.146	2004.10.20
	헌인릉오리나무	0.057	2005.11.24
	남산	0.705	2006.07.27.(2007.12.27)
	불암산 삼유대	0.204	2006.07.27
	창덕궁 후원	0.441	2006.07.27
	봉산 팥배나무림	0.073	2007.12.27
	인왕산 자연경관	0.258	2007.12.27
	광양백운산	9.74	1993.04.26
	태화강	0.983	2008.12.24
	조종천상류명지산청계산	22.06	1993.09.01
	한강강서	0.283	2024.12.26
	성내천하류	0.07	2009.11.26
	관악산	0.748	2009.11.26
	소한계곡	0.104	2012.10.05
	백사실 계곡	0.133	2009.11.26
	석은덤계곡	0.02	2015.06.10
	장산습지	0.037	2017.08.09

자료 :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현황(2020.12월 기준),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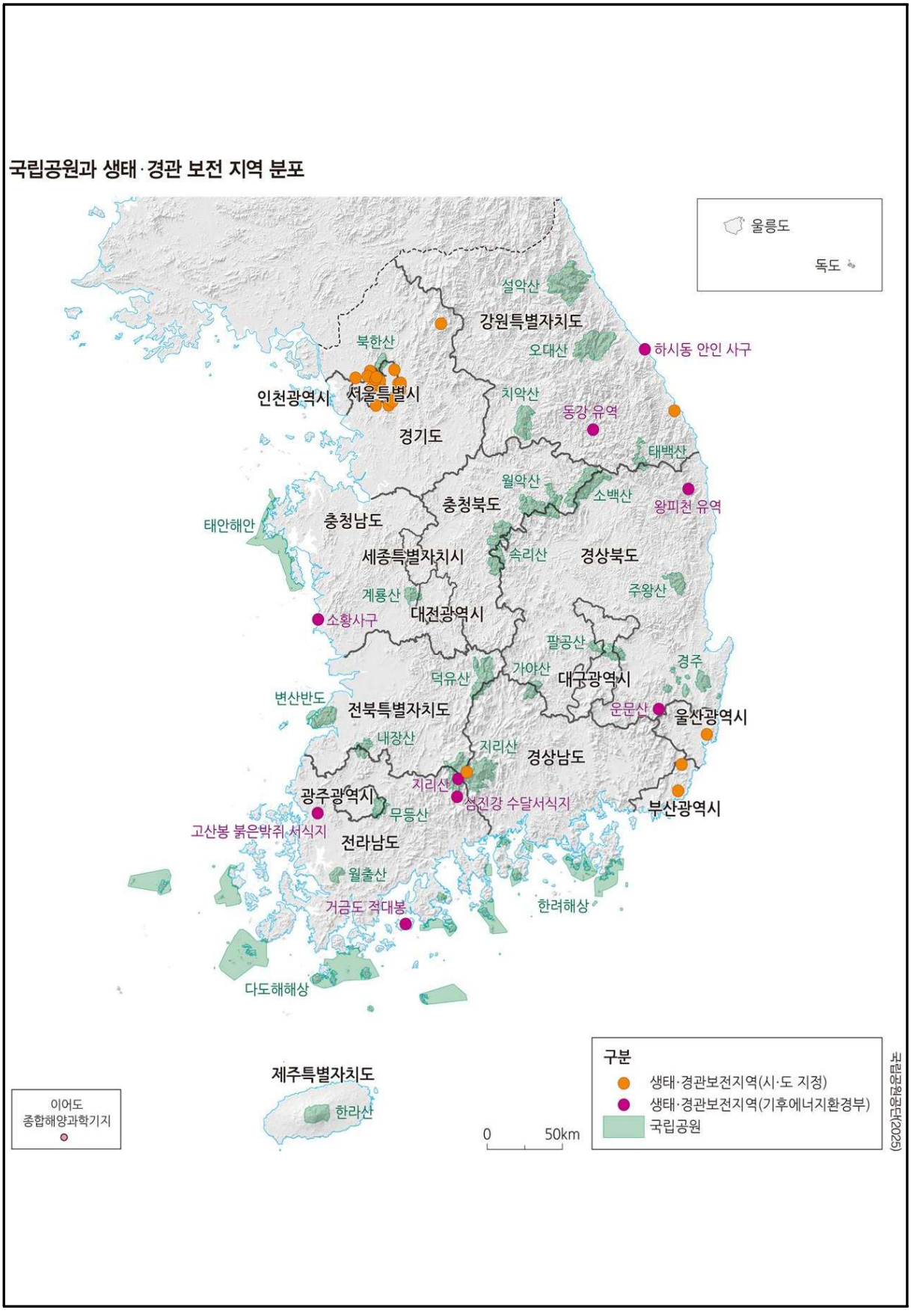
(나) 국립공원

○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총 22개소(6,888.395㎢)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18개의 산악형 국립공원, 3개의 해안형 국립공원 그리고 1개의 사적형 국립공원(경주)이 지정되어 있음

〈표 9.4.1-3〉 국립공원 지정현황

공원명	구 분	내 용
계		8,169.746 (해상 3,211.666)
국립공원	계	6,888.395 (해상 2,782.375)
	지리산	485.647
	경주	137.418
	계룡산	64.176
	한려해상	537.479(해상 414.750)
	설악산	400.027
	속리산	278.921
	한라산	153.444
	내장산	80.138
	가야산	76.792
	덕유산	228.919
	오대산	327.904
	주왕산	106.114
	태안해안	388.604(해상 364.788)
	다도해해상	2,276.209(해상 1,985.187)
	북한산	77.334
	치악산	176.567
	월악산	288.14
	소백산	321.264
	변산반도	154.957(해상 17.650)
	월출산	56.526
	무등산	75.721
	태백산	70.036

자료 : 환경통계연감, 환경통계포털,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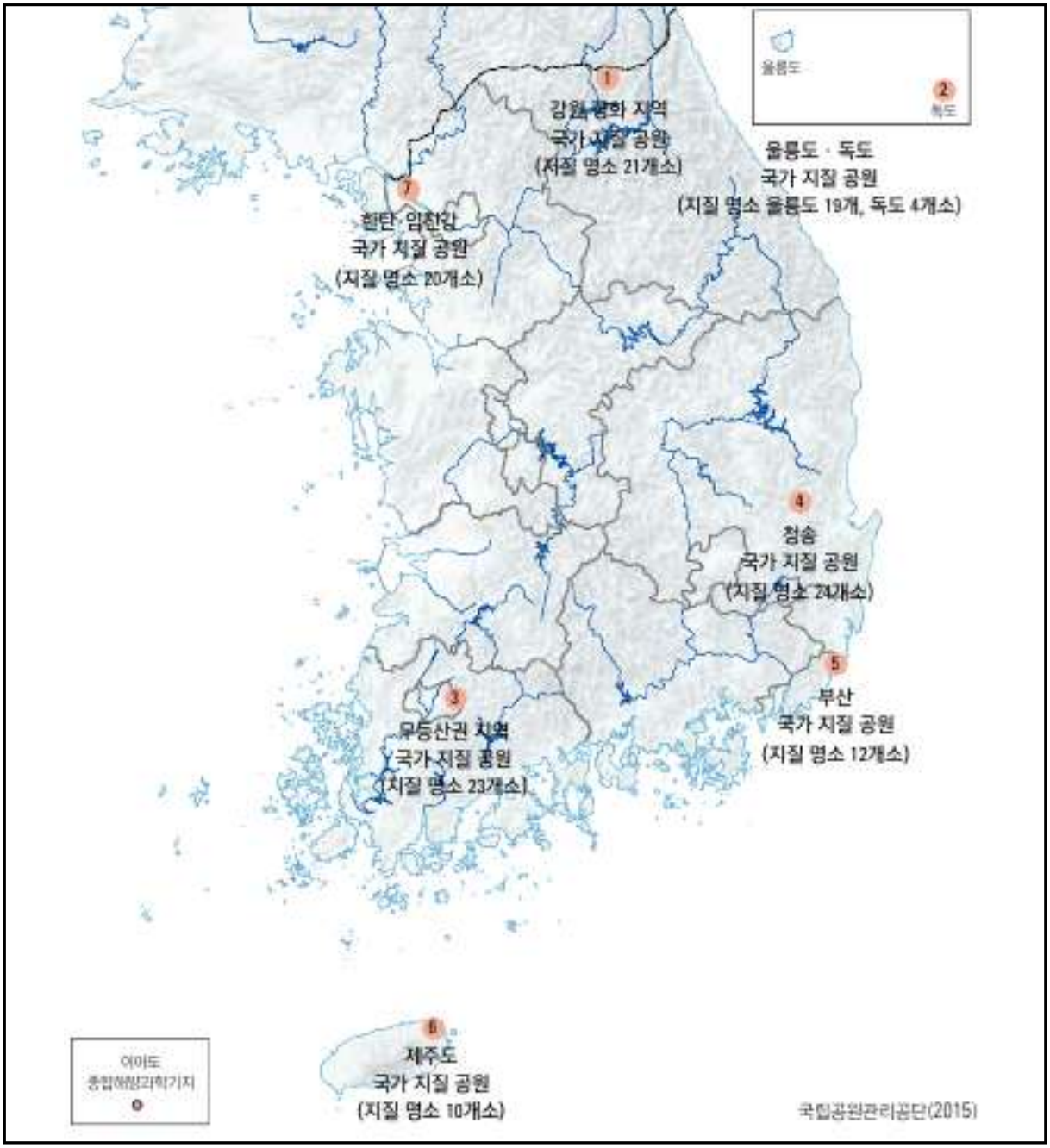


(그림 9.4.1-5)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국립공원 위치도

(3) 국가지질공원

○ 지질 및 지형적 중요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국가 및 세계에서 관리하고 있음

- 제주도는 다양한 화산 지형과 지질 자원을 지니고 있어 섬 전체가 국가 지질 공원이자 세계 지질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주도, 울릉도·독도, 부산, 강원평화지역, 청송, 무등산, 한탄·임진강 등 7곳의 국가 지질 공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지역이 인증을 추진 중에 있음



(그림 9.4.1-6) 국가 지질공원 위치도

(4) 습지보호지역

○ 습지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각종 오염 물질로부터 생태계를 보호해 주는 생태적 완충지대임

○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은 33개소(137.696㎢)이며, 해양수산부 지정 17개소(1,604.97㎢), 시·도지사 지정 7개소(8.254㎢)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표 9.4.1-4〉 습지보호지역 지정현황

생태보전 지역별	지역명	면적(㎢)	지정일자	람사등록일자
환경부 (기후에너지 환경부) 지정	소계	137.696	33개소	
	충주비내섬	0.92	2021.11.30	
	낙동강하구	37.718	1999. 8. 9	
	대암산 용늪	1.36	1999. 8. 9	('97.03.28 람사등록)
	우포늪	8.609	2023.11.13.(확대)	('98.03.02 람사등록)
	무제치늪	0.184	1999. 8. 9	
	물영아리오름	0.309	2000.12. 5	('06.10.18 람사등록)
	화엄늪	0.124	2002. 2. 1	
	두웅습지	0.067	2002.11. 1	('07.12.20 람사등록)
	신불산 고산습지	0.308	2004. 2.20	
	담양 하천습지	0.981	2004. 7. 8	
	신안 장도 산지습지	0.09	2004. 8.31	('05.03.03 람사등록)
	한강하구 습지	60.668	2006. 4.17	
	재약산 고산습지	0.587	2006.12.28	
	제주1100고지습지	0.126	2009.10. 1	('09.10.12 람사등록)
	제주물장오리오름습지	0.61	2009.10. 1	('08.10.13 람사등록)
	제주 동백동산	0.59	2009.10. 1	('11.03.14 람사등록)
	고창 운곡습지	1.93	2011. 3.14	('11.04.07 람사등록)
	상주 공검지	0.264	2011. 6.29	
	영월 한반도습지	2.772	2012. 1.13	('15.05.13 람사등록)
	정읍 월영습지	0.375	2014. 7.24	
	제주숨은물뱅듸	1.175	2015. 7. 1	('15.05.13 람사등록)
	순천동천하구	5.656	2015.12.22	
	섬진강침실습지	2.037	2016.11. 7	
	문경 돌리네	0.494	2017. 6.15	
	김해 화포천	1.244	2022. 8.12(확대)	
	고창인천강하구	0.722	2018.10.23	
	광주광역시 장록	2.735	2022. 8.12(확대)	
	철원 용양보	0.519	2020.12. 8	
	경남고성마동호	1.079	2022. 2. 3	
	순천와룡산지습지	0.899	2022.12.30	
	대전 갑천	0.901	2023. 6. 5	
	철원 이길리	1.39	2023.12.29	
	영양 장구메기	0.045	2024. 9.10	

〈표 계속〉 습지보호지역 지정현황

생태보전 지역별	지역명	면적(㎢)	지정일자	람사등록일자
해양수산부 지정	소계	1,604.97	17개소	
	화성매향리갯벌	14.08	2021. 7.20	
	무안갯벌	42	2001.12.28	('08.01.14 람사등록)
	진도갯벌	1.44	2002.12.28	
	순천만갯벌	28	2003.12.31	('06.01.20 람사등록)
	보성·벌교 갯벌	33.92	2020.12.31(확대)	('06.01.20 람사등록)
	옹진 장봉도 갯벌	68.4	2003.12.31	
	부안 줄포만 갯벌	4.9	2006.12.15	('10.02.01 람사등록)
	고창갯벌	64.66	2018. 9. 3(확대)	('10.02.01 람사등록)
	서천갯벌	68.09	2018. 9. 3(확대)	('09.12.02 람사등록)
	신안갯벌	1,100.86	2018. 9. 3	(증도:'11.07.29 람사등록)
	봉암갯벌	0.1	2011.12.16	
	시흥갯벌	0.71	2012. 2.17	
	대부도갯벌	4.53	2017. 3.22	
해양수산부 지정	고흥갯벌	59.43	2022.12.29	
	사천광포만	3.46	2023.10.23	
	제주 오조리	0.24	2023.12.21	
	여수 갯벌	38.81	2024. 7.30	
시·도지사 지정	소계	8.254	7개소	
	대구 달성하천습지	0.178	2007. 5.25	
	대청호 추동습지	0.346	2008.12.26	
	송도갯벌	6.11	2009.12.31	('14.7.10 람사등록)
	경포호·가시연습지	1.314	2016.11.15	
	순포호	0.133	2016.11.15	
	쌍호	0.139	2016.11.15	
	가평리습지	0.034	2016.11.15	

자료 : 환경통계연감, 환경통계포털,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9.4.2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가. 국내 관광 수요

○ 숙박관광은 코로나19 직전 2019년 1억 6,238만 명에서 2024년 1억 1,646만 명으로 약 28% 감소하였고, 2025년에도 1억 2,413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크게 하회

- 분석 모형은 이러한 구조적인 감소 패턴을 반영하여 2031년 숙박을 1억 1,597만 명으로 예측하였으며, 실질총생산을 변수로 사용하여 실질소득 성장에 따른 완만한 회복을 모형에 포함하였음

- 국민여행조사 실측치 자체가 2019년 수준을 크게 하회하는 상태에서 반등하는 패턴이 없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여타의 분석 기법을 적용하더라도 국내 숙박 수요가 2019년 수준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산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특히 습관지속 모형은 과거 유량에 존재하는 상승 추세를 예측으로 이어가는 구조인데, 국내 숙박관광은 코로나19 직후 크게 하락한 다음 유사한 수준에서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는 정체를 보여 상승 동력이 학습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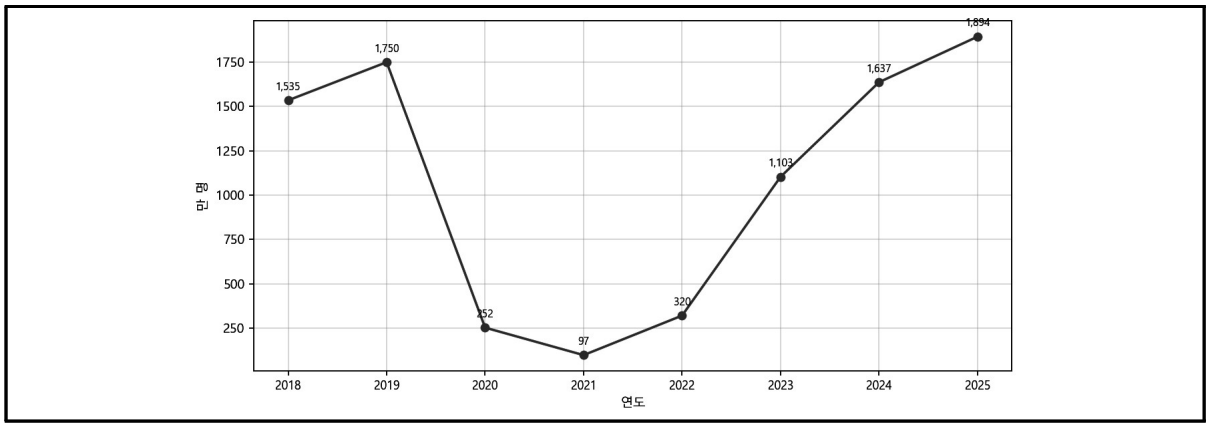
◦ 당일관광은 근거리 중심 여행의 확대에 힘입어 2024년 1억 7,537만 명에서 2031년 2억 2,301만 명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음

◦ 일수 기준으로는 2031년 국내 숙박 약 2.72억 일, 국내 당일 약 2.23억 일, 외국인 약 2.02억 일 수준으로 분석되었음

나. 외래 관광 수요

◦ 외래관광은 2025년 1,894만 명에서 2031년 3,464만 명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전망

- 이러한 전망은 최근의 가파른 실측 회복세에 기초하며, 입국자는 2021년 97만 명에서 2025년 1,894만 명으로 4년 만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상회하였음
- 연평균 성장률 9.5%는 기존 전망의 6.55% 가정을 상회하며, 방한 관광 시장의 회복 속도가 종전 예측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반영하였음



(그림 9.4.2-1) 외래관광 입국자 실측 추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표 9.4.2-1〉 국내외 관광수요 예측 결과 **(단위: 만 명)**

구분		2024년(실측)	2027년	2031년
외래 관광		1,637	2,396	3,464
국내 관광	국내 숙박	11,646	10,906	11,597
	국내 당일	17,537	19,374	22,301

다. 지역별 관광수요

(1) 시도별 배분 방식

○ 내국인은 기종점 회귀모형으로 산출한 시도별 연도 합을 2024년 방문분포로 배분하여 시도별 수요를 산출하며, 시도별 합계는 국민여행조사의 연도별 전국 총량과 일치하도록 정규화하여 지역 수요의 합이 전국 총량을 넘지 않도록 통제

○ 외국인은 방한 외래객 앙상블 예측치에 외래관광객조사 2025의 시도별 방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외래관광객 1인이 평균 약 1.35개 시도를 방문하므로 시도별 방문 합계는 입국자 수의 약 1.35배로 추정

- 외국인 관광은 서울에 크게 집중되어 2031년 서울의 외국인 수요가 과반을 차지하며, 부산과 제주가 뒤를 이어 크게 나타남
- 국내 숙박관광은 강원, 경남, 전남, 충남 등 체류형 관광지에서 높게 나타나고, 국내 당일관광은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배후 지역에서 크게 나타났음
- 제주는 외래와 숙박 수요가 모두 크고 당일 수요가 작아 대표적 체류형 목적지의 특성을 보이며, 강원은 국내 숙박 수요가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났음

〈표 9.4.2-2〉 지역별 관광 수요 예측 결과 **(단위 : 만 명)**

시도	외래('27)	국내('27)		외래('31)	국내('31)	
		숙박('27)	당일('27)		숙박('31)	당일('31)
서울	1,840.5	303	1,283	2,660.3	322	1,477
부산	377.2	684	683	545.2	728	786
대구	29.2	168	304	42.2	179	350
인천	145.7	260	938	210.5	276	1,080
광주	13.7	101	94	19.8	107	109
대전	22.6	186	316	32.7	198	363
울산	29.6	144	336	42.9	153	387
세종	6.4	53	177	9.3	56	203
경기	267.6	863	5,428	386.8	918	6,248
강원	96.4	1,876	1,326	139.3	1,995	1,527
충북	15.6	506	811	22.6	538	934
충남	10.3	947	1,575	14.9	1,007	1,813
전북	31.1	679	1,083	44.9	722	1,247
전남	14.9	1,075	1,533	21.5	1,143	1,765
경북	55.7	960	1,659	80.5	1,020	1,909
경남	47.8	1,124	1,729	69.1	1,195	1,991
제주	231.9	976	98	335.2	1,038	112

라. 기존 제4차 기본계획 관광수요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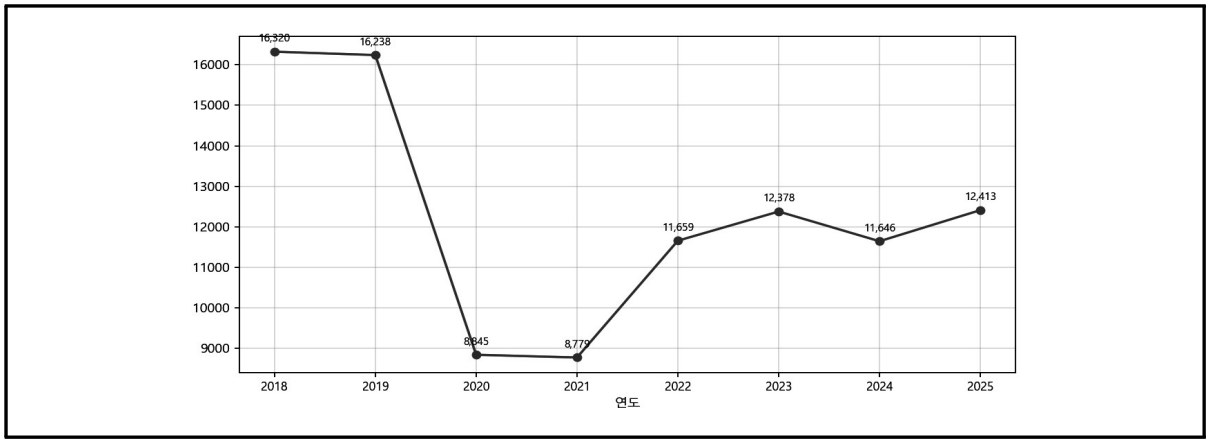
(1) 국내 숙박관광의 실측 감소 반영

○ 수정계획의 2031년 관광수요(37,362만 명)는 기존 확정본(46,735만 명)의 약 80% 수준이며, 두 예측의 격차는 대부분 국내 숙박관광에서 발생

○ 국민여행조사에서 국내 숙박관광은 코로나19 이후 급감하였고 현재까지 상술한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2019년 1억 6,238만 명에서 2020년 8,845만 명으로 급감한 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억 1,600만 명에서 1억 2,400만 명 수준으로 등락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과는 상당한 수준의 괴리가 존재함

- 기존 예측보다 국내 관광객이 크게 감소한 것은 방법론의 차이가 아니라 이러한 추세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임



(그림 9.4.2-2) 국내 숙박관광 여행횟수 실측 추이(2018년부터 2025년까지)

○ 기본계획에서는 2023년 국내관광의 2019년 수준 회복을 가정하였으나, 이후 실측치는 국내 숙박관광이 그러한 가정과는 다른 저수준 경로로 이동하였음을 보여줌

- 실제로 숙박 횟수와 1회 평균 숙박일수가 함께 감소한 구조적 하락이 관측됨

○ 반면 외국인 관광과 국내 당일관광은 기존 예측을 상회하며, 특히 외국인 관광은 최근의 빠른 방한 회복세, 당일관광은 근거리 중심 여행의 확대를 분석에 반영하였음

〈표 9.4.2-3〉 2031년 관광수요 비교 **(단위: 만 명, %)**

구분		제4차 기본계획	제4차 수정계획	수정/기존
외래관광		2,694	3,464	128.6%
국내관광	국내 숙박	25,378	11,597	45.7%
	국내 당일	18,662	22,301	119.5%
계		46,735	37,362	79.9%

마. 공급분석

(1) 수요분석과 공급분석 분리

○ 빠른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에 힘입어 매년 국내관광이 크게 성장하였으나, 앞으로 총 인구가 감소할 전망인 만큼 과거 같은 최대공급능력의 확충보다는 관광시설의 매력도, 수용태세 향상 등 전반적인 관광시설의 질적 수준 제고 중요

- 향후 총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공급능력의 양적 증가가 아닌 질적 향상에 목표를 두고 전체적인 관광공급을 관리할 필요성 제기

○ 기존 관광수급 분석은 원단위 개념을 차용하여 시설의 유형에 따라 별도의 이용 가능한 인원을 설정하고 이를 공급능력(명)으로 환산하는 방식 적용

- 이와 같은 분석은 원단위 산정과 관련한 선행연구(김향자.김현주, 2003; 문화관광부, 2007)의 후속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나, 국제적으로 권장되는 관광공급 통계 가이드라인과의 불일치(UNWTO, 2000; European Union, 2014; 정광민.강현수.양지훈, 2020) 등 여러 가지 한계점 노출

(2) 공급측면에서 관광시설들 간의 편차를 고려한 공급방식 적용

○ 관광공급의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적정수용력에서 관광시설당 기대 사용 인원' 제공으로 공급분석 기준과 방향 설정

- 제1~3차 관광개발기본계획에서는 '적정수용력 = 공급능력'이라는 가정 하에 수급분석을 추진하였으나 적정수용력과 공급능력은 불일치하는 개념(공급능력 〉 적정수용력)이고 과학적 근거 없이 면적당 수용력을 시설별로 구분하여 산정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에서는 실제 관광지점의 방문인원 데이터에 근거, 민간·지역의 자율적인 추가 관광지점의 공급 증가에 따른 기대 사용 인원(명) 제시

○ 3,281개(기존 1,249개) 관광지점의 2018년부터 2025년 기간 동안 중 (코로나 기간 제외) 5년 동안의 총 관광객 분포를 분석하여, 주요 관광시설을 신규 관광지점으로 공급 시 기대 인원 도출

- 관광시설이나 지점을 면적, 수용능력으로 입장객을 나누어 분석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정보를 추가하여 가공한 경우에도 관광지점 사이의 입장객이 크게 상이하다는 사실은 통계적으로 불변이며 통계는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를 사용

○ 모든 시설 유형에서 평균과 중위수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이는 개별시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상이함을 나타냄과 동시에 기존의 총량(=평균×입장객) 지표로 관광공급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

- 도출된 결과를 고려할 때 평균과 중위수가 큰 차이를 나타내는 유형이 존재하여 다수의 관광객은 일부 인기시설에 집중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

(3) 정확한 공급분석 추정을 위해 다양한 조사와 정보의 결합 필요

ㅇ과거 수급분석은 공급(supply)과 수용능력(capacity)에 대하여 명확한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어, 차후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개별 지역의 관광공급 통계 또는 지표에 대한 정비 및 신규 통계.데이터 셋(dataset) 작성 필요

ㅇ장기적으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광공급시설 정보와 지리적 정보를 결합한 관광개발 미시 데이터를 개발할 필요가 있고, 적어도 시·군·구 수준에서 관광공급을 가늠할 수 있는 신규 통계 또는 데이터 셋 작성에 대한 접근 필요

- 각 지자체에서 관광위성계정(tourism satellite account)을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관광공급과 관련한 분석을 산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도로 시·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 시·군·구 수준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교통 등 외부 데이터와 연계하는 방안 마련
- 미래의 공급분석은 관련 데이터를 지리 정보와 결합하여 시각화하는 방법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관광공급 시설에 대한 효율성 분석이나 비인기 시설에 대한 원인 진단과 같은 분석도 같이 수행 필요
- 관광공급에 대한 지표는 인원보다 화폐 단위로 측정되는 방식이 효율성 제고나 지역별 관광시장 규모산정 등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

〈표 9.4.2-4〉 시설 유형별 입장객 통계 (단위: 만 명, %)

시설 유형	주요 관광지점 소분류	제4차 기본계획		제4차 수정계획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관광지구	관광단지(C0101), 지정관광지(C0103), 유원지(C0803), 해수욕장(C0804)	463,838	115,446	341,790	121,610
테마공원	동물원(C0305), 수영장(C0404), 테마공원(Thema Park)(C0802)	560,578	207,858	432,949	148,832
전시체험시설	박물관(국립·사립)(C0302), 미술관(C0303), 전시관(장)(C0308), 국제회의장(C0309), 수족관(C0316), 문학/영화/드라마 배경지(C0317), 학습·체험시설(C0817)	189,755	55,825	125,928	39,914
자연생태체험시설	숲·수림(B0308), 갯벌(B0407), 식물원(C0306), 수목원(C0807), 테마길(C0813), 오솔길·동산·산책로(B0311)	271,286	111,096	214,374	96,908
자연휴양시설	자연휴양림(C0806), 야영·캠핑장(C0506), 자동차야영장(C0507)	80,228	46,183	69,018	38,558
농산어촌체험시설	농촌체험마을(A0405), 관광농원(C0808), 농·어촌휴양지(C0809), 부두(C0703), 유람선선착장(C0708)	192,375	31,187	90,541	15,166
리조트시설	온천지구(C0805), 골프장(C0406), 스키장(C0410)	163,640	113,275	135,021	102,325
레저스포츠시설	체육시설기타(C0401), 수영장(C0404), 자동차경주장(C0412), 요트장(C0413), 레프팅장(C0415), 낚시터(C0419), 관광승마장(C0423), 레일바이크(C0424)	192,482	88,204	136,060	48,759
조망시설	전망대·조망시설(B0503)	341,724	125,164	315,730	331,465
생활여가시설	체육관(C0402), 운동장(C0403), 수련장(C0812)	86,149	25,951	87,021	32,780
공원시설	공원기타(C0201), 도시공원(C0205), 야외조각장(C0304)	391,075	165,529	174,292	95,907
문화예술시설	출생지·생가터(A0103), 마을 기타(A0401), 전통문화마을(A0403), 도예촌·예술촌(A0404), 민속촌(B0810), 공연장·소극장(C0310), 문화예술회관(C0311), 문화원(C0312)	233,833	74,224	100,877	42,782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의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주 1) 코로나 기간(2020~2022년)은 분석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주 2) 기존 농산어촌체험시설에서 나루터(C0709), 관광목장(C0819) 제외됨
주 3) 기존 조망시설에서 케이블카(B0707), 출렁다리 제외됨
주 4) 기존 문화예술시설에서 마을기타(A0304) 제외됨

9.4.3 환경용량의 지속성

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관광부문 실천

(1)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나 시간 부족

◦ 1992년 리우 정상회의에서 197개국은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해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할 것을 서명하였고, 우리나라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선포한 후 관광분야에서 생태관광, 문화생태탐방로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이 추진됨

◦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는 새로운 기후체제로서 신기후체제(new climate regime)를 채택하였으며 국가들이 스스로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함

◦ 우리나라 기준은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기간은 촉박한 상황임. 탄소중립 달성까지 예상 소요 기간은 EU는 60년, 일본은 37년, 한국은 32년, 중국은 30년임

◦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하여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음. 신에너지는 연료전지, 수소, 석탄액화·가스화 등이며,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등으로 종류가 다양하고 전문화되어 있음

◦ 2019년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은 총 12만 1천여 곳에 분포되어 있으며, 풍력 발전시설은 98개소,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은 25개소에 이르고 있음

◦ 에너지 산업융복합 단지는 2019년 2곳(새만금, 광주·전남), 2020년 4곳(경남, 경북, 부산·울산, 충북)이 지정되었으며, 에너지 특화기업, 연구소, 대학, 지원 기관을 비롯하여 에너지 공기업, 에너지 공급시설(발전소 등), 실증·시험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에너지산업 및 연관 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는 클러스터임

◦ 저탄소화를 지향하는 관광분야의 노력 요구

- 관광분야는 숙박, 교통, 관광시설 이용 등으로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분야로 인식되고 있으며, 자연자원이 주요 대상으로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 관광(단)지는 많은 수의 관광객들이 관광활동을 하고 숙박시설 등이 밀집된 체류공간인 동시에 관광개발 분야에서 상징적 역할을 하고 있어 해당 공간의 관리가 중요함

◦ 2010년 기준으로 관광산업은 전 세계 CO2 배출량 중 3.7~5.4% 차지하여 이 중 교통 75%, 숙박 21%, 관광 4% 순임(문체부, 2010). 그 이후 저가 항공사 활성화 및 관광객 증가로 2017년에는 관광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약 8%로 추산되고 있음

◦ 정부는 관광부문의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2009년 '녹색관광과'를 신설하였고, 2011년에는 관광 분야의 '탄소배출 절감 협의체'를 구성하였음

○ 이후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은 지속가능 관광으로 확대되었고 저탄소 및 친환경 관련 연구의 후속적 연구들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한 핵심과제 추진 방안(2014)',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정책방안 및 신규과제 발굴(2020)' 등이 진행됨

○ 지역의 탄소 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지원 필요

- 관광지 제도는 대표적인 법적 근거를 갖춘 관광개발 방식으로 관광지는 1969년 최초 지정이 이루어진 후 2026년 5월 기준 228개소(국토 면적 대비 0.12%), 관광단지는 1971년 최초 지정이 이루어진 후 2026년 5월 기준 59개소(국토 면적 대비 0.16%)가 지정되어 있음
- 1970년대 후반부터 관광(단)지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요 관광시설 노후화 및 콘텐츠 부족 등으로 관광객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2020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서 제시된 비전은 '적응적(Adaptive) 감축에서 능동적(Proactive) 대응으로: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 동시 달성'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러한 비전은 사회적·지역적으로 탄소 중립이 주요 의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 정책방향 중 지역과 연계성이 높은 '공정' 부문의 추진 과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으로 취약 산업·계층 보호', '지역중심의 탄소 중립 실현', '탄소 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임

○ 관광 분야는 영세한 사업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여건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긍정적인 사회적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기 쉽지 않은 취약 분야가 존재하고 있음

○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술이나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체들은 타 업체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는 등 단기적으로는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취약 관광산업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시기임

(2) 추진 과제

(가)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관광자원 개발

○ 관광개발사업 추진 시 탄소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

-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하여 관광(단)지를 개발하거나 관광숙박시설, 테마파크, 컨벤션 시설과 같이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고 규모가 큰 관광시설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추진 과정에서 탄소 저감을 실천할 수 있는 목표 설정을 의무화함
-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광개발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야 하며, 탄소발자국 등과 같이 사용자들이 이해가 쉬운 계량적 지표를 발굴하여 이를 전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탄소발자국’은 환경성적표지 환경영향 범주 중 하나로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 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온실가스)가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나타낸 지표임(기후변화홍보포털, 2021)

- 시공 단계의 범위는 관광시설 조성을 위하여 자재를 생산하고 시공 현장으로 운송하며, 시공 현장에서 장비를 운영 및 자재를 투입하고, 현장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임

• 시공 단계에서는 자재 투입과 장비 사용과 관련하여 작업별, 공종별로 세분화하여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를 확보해야 함

- 관광시설 조성 시 완공 목표 연도까지 지켜야 하는 탄소 감축 목표를 탄소 배출량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설정하고 관광개발 주체들은 이를 실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인력 또는 추진 체계를 마련하며, 정부는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함

- 탄소 감축 목표는 관광개발사업 추진 사업비와 기간, 관광사업체별로 규모와 여건, 특성 등이 상이한 것을 고려하여 정부는 다양한 관광 및 유사 기업체들이 준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ㅇ탄소 중립 평가 지표 개발 및 개발사업 평가시 적용

-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이 증가하고 평가 및 모니터링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 관광개발사업 평가 지표에 탄소 중립과 관련된 항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지역의 관광개발사업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 항목은 일반적으로 ‘사업기획성’, ‘집행효율성’, ‘운영가능성’ 3개 대항목과 ‘사전 점검요인’, ‘사업특화성’, ‘사업진척률’, ‘추진체계의 적절성’, ‘관리·운영의 적절성’, ‘지속발전 가능성’의 6개 평가 지표로 구성됨

- 탄소 중립 항목은 연계성이 가장 높은 ‘지속발전 가능성’에 포함하여 환경적 부문에 탄소 저감과 관련된 평가 항목을 구체화하여 평가가 진행되도록 함. 평가 항목은 ‘에너지’, ‘수자원’, ‘자원재활용’, ‘쓰레기’ 등의 항목으로 구성함

- 탄소 중립과 관련된 내용을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위원으로 중앙부처, 해당 지자체, 관련 전문가는 물론 시민단체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며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함

ㅇ신재생 에너지 단지의 관광자원화

-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태양광과 풍력단지를 중심으로 성공한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한국형 관광자원화 모델을 추진함. 주요 대상은 유아부터 청소년까지를 대상으로 교육관광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조성함

- 지자체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집적화단지 제도가 시행('20.11)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자원의 여건과 위치를 고려하여 신재생 에너지 단지의 입지를 발굴하고 단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태양열) 태양열 발전소는 전국에 가장 많은 수가 분포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소유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산업관광의 방식으로 접근함. 학생들을 대상으로 태양열이 생활에 활용되는 범위 등을 설명하고 에너지 발전시설 내부에 체험공간을 마련함
- (풍력) 풍력단지는 육상(산) 또는 해상(해안)에 위치한 경우 모두 관광객 선호도가 높으며, 덴마크, 영국 등 해외에서도 관광자원화의 성공모델로 인식됨. 풍력시설은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기 때문에 이를 홍보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관광코스를 개발함
- 에너지 산업융복합 단지는 대규모로 에너지 특화기업, 연구소, 대학을 비롯하여 에너지 공기업, 에너지 공급시설(발전소 등), 실증·시험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학술 기능과 체험 기능을 도입하여 활용함

(나) 저탄소화를 지향하는 관광(단)지 개발 및 운영

ㅇ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 시 제로 에너지 시설 도입 의무화

- 장기간 동안 대규모 시설이 조성되는 관광(단)지의 경우 계획 수립 및 승인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에 대해 친환경적인 공법이나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여 탄소 발생(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함
- 관광지 계획 수립 시 필수적인 도입시설에 해당하는 공공편익시설(화장실, 주차장, 관광안내소 등)에서 태양열 등 재생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물재활용 등의 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 규모가 큰 관광단지는 공공편익시설은 물론 숙박시설과 운동·오락시설 또는 휴양·문화시설이 필수 도입시설로 포함되기 때문에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 스키장, 해수욕장 등과 같이 많은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시설은 에너지를 자체 발생시킬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시설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도입함
  - 오스트리아 쉬타트 할레(Stadthalle) 호텔은 세계 최초의 제로에너지 호텔로 호텔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풍력과 태양광, 지하수열을 이용하여 조달하고 있으며 옥상 정원수와 화장실 용수는 빗물을 재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관광지 조성이 완료된 후에도 관광객들과 직원들이 관광지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배출 행동 강령을 제시하며 여행 시 저탄소 교통수단 이용, 관광지 내 쓰레기 발생 및 투기 최소화 등 탄소 저감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권역계획 지침에 탄소중립 목표 설정 의무화

-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관광개발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고 있으며, 권역계획은 지침에 의해 수립되는 과정이 진행됨
-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서 탄소 중립을 빠르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권역계획 지침에 관광지 및 관광단지 계획 수립 시 탄소 중립 목표 설정 의무화
-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권역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자들은 물론 이를 시행하는 관계자들도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장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2050 탄소 중립 시대에 대응할 수 있음

○ 관광(단)지 내외부 교통수단을 친환경 모빌리티로 전환

- 관광지가 도심과 이격되어 있고 자가용 이용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관광(단)지 내·외부에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탄소 발생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 관광(단)지 내·외부를 이동하는 관광객들의 교통수단을 전기, 수소 등의 이용수단으로 전환함
- 대규모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단)지의 숙박시설, 관광시설 골프장 등에서는 이동을 위한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내외부 이동시설의 현황을 파악하여 연도별 목표를 설정함. 우리나라는 셔틀버스, 카트 등이며 해외는 트램이 일반적임
- 관광(단)지 직원들의 교통수단은 물론 관리운영을 위한 이동 시설(카트 등) 등을 모두 전기를 사용하는 친환경 모빌리티 시설로 전환하여 해당 관광지 내에서는 탄소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역 주도의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 지원

○ 지자체를 중심으로 노후 관광지 시설을 녹색관광시설로 전환

- 노후 관광지·관광단지 내부의 관광시설 및 관광편의시설들을 탄소 저감과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고 에너지 재생과 효율화를 추진하는 녹색 리모델링을 통해 녹색시설로 전환함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자체는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 리모델링”)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1970년대부터 지정되기 시작한 관광(단)지가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으며 준공·조성이 된 지 10년 이상 된 시설과 관광휴게시설 등 건축물 외에도 실내외를 포괄하는 지역 노후 관광지 일원의 인프라도 심사를 거쳐 지원을 통해 녹색시설로 전환을 유도함

○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우수 관광개발 모델 발굴

- 지자체를 대상으로 탄소 중립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관광지나 관광시설을 선정하고 탄소 배출시설 특성을 분석하여 탄소 저감형 우수 관광개발 모델을 발굴함
- 관광시설을 건물용도, 연면적, 배출량, 건물 구조 등 대상 시설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탄소중립 모델 적용을 위한 표준 유형을 도출함. 각 유형은 대표성을 가져야 하며 선정에 대한 정확한 논거가 필요함
-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해서 관광개발 단계에 따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조성, 운영의 단계로 구분하고 탄소 발생 상황을 매뉴얼화하여 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우수 모델의 벤치마킹 및 교육을 통하여 관광개발이 진행되면서 관광개발 전 과정에서 각 단계에 참여하는 관계자, 사업자, 근로자들이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탄소 중립 전환에 따른 지역관광 취약분야 보호정책 추진

- 탄소 중립 실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대규모 사업장 보다는 소규모 영세 상인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됨.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탄소저감 시설을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음
- 지역의 관광사업체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 상인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이나 여행업과 같이 탄소 저감을 위한 전환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체들이 발생할 수 있음
- 탄소 중립에 어려운 업종은 일시적으로 세금을 감면하고 탄소 저감을 위한 방안들을 공유하고 취약분야에서 점진적으로 탄소 적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나. 환경보전 계획(안)

○ 관광개발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수립하는 것으로 현재 단계에서 개별 관광시설의 입지 등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추진 등 개략적인 목표 제시하는 것으로 관광(단)지, 관광시설 등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계획을 작성·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향후 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이 검토되고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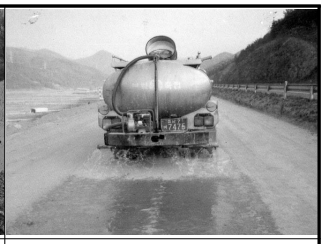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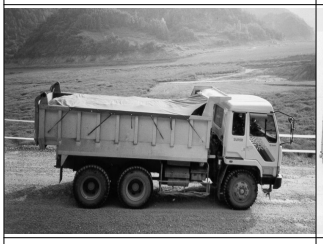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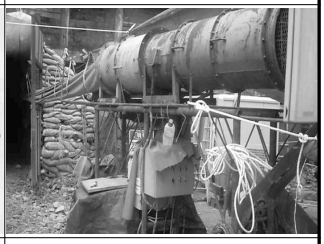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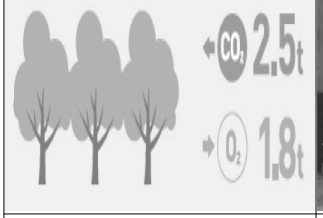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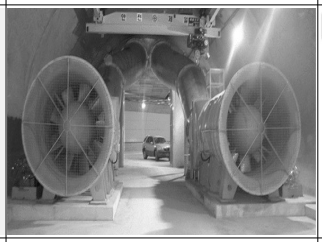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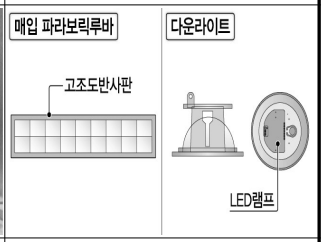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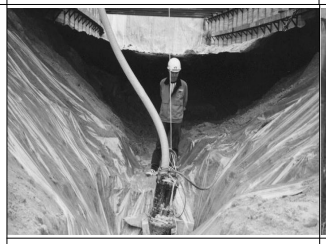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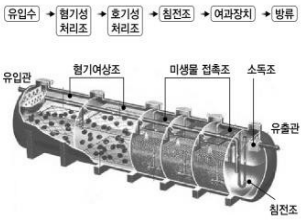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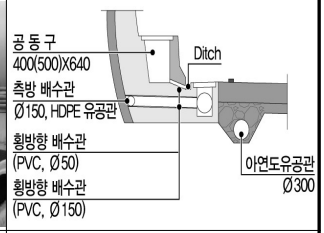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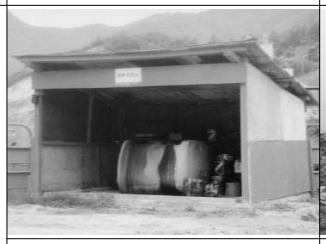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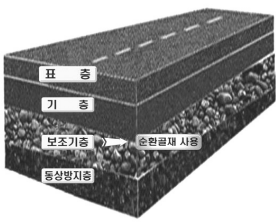
○ 이에, 친환경적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개별 관광(단)지 등 공급을 위한 개발계획시 검토될 수 있는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 계획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음

(1)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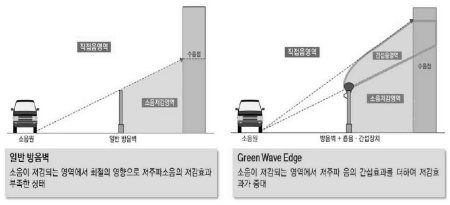
〈표 9.4.3-1〉 주요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계획

분 야	주요 환경영향	환경보전계획	관련법령
자연생태환경	ㅇ식물상 및 식생변화, 주요종과 개체에 대한 영향, 훼손수목 발생 ㅇ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의 서식환경 변화 ㅇ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의 서식환경 변화 ㅇ법정보호종의 서식환경 영향	ㅇ식물상 및 식생 - 훼손수목 처리 : 양호한 수목 이식 및 식재, 그 외 수목은 재활용 - 조경녹지 계획 : 대기 정화수종 식재 - 법면발생지역 : 조기 사면녹화 실시로 안정화 유도 ㅇ육상 동물상 - 저소음·저진동 장비 투입, 주요 번식기 투입 장비 최소화, 차량 속도 제한, 야간공사 지양 등 저감대책 이행 ㅇ육수 동물상 - 우기시 공사 지양, 가배수로, 침사지 설치, 운영시 발생하는 오·폐수는 인근 공장 자가수질오염방지시설 연계처리 및 저류시설 운영 ㅇ육수 동물상 - 법정보호종 : 저소음, 저진동 장비 투입, 장비의 속도제한, 야간 공사 지양, 생태통로 설치, 이식계획 수립	자연환경보전법
대기환경	ㅇ장비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ㅇ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ㅇ교통량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ㅇ세륜·세차시설 설치 ㅇ비산방진망 설치 ㅇ살수차 운영 ㅇ차량덮개 설치 ㅇ집진기 등 저감시설 설치	대기환경보전법
수환경	ㅇ대상수역의 수질오염 변화 ㅇ대상수역의 유황변화 ㅇ지하수 환경변화 ㅇ수자원 이용 상황에 영향 ㅇ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과의 부합성	ㅇ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ㅇ폐공처리 ㅇ폐수처리시설 등 저감시설 설치	물환경보전법
토지환경	ㅇ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변화 ㅇ토양환경 변화 ㅇ대규모 절·성토 사면 발생	ㅇ공원·녹지계획, 생태면적 확보 ㅇ토양 환경 모니터링 ㅇ절·성토 사면 최소화 및 환경친화적인 녹화	토양환경보전법
생활환경	ㅇ지장물 등에 의한 폐기물 발생 ㅇ소음 및 진동발생 ㅇ조망경관 침해	ㅇ건설폐기물 적정 처리 ㅇ폐유보관소 설치 ㅇ방음벽 설치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표 9.4.3-2〉 주요 저감대책(예시)

<table>
<tr><td rowspan="6">대기환경</td><td rowspan="3">공사시</td><td></td><td></td><td></td></tr>
<tr><td>세륜·세차시설 설치</td><td>비산방진망 설치</td><td>살수차 운영</td></tr>
<tr><td></td><td></td><td></td></tr>
<tr><td>차량덮개 설치</td><td>집진시설 운영</td><td>분무시설 운영</td></tr>
<tr><td rowspan="2">운영시</td><td></td><td></td><td></td></tr>
<tr><td>대기정화수종 식재</td><td>환기설비 운영</td><td>LED 등기구 설치</td></tr>
<tr><td>수환경</td><td>공사시</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가배수로 설치</td><td>폐공처리</td><td>폐수처리시설 설치</td></tr>
<tr><td rowspan="2">수환경</td><td rowspan="2">운영시</td><td></td><td></td><td></td></tr>
<tr><td>오수처리시설 설치</td><td>터널유출수 및 세척수 관리</td><td>지하수 분리배수</td></tr>
<tr><td colspan="2" rowspan="2">폐기물</td><td></td><td></td><td></td></tr>
<tr><td>폐유보관소 설치</td><td>건설폐기물 처리</td><td>순환골재 사용</td></tr>
</table>

〈표 계속〉 주요 저감대책(예시)

<table>
<tr><td rowspan="4">소음·진동</td><td>공사시</td><td></td><td></td><td></td></tr>
<tr><td></td><td>가설방음판넬 설치</td><td>저소음·저진동 매입공법</td><td>방음·방폭문 설치</td></tr>
<tr><td rowspan="2">운영시</td><td></td><td colspan="2">
</td></tr>
<tr><td>방음벽 설치</td><td colspan="2">감쇠기 설치</td></tr>
</table>

(2) 생태축, 환경보전지역에 미치는 영향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2027~2031)은 세부 관광(단)지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이 결정되지 않은 정책계획으로 생태축, 환경보전지역에 대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어 개괄적 분석을 통해 야생생물 이동로 단절에 따른 서식지 파편화, 생태축(산림축 및 수계축 등)의 단절 등의 영향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세부계획 수립시 반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환경보전지역 원칙 : 보전지역 회피 등 보전
-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 : 생태연못, 생태숲, 생태통로 설치 등

〈표 9.4.3-3〉 입지 검토(안)

구 분	근거법령	목 적	저촉여부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 수질보전	
수변구역	4대강법	○ 하천 물관리 및 수계보전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 환경기준을 유지 및 주민의 건강, 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 자연생태계 보전	
개발사업 등에 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	자연환경보전법	○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자연공원	자연공원법	○ 경관보전과 적정이용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법	○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또는 특이한 경관적 가치를 지닌 지역 가운데 습지보전법에 따라 보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 지정	
야생생물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지정관리	
특정도서 지정현황	특정도서법	○ 다양한 생태계 지형 또는 지질 등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현재와 장래의 국민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백두대간 보호지역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 백두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	
주요 철새서식지 현황	자연환경보전법	○ 생태계 보전	
전국 해안사구 및 석호현황	문화재보호법	○ 생태계 보전	
생태·자연도 등급 기준	자연환경보전법	○ 자연환경의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성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보전가치에 따라 1,2,3등급으로 구분	
야생생물 특별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하여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을 만들기 위함	

〈표 9.4.3-4〉 평가 기준(안)

검 토 기 준	검토결과
1) 자연환경의 보전	
가)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생태계 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지역 등 각종 보호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	
○생태자연도 1등급, 하천, 호소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거나 훼손의 가능성은 없는지 제시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 야생 동·식물의 서식 공간 확보에 문제점은 없는지 제시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조간대, 사구, 하구언, 갯벌 및 습지 등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	
나) 지형 및 생태축 보전	
○학술적·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제시	
○야생 동·식물의 주요 이동로가 되는 능선 및 계곡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우려되는지 제시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을 초래하는지 제시	
다)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높은 표고·급한 경사로 인한 과도한 지형 훼손 여부와 주변 지역과의 조화에 심대한 영향이 있는지 제시함	
○수려한 경관, 특색 있는 자연경관지역, 경관관련 보전 용도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	
○주요 조망점으로부터 심각한 경관 훼손이 우려되는지 제시	
○건축물, 구조물의 스카이라인이 산지 및 구릉지 등의 외부 스카이라인에 영향이 있는지 제시	
○랜드마크(대표·상징경관), 역사문화자원 등 경관자원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	
라) 수환경의 보전	
○각종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	
2) 생활환경의 안전성	
가) 환경기준 부합성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한 환경목표 설정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제시	
○환경오염이 심화 또는 예상되는 지역으로 추가 개발 시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에 어려움은 없는지 제시	
나)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등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공급가능성, 시기, 규모, 연계처리 등이 적정한지 제시	
다)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해당 계획의 자원,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순환되고 있는지 제시	
○토지이용계획이 환경 친화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제시	

제 10 장

종합평가 및 결론

제10장 종합평가 및 결론

10.1 정책계획의 적정성

10.1.1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구 분	내 용
국가 환경 정책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의 국토 생태용량 확대, 저탄소 전환, 생태계서비스 증진 방향과 관광개발사업 탄소 감축,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 생태관광 및 노후 관광시설 재생 방향 간 부합성 검토 ◦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의 고품질 환경서비스 확보, 생태계서비스 가치 확산 및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방향과의 부합성 검토 ◦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의 기후재난 예방, 기반시설 회복력 강화, 생태계 보전 방향과 관광시설 기후위험 대응 및 생태관광지 관리 방향 간 부합성 검토 ◦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2016~2025)의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혜택의 현명한 이용 및 지역협력 방향과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관리 방향 간 연계성 검토 ◦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의 건물·수송 부문 저탄소화, 지역 주도 전환 및 기후위기 적응 방향과 제로에너지 관광시설, 친환경 교통수단 전환 등의 연계성 검토
국제 환경 동향·협약·규범	◦ 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의 온실가스 감축·기후위기 대응 방향과 관광개발사업 탄소 감축 목표, 시설 저탄소화 및 관광교통 친환경 전환 방향 부합 ◦ 생물다양성협약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원칙과 생태관광지 보전, 자연공원의 환경친화적 관광모델 도입, 보호지역 훼손 회피 방향 부합

10.1.2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구 분	내 용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지역 간 연대·협력, 지역의 문화·관광 활성화, 쇠퇴 관광자원 재생 및 환경친화적 공간관리 방향과 관광권역 연계, 기존 관광자원 활용·재생 및 지역관광 활성화 방향 간 연계성 확인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생태축 보전, 기후위기 대응 및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방향과 관광자원 보호·관리 및 환경용량 관리 방향 간 연계성 확인 ◦ 농촌융복합산업, 산촌진흥,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녹색성장 및 생태관광 관련 계획과 지역 고유자원 활용, 농산어촌 관광, 자연환경 보전과 관광자원 이용·관리의 연계방향 검토
계획 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 수정계획은 「모두가 누리는 관광, 관광으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글로벌 관광·상생관광·지속가능관광의 3대 목표를 설정하고, 관광자원의 매력과 가치 제고,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이용·관리, 편리하고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 역동적인 지역관광 생태계 육성, 연계·협력 기반의 관광효과 확산, 관광개발 제도·관리체계 혁신의 6대 전략을 제시하여 비전·목표·전략 간 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구성 ◦ 관광자원의 개발·이용·보호·관리를 포괄하는 전 주기 관리, 기존 시설 재생, 지역 상생 및 환경적·사회적 수용력 고려가 수정계획의 지속가능관광 목표와 연계됨을 확인

10.1.3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구 분	내 용
공간 계획의 적정성	◦각각의 추진전략 수립에 따른 관광개발계획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체적 입지가 결정될 경우 개별사업별 공간계획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함 ◦하지만,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 상 각 권역별 생태보전 및 생태관광에 대한 적절한 제시를 통하여 공간 계획의 적정성을 나타내어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국내 관광 수요 및 예측, 방한관광 수요 및 예측, 지역별 관광 수요 예측과 공급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관광부문 실천, 관광자원의 적정 개발과 이용 등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을 제시하였음
환경 용량의 지속성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인 환경용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음

10.1.4 결론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2027~2031)은 전국을 대상으로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으로서, 기존 관광시설의 양적 확충 중심에서 관광자원의 가치 제고, 지속가능한 이용·관리 및 지역관광의 상생과 협력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있음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을 검토한 결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및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이 지향하는 생태계 보전, 기후위기 대응, 저탄소 전환 및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수정계획의 정책방향 사이에 전반적인 부합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 및 생물다양성협약과도 정책방향 차원의 정합성을 확인하였음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측면에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 관련계획과 지역관광의 연계·협력, 기존 관광자원의 재생, 친환경적 공간관리 방향을 공유하며, 수정계획의 비전과 3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6대 추진전략 간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구성된 것으로 판단됨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측면에서는 국내 숙박관광의 구조적 수요변화, 외래관광 성장 및 지역·시설별 이용 편차를 반영하여 양적 공급 확대보다 기존 관광시설 활용도 제고 및 수요 맞춤형 관리가 중요함을 제시하였음. 또한 권역별 환경민감지역 검토와 탄소 감축, 환경오염 예방 및 관광자원 관리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한 것으로 검토됨

○ 다만 본 계획은 구체적인 개발사업의 입지·규모·시설배치 등을 확정하지 않은 정책계획이므로 개별 사업의 환경적 타당성 또는 환경용량 초과 여부가 모두 검증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따라서 향후 제8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및 개별 관광개발사업 수립 시 보호구역과 생태축 훼손 회피, 관광수요의 계절별·지역별 집중관리, 환경기초시설 수용능력, 기후재난 안전성, 온실가스 저감 및 운영·관리 단계의 모니터링 방안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 종합적으로 본 수정계획은 국가 환경정책 및 관련계획의 방향과 대체로 부합하고 정책계획 단계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성 고려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계획의 환경적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위계획·개별사업 단계의 구체적 환경검토 및 이행관리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제 11 장
부 록

11.1 평가대행자 인적사항

11.2 용역계약

11.3 용어해설

11.4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11.5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원도급 및 하도급률 검토서

제11장 부 록

11.1 평가대행자 인적사항

11.1.1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업체명	대표자	등록번호 (관할기관)	소재지	연락처
㈜동서엔지니어링	이익상	제원-006호 (사)환경영향평가협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44 3층	033-261-5055

11.1.2 참여자 명단

구 분	성 명	직 책	자격 및 면허	비 고
총 괄	장 원 기	상 무	환경영향평가사 221190186A	
계획의 적정성	한 상 훈	상 무	토양환경기사 13204110190E	
	채 기 병	이 사	수질환경기사 00206110158N	
	박 제 철	이 사	학·경력자	
	전 양 선	부 장	대기환경기사 88201110045U	
	김 현 진	과 장	수질환경기사 10203050154E	
	이 승 현	과 장	수질환경기사 16202140953B	
	김 윤 하	대 리	대기환경기사 18204120392W	
	안 소 영	대 리	토양환경기사 20204011070U	
	황 국 선	대 리	수질환경기사 16201120990P	

11.1.3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등록증 사본

등 록 번 호 제원-006 호 발급번호 : 202608100950871FXJ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기관(업체)명칭		(주)동서엔지니어링	등록상태	영업
대표자 성명		이익상		
주사무소	소재지	(2438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44 3층		
	전화번호	02- 409-1230		
평가담당 부서	소재지	(2438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44 3층(석사동, 동서빌딩)		
	전화번호	02- 409-1230 (FAX) 033- 261-5330		
실 험 실	소재지	측정대행계약체결 (주)세현에코텍, (주)이푸른환경, (주)청명기연환경, (주)한솔환경산업, 자연과환경(주)(합병폐업)		
	전화번호	- -		
기 타		제 1 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수 및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 1 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01년 04월 20일

(사)환경영향평가협회장

본

11.2 용역계약

11.2.1 용역계약서 사본

용역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 주 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계약상대자	상 호	㈜동서엔지니어링		
		대 표 자	이 익 상	등록(법인)번호	221-81-04733
		주 소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44		
		전화번호	033-261-5056		
계약내용	용 역 명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계 약 금 액	금22,000,000원(금이천이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보증금	금2,200,000원(금이백이십만원)			
	지체상금율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			
	계 약 기 간 (용역착수일~준공일)	2026. 08. 13. ~ 2026. 11. 10.			
	과업의 범위	과업지시서 참조			
	기 타 사 항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서에 의거하여 위 용역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 임 : 1. 용역계약일반조건 1부
2.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1부
3. 과업지시서 1부

2026. 08. 13.

발 주 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 장 황 교 익 (인)

계약상대자 ㈜동서엔지니어링 대표자 이 익 상 (인)

11.3 용어해설

11.3.1 일반적인 용어

-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평가를 말함
- 환경영향평가 :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여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목표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모든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경제적·기술적 고려와 환경보전의 관점에서 최선의 안을 선택하는 것을 말함
- 정책계획 : 국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개발·보전 등의 기본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말함
- 저감방안 : 환경에의 악영향을 제거, 감소, 완화 또는 상쇄시키는 것을 말함
- 환경영향요소 : 사업계획의 내용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원인이 되는 요소를 말함
- 환경인자 : 환경을 구성하는 기초적 요소를 말함
- 대안 : 계획의 수립 여부, 추진 수단·방법, 수요·공급 등 계획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방안을 설정하여 환경적·정책적 측면에서 비교·검토하기 위한 안을 말함
- 환경용량 :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
- 기후위기 적응 : 폭염·집중호우·홍수·산불 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경감하고 자연·사회 시스템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대응을 말함

11.4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9),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 관계부처 합동(2019),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 관계부처 합동(2021),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
- 관계부처 합동(2023),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 기후에너지환경부·관계부처(2025),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
- 환경부(기존 문헌),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2016~2025)」
- 국제연합(1992),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 및 「파리협정」(2015 채택, 2016.11.4 발효)
-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적용일 기준 현행본)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10.23.: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 「환경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적용일 기준 현행본)
- 「자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적용일 기준 현행본)
-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 「관광진흥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 국가통계포털(KOSIS), 국내 관광·인구·지역통계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국토통계 및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 국립공원공단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공원·생태경관보전지역·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 지정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 대기환경 연보 및 대기질 통계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통계연감 및 환경통계포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제1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방향 연구」
- 산림청(2017),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2018~2027)」
- 해양수산부(2019),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 환경부(2019), 「생태관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 관계부처 합동(2019~2020), 미래자동차·녹색성장 정책 관련 기존 참고자료

11.5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원도급 및 하도급률 검토서

1. 용역구분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2027~2031)
2. 사업유형 :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3. 용역기간 : 2026.08.13.~2026.11.10.

가. 원도급 계약내역

구 분	대행금액(원)①	산정기준 금액(원)②	대행률(%) (①/②×100)
직접인건비	6,544,070	7,987,080	81.9
직접경비	3,509,000	3,509,000	100.0
제 경 비	7,198,470	8,785,780	81.9
기 술 료	2,748,460	3,354,540	81.9
부가가치세	2,000,000	2,363,600	84.6
합 계	22,000,000	26,000,000	84.6

※ 1. ①의 대행금액은 낙찰 후 발주처와 실제 계약된 총 금액을 표기
2. ②의 금액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의한 산정가를 표기